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2018. 5. 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일시 2018년 5월 8일 화요일 11시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1강의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 일시 : 2018년 5월 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1강의실
- 주최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김미도(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백서발간소위원장,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공동위원장 인사
 - 신학철(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 미술가)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 경과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 발표
 - 김준현(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진상조사소위원장, 변호사)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 권고 발표
 - 이원재(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소위원장,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질의응답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의 02-739-2611



www.blacklist-free.kr



www.facebook.com/blacklistfree201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 ■ **목 차** ■ ■

I. 진상조사위 활동 경과	1
II.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종합	16
-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 및 피해 유형	16
- 블랙리스트 규모와 범위	19
-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문건 해제	22
- 블랙리스트 실행체계 및 구조	53
III. 분야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59
- 조사 신청 및 결과 현황	59
- 공연 예술 분야	68
- 문학 출판 분야	100
- 영화 분야	127
- 시각 예술 분야	149
- 해외 분야	162
- 기타 분야	169
IV.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 권고	180
- 법제도 개선 권고	181
- 문화행정 개선 권고	185
- 문화예술기관 개선 권고(6개 기관)	189
- 후속 조치 권고	213

I.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 경과

- 1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설치 배경
- 2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설치 과정
- 3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구성
- 4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
- 5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향후 계획

1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설치 배경

□ 문화예술계 활동

- 2015.9~10.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계 검열 및 블랙리스트 의혹 논란
- 2015. 10. 6. 연극인들이 예술위 청문회를 요구하며 979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국회 교문위에 전달
- 2016. 6~10. 21개 극단 22개 작품이 참여한 ‘2016권리장전_검열각하’ 진행
- 2016. 10. 10. 더불어 민주당 도종환 전 의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블랙리스트의 존재 주장
- 2016. 10. 12. 시국선언 관련 블랙리스트 9473명 명단 언론보도
- 2016. 10. 18. 문화예술인, 광화문 광장 행진, 검열 반대 퍼포먼스

- 2016. 11. 4.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광화문 캠핑촌 활동(~2017. 3. 20.)

- 2016. 11. ‘박근혜 퇴진 예술행동위원회’ 내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 결성
 - 2016. 12. 12. 특검고소고발(박근혜 김기춘 조운선 김종덕 등)
 - 2017. 1. 16. 국가 손해배상청구 소송(500여명) 및 기자회견
 - 2017. 3. 7. 국가정보원 검찰 고발 및 기자회견
 - 2017. 4. 19.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 2016. 12. 민간 ‘검열백서위원회’ 발족

- 2017. 1.10. 광장극장 블랙텐트 개막

- 2017. 1. 11~12. 문화예술인 1박 2일 블랙리스트 버스
김기춘, 조운선 즉각 구속 촉구(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 특별검사, 법원, 감사원 활동

구분	시기	결과	내용
특별검사	2016. 12. 1. ~ 2017. 2. 28.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 문화 보조금을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공급하고,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여 예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을 잃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법원	2017. 7. 27. 1심 선고 2018. 1. 23. 2심 선고	피해사례 총 374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배제) 19건 - 문예기금 지원배제 325건 - 영화분야 지원배제 8건 - 세종도서 선정배제 22건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정부와 다른 사상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그들의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 등에 의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하여 이를 치밀하게 실행에 옮겼다. 이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헌법질서가 훼손되었고, 법치주의가 후퇴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었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의 '사회의 정신적 재생산' 기능이 저해
감사원	2017. 1. 9. ~ 2017. 3. 10.	범죄사례 총 444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배제) 66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지원배제) 298건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9건 - 예술인복지재단 외 34건 - 영화진흥위원회 5건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2건	문체부는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배제를 산하기관에 지시하고, 배제 지시 이행관리를 총괄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등을 차별하고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

□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의 활동

○ 2017. 1. 23. 문체부 대국민사과문 발표

- “문화예술의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 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 2017. 4. 26. 문재인 대통령 후보, 문화예술인들과 정책협약 체결

-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

○ 2017. 7. 19.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 국정목표 주요내용 중,
최순실게이트로 상징되는 국정 농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확고하게 물어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 복원
- 국정과제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17년부터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추진
- 국정과제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저작권 보장
- 국정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 2017. 6. 12.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 “장관으로 취임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계획”
- “활동 내용을 백서로도 남기겠다”

○ 2017. 6. 16. 문재인 대통령, 도종환 문체부 장관 임명장 수여

-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 등 정치적 난맥 속에서 내부의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는데 인사에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차제에 분위기를 일신해 달라”

2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설치 과정

- 2017. 6. 19.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식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이면서 형법위반입니다. 동시에 헌법위반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다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2017. 6. 30. 문화체육관광부 사전준비팀(TF) 발족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포함한 분야별 과장급 인사와 문화예술계 인사 및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간위원 10인으로 구성

일자	주요 내용
2017. 7. 3.	문체부 장관령에 따른 기구 설치 논의
2017. 7. 6.	훈령에 블랙리스트 사건의 성격을 정의하는 전문 채택
2017. 7. 20.	일상적 자문기구가 아닌 진상조사위원회임을 확인 문체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으로 참여 기간은 6개월,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2017. 7. 21.	특별회계(예산) 편성
2017. 7. 24.	최종 훈령안 확정
2017. 7. 31.	위원회 공식 출범 기자회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3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구성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위원

- 공동위원장 2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학철 민간위원장
- 위원 19인: 민간위원 16인, 문체부 소속 공무원 3인
- 위원은 진상조사·제도개선·백서발간 소위원회에 각각 소속되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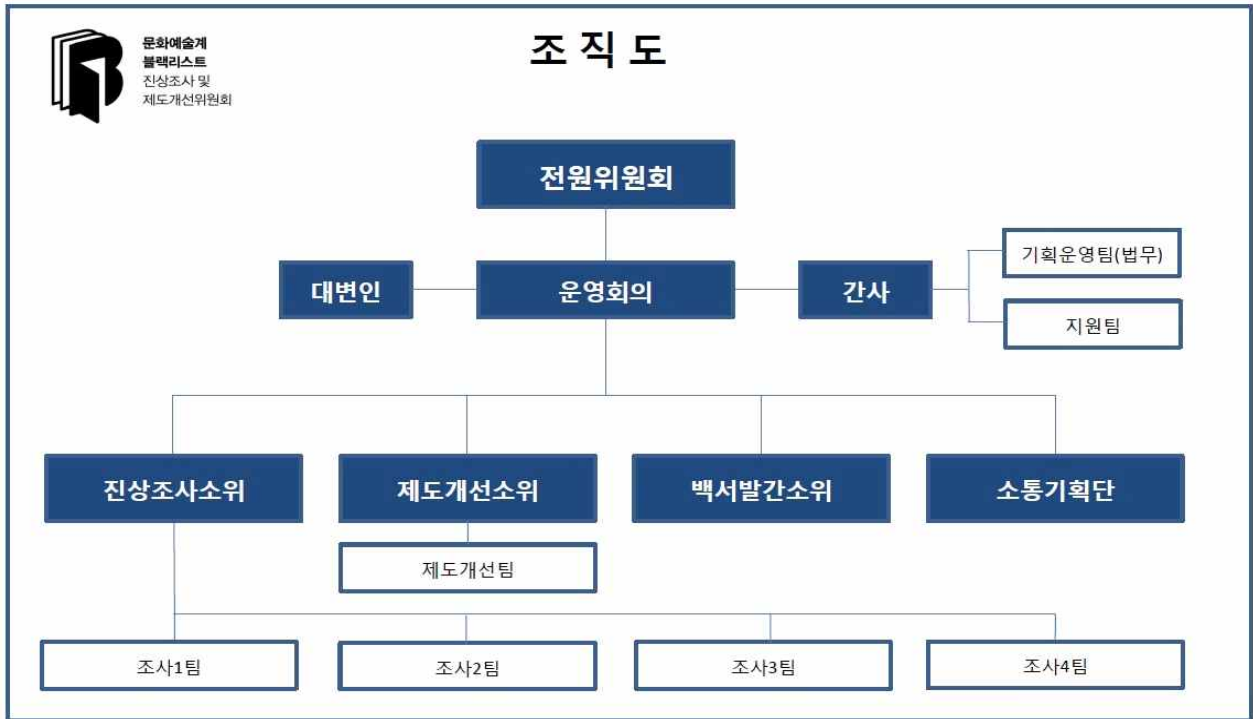
구분	성명	주요 경력
공동위원장 2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학철	미술가
민간위원 16인 (가나다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 소통기획단장
	김미도	연극평론가 / 백서발간 소위원장
	김용삼	김포대 문화학부 교수
	김윤규	안무가
	김준현	변호사 / 진상조사 소위원장
	류지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이사
	박태원	변호사
	박희정	수도권풍물연석회의 대표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 간사
	오동석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제도개선 소위원장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최승훈	문화산업정책협의회 정책위원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당연직 위원 3인	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현완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구성 :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3개
- 전원위원회 회의 :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 심의·의결
- 진상조사소위원회 회의
 - 신청사건 및 직권사건의 조사개시 여부, 신청사건의 각하 여부, 사전조사 기간 연장 여부 심의
 -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여부 심의
 - 진상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방안 논의
 - 조사 세칙 및 조사 일정 논의
-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심의
- 백서발간소위원회 회의
 - 백서 발간 일정, 편집 방향 및 편집 위원 구성 방안 논의

구분	개최횟수	주요내용
전원위원회 회의	34회 2017. 7. 31. ~ 2018. 4. 30.	- 조사세칙 개정 의결 - 조사개시 여부, 사전조사 기간 연장 여부, 직권조사 상정 여부, 각하 여부 심의·의결 - 조사결과보고서 심의·의결 -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의결
진상조사소위원회 회의	40회 2017. 7. 31. ~ 2018. 4. 30.	- 조사 세칙 및 조사 일정 논의 - 조사개시 여부, 사전조사 기간 연장 여부, 직권조사 상정 여부, 각하 여부 심의 - 조사결과보고서 심의 - 자료수집 방안 논의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19회 2017. 7. 31. ~ 2018. 4. 27.	-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범위 및 운영계획 논의 - 권고안 검토 심의
백서발간소위원회 회의	10회 2017. 7. 31. ~ 2018. 3. 5.	- 백서 발간 일정 및 자료 수집 방안 논의 - 백서 편집 방향 및 편집 위원 구성안 논의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운영 구조

- 전문위원(25인) : 진상조사팀(4팀), 제도개선팀, 기획운영팀
- 지원팀(4인)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 법무부 파견검사(1인)
- 운영회의 : 간사, 각 소위원장, 소통기획단장 등 참여



4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

□ 진상조사 활동

① 조사신청

○ 조사신청 총 120건 접수

- 홈페이지 제보센터(68건, 56.6%), 현장(30건, 25%), 이메일(21건, 17.5%), 우편(1건, 0.8%)

○ 신청사건 112건

- 신청사건 120건 중, 각하 4건, 취하 5건, 분할사건 1건→2건

○ 직권사건 32건

- 조사신청 되지는 않았지만 조사해야 할 의미 및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 전체사건 총 144건: 신청사건 112건 + 직권사건 32건

- 7가지 유형으로 사건 분류
- 공연(44건, 30%), 문학(18건, 12.5%), 시각(8건, 5.5%), 영화(23건, 15.9%), 전통(4건, 2.7%), 출판(7건, 4.8%), 기타산업(40건, 27.7%)

구분	공연	문학	시각	영화	전통	출판	기타	합계
신청사건	36	15	7	18	4	4	28	112
직권사건	8	3	1	5	-	3	12	32
총계	44	18	8	23	4	7	40	144

② 조사 방법 및 절차

- 신청서 검토보고서, 사전조사 보고서, 사전조사 기간 연장 보고서 작성
 - 신청서 검토보고서: ‘조사개시’ 또는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 사전조사 보고서: 직권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 사건조사 기간 연장 보고서: 사전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 진상조사소위원회의 심의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 조사개시, 각하, 사전조사 기간 연장, 사건 병합 등 의결

-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통지서 발송

- 조사
 - 자료 수집 및 분석: 청와대, 국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산하·소속기관
 -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 면담조사, 전화조사

-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조사 취지,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자료 조사,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조사결과, 결론 등

- 진상조사소위원회의 심의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의결

- 조사결과 통지서 발송
 - ※ 이의신청 절차 운영

○ 조사 흐름도

1단계 : 준비	신청서 접수 및 분류	▶	· 유형별 분류
	↓		
	검토보고서 작성	▶	· 신청서검토보고서 작성 (신청사건) · 사전조사보고서(직권사건)
	↓		
	소위원회 심의	▶	· 조사개시 및 각하 심의
	↓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	· 조사개시 및 각하 심의·의결
2단계 : 조사	↓		
	결정 통지	▶	· 조사개시 결정통지서 · 각하 결정통지서
3단계 : 보고	↓		
	사건 조사	▶	· 자료 수집 및 분석 ·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
	↓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 조사개요, 조사방법, 조사결과, 결론 작성
	↓		
	소위원회 심의	▶	·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심의
	↓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	·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심의·의결
↓			
결정통지	▶	· 조사결과 통지서	
↓			
사건종결		※ 이의신청 절차 운영	

□ 제도개선 활동

- 주요 지원기관 자체 진단 브리핑 개최, 토론회 개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워크숍 개최, 컨퍼런스 개최

구분	시기	주요내용
주요 지원기관 자체 진단 브리핑	2017. 9. 11. ~ 2017. 9. 26.	주요 지원기관 검열 현황에 대한 기관 자체 진단 브리핑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토론회	2017. 9. 19. ~ 2017. 11. 14.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수립을 위한 연속 토론회 - 제1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재정을 위하여 - 제2차 문학 분야 - 제3차 연극 분야 - 제4차 영화 분야 - 제5차 시각예술 - 제6차 출판 분야 - 제7차 무용 및 전통 - 제8차 문화산업 분야
	2018. 1. 31.	문화예술계 e나라도움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2017. 9. 16. ~ 2018. 3. 16.	- 블랙리스트 방지 법제 연구 사전회의 - 문화행정혁신TF 전문가간담회 - 현안분석 전문가 간담회 - 제도개선 의제별 핵심내용 도출 및 쟁점토론 전문가 간담회 - 기관 간담회 - 영화 분야 현장 간담회
워크숍	2017. 11. 3. ~ 2017. 12. 15.	제도개선소위원회 전략 워크숍
컨퍼런스	2018. 1. 17 ~ 18.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컨퍼런스 - 문화행정 혁신방안, 법제도 개선방안, 문화예술계 주요 지원기관 제도개선방안
	2018. 4. 18.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토론회

○ 제도 개선 권고안 심의 의결 절차

1단계	<p>현장 의견 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차 분야별 현장 토론회 (문학, 연극, 영화, 시각, 무용, 전통, 출판, 문화산업 등) -5개 기관 브리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단계	<p>제도개선 의제별 TF 구성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행정혁신TF, 블랙리스트 방지 법제 개선 TF, 주요 지원기관 개선 TF 등
3단계	<p>제도개선 의제별 연구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용역, 간담회, 워크숍, 외부 전문가 원고 집필 등
4단계	<p>제도개선 의제별 초안(연구결과물) 공개 및 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1월 17일~18일,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컨퍼런스> 개최
5단계	<p>제도개선 의제별 핵심 내용 및 쟁점 도출 및 의견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간담회, 문화예술계 현장, 관계 기관 간담회 및 워크숍
6단계	<p>제도개선 권고안 초안 작성</p>
7단계	<p>제도개선 권고안 초안 토론 및 의견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토론회
8단계	<p>제도개선 권고안 최종 의사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원회 검토 및 심의, 전원위원회 의결

□ 대외소통 활동

-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소통기획행사 개최, 국회토론회 개최,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배포

구분	일자	주요 내용
홈페이지 개설	2017. 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
소통기획 행사	2017. 9.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세상 - 현장조사신청: 제보 및 조사신청 접수 - 여는 마당: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소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1차 조사보고 및 권고안 발표 - 이야기마당: 블랙리스트를 말하다
국회토론회	2017.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계 적폐 청산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
	2018. 4.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의 현재와 후속대책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기자회견	2017.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관련 입수자료 분석 •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지원배제 사건
	2017.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신청 마감 결과 및 조사현황 • 블랙리스트 문건 종합 및 분석 • 주요기관 사건 보고 • 제도개선 활동 보고
	2018.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불 수교 130주년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종합판' - 2015~2016년 양국 최대 규모 문화예술행사에서 '2년에 걸쳐' 블랙리스트 실행
보도자료	2018. 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 BIFF 이용관 인사조치 요구, 부산시 전방위 접촉·압박
	2018. 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블랙리스트 적용
	2018.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콘텐츠진흥원,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확인
	2018. 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다큐영화, 영진위 지원사업 배제 27건 추가 확인
	2018.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토론회 개최
	2018. 4.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근혜 정부, 세월호 연대한 문화예술인에 '집요하고 끈질긴 탄압'

5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향후 계획

□ 백서 발간

○ 백서 발간 근거

훈령	내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사건의 실체 파악과 기록,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정책 권고안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 최종 결정을 거쳐 확정하고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백서 편집안

- 제1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활동보고서
-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 제3권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 제4권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 자료집 1권 개별사건 조사보고서
- 자료집 2권 위원회 활동 관련 자료

○ 백서 발간 시기

- 2018. 7. 중 발간 예정

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종합

- 1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 및 피해 유형
-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규모와 범위
- 3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문건 해제
- 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체계 및 구조

1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 및 피해 유형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

○ ‘블랙리스트’

- 정부기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사회적 성향이나 활동을 조사·분류하여 이를 관리한 문건 또는 내용
(유형의 리스트 형태로 작성되거나 정책 기조 등을 통해 하달된 배제 내용 포함)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공적(公的) 또는 강요·회유 등의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 권력을 오·남용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범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	내용
행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준정부기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기타 공공기관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 수단 : 법·제도·정책·행정·프로그램 편법, 불법적 운용 ▶ 비공식적 수단 : 강요·회유 등 비공식적 수단 활용
행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의 정치적 성향 및 정치적 표현 행위 사찰·감시·관리 ▶ 문화예술 창작·표현 활동 검열 및 각종 지원 등에서 배제·차별 ▶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제도·정책·사업 개악
침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 평등의 원칙 침해,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22조 예술의 자유 침해 ▶ 「문화기본법」 제4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시민들이 향유해야 할 문화예술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행위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이 다양한 층위에서 부당·탈법·위법·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총체적 국가범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유형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2심 판결문(2018. 1. 23.)

“피고인들은 문화예술계의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거나, 특정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명단을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에 하달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였음.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와 같은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헌·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함”

☞ 법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를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단’을 하달하여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특정함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피해가 ‘지원 배제’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 문화예술 창작·표현 활동에 대한 검열,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통제 및 불이익과 차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조사를 통해 확인함

○ 이로 인하여, 블랙리스트에 올라 직접적 배제 피해를 입은 개인·문화예술단체는 물론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지원사업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이익과 위협을 피하기 위해 자기검열을 한 문화예술인 등 광범위한 피해자를 양산하였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유형

피해	유형 정의	사례
사찰	국가, 정보기관 등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상적인 동태 를 살펴 조사하는 행위	- 시국선언 명단 수집, 정치적 성향 파악
감시	국가와 정부(또는 기업이)가 시민을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해 행동을 지켜보는 행위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 정보 수집 포함)	- 전화 도청, 스마트폰 사용내역/문자/컴퓨터 해킹 등의 정보수집부터 도청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감시 포함
검열	정부 당국이 책, 영화, 연극 등의 내용이 사회적 또는 윤리적 규범에 위배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예술매체에서 제시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공권력에 의해 예술 작품의 표현이나 공개를 통제하는 행위)	- 사전검열 : 작품 불허·취소·교체, 작품내용개입, 상영거부, 작품 손상, 작품 철거, 작품 운송 거부 등 - 사후검열 : 상영중단, 문화예술인에 대한 고발, 예술가에 대한 과도한 법적 제재 등 - 자기검열 : 작품 내용 수정, 지원신청 철회 등
배제	국가와 정부가 다양한 권리, 기회, 자원 (예:고용참여예산지원) 으로부터 개인 또는 특정 단체를 체계적으로 제외시키는 행위	- 지원(금) 배제 또는 삭감/중단 - 심사위원 배제, 인사 선임 시 특정인물 배제 - 공연자·연출가·작가 배제, 행사 초청 배제, 수상 배제 등 - 대관배제(공연장 폐쇄), 전시 취소, 강연 취소 등
통제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또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거나 지휘하거나 결정하는 권력의 행사로서 결과를 평가하고 시정하며 조정하는 활동	-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정책, 제도, 사업 개편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변경 / 사업폐지 등) - 사업 예산 축소·전용·폐지 등 - 심사과정에 부당한 압력행사 (심사번복요구 등) - 불공정한 사후 평가를 통한 제재 조치 -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 민간의 활동에 부당개입 (선거개입, 인사개입, 포기각서 요구, 표적감사, 공연방해 등)
차별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전과, 성별, 외모, 성적 지향, 인종, 신체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 특혜 (특정단체 및 개인 특혜 지원) - 사업 위상 격하 (작품 및 행사 위상 격하, 시상 결과 격하) - 고용, 모집,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특혜 또는 배제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규모와 범위

-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 등재 규모 : 총 9,273 명단 (개인·단체, 중복제외)
- ▶ 각종 시국선언 명단 포함 블랙리스트 관리 명단 규모 : 21,362여 명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DB 분석 결과

○ 주요 블랙리스트 문건 분석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 작성된 주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입수하여 각 문건들에 기재된 인물, 단체들의 명단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였음
- 블랙리스트 DB 분석 결과, **단체 342개, 개인 8,931명 등 총 9,273개**(중복제외) 명단이 주요 문건에 등재돼 사찰, 검열, 배제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됨¹⁾
- 주요 블랙리스트 문건 9개의 특징과 리스트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문건 현황 및 규모】

	문건명	작성 주체	규모 (중복제외)	성격	시기
①	이명박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5 (단체 2, 개인 3)	블랙리스트 입안	2008.8.27.
②	이명박 국정원, 「문화연예계정부비판세력」	국정원	82 (개인 82)	블랙리스트 실행	2009. 2.
③	박근혜 청와대,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민정수석실	29 (단체 12, 개인 17)	블랙리스트 입안	2013.3.10.
④	박근혜 국정원, 「'좌성향' 문화예술단체인물 현황」	국정원	293 (단체 43, 개인 250)	블랙리스트 실행	2014. 3.19
⑤	박근혜 국정원,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인물 현황」	국정원-문체부	166 (단체 4, 개인 162)	블랙리스트 실행	2014. 2 ~2016. 9
⑥	박근혜 청와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민정수석실	200 (단체 78, 개인 122)	블랙리스트 입안 및 실행	2014. 5.
⑦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2014~16)	문체부	903 (단체 281, 개인 622)	블랙리스트 실행	2014. 2 ~2016. 9
⑧	9473명 시국선언명단	교문수석실	8,229 (개인 8,229)	블랙리스트 실행	2015. 5. 6
⑨	박근혜 청와대 정무리스트 113명	정무수석실	108 (단체 4, 개인 104)	블랙리스트 실행	2015. 7. 6.
	총계	총 9,273 개 블랙리스트 명단 (단체 342개, 문화예술인 8,931명 / 전체 중복 제외)			

1) 블랙리스트 문건에 기록된 인물 중 '동일인물/유사분야'인 경우 중복으로 간주하여 중복을 제외한 규모임

○ 블랙리스트 중복 기재

- 총 9,273 명단(단체 및 개인, 중복제외)이 블랙리스트 문건에 총 12,026회 기재됨

【단체 및 개인 리스트 중복 기재 횟수】

중복기재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이상
명단	7,619	1,109	279	130	68	24	18	6	4	11

※ 하나의 문건에 중복 기재된 경우 포함

○ 분야(장르)별 규모

- 총 9,273 명단 중 분야가 명시된 경우는 9,100개(단체 및 개인)

- 영화 / 문학 / 공연 / 시각 / 전통 / 음악 / 방송 / 기타 분류

* '공연'은 연극, 무용, 뮤지컬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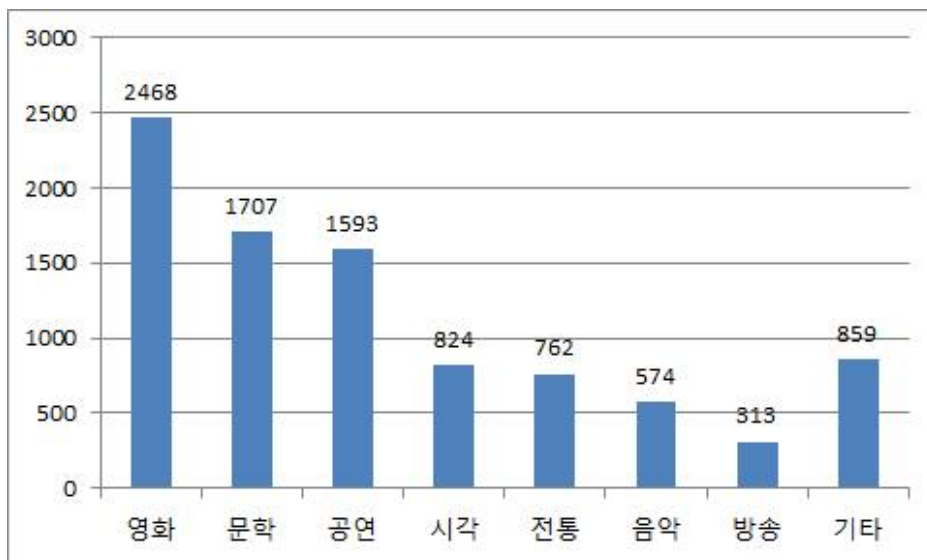
* '시각'은 미술, 건축, 사진, 만화 포함

* 분야에 문화일반 등 장르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표기된 경우는 기타에 포함

* 패션, 게임 등 독립된 분야이나 인원수가 소수(10명 이하)인 경우 기타에 포함

【분야(장르)별 규모 비교】

분야	영화	문학	공연	시각	전통	음악	방송	기타	합계
규모	2,468	1,707	1,593	824	762	574	313	859	9,100개
비율(%)	27.1	18.8	17.5	9.1	8.4	6.3	3.4	9.4	100%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 대상 규모

○ 각종 시국선언 명단 사찰 근거로 활용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주요 블랙리스트 문건에 ‘배제사유’로 적시되어 있는 시국선언 명단을 모두 취합,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함 (아래 표 참조)
-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하달한 9,473명 시국선언 명단 외에도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및 지식인들의 명단이 지속 관리되어 왔음
-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선언>,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선언>,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부 비판적 인사들에 대한 명단이 다수 포함됨

번호	블랙리스트 활용 각종 시국선언 명단	비고
1	안티조선 지식인 선언명단(2000-2001))	1,600명
2	문화예술계 531인 민주노동당 지지선언(2006)	531명
3	젊은 문인 183명 MB정부 비판 6.9 작가선언(2009)	183명
4	부산경남지역 문인 121명 야권 단일후보 지지성명(2012)	121명
5	문재인 멘토단(문화예술)(2012)	37명
6	문화예술종교인 102명 야권 단일화 촉구 시민운동(2012)	102명
7	연극인 1000명 문재인 지지선언(2012)	1,000명
8	정권교체를 바라는 시인 소설가 137명 시국선언	137명
9	출판인 516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516명
10	어린이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인 지지선언(2012)	362명
11	경남지역 문화예술인 869명 문재인 지지선언(2012)	869명
12	문화예술인 269인 진보신당 지지선언	269명
13	안철수 팬클럽(작가 74명)	74명
14	연극인 513명 문재인 지지	513명
15	부산지역 지식인 문재인 지지	580명
16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선언	436명
17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	1,884명
18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664명
19	건국대 교수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선언	62명
20	동아대 교수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선언	56명
21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시국선언	128명
22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교수 1000명	1,000명
23	연세대교수 131명 세월호 참사 정부대책촉구 시국선언	131명
24	강원대 교수 107명 세월호 참사 대통령 책임 시국선언	107명
25	문재인지지 1만명 예술인	10,000명
	총계	21,362명

3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문건 해제

- ▶ ① 청와대 ② 국정원 ③ 문체부 문건 작성 및 실행 주체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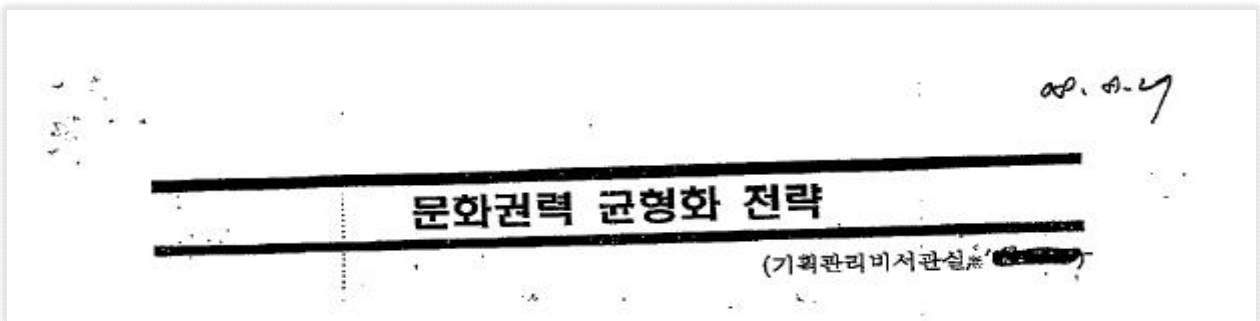
① 청와대 : 이명박 정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기반정비(2013)’ 통해 각각 블랙리스트 입안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과 ‘문화융성 기반정비(2013)’ 라는 블랙리스트 입안 문건을 작성함
- 이들 문건에 나타난 소위 ‘좌파 문화예술계’ 와 ‘문화예술’ 에 대한 편향적이고 반헌법적 인식은 두 정부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내용	이명박 정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기반정비’
이념적 접근을 통한 문화계 좌파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파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조직적 지원 하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중심으로 문화권력의 주도세력으로 부상. 제도권을 통한 좌파세력화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계 좌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각종 특혜를 받으며 성장, 예술위.영진위.한예총 등 제도권을 장악해 ‘문화권력’ 형성
비판적인 국민의식 확산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를 국민 의식개조 및 정권 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좌파에서 조직적으로 활용. 국민의식 좌경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파 문화예술인들은 기득권 유지 및 뒤튼린 이념 확산을 위해 ‘문화’를 수단 삼아 국론을 분열. 그릇된 대북관 주입
친정부적인 건전문화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문화세력 형성. 항구적 우파 문화권력 유지를 위한 근본대안은 우수한 우파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총, 자유총연맹 등 건전세력과 협조. 펀드 조성 등 문화지원을 적극 독려해 문화계 건전화 촉진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격리와 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 실시 □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좌파 고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 대상 선정시 철저 배제하는 등 점진적 격리 추진 □ 문화계 좌파세력의 반국가, 정치투쟁 실체·폐해 폭로

- 위 표에서 보듯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위 ‘좌파 문화 예술계’를 ‘문화권력’, ‘국민의식 좌경화’ 집단으로 규정했으며, ‘건전문화 세력’을 육성하고 ‘좌파 문화예술계’를 고사한다는 내용을 모두 입안 문건에 담았음
- 이는 이념이 다른 문화예술계를 적대시하며 ‘고사’ 시켜야 할 대상으로 단정한 국가주의적인 폭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또 자의적으로 이념적 잣대를 대어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한 것은 두 정부가 가진 정치철학의 위헌성을 보여줌

1.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2008)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첫 표지로 2008. 8.27. 기획관리비서관실이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음.>

1) 문건의 작성 주체 및 경위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6개월 후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입안 문건으로 첫 표지 상단에 ‘08. 8.27’ 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제목 아래 ‘(기획관리비서관실)’ 이라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보아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생산한 문건으로 추정됨

2) 문건의 기초 및 주요 내용

- 특징 : 문건은 “문화권력=이념지향적 정치세력” 이라고 규정하면서 ①좌파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 ②주요대책 : 건전 문화세력 형성 ③대책을 위한 추진체계 및 자원계획 등을 서술하고 있음
- 특히 이명박 정부는 당시 문화권력화의 실태에 대해 논하면서 우파 쪽은 예측, 좌파 쪽은 민예충이 핵심이라고 분석했음

예총·민예총을 중심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좌·우파 문화권력에 대한 인식	
예총	△보수를 대표하는 예총은 규모 확장, 정부지원금 확보, 국회의원 진출 등 외형 및 자리다툼에 치중하여 구심점 기능 상실, △외형상 회원수 120만명으로 좌파 민예총(10만명)을 압도하나 회원공감대 및 정체성 부족으로 지지멸렬한 상황
민예총	△좌파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조직적 지원 하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중심으로 문화권력의 주도세력으로 부상, △1999년 문화연대 결성을 통해 예술가 뿐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 전문가 그룹을 포섭·육성하여 외연확장 추진, △2002년 문성근, 명계남, 이창동 등 700여명이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의 모임(노문모)'를 결성하면서 실제적 권력집단화, △문화부-위원회·국립문화기관-시민단체로 이어지는 조직구조를 정립시켜 예산, 사업 등 제도권의 수단을 통해 세력 확대

- 이명박 정부는 위 표 대로 보수를 대표하는 예총이 “구심점 기능” 을 상실했다고 본 반면 진보를 대표하는 민예총은 “문화부-위원회·국립문화기관-시민단체” 등의 조직구조로 세력을 확대했다고 분석함
- 대책 : ①건전문화세력 형성 ②좌파집단 인적청산 ③건전문화세력 자금지원 ④좌파 자금줄 차단 등을 계획했고 ⑤추진체계 및 재원계획을 수립

대 책	내 용
건전문화세력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씹크탱크로 '문화정책포럼' 형성 : 민간 스스로 문화세력 구심점 역할을 하고 좌파와 대항할 조직 필요. 정부는 연구, 심포지엄, 출판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기존인사 배제하고 국내외 젊은 소장학자 및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조직화 □ 우파 실행기관으로 '한국문화산업연구소' 설립 : 좌파에 대응할 만한 활발한 사업추진과 인력양성 실행기관 필요. 문화예술계 다양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간별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좌파집단 인적 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은 소리없이 지속 실시 :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술위나 영진위 등)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진두지휘하고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청산작업을 지속감, 독려 * 급진적인 인적청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불필요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좌파 고사 유도

<p>건전문화세력 자금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인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모금회 설립 : 문화권력의 균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재원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지원사업 추진 필요. - 대규모 문화자본과 정부간 새로운 문화펀드 조성 - 문화인재들이 활동할 신개념의 '창조문화센터' 건립
<p>좌파 자금줄 차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파세력에 대한 정부 지원금 평가 및 재조정 : 문화부 지원사업에 대해 문화부 및 기재부의 엄격한 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09년도부터 좌파단체 지원예산을 근절
<p>추진체계 및 재원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 BH.문화부.기업 역할 분담 □ 재원계획 : 정부지원 09년 총 72억원, 시장자체지원 약 520억원

3) 특이점 1 : 천만 관객 영화 “선동의 수단” 단정

-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입안 단계에서의 특징은 대중적 파급력이 높은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는 점
- 문건에는 “대중이 쉽게 접하고 무의식 중에 좌파 메시지에 동조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인 영화를 중심으로 국민의식 좌경화 추진” 이라고 기재됐고 1천만 이상의 관객이 관람한 괴물, JSA, 효자동 이발사 등 대중영화를 ‘선동의 수단’ 이라고 단정했음

영화명	감독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평가
괴물	봉준호	반미 및 정부의 무능 부각
JSA	박찬욱	북한을 동지로 묘사
효자동 이발사	임찬상	국가권력의 몰인정성 비판

4) 특이점 2 : 좌파청산 인적청산 실제 실시...문체부 관련 기관장 20명 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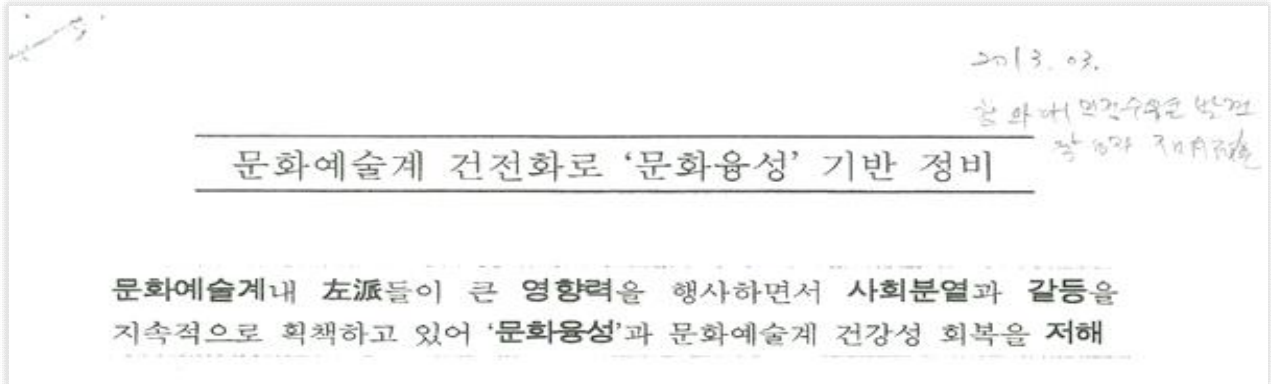
-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 도 눈에 띄는데,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조사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1년간 문화예술 기관장 25명이 표적감사를 당하거나 사퇴 압박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 직권면직으로 교체됐음. 해임에 한정해도 20명에 달했음

이명박 정부 문체부 산하 기관장 해임(20명)			
기관명	기관장	기관명	기관장
영화진흥위원회	안정숙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남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현	한국방송광고공사	정순균
경북관광개발공사	김진태	그랜드코리아레저	박정삼
한국정책방송원	윤형식	대한체육회	김정길
예술의전당	신현택	국립오페라단	정은숙
서울예술단	정재왈	국제방송교류단	장명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송재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권영후
한국문학번역원	윤지관	국립국악원	김철호
한국종합예술학교	황지우	한국관광공사	오지철

5) 문건의 평가

-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에 직접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문화예술단체는 민예총, 문화연대 등 2곳, 문화예술인은 명계남, 문성근, 이창동 등 3명으로 총 5건이 등재됐음
-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은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한 리스트 형태는 아니었지만, 입안 문건의 ‘좌파 청산’ 취지에 따라 문체부 산하 기관장이 직권 면직되거나 해임된 경우가 최소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피해규모가 작다고 할 수는 없음

2.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문건(2013)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화융성 기반정비' 문건 첫 표지>

1) 문건의 작성 주체 및 경위

- 위원회가 2017년 9월 29일 대통령기록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를 확인하던 중 발견한 문건
-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돼 ‘캐비닛 문건’으로 불리며,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입안돼 가동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임
- 위원회가 국정원에 의뢰한 결과, 문건의 작성경위는 알 수 없지만 “국정원에서 작성해 2013. 3. 15.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비서실장·민정·정무·교문수석에게 배포되었다”고 회신함

2) 문건의 기조 및 기초 내용

- 이 문건에 언급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단체는 12곳, 문화예술인은 17명으로 총 29건임. 주로 지명도가 높고 활발히 활동하는 문화예술인과 대중예술인, 단체를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만들어 관리했음

‘문화융성 기반정비’ 등재 블랙리스트 단체 및 인물	
단체(12곳)	인물(17명)
P당(주), 다음기획, 문화연대, 민예총, 민족민술인협회, 민족음악인협회, 민족극운동협회, 영화감독조합, 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국민TV	강내희 공지영 권해효 김미화 김여진 김영준 김제동 명계남 문성근 신경림 이시영 임정희 정지창 조정래 탁현민 김용민 정봉주

- “문화예술계 내 좌파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분열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어 ‘문화융성’ 과 문화예술계 건강성 회복을 저해” 한다는 기조로
 ①문화예술계 좌파의 편중지원과 헤게모니 장악 ②좌파의 문화를 수단으로 한 국론 분열 ③국민대통합 분위기에 편승해 영향력 확대모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문건 소주제	내 용
<p>좌파의 헤게모니 장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계 좌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각종 특혜를 받으며 성장, 예술위·영진위·한예중 등 제도권을 장악 하여 문화권력 형성 - 문화, 미술, 영화 등 분야별 조직을 바탕으로 문화계 신주류로 행세하고 있고, 순수 창작활동보다는 맹목적 정책비판 등 정치 투쟁에 치중 - 최근 문화투쟁 거점이 대중매체, 인터넷 등으로 이동하자 좌파 폴리테이너 및 파워 트위터리안, 나꼼수 등이 대중적 영향력을 지속확대
<p>국론분열.편향된 가치관 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파 문화예술인들은 기득권 유지 및 뒤틀린 이념 확산을 위해 문화를 수단 삼아 국론을 분열시키고 편향된 가치관 조장에 몰두 - 공권력, 정부는 탄압의 주체로, 대중은 사회적 약자로 왜곡해 공권력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는 한편 그릇된 대북관을 주입 - 선거정국마다 좌파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 정치 오염
<p>국민통합 분위기 편승 영향력 확대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좌파들이 정부 초기 대국민통합 분위기에 편승, 영향력 확대를 모색 중인 가운데 문화계 ‘좌파 쓸림’ 지속 시 문화융성 구현에 차질 소지 - 문화계 좌파들은 금년 주요사업으로 ‘문화 귀촌 프로젝트’ 등 지역 사회 의식화를 통한 소외계층, 중산층 주부 등 저변층 흡수에 부심 - 건전문화예술인들은 좌파들이 문화재정 2% 확대 등 정부의 문화정책에 편승, 재기의 발판으로 악용할 소지를 우려
<p>문화계 좌파 대응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계가 보수, 좌파 공히 정치색을 벗고 순수 문예 활동에 매진하도록 ‘문화계 대통합’과 자성 분위기 조성 □ 민예총, 문화연대 등 골수 좌파조직들은 예술위, 영진위 등의 정부지원 대상 선정시 철저 배제하는 등 점진적으로 격리 추진 □ 예총, 자유총연맹 등 건전세력과 협조, 문화계 좌파세력의 반국가·정치투쟁 실체, 폐해를 폭로하는 등 대응활동 강화 유도
<p>문화계 건전세력 육성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단체, 기업간 협력 MOU 및 메세나협(금호 등 기업들이 문화지원을 위해 만든 협회<회원 249개사>로 94년 설립)의 펀드 조성, 교육사업 등 문화지원을 적극 독려, 문화계 건전화 촉진

3) 문건의 특이점 : 대중적 영향력이 높은 단체 및 문화예술인 리스트화

-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 입안 문건을 작성하면서 <붙임> 형식으로 별도 블랙리스트 명단을 첨부한 것은 별도의 명단이 없었던 이명박 정부 초기 블랙리스트 입안 문건과 비교되는 특성임
- 김미화, 김제동, 김용민, 김여진, 공지영, 탁현민 등 라디오나 TV 방송, 각종 팟캐스트, 토크콘서트, SNS 등을 통해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문화예술가들이 주요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분석됨

3. 소결 :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위헌적 정치철학 드러낸 문서

-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입안문건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좌파고사 유도(이명박 정부)”, “점진적 격리 추진(박근혜 정부)” 등을 언급하고 소위 좌파 문화예술인들을 위법적으로 블랙리스트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임
- 헌법 제11조 1항과 제22조, 문화기본법 제4조에 명시돼 있듯,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와 예술의 자유가 있음. 반면 두 정부의 블랙리스트 입안 문건은 이러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덧붙여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 입안 문건 등을 통해 다수의 문화예술인을 좌파라고 단정 지은 근거는 “정부 비판적”이라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였는데 이는 좌우파를 가늠하는 이념적 잣대가 될 수 없음

② 국정원 :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 주도로 블랙리스트 준비

구분	이명박 국정원 블랙리스트	박근혜 국정원 블랙리스트		
		국정원 자체	문체부 의뢰	계
규모	82	289	163	422 (중복 제외)
지시	청와대 민정수석, 기획관리비서관	청와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주체	국정원 좌파연예인 대응TF, 국정원 심리전단, 국정원 문화연예 담당 수집관	국정원, 문체부(문화예술정책점검TF, 건전콘텐츠활성화TF)		
기조	대중적 영향력이 큰 방송진행자, 영화감독 등 사찰 및 외압, 배제	문화예술기금 선정 배제 통한 좌파 문화예술계 고사		

-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블랙리스트 입안 문건이 만들어 진 이후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해 블랙리스트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거쳤다는 유사성이 있음
- 다만, 이명박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는 문체부가 거의 관여하지 않은 국정원 ‘원 트랙’ 으로 가동됐고, 박근혜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는 국정원-문체부의 투 트랙으로 가동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규모 면에서도 이명박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는 82명인 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는 422명으로 5배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명박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 문건의 기조는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방송진행자나 영화 제작·배급사 축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박근혜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는 이에 더 나아가 문예진흥기금 선정 대상에서 소위 좌파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배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해 사실상 모든 문화예술인들 및 이들의 작품내용을 사찰 및 검증대상으로 상정하고, 문체부와 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운용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모든 예술인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음. 이로 인하여 문화예술인들은 창작 및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원천 봉쇄당함

1. 이명박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 (2009)

구분	강성 성향(69명)	온건 성향(13명)
문화계	이외수, 김명곤, 조정래, 진중권, 탁현민, 신학철	
배우	문성근, 명계남, 권해효, 문소리	김민선, 이준기, 유춘상, 김가연
영화감독	이창동, 여권동, 박진욱, 봉준호, 김동원, 박광현, 장준환 및 2006년 5월 「민노당」 지지선언 참여 양운모 등(총 52명)	
방송인	김미화, 노정렬, 오종욱	김구라, 김제동, 박미선, 배철수, 황현희
가수	윤도현, 신해철, 안치환, 윤민석	양희은, 김장훈, 이하늘, 이수

<국정원 개혁위가 2017. 9. 11. 발표한 'MB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 조사 결과>

1) 문건의 작성 주체 및 경위

- 국정원 개혁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위')가 2017년 9월 11일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 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가 공개됐음
- 이 문건은 2009년 2월 취임한 원세훈 국정원장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원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 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음
-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은 2009년 7월 당시 김주성 기조실장 주도로 문화연예계 대응을 위해 '좌파 연예인 대응 T/F' 를 구성해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 퇴출,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전 방위적 압박을 가했음

2) 문건의 규모 및 기조·주요내용

- 문건에 오른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및 방송연예인은 총 82명으로 강성 성향과 온건 성향으로 나누어 기재됐는데 강성은 69명, 온건은 13명임.
-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은 문화연예계 내에 정부 비판세력이 있다고 규정했으며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 △좌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촛불시위 참여를 통해 젊은 층 선동 등을 사유로 퇴출활동을 벌였음

- 대응책은 ①특정 연예인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 ②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유도 ③정부비판 연예인 광고주에 반대 이메일 발송·광고 모델 교체 유도 ④특정 연예인 이미지 실추 유도 심리전 등(아래 표 참조)이었음

이명박 정부 청와대·국정원의 사찰 및 외압 타임테이블

날짜	내 용	담 당
2009. 10.	특정 연예인 소속 특정 기획사 세무조사 유도	좌파연예인 대응 TF
2009. 10.	다음 아고라에 특정 연예인 교체는 인기 하락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요지의 토론글, 댓글 게재(500여 건)	국정원 심리전단
2009. 11.	복지부 '2009 푸른성장 대상' 수상 후보자에서 제외 유도	좌파연예인 대응 TF
2010. 1.	'2010년 문화예술 분야 등 건전화 사업 계획' 보고	좌파연예인 대응 TF
2010. 1.	국제영화제 차기 위원장 후보 배제 유도	좌파연예인 대응 TF
2010. 2.	특정 연예인 진행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유도	좌파연예인 대응 TF
2010. 3.	MBC 대상 정부 비판 연예인의 출연 가능성 원천 차단 및 정부비판 연예인 출연 프로그램 폐지 유도	좌파연예인 대응 TF
2010. 3.	특정PD 제작 다큐멘터리 '방송 대상' 수상작 선정 탈락 요청	좌파연예인 대응 TF
2010. 3.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국정원장 지시)	국정원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 담당 수집관
2010. 4.	특정 라디오 제작자 지방 전보발령 유도	좌파연예인 대응 TF
2010. 4.	김제동 출연 MBC '환상의 짝꿍 폐지' 유도	좌파연예인 대응 TF
2010. 8.	'좌파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민정수석 요청)	국정원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 담당 수집관
2010. 9.	'좌파방송인 사법처리 획형으로 편파방송 근절'(청와대 일일보고)	국정원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 담당 수집관
2010. 10.	'문화예술단체내 좌파인사 현황, 제어 관리방안 보고'(기획관리비서관 요청)	국정원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 담당 수집관
2010. 10.	SBS '물은 생명이다' 특집행사 관련 4대강 사업 비판 자제 협조(국정원장 지시)	국정원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 담당 수집관
2010. 10.	정부비판 연예인 광고주에 반대 이메일 발송, 광고모델 교체 유도	국정원 심리전단
2010. 11.	'문화·연예계 좌파 실태 및 순화 방안 보고'(국정원장 지시)	국정원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 담당 수집관
2010. 11.	'좌파성향 방송연예인 순화견제 활동 방향 보고'(국정원장 지시)	국정원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 담당 수집관
2011. 1.	특정 연예인 주도 정부 비판 사이트 반대 심리전	국정원 심리전단
2011. 4.	MBC 특정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국정원장 지시)	국정원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 담당 수집관
2011. 4.	김정일을 비호하는 특정 연예인의 이적 행적 폭로 심리전 활동	국정원 심리전단
2011. 5.	특정 연예인 이미지 실추 유도 심리전	국정원 심리전단
2011. 8.	MBC 특정 문화연예계 출연인물 퇴출 유도(국정원장 지시)	국정원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 담당 수집관

- 이명박 정부 청와대 역시 문화연예계 실태 파악 등을 수시로 지시했고 국정원은 이에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했음
- 청와대와 국정원 지휘부는 문화연예계 특정인물 견제 관련 지시를 계속 하달했는데 담당 부서는 오프라인에서는 직접적인 조치를 통해 압박했고, 온라인에서는 소위 ‘문화연예계 중복세력’ 대상 심리전을 주도했음.
- 이는 국정원 ‘좌파연예인 대응 TF’, ‘국정원 심리전단’, ‘국정원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담당 수집관’,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기획관리 비서관 등이 관여했음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문화연예계 사찰 일지		
날짜	내 용	담 당
2009. 9.	좌파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PD 주요 제작활동 실태	靑 기획관리비서관
2010. 4.	좌파 연예인 비판활동 견제 방안	靑 기획관리비서관
2010. 5.	KBS 조직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	靑 홍보수석
2010. 8.	좌편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파악	靑 민정수석
2011. 6.	좌편향 성향 언론인, 학자, 연예인이 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	靑 홍보수석
2011. 12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 확인	靑 민정·홍보 수석

- 이같이 특정 인물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사찰과 외압은 국정원 개혁위가 밝혔듯 전 방위적이고 구체적이었는데 파악된 것만 23건이었음. 청와대 사찰 등은 6건으로 이를 합하면 주요 사찰 및 외압 행위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년여 간 총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음

3) 문건의 특이점 : 국정원 블랙리스트 82명 중 60명이 영화인

-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과 문성근, 권해효, 문소리, 김민선, 유준상 등 영화배우 8명 등 영화인이 60명으로 이 문건에 적시된 82명 중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문건의 특징임. 즉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의 사찰, 검열, 외압, 배제 등이 영화인에 집중된 것임

- 앞서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 블랙리스트 입안 문건인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 괴물, JSA 등의 영화를 ‘선전선동’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는데, 후에 만들어진 국정원 블랙리스트 문건에 영화인이 70% 이상 포함된 것으로 보아 초기 입안 문건의 연장선상에서 국정원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박근혜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2014) · 박근혜 정부 국정원, 문체부 선별 · 통보 블랙리스트 181명 (2014~2016)

1) 문건의 작성 주체 및 경위

- 박근혜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는 국정원 자체 생산 블랙리스트와 국정원의 문체부 선별통보 리스트로 나눌 수 있음

연번	분야	성명	특이사항	등급
1	문학	강내희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 비상임공동의장, 문화연대 대표	A
2	문학	고영범	서울예대 영화과 겸임교수	C
3	문학	고영직	민족문학연구소 소장	C
4	문학	고은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	B
5	문학	공선옥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	C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 중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일부>

- (1) 국정원 자체 생산 리스트 : 2013. 8.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부임 후 ‘좌성향 문예계 인물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조직재건의 호기로 보고 세 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음
- 이후 국정원은 2014. 3. 19.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이라는 청와대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 보고서에서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현황’,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이하 박근혜 국정원 자체 블랙리스트)이 첨부됐음. 소위 박근혜 정부 국정원 자체 블랙리스트는 이 문건의 첨부문서(위 ‘좌성향 인물 현황’)를 말함

연번	성명	기재 내용	출처
1	강영민	팝아트조합 대표	院 보고서
2	강영민		문체부 자료
3	강용석		문체부 자료
4	강은교	문학	문체부 자료
5	강주석	한국전통예술단 아을	문체부 자료
6	고능석	극단 현장	문체부 자료

<박근혜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블랙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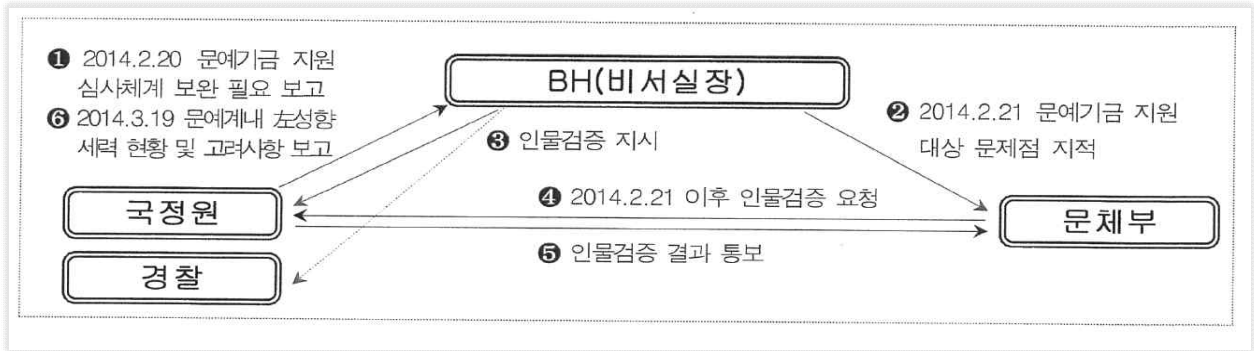
(2) 국정원 문체부 선별·통보 리스트 : 박근혜 정부 문체부는 2013. 9. 김기춘 실장의 ‘특정성향 예술지원 실태 및 대책 지시’에 따라 관련 대책을 작성해 보고했으며 2013. 9. 9. 문화예술정책 점검TF를 구성해 특정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방법을 마련해 실시하는 등 국정원과 함께 ‘투 트랙’으로 블랙리스트 시스템을 가동함.

- 문체부는 자체 검증이 여의치 않자 2014. 2~2016.9.까지 2년 5개월 여간 국정원에 8,500명에 대한 인물 검증을 의뢰해 문예기금 사업 배제 대상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 문건이 ‘박근혜 국정원 선별·통보 블랙리스트’ 임

연도	문체부 검증요청 인원	국정원 선별통보 인원
2014년	1400명	102명
2015년	3700명	177명
2016년	3400명	69명
총계	8500명	348명

-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4. 8. 청와대로부터 문화계 좌파 견제 지시를 받고, 경찰과 공정위 협조 하에 자체검증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역부족이자 국정원에 협조를 계속 요청, 348명의 명단을 받았음
- 문체부의 8,500명 검증 요청을 받은 국정원은 348명을 통보했는데 문체부 담당 국정원 IO가 외부 유출에 대비해 선별된 명단을 전화로 불러주고 별도로 문서자료를 남기지 않아 선별통보 대상자 실명이 모두 기재된 자료는 보존되어 있지 않음
- 다만, 국정원 내 잔존 보고서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종합한 결과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348명 중 181명의 실명은 확인됨

- 박근혜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비서실장 부임 후 청와대-국정원-문체부 등이 모두 관여해 만들어졌으며, 문예진흥기금 운용기관의 보조금 지원 기준과 심사체계 보완 등 과거에 비해 체계적으로 블랙리스트 시스템이 가동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아래 그림 및 표 참조)



<청와대-국정원-문체부의 '박근혜 정부 국정원 선별통보 블랙리스트' 생산 구조도>

날짜	내용	주체
2013. 8. 5.	김기춘 비서실장 부임	청와대
2013. 8. 16.	국정원,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활동 실태 문건 청와대 보고	국정원
2013. 9. 3.	문체부,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청와대 보고	문체부
2013. 9. 9.	문체부, 문화예술정책 점검 TF 구성	문체부
2013. 10. 31.	문체부 장관, 우수문학도서 선정시 좌편향 배제 지시	문체부
2013. 12. 10.	김기춘, 문화예술계 좌편향성 여전 지적	청와대
2014. 1. 27.	국정원, '문예기금 운용기관의 보조금 지원기준 보완 필요' 청와대 의견 보고	국정원
2014. 2. 20.	국정원,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보완 필요 여론' 청와대 보고	국정원
2014. 2. 21.	문체부, 김기춘에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보고	문체부
2014. 2. 21.	김기춘, 문체부에 예산이 좌파에 흘러들어가고 있으니 국정원과 협의해 정체성을 검증하라고 지시	청와대
2014. 2. 22.	문체부, 국정원에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관련 이념 편향성 인물에 대한 검증 요청.	문체부
2014. 3. 19.	국정원,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보고서 작성 및 청와대 전달	국정원

2) 문건의 규모 및 기조·주요내용

- 앞서 언급했듯 박근혜 국정원 블랙리스트 문건은 국정원 자체 블랙리스트와 국정원의 문체부 선별·통보 리스트로 나뉘며 자체 블랙리스트는 289건, 문체부 선별통보 리스트는 163건으로 422건 규모임

(1) 국정원 자체 리스트 : 진상조사위 블랙리스트 DB(2018. 4. 29. 수정본) 분석결과 문화예술단체 41곳, 문화예술인 248명(중복 제거) 등 289건이었음. 이 중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현황(249명)’은 문화예술단체 대표자의 경력과 활동(정부비판 작품 저술, 시국선언, 야권인사지지 등) 등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문화예술인의 활동 전력에 따라 A급(24명), B급(79명), C급(146명)으로 급수를 분류해 기재했다. 문학 48명, 미술 28명, 연극 22명, 음악 30명, 영화 104명, 방송 7명, 기타 10명이었음

- 이 문건의 기조는 “문예기금 선정기관에 좌성향 인물 배제,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을 통한 자금줄 차단 등 대응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문체부 등을 통해 실행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의 기준점을 제시” 한 것임

박근혜 국정원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2014. 3. 19) 주요내용

문예계 좌성향 세력 근절 미흡원인	①문예계의 근본적 사회 비판성 ②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자금줄 마련 ③보조금 확보 목적으로 단체명 변경 및 신규단체 설립으로 좌 이미지 감추기 시도 ④한예중 좌성향 교수들의 이념편향적 교육	
분야별 단체·인물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전략	①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위 등 문예기금 지원기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주요보직에 좌성향 인물들이 배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인사검증. □ 문제단체, 인물에 대한 비리, 부조리 관련 증거 확보해 자발적 사임 유도 및 임기만료시 연임 차단 □ 연구실적이 부진한 한예중 교수에 대한 제제조항 신설 및 이념 편향적 교수 퇴출방안 확보
	②민간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대북연동을 일삼는 싸구려 좌파는 철저히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고립·고사시키고, 중도성향 세력은 적극 포용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접근
	③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인터넷을 통한 좌성향 문예인들의 이념·정치적 활동에 대한 비판 여론을 집중 부각 □ 국민적 거부감 확산 및 순수예술 지향 풍토 조성
건전문예단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좌성향 문예계에 대항할 수 있는 건전문예단체(차세대 문화인연대 등) 중심으로 각종 자금 배정. ②체계적 관리를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의 우파 전향 유도 	

(2) 국정원의 문체부 선별·통보 리스트 : 위원회 블랙리스트 DB 분석 결과, 박근혜 국정원의 문체부 선별·통보 블랙리스트의 규모는 문서상 181명이지만, 중복을 제외하면 163명 규모임 국정원 보고서와 문체부 자체 자료의 통합본 형식으로 앞서 만들어진 ‘박근혜 정부 국정원 자체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물들과 차이가 큼

- 진상조사위 구축 블랙리스트 DB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국정원 자체 생산 블랙리스트’와 ‘박근혜 국정원의 문체부 선별통보 리스트’에 중복 기재된 문화예술인은 15명에 불과함. 148명이 기존 박근혜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없었던 인물임. 즉, 국정원 자체 생산 블랙리스트와 문체부 의뢰 블랙리스트의 특성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박근혜 정부 국정원 자체 생산 블랙리스트가 각종 정부비판 단체를 광범위하게 사찰해 중량급 인사들에 대한 등급(A급, B급, C급)을 나눴다면, 문체부 의뢰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성향 평가 문서라고 볼 수 있음

3) 문건의 특이점 : 7개월간 정부비판 단체 전방위 사찰 결과물

- 문건에 등장하는 단체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 △민족문학연구소 △문화연대 △한국작가회의 △노무현 재단 △광주민예총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노무현을 사랑하는 문화인 모임 △한국문학평화포럼 △시사IN △리얼리스트 100 △강정평화대행진 100인 공동대표단 △6.15 선언실천 남측위 △실천연대 △노나메기 재단 △민족미술인협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서울연극협회 △전교조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범민련 △노래를 찾는 사람들 △뉴스타파 △전국영화산업노조 등으로 광범위했음
- 또 1986년 민족작가회의 이사(조정래), 1993년 민족미술협의회 대표(임옥상), 1995년 민예총제주지회장(강요배) 등의 기록으로 보아 길게는 28년 전 행적까지 조사해 블랙리스트에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 국정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부임한 직후인 2013. 8. 16.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후 2014. 3. 19.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약 7개월이 소요됐음. 즉 ‘박근혜 국정원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들의 28년 전 행적을 비롯해 문화예술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전 방위적 사찰의 결과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③ 문체부 등 정부부처 전수조사 :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구체적 실행에 문체부 등 정부부처 총동원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청와대와 국정원이 관여해 블랙리스트를 입안·준비하고 실행한 점에서 유사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가 문체부 등 정부부처, 공공기관에 블랙리스트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등 전 방위적인 사찰을 벌이고, 나아가 문체부 등 정부부처를 블랙리스트 실행의 주요 주체로 삼은 것은 두 정부 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또 이를 통해 블랙리스트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을 각종 정부보조금에서 배제하는 방식 등 블랙리스트 실행이 좀 더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박근혜 정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1. 중앙정부 보조금 차단

민간단체보조금 TF 운영

- [추진배경] 불법시위, 정권반대운동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실태파악 및 근본적 조치 미흡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사업주체가 다양하고, 선정권한도 개별 부서에 위임되어 있어 총괄적 실태파악 어려움 발생
- [TF구성] 정무수석 주관 하 주요부서* 참여, △민간경상보조금, △주요부처 공모사업현황 등을 확보해 전수조사 실시(4.4~5.23)
 - *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 ※ 중앙부처가 직접 선정·교부하는 보조금 전체를 파악(기금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급사례는 미포함

1) 문건의 작성 주체 및 경위

- 김기춘 등 3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에 따르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4. 3. 14.경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에게 부처별 보조금 지원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TF를 만들어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음

- 이에 박 정무수석과 신 소통비서관은 2014. 4. 4~5. 하순까지 각 분야 청와대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 를 운영했으며 문체부를 비롯한 각 부처의 협력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음. 이 문건이 바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임
-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로 박준우 정무수석, 신동철 소통비서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고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청와대 비서관들이 대거 투입됐으며, 문체부를 비롯한 각 행정부처 역시 이에 협력했음

2) 문건의 규모 및 기초·주요내용

- 문건에 첨부된 리스트에는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 130건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현황 26건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현황 79건 등 235건도 등재돼 있음
- 위원회 블랙리스트 DB에는 200건(단체 78곳, 인물 122명)으로 취합되며, 이는 리스트 상에서 중복된 단체와 인물을 제외한 후 도출한 수치임
-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위 표에 언급했듯 각 부처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광범위한 사찰을 실행했으며 문건은 이에 대한 결과물임
-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해 각종 사회단체의 정부보조금 지원 실태 등이 자세히 언급돼 있으며 △중앙정부 보조금 차단 △좌파인사 확인·조치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 △관심조치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음(아래 표 참조)

박근혜 청와대 생산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주요내용	
분 류	내 용
중앙정부 보조금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시위, 정권반대운동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실태파악 및 근본적 조치 미흡 □ 민간단체보조금 TF 구성 정무수석 주관 하 주요부서 참여 □ (조치결과) 총 130건, 139억원의 문제예산 확인.조치 □ (DB 운영으로 지속 감시) 3천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시위 참여 등)와 8천명의 좌편향인사(문재인.구 민노당 지지 등) DB 구축, 지속 보안

<p>좌파인사 확인 ·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배제. 자체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주요부처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파악, 총 26명의 좌편향 인사 확인. 조치 □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 각 부처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총 70명의 좌편향 66개 위원회에서 활동(중복제외) 중임을 확인
<p>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민간이 함께 만든 모태펀드가 문화.영화계정에 투자되고 있으나,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 창구가 되는 사례 빈번 □ 추진계획 : 창투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한국벤처투자의 임원진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 대폭 교체 건의
<p>관심 · 조치가 필요한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를 통한 좌파단체 활동자금 : 국회 국정감사, 서울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편향지원 실태 및 시장-단체대표간의 친분관계 지속 부각 □ 문체부 :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문제단체 지원을 관행으로 인식, 간부공무원들의 개선 의지 부족

- 박근혜 정부는 앞서 블랙리스트 입안 문건인 ‘문화융성 기반정비(2013)’ 와 국정원이 주도한 ‘박근혜 국정원 블랙리스트(2014)’, ‘박근혜 국정원, 문체부 선별 · 통보 블랙리스트(2014-16)’ 에서 소위 ‘좌파 성향’ 인사들과 단체들을 선별해 리스트화한 바 있었으나, 정부 위원회나 정부기금 심사위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담은 형태는 아니었음
- 따라서 2014. 5. 하순 작성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은 박근혜 정부 첫 번째의 구체적 블랙리스트 실행문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3) 문건의 특이점 1: 기존 블랙리스트 문건에 없던 시국선언 등장

- 이 문건의 가장 주된 특징은 기존에 블랙리스트 사유로 거론되지 않았던 시국선언 및 당시 야당 지지선언자들의 명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임
- 문건이 만들어진 2014. 5. 하순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시점이었으며,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이 나오던 시기임
 - 문건에서 확인한 바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은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로 올라있는데, ‘연세대교수 131명 세월호 참사 정부대책촉구 시국선언(2014. 5. 14.)’, ‘강원대 교수 107명 세월호 참사 대통령 책임 시국선언(2014. 5. 24.)’ 등을 그 예로 볼 수 있음

- 복수의 박근혜 정부 청와대 및 문체부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 관련 진술 및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시국선언=반정부 투쟁’으로 규정하였음
 - 송광용 전 교문수석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정권 퇴진운동에 앞장 서는 단체를 반정부적인 단체로 언급했다”고 진술했고, 모철민 전 교문수석은 “세월호 시국선언을 반정부적 활동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음

• 연세대교수 131명 세월호 참사 정부대책 촉구 시국선언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 강원대교수 107명 세월호 참사 대통령 책임 시국선언
• 강원대교수 107명 세월호 참사 대통령 책임 시국선언
• 미국산쇠고기 협정파기 촉구선언
• 서울대교수 124명 MB정부 비판 시국선언
•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시국선언
• 서울대교수 204명 세월호 진상규명 시국선언
•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교수 1000명
• 충북대교수 47인 국정원 선거개입 시국선언
• 미국산쇠고기 협정파기 촉구선언
• 성공회대 교수 67명 세월호 시국선언
• 서울대교수 128명 국정원 시국선언
•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교수 1000명
• 서울대교수 124명 MB정부 비판 시국선언
• 전교조를 지지하고 사수하는 전국교수연구자모임
• 미국산쇠고기 협정파기 촉구선언
• 전교조를 지지하고 사수하는 전국교수연구자모임
• 미국산쇠고기 협정파기 촉구선언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 어린이책올리는사람들, 문재인 지지	지원배제
• 문재인 지지 1만명 예술인	지원배제
• 안철수 팬클럽(작가 74명)	지원배제
• 경남문화예술인 869인 문재인 지지	지원배제
• 문재인 지지 1만명 예술인	지원배제
• 문재인 지지 1만명 예술인	지원배제
• 문화예술계 531인 민주노동당 지지	지원배제
• 전북 문화예술인 문재인 지지	지원배제
• 문재인 지지 1만명 예술인	지원배제
• 노사모 및 문재인 지지	지원배제
• 노사모 및 문재인 지지	지원배제
• 문재인 지지 1만명 예술인	지원배제
• 어린이책올리는사람들, 문재인 지지	지원배제
• 어린이책올리는사람들, 문재인 지지	지원배제

-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문건에는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외에도 각종 시국선언이 등장하는 데 다음 표와 같음

박근혜 정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기재된 시국선언
△연세대 교수 131명 세월호 참사 정부대책 촉구 시국선언 △강원대 교수 107명 세월호 참사 대통령 책임 시국선언 등 △문화예술인 269인 진보신당 지지선언 △전라북도 문화예술인 115명 문재인 지지선언 △문화예술계 531인 민주노동당지지 △문재인지지 1만명 예술인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 문재인지지 △연극인 1000인 문재인지지 △경남지역 문화예술인 869명 문재인지지 △연극인 513명 문재인 지지 △문-안 단일화 촉구 서명활동 △트위터를 통하여 문재인 지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운동 △콜트 등 노동자 2000일 투쟁지지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교수 1000명 △부경대교수 20명 국정원 시국선언 △박원순 지지선언 △미국산 쇠고기 협정 파기촉구 1천명 교수 시국선언 △전교조를 지지하고 사수하는 전국 교수 연구자 모임 △건국대 교수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선언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시국선언

4) 문건의 특이점 2 : 문화예술계 비롯 각 분야 블랙리스트 망라

- 이 문건은 문화예술계 말고도 각종 노동, 복지 분야 단체와 인사들이 대거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정부가 만든 각 분야에 블랙리스트가 가동됐음을 보여줌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나타난 부처별 배제대상(문체부 제외)	
부처	배제 대상
고용노동부	<p>△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부산여성회 △대구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일반노동조합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청남도공공일반 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전국선설산업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p> <p>■ 고용노동부 각종 공모사업 심사위원 △류장수 부경대 교수 △이인재 한신대 교수 △박준식 한림대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어수봉 한기대 교수 △엄창욱 경북대 교수</p> <p>■ 고용노동부 각종 위원회 위원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교수 △류장수 부경대 교수 △석인선 이화여대 교수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장영철 경희대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조우현 숭실대 교수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p>
교육부	<p>△민족문제연구소</p> <p>■ 교육부 각종 위원회 위원 △전형수 대구대 교수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하연섭 연세대 교수</p>
통일부	<p>△어린이어깨동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p> <p>■ 통일부 각종 위원회 위원 △백준기 한신대 교수</p>
농림축산식품부	<p>△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도시농업시민협의회</p> <p>■ 농림부 각종 위원회 위원 △김경량 강원대 교수 △이재선 강원대 교수 △최영찬 서울대 교수 △김종연 충북대 교수 △박창길 성공회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p>
보건복지부	<p>△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한겨레신문 시니어직능클럽</p> <p>■ 보건복지부 각종 공모사업 심사위원 △이재용 한림대 교수 △조흥식 서울대 교수 △홍선미 한신대 교수 △남진열 제주대 교수 △이재완 공주대 교수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 △이문국 안산대 교수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p>

	<p>■ 보건복지부 각종 위원회 위원 △권순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진영 서강대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조성재 대구대 교수 △주은선 경기대 교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팀장</p>
환경부	<p>△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p> <p>■ 환경부 각종 위원회 위원 △김재기 대구대 교수 △김흥균 한양대 교수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시원 강원대 교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윤순진 서울대 교수 △정연숙 강원대 교수 △조우 상지대 교수</p>
기획재정부	<p>■ 기획재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 △박능후 경기대 교수 △박병현 부산대 교수 △윤순진 서울대 교수</p>
미래창조과학부	<p>■ 미래창조과학부 각종 위원회 위원 △조만형 한남대 교수</p>
법무부	<p>■ 법무부 각종 위원회 위원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p>
안전행정부	<p>■ 안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재은 경기대 교수 △최경실 이화여대 교수</p>
산업자원통상부	<p>■ 산자부 각종 위원회 위원 △김민배 인하대 교수 △윤순진 서울대 교수 △임운택 계명대 교수</p>
여성가족부	<p>■ 여가부 각종 위원회 위원 △김창록 경북대 교수 △하종문 한신대 교수</p>
국토교통부	<p>■ 국토부 각종 위원회 위원 △박화진 부경대 교수 △석인선 이화여대 교수 △손희하 전남대 교수 △양보경 성신여대 교수 △양현미 상명대 교수 △이명우 전북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이학기 동아대 교수 △장창곡 동덕여대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조명래 단국대 교수</p>
해양수산부	<p>■ 해수부 각종 위원회 위원 △이찬원 경남대 교수</p>
법제처	<p>■ 법제처 각종 위원회 △김민배 인하대 교수</p>
국가보훈처	<p>■ 보훈처 각종 위원회 △윤일규 순천향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p>
식약처	<p>■ 식약처 각종 위원회 △남부원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홍진태 충북대 교수</p>
농촌진흥청	<p>■ 농진청 각종 위원회 △김선일 한국유기질비료협동조합 이사장</p>
산림청	<p>■ 산림청 각종 위원회 △최정우 목원대 교수</p>
소방방재청	<p>■ 소방방재청 각종 위원회 △최정우 목원대 교수</p>
공정거래위원회	<p>△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p>
국가인권위원회	<p>△노동건강연대 △(재)호루라기 △환경정의</p>
총계	<p>△14개 부, 3개 처, 3개 청, 2개 위원회 등 총 22개 부처 △단체 35곳, 개인 88명 등 총 123건(중복 포함)</p>

- 위 표처럼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 3개 처, 3개 청, 2개 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했으며 블랙리스트 단체 35곳, 블랙리스트 인사 88명 등 총 123건(중복 포함)의 리스트가 등재됐음.
 -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타 부처에서도 광범위하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불법적인 행태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위원회 조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추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됨

2.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2014~16)

리스트-‘16.9.27현재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사업명	검토내용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1차) (‘15.12.11)	○연극, 무용분야 해당없음-K(15.12.21) ○타 분야도 결과가 늦어지므로 먼저 진행할 것(16.1.7)-k ○B확인(1.21)

1) 문건의 작성 주체 및 경위

- 문체부 예술정책과 000 서기관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성·보고·관리한 문건으로 소위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이하 관리리스트)’로 불림. 2014년 2. 경부터 2016년 9. 27.경까지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작성, 보고, 관리되어온 것으로 파악됨
 - 위 서기관은 2012. 4. 17.부터 2016. 8. 15.까지 예술정책과에 사무관·서기관 등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위 관리리스트에 기재된 ‘16. 9. 27. 현재’는 오 서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은 000 사무관이 업데이트한 것임
- 문건의 시초는 2014. 2. 청와대로부터 전달 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배제 명단으로 ‘관리리스트’ 12페이지에 1차 배제대상 문화예술인 16명의 이름이 아래 그림과 같이 기재돼 있음

2014 예술위 책임심의위원회(2014년도) - 19명

사업명	검토내용
2014 책임심의위원회 ('14.3월)	<p>(1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황현산(45년생), 방민호(65년생), 신덕룡(55년생), 김사인(56년생), 최수철(58년생), 정끝별(64년생), 나희덕(66년생), 방현성(방재석, 61년생)-제주해군기지반대, 국보법폐지 등) 김탁환(68년생) - 민노당원 진보신당 홍보대사 ○시각예술: 김장언(민노당지지, 시국선언), ○연극: 차근호(노무현스토리제작비 모금, 시국선언), 안치운(전교조해직교사 철회축구, 김삼곤지지) ○무용: 백영태(시국선언), 김의곤(상명대 영화영상조교수-소고기협정폐기축구, 대운하반대) ○음악: 민경찬(적기가논란) ○전통예술: 류형선(문익환방북현정) <p>(2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서영채(61년생), 임철우(54년생)- 시국선언, 좇불시위/ 정호승(50년생) - 노무현시민학교 강좌, 국정원국기 문란비판 성명, 미국규탄성명)

○ 이후 문체부와 예술위 등 공공기관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정원과 협업을 거쳐 ‘관리리스트’ 를 업데이트하였음. 다음의 표는 000 예술정책과 사무관을 중심으로 구축한 관리리스트 작성 경위임

날짜	진술 및 재판자료 등으로 재구성한 내용
2014. 2.	배제리스트는 초창기에는 예술위 대상으로 예술정책과로 내려왔음. 2014. 3. 있었던 예술위 책임심의위원회 선정 배제 명단이 처음이었음
2014. 2.~12.	청와대는 문체부에 ‘예술위의 좌편향 개인, 단체 지원행위에 대해 감독을 잘하라’는 지시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함. 수시로 선정단체에 대한 질문을 하며 왜 선정했는지 해명을 요구했으며, 문체부 000은 이에 해명자료를 보내기도 함.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지원 제지 대책을 하달했는데, ‘문체비서관 김소영→예술정책관 000→예술정책과장→ 000 사무관’으로 하달
2014. 하반기	000 예술정책관과 김소영 문체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10에게 검증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하라는 지시를 받음. 000 사무관은 11월 중순 혹은 말경부터 000 국정원 10에게 신청자 명단을 건네기 시작함.
2014. 11.	000 사무관은 2015 문예기금 정기공모 신청자 리스트 전체를 000 행정관 이메일로 보냄. 블랙리스트 명단의 본격 적용이 시작됨.
2014. 12.~2015. 1.	문체비서관실에서 000 국장에게 개별 사업별로 사업배제 개인, 단체 명단을 알려주었으며 이를 000에게 하달해 예술위 000, 000, 000에게 알려주며 지원배제를 요청함

2015. 4.	2015.4.13. 정무리스트.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은 2015. 4. 13.경 청와대에서 받은 명단을 '정무리스트('15. 4. 13. 현재)/중요)-59명'이라는 이름으로 보관함
2015. 7.	OOO 과장이 'BH 정무에서 받았다'며 리스트를 OOO 사무관에게 전달 (2015. 7. 6. 리스트)
2015. 7. 중순	청와대·국정원 연락창구가 OOO 사무관으로 단일화됨. 청단일화 지시는 OOO 행정관에게 전화로 받았음
2015. 12.	OOO 사무관이 예술위 심의위원 풀 명단을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냈으나, 회신이 각각 2016. 2., 2016. 7.에 왔고 그 사이에는 예술위가 자체적으로 보수성향의 심의위원을 선정해 진행

- 위 표처럼 2014. 2. 경 문체부로 처음 하달된 명단은 2014.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데, 이 시기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이 가시화된 시점이기도 함
- 이후 2014. 11. 경 문체부는 '2015 문예기금 정기공모 신청자 리스트' 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본격적인 검증과 함께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본격 작동하기 시작했음
- 각종 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의 구조 역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구조는 아래 표와 같이 파악됨

박근혜 정부 문체부 관리리스트 프로세스

① 예술위 등 지원기금 주관기관, 문체부에 신청자 명단 전달→②문체부, 누적리스트로 자체 판단해 1차 표시→③문체부, 국정원·청와대에 신청자 리스트 송부(인적사항, 주민번호 포함)→④국정원, 교문수석에 배제명단 전달→⑤교문수석, 문체비서관 혹은 교문수석실 행정관에 배제명단 전달, 정무수석실 검토의견 반영→⑥문체비서관, 문체부 예술정책관에 배제명단 전달→⑦예술정책관, 문체부 장차관에 배제명단 보고→⑧문체부 장차관, 예술정책관에 배제명단 승인→⑨예술정책관, OOO 사무관에 배제명단 전달→⑩OOO 사무관, 예술위 등 주무기관에 배제명단 전달→⑪주무기관 '실행' ⑫양해 필요시 주무기관, OOO사무관에 전달→⑬OOO사무관, 문체부에 내부 보고→⑭문체부, 교문수석실에 양해 요청

2) 문건의 규모 및 주요 내용·특징

- 위원회 블랙리스트 DB 분석 결과, 관리리스트에 오른 블랙리스트 문화예술단체는 281곳(중복 제외), 문화예술인은 622명(중복 제외)으로 총 903건의 블랙리스트가 등재돼 있음

- 관리리스트는 △2016년 예술정책과 소관사업 △기타사항 확인 리스트(K) △2014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연극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융합복합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소외계층문화순회 2015 예술위 공모사업 △시각예술분야 2015 공모사업 △기존관리리스트 149명 △정무리스트(15. 4.13 현재) 중요-59명 △2015 연중사업 리스트-262명 등 11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음
- 이 관리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은 대다수가 실질적인 배제 피해를 당했으며 30건만 문체부 양해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음
 - 양해의 사유는 이미 지원에 선정돼 해당 단체와 개인에게 통보되었거나 당시 여권 정치인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유 등이었음
 - 또 양해 표시 뒤에는 ‘추후 제외할 것’ 등의 문구가 붙어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음

3.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리스트 113명 리스트(2015. 7. 6. 받음)

2015. 7. 6 받음

연번	사업명	지원사업명	신청내역	대표자	지원상용금액	분야	참고사항
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구도 문화> 발간	김영갑	김영갑	10,000,000	동시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김영갑	김영갑	10,000,000	동시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영갑	김영갑	10,000,000	동시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4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동시집 '아래의 날개'(가제) 발간	김영갑	김영갑	10,000,000	동시	문화예술계 531인 연두노동당 지지선언(2006.5.23)
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동시집 '달간'	박철민	박철민	10,000,000	동시	광남지역 문화예술인 889명 온재인 지지선언(2012.12.15)
6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구도 친구 하나> 발간 (가제)	유영갑	유영갑	10,000,000	동시	문화예술계 531인 연두노동당 지지선언(2006.5.23)
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미희 동시집 <은유 담긴 향아래>	김미희	김미희	10,000,000	동시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8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문학	조인숙	조인숙	10,000,000	동시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9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최영성	최영성	10,000,000	동화, 단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10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박철민	박철민	10,000,000	동화, 단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1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문학창작집 발간 지원	박철민	박철민	10,000,000	동화, 단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1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시경 중화 장미집	미나영	미나영	10,000,000	동화, 단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1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동행할 만한 고향을 찾자	김미애	김미애	10,000,000	동화, 단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14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015년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김미애	김미애	10,000,000	동화, 단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첫사랑은 연수종> 발간	최영남	최영남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16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영화감독 나탈리야의 티라노사우루스	김효미	김효미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이미애	이미애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18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동화 작품집 발간	백승남	백승남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19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최은영	최은영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20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유정	김유정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2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조용희 소설 배후	김영민	김영민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2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리사	김리사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2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말두살의 모나리자 2	임지향	임지향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24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고수일 집안> 발간	이금숙	이금숙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2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영진	김영진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26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최은숙	최은숙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2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장편소설 <디 나브> 발간	신자은	신자은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28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이성진	이성진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29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이희복	이희복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30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그레고 뎀브라 우리집	강정연	강정연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3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할라 세계 작품집 발간	김혜은	김혜은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3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개일'을 대의 시간 발간	박광희	박광희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3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정원	김정원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34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한류의 유년기를 가늠 소설	김은희	김은희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3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장편소설 <꿈꾸는 로트 허브> (가제)	신정연	신정연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36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홍기훈	홍기훈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3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로키]로 구성된 작품 발간 사업	이병훈	이병훈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38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로얄티 노래> 발간(가제)	이성희	이성희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39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정영복	정영복	10,000,000	동화, 장편	여권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만 지지 선언(2012.12.15)

1) 문건의 작성 주체 및 경위

- 해당 문건은 '2015. 7. 6.자 정무리스트' 로 문체부 000 예술정책과장이 2015. 7. 5.경 청와대에서 000 행정관으로부터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신청자 105명을 포함하여 참고사항으로 '문재인 지지선언' 등이 기재되어 있는 113명의 해당 문

건을 받아, 이를 문체부 예술정책과 000 서기관에게 정무수석실에서 받은 것이 라면서 전달하였음

- 000 서기관은 000 과장으로부터 해당 리스트를 전달받으면서 2015. 7. 6. 수 령일자를 문건 상단에 가필로 기재하였음

○ 해당 문건의 경우 당시 청와대 행정관 000은 자신이 000과장에게 전달한 문건 은 맞으나 작성자는 본인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바, 문건의 작성주체는 다소 불분 명한 점이 있음

- 당시 교문수석실은 검토 명단을 정무수석실로 송부하여 검토의견을 받아 문체 부에 하달해온 진행과정에 비추어, 해당 문건 또한 정무수석실에서 검토한 것 으로 추정됨

2) 문건의 규모 및 기초 내용

○ 이 정무리스트에는 단체 4곳, 개인 104명 등 총 108건이 기록돼 있으며 이는 중 복 제외를 한 수치임

○ 해당 문건에 기재된 자들은 대부분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 사업의 신청 자들로, 2015. 7. 5.~6.경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다시 배제지시 대상자 명단을 하 달한 내용임

3) 문건의 특이점 : 구체적인 배제사유 기재

○ 해당 문건은 이례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배제사유가 “참고사항”에 명 시되어 있음

- 기재된 구체적인 배제사유는 ‘문재인 지지선언, 민주노동당 지지선언(2006. 5. 23.), 정권 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 소설가 137명 선언(2012. 12. 14.), MB정부 비판 6. 9. 작가선언(2009. 6. 9.), 안티조선 지식인 선언 명단(2000~ 2001), 조선 일보 거부 1차 지식인 명단(2008. 9. 20.), 야권단일후보 지지성명(2012. 4. 8.),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연석회의 참석자’ 등임

④ 블랙리스트의 출처 : 박근혜 정부, 세월호 시국선언 등 각종 시국 선언 명단 활용

1. 세월호 시국선언 등 9473명 시국선언 리스트

합계	총 9,473인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 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 (문화예술인 4,110인, 경남 문화예술인 869인, 전북 문화예술인 115인, 부산 문화예술인 423인, 서울연극협회 1,000인)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1,608인 (문화예술인 909인, 문화예술인 71인, 여성 문화예술계 628인)

<위원회가 입수한 박근혜 정부 당시 시국선언 9473명 명단 표지. 전체 60페이지 분량>

1) 문건의 작성 주체 및 경위

- 이 문건은 000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이 2015. 4. ~ 5.경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으로 위원회는 이 시국선언 문건이 지원 배제에 실제 블랙리스트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음
-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2015. 5.1)’, ‘4.16 세월호 참사와 우리의 현실에 대한 문학인 시국선언(일명 세월호 시국선언)’ 등 문화예술인 9473명의 명단이 실려 있음
 - 2015. 4.경 당시 000 청와대 행정관은 000 사무관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등 카테고리를 지정해 알려주면서,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 명단을 확인해서 장관한테 보고하고 교문수석실로 보내라고 지시했음

- 000 사무관은 이와 관련 특검에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더니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1,608인 등 총 9473인으로 확인이 되어 이 표로 작성했다” 고 진술함
- 000 사무관은 당시 000 예술국장에게 내부 메일에 앞 표와 사이트 주소창(URL)을 붙여 메일로 보냈음

2) 문건의 규모 및 주요내용

- 위원회가 세월호 시국선언 등 9473명 시국선언 리스트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8,229명 규모로 분석됐음(중복자 제외)
- 9473명 시국선언 리스트는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000 주무관이 보관하고 있던 블랙리스트 사본을 2018. 1. 31. 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하면서 확보한 문건임
 - 이 문건은 2015. 4.경 000 사무관이 예술정책과 000 서기관으로부터 받아 온 것인데, 000 주무관이 이를 한 부 복사해 집에 보관해 두고 있었던 것임
- 이 문서의 존재는 한국일보 보도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2016. 10. 12.)’ 를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음
- 이 문건은 2015년 5월 6~7일 출력됐으며 60페이지 분량임. 목차는 아래와 같음

시국선언 및 지지선언	보도매체	보도 날짜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명 명단	한겨레	2015. 5. 1
문학인 754명 시국선언	미디어오늘	2014. 6. 2
문화예술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문 및 명단 4111명	한두메	2012. 11. 20
문화예술인 1만인, 문재인 지지선언	세상돌아가는 소리	2012. 12. 12
경남 문화예술인 869인 문재인 후보지지	고성인터넷뉴스	2012. 12. 10
전북지역 문화예술인 115명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데일리 전북	2012. 11. 1
부산 문화예술계 인사 423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2012. 12. 13
서울연극협회 문재인 후보지지 연극인 1000인 선언	서울포스트	2012. 12. 7
문화예술인 900여명 박원순 지지선언문 전문	폴리뉴스	2014. 6.3
연극인들 박원순 서울시장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지지 선언	월드스타	2014. 6. 2
도종환 등 문화예술인 71명 박원순 지지선언	조은뉴스	2011. 10. 20
628명 여성 문화예술계 박원순지지 성명	매일일보	2011. 10. 19

3) 문건의 특이점 : 시국선언 명단 실제 적용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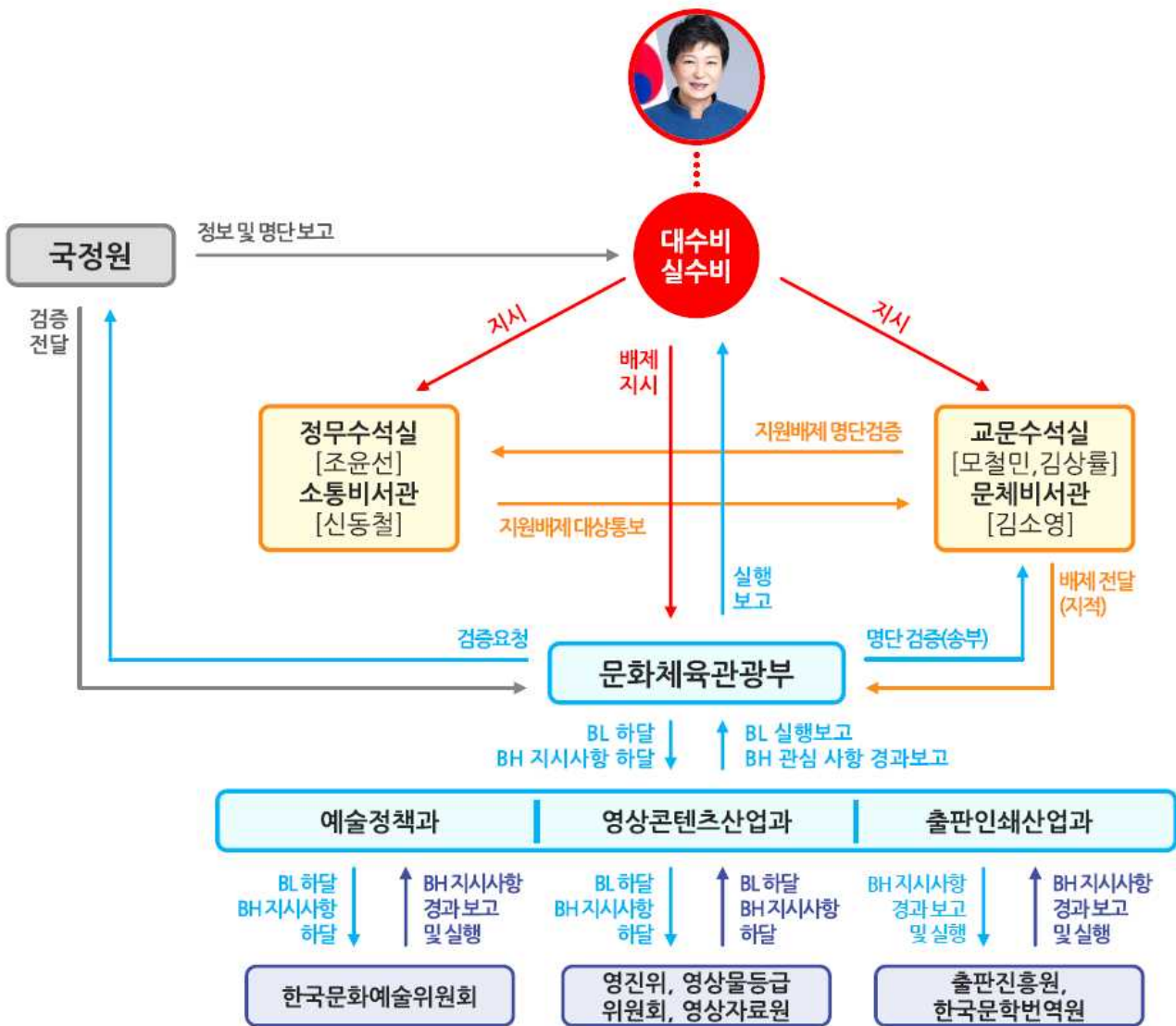
□ 리스트 관리 체제

- ①청와대가 문체부 간부들을 통해 별도 전달한 경우(예: 정무리스트 등) ②청와대에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면, 배제해야 할 명단을 우선으로 불러주는 경우 등
→ █████ 서기관이 세부사업별로 <일지 형식>으로 자세히 정리(2013.10월~2016.9월)
※ 2013년말~2016년 배제지시에 따른 총 점검(확인) 인원: 600여명
- 한국일보에 보도(1012.)된 9,473명 블랙리스트
 - 2015년 5월경, 실제 청와대(교문수석실)에서 4개 카테고리(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지지선언 등)를 우선으로 불러주며,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정리해 보고할 것을 지시
 - 1쪽 표만 정리하여(첨부는 인터넷 자료 스캔) 청와대에 보고한 결과, 교문수석실에서는 동 인원 전체를 모든 사업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 그러나, 동 명단은 과도하게 많은 명단인데다, 세부인적사항도 없는 등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 → 실제 지원사업에서는 참고하는 수준에 불과(실제 적용 곤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관련 그간 경과 및 현황분석' 문건 중 시국선언 명단 관련 부분>


- 앞서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관련 그간 경과 및 현황분석’ 문건을 통해 시국선언 명단에 대해 ‘실제 적용 곤란’ 이라는 입장을 냈으며,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한 바 있음
 - 문체부는 위 문건에서 ‘한국일보에 보도된 9473명 블랙리스트’ 에 대해 “동 명단은 과도하게 많은 명단인데다, 세부 인적사항도 없는 등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 실제 지원 사업에서는 참고하는 수준에 불과(실제 적용 곤란)” 이라고 적시함
-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문체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복수 직원들이 시국선언 명단(출력본)을 통해 지원 사업 배제 여부를 결정했다는 진술 △시국선언 명단을 필요할 때마다 문체부 각 과에 전달했다는 000 서기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9473명의 시국선언명단이 실제 블랙리스트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문체부 예술정책과 000 서기관은 이와 관련해 위원회 조사에서 영상콘텐츠산업과, 국제문화과, 지역전통문화과, 공연전통예술과 등 각 문체부 부서에서 지원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박근혜 정부 시국선언 9473명 명단’ 을 전달했다고 진술함
 -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복수의 직원들은 이 시국선언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활용하였으며, ‘본부(문체부)에서 해당 명단을 보고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미 대상자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예술가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배제하라’ 는 지시를 상급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함

4 블랙리스트 실행체계 및 구조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 청와대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시발점은 2013. 3. 15. 국정원에서 청와대 정보보고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조성」으로 추정
-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되어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배제 방침의 시발점이자, 향후 블랙리스트 작성 및 하달의 단초가 됨
- 2013. 8. 5. 김기춘 비서실장 취임
 - ▶ 김기춘 실수비(8. 9.) - “집단행동에 대처하고, 체제수호에 대한 신념을 확립하여야 하며, 헌법·체제에 대한 도전은 용납되지 않는다.”
 - ▶ 박근혜 대수비 -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 문제가 많다”는 발언을 하는 등 대수비 외에 당 최고위원 모임 등에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 ▶ 김기춘 실수비(8. 21.) - “종북 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 ▶ 김기춘, 2013. 12.말경 “쫓부처 좌편향 지원 문제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라” 지시

 대통령 서면 보고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실) 2013. 12.20	
□ 개 요	
보고 제목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 보고
보고자	국정기획수석(기획비서관)
	<input type="checkbox"/> 금일(12.20일, 08:30)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첨부외 각 수석실별 안건이 보고·논의되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위원, 각부 실국장 등 쫓 공직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함. 각 부처가 반국가적, 반체제적 경향을 보이는 단체나 기관의 행사사업에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임 - 각 수석은 관련부처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정토록 할 것

- ▶ 김기춘, 2014. 1.초에는 문체, 교육, 행안, 고용 등 특정 부처를 찍어 NGO에 지급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 지시

 대통령 서면 보고서 국정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실) 2014. 1.3	
□ 개 요	
보고 제목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 보고
보고자	국정기획수석(기획비서관)
보고 내용	<input type="checkbox"/> 규일(1.3일, 08:30)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첨부 각 수석실별 안건이 보고·논의되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acted] ● [Redacted]
● 문체부, 안행부, 교육부, 고용부 등 산하에 많은 NGO를 지니고 있는 부처들은 그동안 재정지원 해운 산하 NGO들에 대해 단체 성격, 단체대표 성향, 단체 수행사업 등에 대해 조용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 국고 지원을 지속할지 여부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찾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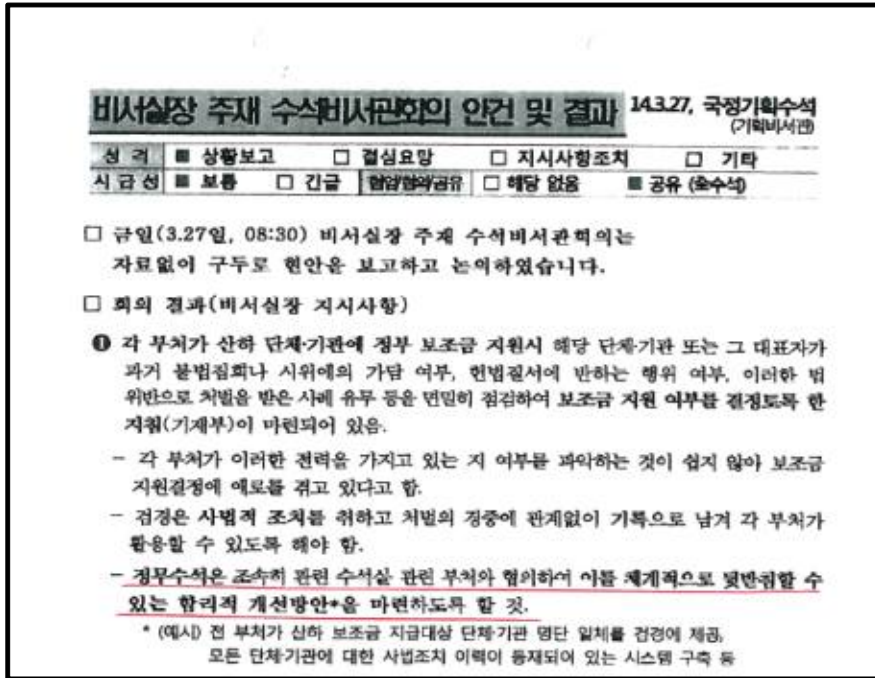
- 문체부, 2014. 1.말경 좌성향 민간 보조사업 지원 배제책 청와대에 보고 추정. “문화예술분야 민간보조사업에 이념시비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단체, 좌편향 단체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산집행 전 과정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균형적인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는 방침”

문체부장관, 좌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 강구 지시

2014. 1. 24

1. 유진룡 장관은 문화예술분야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이념시비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불법단체, 좌편향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산집행 전 과정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균형적 심사위원 구성을 통해 심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

- 2014. 3. 27. 박근혜와 김기춘은 실수비 및 대수비 통해 특정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배제 방안 마련을 위한 준비 단계 지시



- 2014. 4.초 정무수석실 주도 TF 만들어 전 부처 소관 정부보조금이 민간단체에 지원된 것을 전수조사, 그 중 좌파단체에 지원된 것에 대한 대책 보고 지시
-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신동철 2014. 4. 4. ~ 5.말까지 관련 비서관들과 민간단체 보조금TF를 구성, 보조금 지원관련 대책 마련. TF 결과물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을 내놓고 김기춘, 대통령 보고 후 관련 부처 하달

□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

-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신동철은 민간단체보조금TF 결과물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을 작성해 문체비서관실을 통해 문체부에 하달
- 문체부에서 공모 사업 신청자 명단을 문체비서관실을 통해 송부하면, 검증 후 지원 배제자를 표시해 문체비서관실로 인편으로 송부

□ 교문수석실 문체비서관

- 교문수석실 문체비서관 김소영은 최초의 블랙리스트를 문체부 차관 조현재에게 전달
- 문체부로부터 공모 사업 신청자 명단을 받아 검증을 위해 인편으로 정무수석실에 전달. 지원 배제자 표시된 명단을 재전달 받아 문체로 하달

□ 국정원

- 보조금 신청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물 검증 요청시 성향 검증을 통한 지원배제 여부 결정에 관여
- 국정원 IO는 문체부 및 소속기관 직원들로부터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한 정보 등을 수집, 청와대에 수시로 정보 보고

□ 문체부 건전콘텐츠활성화TF

- 2013. 8. 김기춘 비서실장 부임 이후, 청와대 기조가 바뀌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3. 9. 9. 문화예술정책점검TF 구성. 연극 개구리 논란 대응책 제시 과정에서 발족. 문체부 1차관이 주재하여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정책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예술정책관 등 1주 1회 회의 운영. 블랙리스트가 내려오기 전으로 청와대의 지시 사항에 문체부 대응책 마련 창구 역할
- 주요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으로는
 - 2013. 10.31. 우수문학도서 선정시 좌편향 배제지시(제도 개편으로 2014년도부터 선정기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변경)
 - 2013. 12.- 2014.2. 청와대지시에 따라 문체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 2014. 2. 21.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등 보고
 - 2014. 2. 21. 이후 청와대 지시로 국정원에 지원기금 대상자 인물검증 요청수행
 - 2014. 2 경. 청와대로부터 문예위 책임심의위원 배제 명단을 청와대로부터 수령
 - 2014. 3. 21. 예술인복지재단의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한국작가회의 등 선정되었다는 사유) 등이 있음
- 2014. 4. 16.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시행을 강화지시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점검TF는 건전콘텐츠활성화TF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이 시기부터 청와대로부터 구체적인 명단이 지속적으로 하달되어 이를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하기 시작함. 당시 주요 사건으로는 2014. 9.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및 이후 대책 등이 있음
- 2014. 8. 김종덕 장관 부임 이후에도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계속 운영됨. 2014. 10. 경 당시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이었던 문체부 1급 3명에 대한 강제사직이후 TF활동 강화. 2014, 10. 21.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을 청와대에 보고. 이후 이 문건에 담긴 문화예술(문예기금 지원, 비엔날레 사업), 콘텐츠(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 미디어(세종도서 선정) 등 3개 분야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위한 제도 변경 등 대책 마련 기구역할을 함. 소속 공공기관에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변경(심사위원 위촉절차, 심사제도) 등 지시, 배제명단 하달 지속적 실행함.

□ 지원배제 업무 단일화

-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2013. 9. 9.부터 2015. 4. 20.까지 운영되고 중단됨. 2015. 2.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임과 예술국 000 사무관으로 지원배제 창구가 단일화 되면서 건전콘텐츠활성화TF 또한 해소
- 000 사무관으로 창구가 단일화된 것은, 생태계 진흥세부 실행계획 등으로 심사 위원제도나 심의절차 등 좌파배제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시스템 정착이 마무리 되어 TF를 통한 정책적, 제도적 논의보다는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정치적 성향 검증 위주로 블랙리스트 실행 업무의 내용이 단순해진 것이 요인으로 추정됨

Ⅲ. 분야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1-1 조사 신청 현황

① 조사신청 마감 결과

- 위원회는 2017년 8월 31일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또는 관련 단체들의 조사신청을 접수 받았음
 - 온라인과 우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조사신청 건수는 총 120건임
- 신고를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내부고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 실명제보를 가능하게 하여 총 55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음
- 총 조사신청 및 제보 건수는 아래와 같음

	조사신청	실명제보	익명제보	합계
접수현황	120건	35건	20건	175건

② 조사신청 및 제보 관련 현황 분석

1. 분야별 신청현황

- 가장 많은 제보 및 조사신청이 접수된 분야는 연극, 무용 등 공연 분야(총 51건)이며, 그 뒤를 이어 영화 분야(33건), 문학 분야(18건) 순으로 신청 접수가 많았음
- 미술, 만화, 사진 등 시각예술 분야는 총 11건의 제보 및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전통, 출판 분야 역시 각 5건씩의 피해 조사 신청이 접수되었음
- 기타로는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구별할 수 없거나 특별한 사건들이 접수되었으며, 구체적 사례로는 ▲MB 정부 시기 블랙리스트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 ▲국정원, 군대에서의 문화예술인 개인 사찰 의혹 제기, ▲문화재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악방송,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블랙리스트 연관 사건에 대한 조사신청이 접수되었음

○ 분야별 조사신청 및 제보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분	공연	문학	시각	영화	전통	출판	기타	합계
조사신청	38	15	7	19	4	4	33	120
실명제보	11	3	2	8	1	-	10	35
익명제보	2	-	2	6	-	1	9	20
소계	51	18	11	33	5	5	52	175

2. 조사신청을 통해 추가 확인된 블랙리스트 의혹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원배제와 관련하여 특검 수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블랙리스트 의혹이 조사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기되었음

- 가장 많은 지원배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외에도 ▲예술인경영지원센터 ‘재외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작가미술장터지원사업’ 등에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었음
- ▲한국문학번역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공모사업 지원 배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및 심의위원 배제, 권고사직 의혹까지 추가로 조사신청이 접수되었음

○ 특정 사업에서의 지원 배제를 넘어서 ▲국립극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국악원 등 국립예술단체에서의 작품 사전검열 및 공연취소 등의 사건들이 조사신청을 통해 새롭게 확인되었음

- 공연 외에도 ▲전시, 만화 분야에서 세월호 관련된 내용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외압 및 배제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었음
- 영화 분야에서도 ▲〈불안한 외출〉, 〈자가당착〉 등 소위 ‘문제영화’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사후 모니터링 강화, ▲〈잼다큐 강정〉, 〈천안함 프로젝트〉, 〈다이빙벨〉 등 사회비판적인 독립영화의 상영 금지 지시 및 상영 검열 의혹 등이 제기되었음
- ▲재외한국문화원에서도 특정 영화 상영 배제 및 전시 외압 등이 있었음이 피해 당사자들의 조사신청을 통해 드러났음

- 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지원사업에서의 배제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검열’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작동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기존 수사 혹은 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피해의 유형을 보여줌
 - 이 외에도 ▲청와대와 국정원을 통한 문체부 산하기관 및 지역문화재단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과 배제 등 다양한 유형의 블랙리스트 작동이 조사신청을 통해 파악되었음

- 또한,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특혜 의혹들에 대한 조사신청 및 제보도 접수되었음
 - 특히 ▲모태펀드 운용 과정에서 특정 영화에 대한 정치적 검열이 작동됨과 동시에 화이트리스트 의혹이 제기되었는바, 소위 ‘건전영화’에 대한 차별적 특혜 지원 및 정부의 부당한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음

<주요 조사신청 접수 목록> (2017. 8. 31.~11. 30. 접수마감)

순번	분류	관련기관	사건명
1	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 지원사업에서 특정 극단 배제 사건 등 다수
2	공연	국립극단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검열 사건
3	공연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 부당개입 사건
4	공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찾아가는 연극’ 검열 배제 사건
5	공연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외문화원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배제 사건
6	공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사위원명단 제출 거부에 따른 권고사직 강요 사건
7	공/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사건
8	문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집회·시위 불참 조건부 지원 확인서 강요 사건 (MB정부)
9	문학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지원배제 사건
10	문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사건
11	문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및 심의위원 배제
12	문학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공모사업 배제 의혹 사건

13	시각	베를린문화원	베를린 한국문화원 "○○○ ○○" 전시 지원 취소 사건
14	시각	뉴욕문화원	뉴욕문화원 기획전시 '○ ○○ ○○○○' 취소 건
15	시각	예술경영지원센터	작가미술장터지원 사업 선정 배제 사건
16	시각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展 검열 사건
17	시각	광주비엔날레 등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등 특정 화가의 작품 배제 사건
18	시각	한국콘텐츠진흥원	세월호 만화 '연재만화제작지원사업' 지원 배제 사건 등
19	영화	영화진흥위원회	MB정부, 독립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배제 사건
20	영화	영진위/영상자료원	영진위 제작지원 심사위원 및 한국영상자료원 필진 배제 사건
21	영화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 '○○○ ○○' 검열 및 상영 방해 사건
22	영화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 직영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특정영화 상영 검열
23	영화	영화진흥위원회	모태펀드 운용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의혹 사건
24	전통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기획공연 '○○○○' 공연취소 사건
25	전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전통문화예술원 선정 배제 사건
26	출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진흥원 이사선임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부당개입 의혹
27	출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등 세종도서 배제 사건
28	출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사업 주관단체 선정 배제 사건
29	기타	국가정보원	MB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블랙리스트 사건
30	기타	검찰	정치풍자 예술행위에 대한 정부기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31	기타	문화재청	문화재청 위원 임명 취소 사건
32	기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MB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33	기타	지역문화재단	문화재단 내 블랙리스트 지원배제 및 좌파문화단체 차별 강요
34	기타	아시아문화전당	전시 프로젝트 사전 검열 및 부당 인사 조치
35	기타	국악방송	국악방송 사장 임명 관련 의혹 사건

1-2 조사 개시 및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현황

- ▲ 조사신청 112건과 직권조사 32건 등 총 144건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함
- ▲ 위원회는 조사신청 90건과 직권조사 15건 등 총 105건에 대하여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 (2018. 4. 30. 현재)
- ▲ 현재 남아있는 조사신청 19건과 직권조사 17건 등 총 36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1] 조사개시 현황

1. 신청사건 조사개시

- 조사신청 121건²⁾ 가운데 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4건에 대하여 신청각하 결정을 하였고 5건은 신청인 스스로 조사신청을 취하하였음
- 위원회는 2017년 9월 15일 제7차 전원위원회의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등’극단 ○○○’ 선정배제 사건’ 과 ‘한국문학번역원 ○○○ 등 지원 배제 사건’ 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19일 제22차 전원위원회의 ‘박근혜 정부의 마을라디오 활동 외압 의혹 사건’ 까지 총112건에 대하여 신청사건 조사개시를 결정함

2. 직권사건 조사개시

- 위원회는 조사 신청되지는 않았지만 조사해야 할 의미 및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발굴하여, 진상조사소위원회의 심의와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조사 사건으로 결정하였음
- 위원회는 2017년 9월 1일 제5차 전원위원회의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 과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사건’ 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2일 제27차 전원위원회의 ‘○○ 등의 인사개입을 통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까지 총 32건에 대하여 직권조사(직권사건 조사개시)를 결정함

2) 문학 분야 신청사건 1건을 2건으로 사건 분할하여 신청사건 총수는 121건임

<직권사건 조사개시 목록>

(2018. 4. 30. 현재)

순번	분류	사건명
1	공연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사건
2	공연	공연예술창작산실 심사번복 요구 및 공연포기 강요 사건
3	공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실행사건
4	공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블랙리스트 실행사건
5	공연	(재)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6	공연	국립중앙극장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7	공연	블랙리스트 배제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
8	공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9	문학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지원 사업 파행 사건
10	문학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 등에 관한 직권조사
11	문학	한국문학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2	시각	광주비엔날레 전시 취소 외압 및 광주비엔날레 예산삭감 사건
13	영화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
14	영화	모태펀드 운용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15	영화	해외 한국영화제 특정 영화 배제 사건
16	영화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7	영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문제영화 검열·배제 사건
18	영화	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9	출판	출판진흥원 이사선임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사건
20	출판	출판진흥원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번역지원' 사업 배제 사건
21	출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22	기타	재외 한국문화원 블랙리스트 사건
23	기타	이명박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 사건
24	기타	박근혜 정부의 좌파 문화예술계 배제, 문화융성 정책입안 및 실행
25	기타	문체부 건전콘텐츠활성화TF 등의 구성 및 운영 사건
26	기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취재 지원 사업 등 특정언론 배제 사건
27	기타	한국콘텐츠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28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29	기타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30	기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인사 농단 의혹 사건
31	기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국가정보원의 관여 내용
32	기타	○○ 등의 인사개입을 통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②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현황

1. 신청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 신청사건 조사개시 112건 가운데 착오나 오해 등으로 인하여 3건은 신청인 스스로 조사신청을 취하하여 조사를 종결하였음
- 2018년 3월 23일 제29차 전원위원회에서 ‘퍼포먼스 활동가 ○○○의 정치풍자 전단 배포 및 살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처음 채택함
- 위원회는 2018. 4. 30. 현재 조사신청 90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함

2. 직권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 2018년 3월 23일 제29차 전원위원회에서 ‘2014년 광주비엔날레 ‘○○○○’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처음 채택함
- 위원회는 2018. 4. 30. 현재 직권조사 15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함

③ 조사활동의 주요 성과

1.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 문건, 자료, 진술 등 확보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방대한 문건, 자료 등을 취합 및 입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주요 관여자 및 피해자의 진술 확보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다수의 사실 관계 입증

2.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동 구조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입증 및 분석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주요 문건 분석 및 구조화
- 자료 분석을 토대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 구축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구조화, 객관화, 의미화 진행

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요 사건별 조사 진행 및 사실 입증

- 시간과 조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총 144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개별 사건들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 조사
- 개별 사건들에 대한 자료 및 진술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확인

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다양하고 광범위한 현장 문화예술인,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5.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진상조사 및 사회적 공론화 진행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의 출범 준비 과정에서부터 사건신청, 진상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에 이르기까지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에 기반하여 진행
- 진상조사위 활동 과정, 조사 결과 발표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사회적 공론화 형성

4 조사활동의 한계

1. 조사권한의 한계

- 위원회는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조직이 아니라 문체부 훈령(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2017. 7. 31.)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짐
- 정부 타 부처나 기타 공적기관, 개인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어 대상기관 및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음
- 이러한 한계로 말미암아 중요 자료 및 핵심 참고인에 대한 일부 조사는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경우 진행하지 못하였음

2. 조사활동 기간의 부족

- 위원회는 최초 6개월 및 3개월의 기한 연장 등 총 9개월간의 활동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이 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 개시된 신청사건 112건(접수 120건), 직권사건 32건 등을 조사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계를 드러냈음
-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로 대상자 및 대상기관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어 실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간 부족을 초래했음
- 이로 인하여 개별 신청사건 조사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직권사건 조사를 짧은 조사기한 내에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3. 일부 기관의 조사활동 비협조

- 문체부 내부 공무원과 소속기관 직원 일부는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함
- 이는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조사를 지연시키고, 조사활동의 장애요인이 되었음

2 공연 예술 분야

1. 개요

1) 내용요약

- 2013년 9월 연극 <개구리>(9.3.~15.)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하하는 한편 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자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음. 문체부는 향후 국립극단 등 국립예술 단체에 정치 편향적 소재의 내용은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하고, 2013. 9. 9.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구성하였음
- 2014. 2월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 및 혜화동 1번지·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 좌 성향 단체들이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선정되자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문제 제기를 하였고, 문체부는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심의제도를 개편하여 문제 예술인(단체)들을 배제하겠다고 보고하는 한편 2014. 3월 경 예술위 책임심 의위원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배제조치를 하였음
- 문체부 예술정책과는 2014.4월~9월 사이에 예술위 예술진흥본부 간부들과 논의 과정을 거쳐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세부 실행 계획’ 중 문화예술분야 심의 대응전략을 마련(2014.10.)한 후,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실행계획에 따라서 배제 지시를 이행하였음
- 배제 대상자들에 대한 배제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이 반발하기도 하는 등 배 제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생겨나고, 배제 대상자에 대한 검증 과정이 길어지면서 심의나 결과 발표가 지연 되는 등 문제점도 생겨나서, 2016년 문예진 흥기금공모 사업 심의 및 지원 제도에 대한 개편을 계획하게 되었음
- 2015. 4. 21.일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로 추정) 매주 정기적으로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가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주재로 각과 관련 담당사무관, 예술위 예술진흥본부 3본부장, 현안 관련 부서장 등 간부들을 참석 대상으로 하여 열렸음. 문예기금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블랙리스트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 하였음

- 2016년 가을~12월 사이에 문체부 예술국과 예술위 예술진흥본부 사이에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2016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개편안을 마련하였음. 심의위원 풀도입, 예술성·대중성·국제진출가능성 등 다원심사 등 심의제도 개편, 소액다건 직접 지원 비중을 줄이고, 장르별 기획사업 발굴·강화하는 등 사업방식의 변화,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대신 고용실적, 관객수, 수익창출효과 등 계량 평가지표 등 평가방식을 변경하는 등이 개요였고,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강한 것이었음

- 예술위가 배제대상자 중 일부를 우회 지원한 사실도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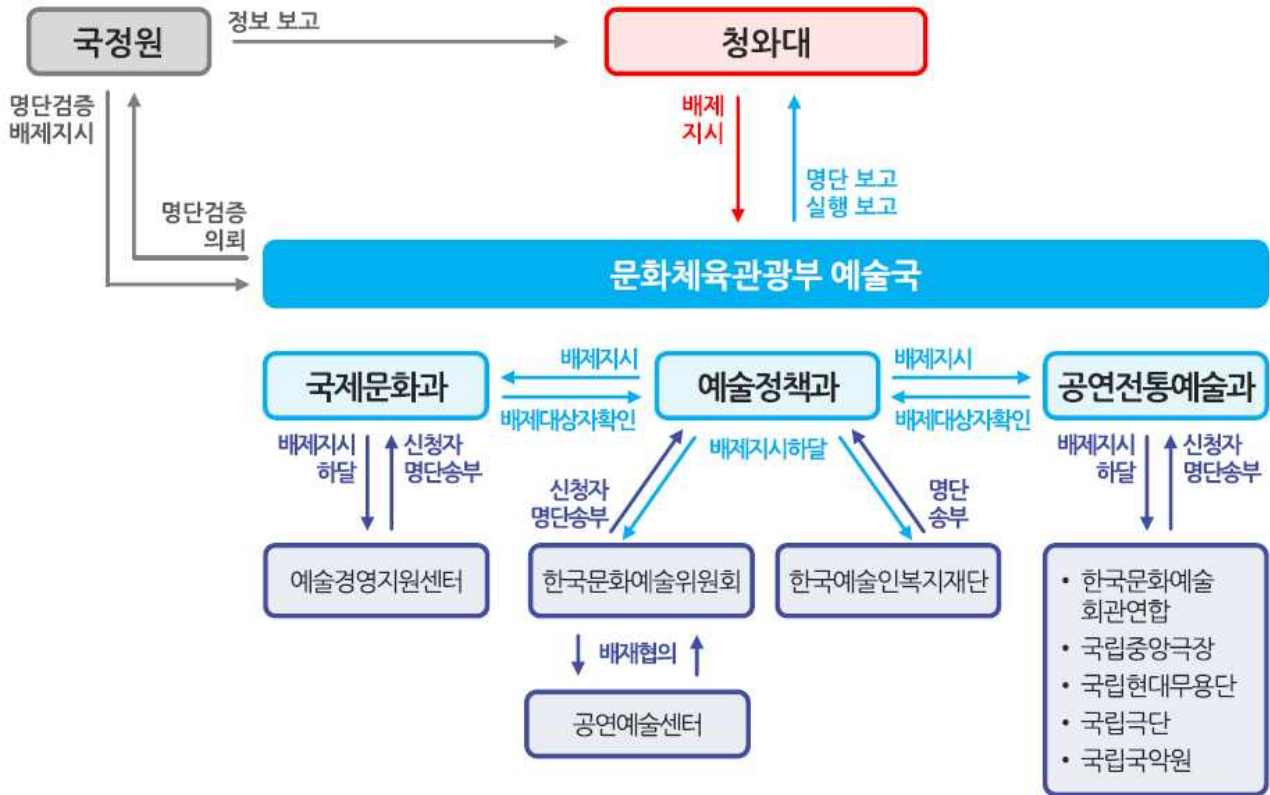
- 예술위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기획조정부에서 일괄 취합한 후 담당 부서로 보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음

- 국립극단의 경우 2013년 연극 <개구리>가 논란을 빚은 이후 후속 작품인 <구름> 대본에 특정 정치인을 풍자하는 등 특정 대사에 빨간 줄이 쳐져서 국립극단 사무국장을 통하여 연출가에게 전달되기도 하였음. 광화문 광장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게시된 포스터를 삭제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등 검열 조치도 있었음

-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은 2015년 1월 경 청와대에서 특정 연출가들에 대한 배제 지시가 내려왔으나 문체부가 양해 과정을 거쳐 취소시 파장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에는 공연을 하되 차기년도부터 배제 하도록 하였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립극단·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주요 예술지원기관들은 2015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예술검열 논란을 거치면서 기관 스스로 자체 검열을 하는 등 자기 검열의 단계에 접어들었음

2) 구조



2. 주요 사건 조사 결과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및 심의 제도 개편

① 국정원은 청와대에 문화예술계 좌성향 보고, 문체부는 문화예술정책 점검 T/F 구성 및 좌성향 실태 조사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2013. 8. 16.)]

-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 8. 16.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2013. 9. 3.)]

- 국정원 정보보고 문서인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문서에 따르면 문체부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특정 편향(좌편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보고서를 지시한 것과 관련 예술지원을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에 초점을 맞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근거를 남길 경우 잡음이 발생할 개연성에 대비하여 2013. 8. 30. 저녁 교문수석실 000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됨

[문화예술정책점검 TF]

- 국정원 정보보고 문서인 ‘문체부, 좌파 견제 ‘문화예술정책점검 TF’ 지속 운영 방침’ (2013. 12. 5.) 문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내 좌편향 작품·행사·사업 등을 사전 스크린하고 보수지형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3. 9. 9. ‘문화예술정책점검 TF’ (단장: 조현재 1차관)를 출범시키고 차기 년도에도 계속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② 2013. 11.~2014. 2. 문체부·예술위 지역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실태조사

- 국정원이 ‘2013. 9. 26. 限 파기’로 작성한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 문서는 전국 광역 지자체 산하 12개 문화재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충북문화재단에서 충북민예총, 서울문화재단에서 윤한솔 연출가 등이 지원 받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

- 문체부는 2013. 11. 6. ‘지자체 대상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고, 2013. 11. 25. ‘지자체 문예기금사업 실태조사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2014. 2. 17.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서’(예술위 작성)를 최종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③ 청와대, 문체부에 좌성향 단체 지원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 지시

- 2014. 2. 21. 청와대는 문체부에 2014년 예술위 지원사업에서 밀양송전탑 반대, 복합미항 반대 등 정부를 비판해 온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과 ‘혜화동 1번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이 선정된 사실을 지적하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 임명 시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음
- 문체부는 이에 대하여 2014. 2. 21.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 방안’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 하였는데,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구성에서 이념편향·반정부 행위 관련자 배제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 배제 등을 향후 조치 계획으로 보고하였음
- 2014년 3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문체부→예술위’로 황현산 등 19명에 대한 배제 지시가 하달되었고, 이에 따라서 19인이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었음

④ 심의 제도 개편 논의

- 2014. 4.~2014. 9. 사이에 예술위 지원 심의 제도를 개편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000 사무관과 예술위 예술진흥본부 간부들 사이에서 문예진흥기금 심의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000 사무관이 궁금한 것을 묻고 예술위 간부들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2014. 10월 경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문화예술분야’ 세부 대응전략에 반영되었음
-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청와대 지시에 따른 지원 배제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 계획’ 중 ‘문화예술’ 분야 세부 대응전략 대로 실행되었지만, 일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생겼음

- 2014년 9월 문체부 000 예술국장이 예술국 직원들을 모아놓고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정부비판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방침을 설명하였고, 예술위 사무처 간부들을 별도로 세종시로 불러서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음

⑤ 건전콘텐츠TF, 청와대에 예술위 심의제도 개편안 보고

-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서의 분야별 대응방안은 각 과별로 취합되어 문체부 건전콘텐츠활성화TF에 전달, 장관 및 청와대에 보고되었음.

⑥ 2015 공모사업 배제 실행 / 순연

- 2014. 12. 19.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 결과 총 1,989건 중 특이사항 (배제 대상자) 106건이 확인되었음
- 2015. 1. 9.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로 지원배제 명단이 하달되었고, 이 명단은 다시 예술위로 하달되었음
- 2015. 1. 15. 현재, 1. 27.현재, 3. 9. 현재 등 2015년 문예진흥기금 추진 과정에서 배제 및 심사보류 현황, 양해 조치 상황이 계속하여 보고되었음
-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학 및 연극 분야의 경우 일부 사업이 선정되어 발표 일자를 무기 연기하여 재심 등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하는 등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에서 해당 사항이 논의된 사실이 확인됨

⑦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

- 2014. 4. 21.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주재로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 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열렸고, 예술위 사무처장, 본부장, 현안 관련 부서장 등 간부들 7~8명은 매주 1회 봉고차를 타고 전남 나주에서 세종시 문체부까지 찾아가서 블랙리스트 및 공모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하고 논의하였음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 운영 계획

□ 개요

-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주제로 예술위원회 기관운영과 전체 사업 및 주요 행사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현안 점검회의 개최

□ 내용

- 시기 : 매월 격주(1.3주) 목요일 15:00~17:00
- 배주 계획 예정, 요일, 시간은 별도 협의해서 결정
- 장소 : 세종시 문체부 예술정책관 회의실
- 참석자
 -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주제, 각과 관련 담당사무원
 - (예술위) 3본부장, 기획예산부장, 현안 관련 부서장 등
 - 본부장이나 부서장 참석 불가피 시 선임부서장, 선임직원 대함

□ 1차 회의 개최

- 일시 : 4.21(화) 15:00~17:00
- 참석자 : 3본부장, 기획예산부장, 감사부장, 문화예술후원센터장, 창작지원부장, 예술인력개발원장(장계환 전문위원 대참)
- 논의 사항
 - 문예기금 공모사업 추진 현황
 - 문예기금 미정산사업 건 조치 진행상황
 - 모금미납금 관련 문체부 과태료 불납처리 조치
 - 기금 재원확충 추진 현황 및 실행 방안
 - 기타 현안사항 등

□ 특이사항

- 창작산실(연극) 우수작품제작지원사업 지원심의 후속조치
 - 시범공연 선정작(8편) 중 실연심사('15.4.7~4.11)로 선정
 - ※ 지원심의회와 관련(문제사업 3건)하여 문체부(예술정책과, 공연 예술과)와 협의진행중
- 창작산실(연극) 우수재공연지원사업 지원심의회 개최
 - 일자 : 2015. 4.29(수)(예정)
 - 지원 심의 대상 : 11건
 - ※ 지원심의회와 관련(문제사업 3건)하여 문체부(예술정책과, 공연 예술과)와 협의진행중
- 체육기금사업 중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현황 검토중
 - 예산액 : 11억원
 - 문제 현안

예술위 작성,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 운영 계획>

⑧ 2016년 예술위 지원 사업 개편 논의 시작

- 문체부는 2015년 5월 경 공모사업이 하반기까지 계속 진행되면서, ‘신청건수 증가→확인대상 지속 증가→확인과정 부하·지연→심의 절차 지연→사업추진 순연→단체 불만 누적, 부정적 여론화 추세’ 등은 물론 문학과 연극분야의 경우 특이 사항 증가로 사업 추진 자체가 곤란한 상황도 생기자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도 개편해야할 필요가 있었음
- 2016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는 공모제도를 기획사업 위주로 전환하고, 문예기금 심사제도를 책임심의제도에서 심의위원 풀(pool) 제도로 전환하는 등 사업 개편 계획을 세움

⑨ 제162차 예술위원회 회의에서 오프더레코드로 블랙리스트 문제 설명

- 2015. 6. 25. 제162차 예술위원회 회의에서 예술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이 예술위원들에게 ‘오프 더 레코드’ 로 블랙리스트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나,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음

⑩ 심의제도 개편 - 심의위원 풀(pool) 제 도입

- 예술위 제165차 전체회의(2015. 7. 31.)에서 책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심의위원 풀 제도로 변경이 의결되었음

⑪ 사업개편 - 기획공모 및 수시공모 확대

- 2015년 10월 경 예술위 하반기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도 특이사항 확인 절차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던 상황이었음

<지원심의/진행사업>

사업명	공고일	접수기간	발표 예정일	발송일	접수일	비고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7.17	7.20-8.5	9월 초	8.13	9.11	29일
연극 창작산실지원사업 대본공모	6.30	7.1-7.31	11월 1주차	8.3	9.22	50일
창작뮤지컬육성지원사업 대본공모	7.1	7.1-7.20	9월 말	7.30	9.8	39일
미술품해의시장개척지원(4차)	8.18	8.24-9.3	10월 초	9.9	미도착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문화(2차)	6.11	6.20-7.20	9월 초	7.29	9.7	38일
미술주간행사 작품구입 공모	7.31	8.17-8.28	9.25	9.15	미도착	

예술위 작성, <장관님 면담 참고자료(2015. 10. 2.)>

- 2015. 10월에도 단순 공모에서 기획 발굴 사업의 확대, 심사 과정에 내부 직원 포함 등이 검토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⑫ 2016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개편

- 2015년 가을~2016년 1월 초 사이에 문체부 예술국과 예술위 사무처 간부들 사이에 문화역서울284 지하, 서계동 문체부 사무실 등에서 청와대 지시에 따른 2016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개편을 위한 회의가 계속되었음
- 2015. 11. 1.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체부가 좌성향 단체에의 무분별한 지원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문화예술 지원시스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12월 확정) 이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차체에 동 개편 작업을 철저히 추진해줄 것’을 교문수석에게 주문하였음
- 문체부는 2015. 12. 8.~ 2016. 1. 8.에 걸쳐 2016년 예술위 문예기금사업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2016년 예술위 문예기금사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① (사업방식) 소액·다건식 단순 공모를 축소하고 기획공모사업의 비중을 강화, ② (심의제) 소수 예술전문가 중심 심의제를 폐지하고, 개방적·다원적 심의제를 도입하여 심의위원 풀(pool)제, 예술성 뿐만 아니라 대중성, 해외진출 가능성 등 다원적 시각에서 심사, ③ (평가, 환류) 객관적·정량적 평가 도입으로 예술단체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등이었음
- 위와 같은 2016년 예술위 문예기금사업 개편안은 결국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강한 것이었음

2) 검열사건

① <개구리>, <구름> 검열 사건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2013. 9. 3.~9. 15.) 공연이 올라간 후, 9.6.~9.7.경,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문체부가 국립극단 예술감독 면담 후, ‘그분(노무현 전 대통령)’ 과 ‘카멜레온(박정희 전 대통령)’ 의 대화를 통해 ‘그분’ 을 미화하고, ‘카멜레온’ 을 비하적으로 묘사한 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기말고사 컨닝’ 으로 풍자한 점 등에 대한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조치계획으로, 2013년 국립극단 후속 작품에 정치적 소재의 내용은 배제토록 강력 조치하겠다고 보고하면서, 국립극단 예술감독을 교체 추진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됨

[국립극단 기획공연 ‘구름’]

- ‘개구리’ 후속 작품이었던, 국립극단 기획공연 ‘구름’ (2013. 9. 24.~10. 5.)에 대하여 국립극단 사무국장이, 특정 정치인을 풍자한 부분 등 특정 대사에 자를 대고 빨간 줄을 그은 대본을 가지고 극장으로 찾아와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 대본에 빨간줄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사실 확인하지 못하였고, 국립극단 사무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해당 연출가에게 대본을 전달한 장면은 기억나지만 빨간 줄이 쳐진 대본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 한편 문체부는 국립극단 기획 공연 ‘개구리’ 가 문제가 된 이후 2013. 9. 9. ‘문화예술정책점검 TF’ 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② <조치원 해문이>·<망루의 햄릿> 홍보물 검열 사건

[2015년 국립극단 기획대관공연 <조치원 해문이>·<망루의 햄릿>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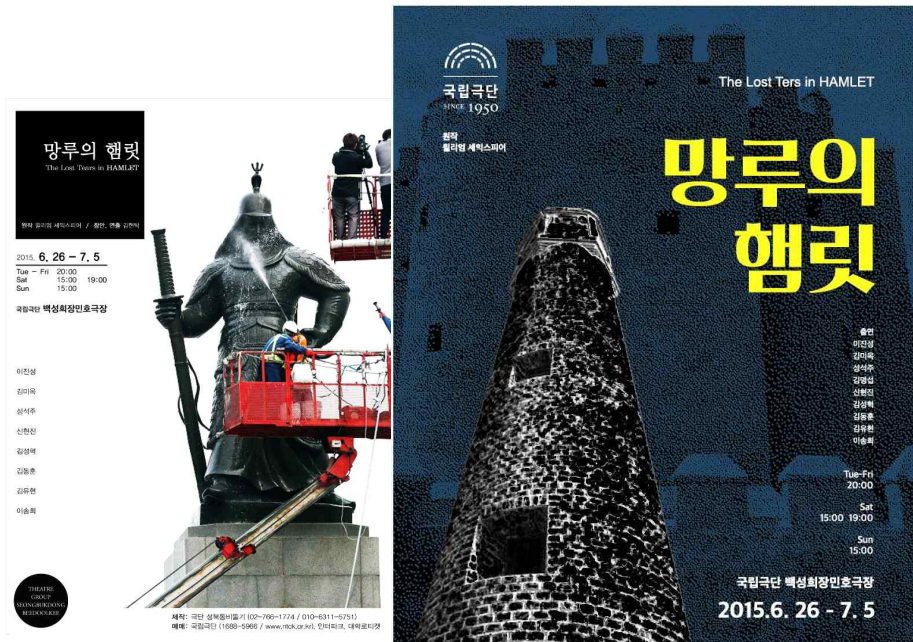
○ 개요

- 국립극단 기획대관공연 <조치원 해문이>는 벽산희곡상 수상작으로 ‘햄릿’을 세종시 건설 즈음의 조치원으로 배경을 옮겨 각색한 작품으로 2015. 8. 24.~9. 13.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그린피그 제작, 이철희 작·박상현 연출로 공연되었고, <망루의 햄릿>(김현탁 각색·연출, 극단 성북동비둘기 제작)은 2015. 6. 27.~7. 5.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공연되었음

○ 조사 결과

-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국립극단 측으로 연락하여 <조치원 해문이> 공연 홍보물에서 그린피그, 윤한솔 등의 명칭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국립극단은 극단 측에 요청하여 그린피그, 윤한솔 등 명칭을 삭제한 포스터를 별도로 받아서 국립극단 게시판에 게시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음

-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국립극단 측으로 연락하여서 <망루의 햄릿>이 광화문 광장을 연상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 있는 포스터를 삭제하고, 포스터 이미지 교체를 지시하였고, 국립극단은 해당 극단에게 보수 단체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포스터 삭제 및 교체를 부탁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음



<망루의 햄릿> 수정 전 포스터

<망루의 햄릿> 수정 후 포스터

③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방해 사건

○ 개요

- 팝업씨어터는 극장이 아닌 일상 공간인 카페나, 극장 로비, 공원 등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15분 안팎의 짧은 공연으로 예술위가 자체 기획한 ‘공원은 공연중’ 10월 프로그램임
- ‘팝업씨어터’ 참가작 <이 아이> 첫째 날 공연(2015. 10. 17.)에서 ‘수학여행’, ‘노스페이스’ 등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등장하자 예술위 문화사업 부장이 공연예술센터장·경영전략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는 보고를 하였음
- 그날 밤 예술위 공연예술센터 간부들은 이튿날 공연을 취소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팝업씨어터 공연 취지에 맞게 카페 영업을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카페 의자나 테이블 등을 못 움직이게 하는 등 사실상 공연 진행을 방해하기로 하였음
- 공연단체의 반발을 우려한 예술위 문화사업부장은 담당 직원에게 다음 날 공연을 취소시키라고 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이를 거부하였음
- 다음 날 공연에서 예술위 공연예술센터 간부들은 배우들의 동선에 커다란 테이블을 놓고 자리에 앉아 있는 등 공연 진행을 방해하고, 극중 죽은 아이가 올려져 있는 것으로 설정된 테이블도 치워버려서 배우들은 죽은 아이가 바닥에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연기를 해야 했음
- 예술위는 후속 작품인 ‘후시거나 포켓또’의 연출, ‘불신의 힘’의 연출에게 대본 제출을 요구하였음
- 한편 예술위는 팝업씨어터 참여 연출가 선정 과정에서도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섭외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였고, ‘섭외자들이 너무 신진 예술가들이라서 프로필 검색이 안 된다. 생년월일을 보내 달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음

3) 기관별 주요 사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서울연극제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대관 배제

○ 개요

- 2015년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 공모사업에서 서울연극협회가 대관 배제 됨
- 서울연극협회를 비롯하여 연극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2014. 12. 30. 서울연극협회의 서울연극제에 대하여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등을 다시 대관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음
- 2015. 4. 3. 예술위가 구동부 장치 고장을 이유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서울연극제 전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폐쇄하였음

○ 조사 결과

- 서울연극협회 등 19개 단체를 배제 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가 예술위 공연예술센터에 전달하였음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관련 보고

2014.10.31.(금) / 공연전통예술과

□ 보고 사항

- BH 협의 결과, 심사위원 3인(김석만, 김미도, 김채현) 제외, 19개 신청단체(서울연극협회, 조은컴퍼티 등) 미신청 요청(14.10.30)
- ※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 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대극장, 소극장), 대학로3관 등 5개 공연장 보유 (단, 대학로3관 운영은 2014년 만료 예정)

< 정기대관공모 심의 개요 >

- 일시/장소 : 2014.11월 초/ 아르코예술극장 회의실
- ※ 대관신청서 접수 : 2014년 9월 1일(월) ~ 10월 8일(수)
- ※ 발표 예정일 : 2014.11월 중순
- 접수 현황 : 총 182개 단체
 - 연극78, 무용 82, 뮤지컬8, 다원12, 기타2
- 심의 기준 : 한국공연예술센터 운영규정 제11조(대관 심의기준)
- 심의 절차 : 외부 심의위원 선정(연극/뮤지컬/다원 5인, 무용 5인 이내)
 - 심의위원회 개최(심의위원 간 심층 토의 후 개별 제청)
 - ※ 심의위원 후보(안) 및 지원단체 현황 : '붙임' 참조

□ 검토 의견

- 외부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는바, 우리부 정책 집행에 대한 심의위원의 반발이 예상되며 대관심사과정에 대한 개입 부담
- 특히, 서울연극제(신청단체 : 서울연극협회)는 1977년 제1회부터 한국공연예술센터에서 개최된 행사로서, 미신청시 집단 시위 및 성명서 발표 등 연극계 반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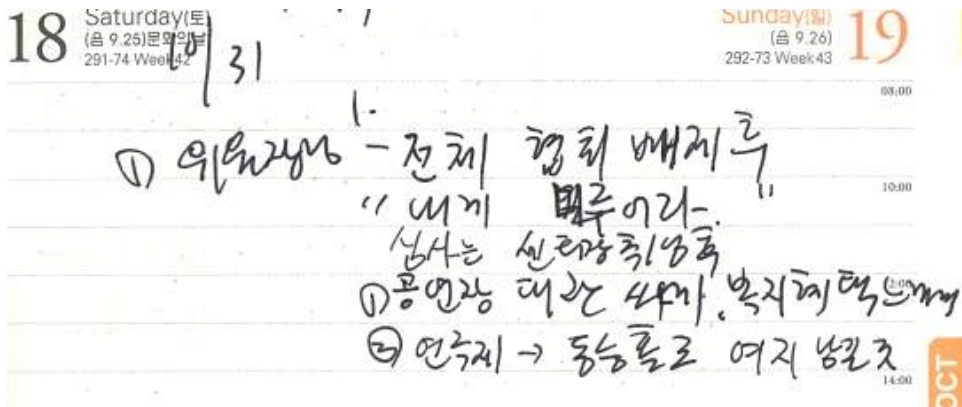
붙임2 지원단체 현황(182단체)

□ 연극 분야 (신청단체 : 7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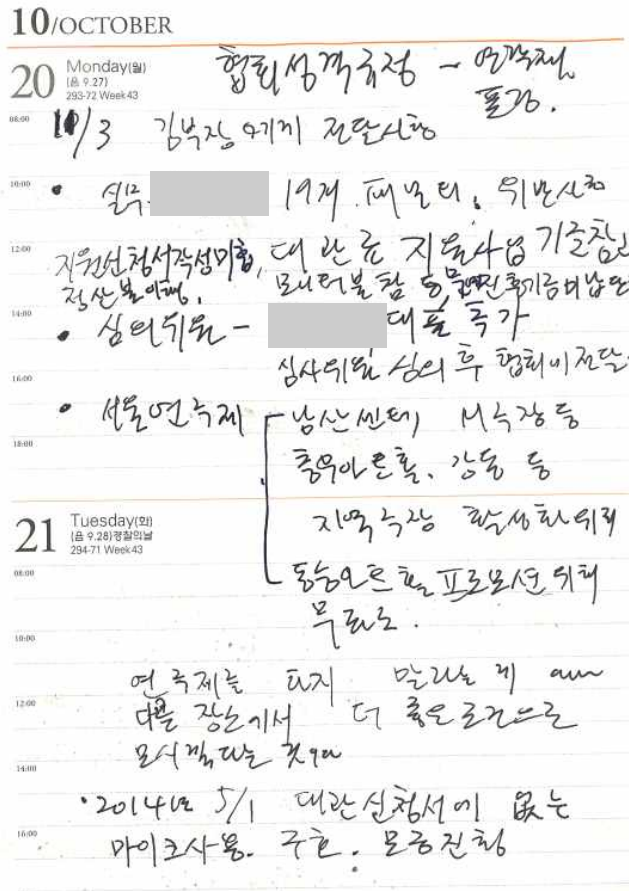
구분	지원단체명	작품명	연출	안무
1	극단 완자무늬	작가를 찾는 6인의 동정인물	김태수	
2	서울연극협회	제36회 서울연극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작성,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관련 보고>

- 예술위 공연예술센터는 심사 방법을 변경하여 A, B, C, D 등 등급을 나눠서 1차 분류한 뒤, 서울연극협회 등 19개 배제 대상 단체 중에서 A, B 등 높은 등급을 받아서 대관 선정될 것이 예상되는 단체들에 대하여는 대관 신청서 미비, 과거 3년간 대관 후 실적 등 대관 배제 근거가 될 만한 사유를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배제 조치하였음



<OOO 공연예술센터장의 2014년 업무수첩>



<OOO 공연예술센터장의 2014년 업무수첩>

- 서울연극협회에 대한 지원 배제는 2014년 12월 1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보고되었음

5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생태계 건전화 추진

○ 예산지원 단계별 철저 검증'으로 문제단체·작품 지원배제 및 건전단체·작품 지원강화

- 사전(심사위원 일석, 선정 재량권 확대, 진행(유제자 배제), 사후(조거위바 시 지워준다, 회후 지원 배제) 등

→ 문체부내 건전문화생태계 TF 운영으로 주간단위 철저한 검증시스템 운용 중

※(예) 서울연극협회 지원 배제(사전), 서울극단협회 3주 문수 도둑영화 배제(진행), 부산국제영화제 지원배제(사후)

대통령 비서실 작성, <2014년 제13차 수석 비서관 회의자료>

-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후 연극인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예술위는 2014. 12. 30.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등을 다시 대관하여주는 합의를 하였으나, 청와대에서 서울연극제를 배제하라는 지시가 청와대→문체부 예술국→예술위로 다시 내려왔음

서울연극제 관련 진행 경과

일자	주요 내용	비고
11.14	정기대관심의결과 발표	
11.18	서울연극협회 성명서 발표	
11.19	서협 항의방문 - 센터장, 공연운영부장 공개 질의 (아르코극장 로비) - 위원장 면담 불발	
11.26	서협 문화부에 정형서 전달	
12.2	1인 시위 시작 (31일까지 지속)	
12.4	연극인 정기대회(아르코니예공원)	
12.8	연극계 원로 간담 - 위원장, 센터장, 최지민, 김정욱, 김의권, 노경석, 오현경	
12.12	서협 긴급 기자회견 - 항사고소 발표	
12.15	위원회-서협 간담 - 센터장, 본부장, 박정렬회장, 연출기획팀 김성노회장	
12.29	위원장, 김의권 간담 - 서협으로 발송될 공문 관련 -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유감 표명 및 대관	
12.31	서협으로 공문 발송 (오전) - 유감 표명 - 대관 일정 서협은 위원회로 공문 발송 (오후) - 3개 작품 및 개막식 요청	
1.7	위원장 고소 취하 촉구 - 본부장 통해 수신 전달	
1.8	고소 취하 안되며 대관 취소하라는 BH 입장 전달 (BH→국정→... 사무관→본부장)	
1.9	고소 취하 촉구 (본부장→서협 사무국장)	
1.15	서협 측 요구사항 도해(공문 아님) - 위원회의 무고 및 고소 없음 확인 필요 - 공연운영부장 인사 필요	
1.16	고소 취하가 우선이라는 위원회 입장 전달(본부장→사무국장)	
1.20	고소취하 관할하여 위원장 면담 요청하는 서협의 공문 접수 심의회원 3인의 입장발표 (홍재미지 게시)	
1.26	심의위원과 서울연극협회 간담 - 연극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	
2.4	대관 확인서 요청하는 서협의 공문 접수	
2.6	위원장, 박정렬회장, 본부장 회담 간담	

	- 맞고소는 없을 것, 센터장이 구두로 밝힐 것 - 센터장과 서협 만남 불발 (극장 지원)	
2.13	정대경 위원 박정렬 회장과 통화 - 맞고소는 없을 것	
2.26	서협의 고소 취하서 접수 - 연습실 요청(구두)	
3.3	서협의 후원명칭 사용 요청 공문 접수	
3.16	고소 각하 처리	
3.19	서협의 측사 및 개막식 참석 요청 공문 접수	
4.1	극단관장의 대확보연습실, 극단78의 아르코연습실 사용 신청 접수	

대관 말락 후 원로연극인들의 서울연극제는 해야한다는 강력한 요청
서울연극협회의 센터 고소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유감 표명(협회 아닌 연극제), 대관 결정
관련 공문 12월 31일 발송
서울연극협회는 맞고소 안하겠다는 보장, 공연운영부장 인사를 요구하며 고소 취하를 미룬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2월 26일 고소취하 접수, 3월 16일 고소 각하 결정
고소가 취하 및 각하되었으므로 대관은 진행하는 것이 당초 합의 내용
그러나 대관 진행에 대한 불기 발생이 전달되어
대관 필요성 및 아르코 배제 및 민간극장 대관 진행이라는 자선책에 대한 자료 제출(3.31)
위원장 측만 면담 예정(4.2)

예술위 작성, <서울연극제 관련 진행 경과>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폐쇄 전달인 2015. 4. 2. 해당 사안으로 권영빈 위원장과 김종덕 장관이 면담한 후 청와대 교문수석실과도 협의를 거쳐 아르코예술극장을 폐쇄 조치하였음

서울연극제 대응 방안

'15.6.6(월) 예술정책과

□ 대응 경과

- 심의 탈락 및 연극제 환원
 - '14.11.14 공연예술센터 '15년 정기대관 심의결과 발표(서울연극제 탈락)
 - '14.11.18 서울연극협회 성명서 발표 / 11.26 문체부에 정황서 전달
 - '14.12.4 연극인공기대회 개최(마로니에공원)
 - '14.12.12 서울연극협회 긴급 기자회견(센터, 센터장 등 행사고소)
- 연극계 원로 의견청취 및 전체 지원사업 파급력을 고려, 대관 결정
 - '14.12.30 위원장, 연극협회장, 김의경(연극계원로) 간담
 - '14.12.31 예술위 서함으로 공문 발송(유감표명, 아르코대/소극장 대관)
- 서울연극협회의 고소 취하 지연 및 대관 불허 분위기 고조
 - '15. 2.26 서울연극협회 고소 취하서 접수
 - '15. 3.17 센터장 등에 대한 고소 각하 결정
 - '15. 4. 2 장관님-예술위원회장 연방
 - '15. 4. 2 아르코예술극장 공연 3개 작품 티켓판매 중단, 홍보 중단 조치요청

□ 고려 사항

- (서울연극제 파행 불가피)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폐쇄 (4.13~5.17)
 - 무대구동부 모터 2개조 파손(3.10)에 따른 이상징후 발견, 2개조는 긴급 수리하였으나 전체 60개 모터 전수 점검 필요, 모터에 연결된 조명봉 추락시 대형 인명사고 우려
 - 김준이무용단, 현대춤작가12인전, 서울연극제(작품2개 및 폐막식) 국립현대무용단 등 4개 단체에 극장 폐쇄 통보(4.3) → 81년 극장 개관 이후 사고대비 극장 폐쇄 처음

□ 대응 방안

- (서울연극제 파행 및 축소) 위원회 임차 소규모 민간극장으로 분산
 - 기존 대관허가 공문(14.12.31 발송)에 의거, 아트원시어터, 동송소극장 등으로 이동
 - <에고부고장> 아르코대극장(604석)→아트원1관(365석), <물의노래> 대극장(604석)→동송소극장(161석), <폐막식>은 공연이 아니므로 불가, <청춘, 간다>→아르코소극장 유지
 - 무장 국면은 협회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음, 행사 축소 및 파행으로 협회의 무능을 부각시키고 연극계의 협회에 대한 불신 및 집행부 교체 분위기 유도
- (연극제와 전면전) 대관 일체 불허
 - 대관신청서 접수 후 내부심의하여 심의 탈락
 - 연극팀알 이슈 재점화 및 4월 세월호 1주기, 노동계 혼투와 결합하여 문화행사가 많은 4~5월 아의 무명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서울연극제 관련 추가 자료

'15.6.6(월)

□ 대관 요청 내용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2개 작품 및 폐막식
 - 극단광장 <에고부고장> 4.20-29 대극장
 - 극단76, 극단죽죽 <물의 노래> 4.30-5.9 대극장
 - 폐막식 5.10 대극장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1개 작품
 - 극단명작극수수발 <청춘, 간다> 4.27-5.10 소극장

□ 변경사유 및 변경(안)

- 아르코예술극장 무대 구동부 이상으로 인한 임시 휴관(4.11~5.17)
 - 무대구동부 모터 2개조 파손(3.10)에 따른 이상징후 발견, 2개조는 긴급 수리하였으나 전체 60개 모터 전수 점검 필요, 모터에 연결된 조명봉 추락시 대형 인명사고 우려
 - 김준이무용단, 현대춤작가12인전, 서울연극제집행위,국립현대무용단 등 4개 단체에 극장 폐쇄(4.11부터 5.17까지) 통보(4.3) → 81년 개관 이후 안전 무려 휴관 처음
- 변경(안) : 위원회 임차 민간 소극장으로 변경하여 축소 추진
 - <에고부고장> 아르코대극장(604석)→아트원1관(365석) ※ 무대 재제작 필요
 - <물의노래> 아르코대극장(604석)→동송소극장(161석) ※ 무대 재제작 필요
 - <폐막식>은 공연이 아니므로 불가
 - <청춘, 간다>→아르코소극장 유지

□ 예술위 입장

- 서울연극제 파행 불가피, 행사 축소
 - 상징적인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사용 불능에 따라 이미 서울연극제는 실질적 타격을 입음, '14.12.31자로 발송된 공문에 따라 서울연극제 축소(대극장→소극장)
 - 공연장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월호 1주기 등을 계기로 기타 지원사업과 결합된 예술계 전체의 반감 확대 및 이후 문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문체부 입장

- 그 동안 서울연극제 관련해서는 문체부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음에 따라 예술위원장이 장관 면담을 통해 예술위 입장을 전달하였고 장관은 이에 대해 교문수석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음

예술위·문체부 작성, <서울연극제 대응방안>, <서울연극제 관련 추가 자료>

② 2015 연극 창작산실-우수작품제작지원 사업에서 극단 골목길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배제

○ 개요

- 2015년 연극 창작산실-우수작품제작공연 지원사업에서 극단 골목길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등 모두 8개 작품이 지원 선정되었음(2015. 4. 11.)
- 심사 전에 극단 골목길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심사 후에 극단 돌파구의 <고제>, 극단 뽕뽕의 <떠도는 땅>을 배제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내려왔음
- 예술위 직원들은 2015. 6. 18. 심사위원들을 재소집하여 ‘창작산실’ 사업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다면서 극단 골목길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제외해주면 나머지 두 작품은 지원 선정하여 주겠다고 하였음
- 심사위원들은 논의 끝에 심사 결과를 번복하지 않되 예술위 직원들이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의 작가를 만나 스스로 작품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하는데 동의하였음
- 예술위 직원들은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의 작가를 찾아가 포기 의사를 받아냈으나, 권영빈 예술위원장의 지시로 다시 한 번 작가를 찾아가 포기 각서를 받아

- 은 후 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포기 신청서를 처리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임
- 예술위 직원들은 2015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문체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 포기 각서를 받아온 과정에 대하여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하였음
 -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2015. 11. 예술위 내부 감사 결과 예술위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문제점을 예상하여’ 해당 작가를 찾아가서 포기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음. 두 직원은 감사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하였지만 허위 감사결과가 나왔고, 이는 예술위 조직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확인됨

③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선거 개입

○ 개요

- 2015.말경 서울연극협회장 박장렬이 한국연극협회 제25대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였고, 당시 예술위 연극분야 위원이었던 000도 위 선거에 입후보함
- 결과적으로 위 선거에서 박장렬이 낙선하고, 000 예술위원이 당선되었는데, 이후 블랙리스트 재판과정 및 위원회의 사전조사 과정에서, 당시 문체부 문건에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선거와 연계’ 등 문구가 기재된 사실이 확인됨
- 이에 따라 위 선거에 서울연극협회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동의 일환으로 문체부의 개입 혹은 관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조사 결과

- 위원회 조사를 통해, 문체부가 서울연극협회 세력확대를 우려하고 연극계의 정부 우호세력을 확보하려는 의도 하에 당시 예술위원이자 ‘보수진영’이었던 000의 이 사건 선거를 돕고자, 000의 특정단체 블랙리스트 양해요청을 수용하고 청와대에 보고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됨
 - 2014. 말경부터 ‘서울연극협회(회장 박장렬)’ 지원 배제는 청와대 및 문체부의 기본방침이었고, 서울연극제 대관탈락 이후 문체부는 서울연극협회의 세력 확대 및 대정부 투쟁을 우려함

참고1 문체부 검토의견		
구분	장점	문제점
(1안) 대관 일제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관심사에서 서울연극제를 탈락시킨 기본 원칙 재확인 서울연극제 상영 작품에 대한 신뢰성 담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연 불허를 통해 이에 대한 원천적 해결 가능 서울연극제가 보여 온 이념 편향성 문제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 고소·고발 등 무고 행위에 대한 공공기관의 단호한 처리 의지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임시국회(4.10. 교문위 현안 질의, 4.16. 대정부질의 사회문화분야), 세월호 1주년(4.16.) 등 정치상황과 연계 이슈화 서협, 마로니에공원 집회신고(4.13-5.6)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예정(4.12) 휴관조치를 서울연극제에 대한 표석행위로 인식, 표현의 자유 침해 제기 가능 연극계 결집을 통해 서협실행부 리더쉽 강화 우려(16년 한국연극협회이사장 선거 및 예술위 주도 대한민국연극제 처집)
(2안) 민간공연장 변경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월호, 보궐선거 정국 등 연극계 이외 이슈와의 연계 차단.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아르코 대극장 휴관 등 일련의 사건에 문체부 권여 의혹 해소 강경일변도의 서협 집행부 세력 위축 유도 (집행부의 고소 취하 지연, 대관 미개막 상태 방지 등 대우미만 제기) 퇴임예정 한 위원장의 악습을 존중, 예술위 자체해결이라는 명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연극제 배제 기본 원칙을 깨고 어정쩡한 형태의 타협이라는 비판이 제기 될 수 있음. 미온한 대처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가능 일부 작품(에고부고정)의 경우, 도입부에 '전두환은...정권을 물려주기 위해 4.13 호헌조치 선언', '18년 박정희정권이 막을 내리고..12.12사태 계기로 전두환이 권력에 욕심...' 등의 표현 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현실속에서의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다루고 있음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5. 4. 6.자 '서울연극제」 최근상황 보고' 중>

- 문체부는 2015. 5.경 이 사건 선거에 서울연극협회장인 박장렬과 '보수진영' 인 000(당시 예술위원)이 출마한다는 동향을 파악하였고, 청와대에 '연극계 우호세력화 추진', '각종 선거를 통해 연극계 주도세력 교체' 등의 대응방안을 보고함

□ 대응 방안(예술위)		
구분	강경 대응	온건 대응
조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연극협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공개비난받고 있는 유인화 공연예술센터장 개인자격 고소 -예술위차원에서 무고죄로 고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협 공세에 방어적 대응 및 연극계 우호 세력화 추진 -공익감사 청구에 자료 대응중 -손배송 소송시 방어차원의 대응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연협의 고소, 언론홍보행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 표명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선거 시 대정부 투쟁의 명분 제공 등 악용될 소지 -신임위원장에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호적 단체·인물 등 서협 반대측의 결집을 유도하고 각종 선거를 통해 연극계 주도세력 교체 유도 -신뢰할 수 있는 우호세력 확보, 지원 강화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5. 5. 13.자 '서울연극제 관련 보고' 문건 중>

- 문체부 및 예술위는 문체부에 유리한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예술위원 정대경은 문체부 및 예술위에 특정단체들의 블랙리스트 양해 등 선정을 요청하며 이 사건 선거 협조를 요청함

▶ “(중략) 000 위원이 자기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예술국 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예술정책과장 혹은 공연전통예술과장 등에게 들었습니다. 000 위원의 입지가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문체부 000 예술정책관 진술조서 중]

▶ “000 위원이 보수 쪽에서 연극협회 선거에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000 위원이 선거를 좀 도와달라고 했다는 말을 문체부나 예술위 직원 중 여러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중략)” [문체부 예술정책과 000 사무관 진술 중]

▶ “당시에 제가 연극협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극 분야에서 블랙리스트가 극심하게 실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해소해 달라, 블랙리스트 실행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큰 틀에서 제가 출마한 선거에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했습니다.(중략)특정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연극분야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000 현 한국연극협회장 위원회 진술 중]

- 문체부는 예술위와 협의 하에 예술위 사업 블랙리스트 3개 단체에 대해 ‘한국연극협회장 선거와 연계’, ‘000 위원 요청’ 등 의견으로 청와대에 양해요청을 하였고, 청와대 협의 결과 양해 요청한 3개 단체 중 2개 단체가 양해되어 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확인됨

한국연극인복지재단

① 2015 찾아가는 연극

○ 개요

- 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15 찾아가는 연극> 사업은, 연극인에 대한 문화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가수입 창출과 사회공헌활동 구현 및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예술육구 충족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15.6.~2016.1. 진행된 연극인복지재단의 연극인 일자리지원 사업임
-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총 120,000,000원 예산으로 진행됐으며, 공모를 통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총 7개 팀에게 인건비, 제작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직접경비를 최대 2,000만 원 가량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음

○ 블랙리스트 작동 의혹

-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은 2017. 1. 26. 홈페이지에 ‘[성명문] 2015년 연극인일자리지원사업 ’ 찾아가는 연극 ‘ 최종심사에 대한 재단의 입장’ 이라는 제목의 블랙리스트 관련 사과문을 게시하였음
- 위 성명문에는 연극인복지재단이 이 사건 사업 최종심사 당일 문체부 담당자로부터 심사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 ‘정산 불성실 이행 또는 횡령 사실’로 참가자격이 없다는 유선통지를 받아 이를 심사규정에 반영해 진행했다는 내용, 위사안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그 경위와 입장을 밝힌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있음

- 다음 -

1. 2015년 7월 30일, ‘찾아가는 연극’ 참가 단체를 선정하는 최종 심사를 진행하기 5분 전, 재단은 문체부의 사업담당 직원으로부터 심사대상자 중 ‘경산 불성실 이행 또는 횡령 사실’로 인해 이 사업에 참가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유선 상으로 통지를 받아 촉박한 심사 일경으로 위 내용을 의심의 여지없이 심사규정에 반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 최근, 재단은 이 일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경위와 입장을 밝힘으로써 예술 검열에 관한 역사기록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있어 재단은 ‘경산 불성실 이행 또는 횡령 사실’에 대하여 문체부에 근거 자료를 요청하지도, 해당 단체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던 바, 연극인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호해야 할 재단으로서 대처가 적절치 못 하였음을 인정합니다.
4. 재단은 이 일로 연극인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초래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어떤 경우에도 부당한 외부 개입이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실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5. 아울러 재단은 이 일을 계기로 진정한 연극인 복지 실현을 위하여 한층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연극인복지재단 2017. 1. 26.자 [성명문] 2015년 연극인일자리지원사업 ‘찾아가는 연극’ 최종심사에 대한 재단의 입장>

- 위 성명문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한 문체부의 입장 표명이나 조치는 없었으나, 연극계 등 문화예술계에서는 위 사건이 당시 정부 블랙리스트의 전형적 사안 중 하나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음

○ 조사 결과

- 위원회 조사 결과, 위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해 6개 연극단체가 공정한 심사기회를 박탈당한 채 부당하게 탈락한 사실이 확인됨. 당시 문체부 주무관이 ‘기금 미정산 또는 횡령’ 사유가 있다고 통보한 6개 단체에 ‘기금 미정산 또는 횡령’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제목 사실조회 요청 회신

1. 기획행정담당관-1972(2018.3.29.)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2015.8.1. 기준, 극단 고래(대표 이해성), 극단 문(대표 박영희), 극단 초인(대표 박정익), 극단 하땅세(대표 윤시중), 세종대학교 교육연극극단 혼(대표 김영미), 예술집단 페테(대표 백훈기) 등 6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규정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단, 극단 하땅세(대표 윤시중)의 경우, 2016.1.13.~1.20까지 보조금 미정산단체로 지정되었으나,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지정 해제함. 끝.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8. 4. 10.자 시행 ‘예술정책과-1393호(2018. 4. 10.)’ 사실조회 요청 회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①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 예술인복지재단은 2014. 3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심사 결과 서울연극협회, 한국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우리만화연대 등 좌성향 단체들이 대거 선정(2014. 3. 5.)되자 선정결과 발표(3. 7.) 계획을 중단하고 교육지원보다는 예술인들에 대한 생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위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은 폐지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 담당 000 사무관이 위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우리만화연대를 지원해도 되는지 청와대 000 행정관에게 연락하여 물어본 후 청와대 비서실에서 유진룡 장관에게 이 사업과 관련하여 연락을 하였고, 유진룡 장관이 000 예술정책과장에게 다시 연락한 후 위와 같은 폐지 조치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② 2015 예술인맞춤형교육지원사업 지원 배제

○ 개요

- 2015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맞춤형교육지원사업은 “현장예술인의 자율적·실천적 예술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예술인이 새로운 예술 창작 혹은 현장예술활동에 필요한 학습을 직접 기획, 운영함으로써 학습에 기반한 새로운 예술창작의 구심점 마련 및 예술창작 네트워크 모델 개발, 수행된 예술 프로그램의 실천적 가치와 성과가 예술계 대내외로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는 장 마련”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년 3월 2일(월)~3월 13일(금) 공모 접수하였고, 2015년 4월 24일 결과 발표되었음

○ 조사 결과

- 2015년 예술인맞춤형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담당 사무관이 000 예술인복지재단 대표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송경화(혜화동 1번지 6기 동인), 홍은지(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 모두 7명을 배제하여 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000 대표는 심사위원 중 한 명에게 문체부의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심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탈락할 경우 그냥 지나가고 만약 해당 명단이 선정될 가능성이 보일 경우 별도의 언급을 하여서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 이와 관련하여 000 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위원회 조사에서 자신의 부탁을 받은 심사위원이 심사가 끝난 후 다행히 우선적으로 선정할 단체들이 있어서 배제를 위한 별도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③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 비상임 이사 검열

- 2014년 3월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2015. 12월 신규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 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1년 9개월 동안 신규 심의위원 위촉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2014. 5. 8. 문체부 000 사무관이 문체부 각 과에서 추천받은 후보를 취합하여 국정원으로 보내 검증 받은 결과 박태순 등 2명이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오세곤 심의위원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 대상이었고, 2015. 3월 경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000 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위원회 조사에서 오세곤 위원 이 배제된 것은 학교 일정 등으로 바쁘고 심의 피드백이 늦어졌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 2015. 1. 8.~8. 10. 기간 동안 예술인복지재단이 문체부로 총 8회에 걸쳐 심의위원 위촉 선정을 요청하는 업무메일을 보냈고, 문체부는 ‘후보자 적격성 내부 검토’ 를 하고 있다는 업무 메일을 2회에 걸쳐서 회신하였으며, 2015. 12. 2. 한상정, 정준모 등 모두 8명이 추가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 000 예술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청와대 · 국정원으로부터 배제 지시를 받아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이 예술인복지재단에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 2015년 12월 예술인복지재단 비상임 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검증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예술경영지원센터

① 우수 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배제

○ 사건 개요

- 극단 마실(손혜정 대표)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15 우수프로그램 문화원순회사업에서 최종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유선으로 받았는데, 이는 초기 예산 배정의 실수였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에 대한 폐지를 통보 받았음

○ 조사 결과

- 극단 마실은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개발지원-기획안 공모(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 사업)에서 문체부의 배제 지시를 받고, 1차 심사 결과 극단 마실, 극단 북새통, 극단 하땅세 등 3개 단체가 모두 배제 대상자였음

- 2차 심사를 앞두고 위 1차 통과자를 다시 배제하라는 문체부 지시가 내려오자 이러한 사항을 심사위원 2명에게 전달하였으나 심사위원들은 이를 거부하였음. 담당 직원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문체부와 상의하여 ‘중복 지원 대상 문화원 제외’ 라는 원칙을 새롭게 세워 극단 마실을 지원 배제하였음

- 결국 극단 마실은 2차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되었으나 위 사업이 폐지됨으로써 지원 배제된 사실이 확인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①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배제

○ 개요

-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지방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고자 추진, 민간 예술단체의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2015년 연간 지역문예회관에서 유치한 우수공연에 대해 초청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민간공연단체 및 기획사를 대상으로 지원 규모에 따라 중·대규모와 소규모로 나누어, 중·대규모의 경우 회당 최대 8,000만원 이내, 소규모의 경우 회당 최대 1,000만원 이내(1일 1회 기준)의 예산을 지원함

○ 블랙리스트 작동 사실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의 2015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블랙리스트 배제 사실은 2017년 문체부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음
- 「리스트- '16.9.27.현재」 문건에서 2016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대하여 청와대가 2개 단체, 국정원이 10개 단체를 각각 배제 지시한 사실이 확인됨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16.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B-연극①이동준(은세계컴퍼니)(2.12, B) ○ 오준석(엠제이플레닛)- 양혜됨(현장투표로 자동선정/차기부터 없앨 것/B) ○K(4.4) -연극: 선아트컴퍼니(김명곤), (사)전문예술극단예인방(김진효), 엠제이플레닛(오준석), 큰들문화예술센터(전민규), 극단다(Da)(임세룡) -음악: 예술기획파홀로(백형기), 김선국제오페라단(김진) -전통예술: 두들쟁이타래(박관우) -다원예술: 슈엔터테인먼트(유수훈), ㈜인비트윈 아트매니지먼트(이승효)
-----------------------	--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리스트-`16.9.27.현재>

- 감사에서 한문연은 2016년 사업에 대해서 문체부로부터 배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리스트- '16.9.27.현재」 문건에 적혀있는 단체 중 일부가 선정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배제 이행은 부정하였음. 그러나 위원회 조사를 통해 2016년 배제 이행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
- 2016년 사업은 국정원의 배제 대상자 회신이 지연되어 심의에는 청와대 배제 명단만 반영됨. 따라서 문건에서 확인되는 국정원 명단은 실제 심의에 반영되

지 않았으므로, 국정원 명단에 포함된 단체가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청와대 배제 명단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되지 않음

- 문체부는 청와대와 국정원에 신청자 명단을 보내기 전 기존 지원배제 대상 명단에 있던 단체를 표시하여 보냈고, 추가로 배제 지시가 오는 건에 대해서만 「리스트- '16.9.27.현재」 문건에 기재함. 따라서 문건에서 청와대 배제 지시는 2개 단체만 확인되나, 실제 문체부가 한문연에 배제 지시한 단체 숫자는 더 많음

- 1차 심의에서 공연전통예술과는 기존 지원배제 대상 명단과 대조한 내역을 한문연에 전달하여 배제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한문연은 이를 심의에 반영하였음. 그 결과 2015년 사업에서 배제된 22개 단체 중 2016년에도 재신청 한 단체 13개가 전원 1차 심의에서 탈락함

- 2차 심의의 경우 청와대와 국정원 회신이 늦어지자 배제 이행을 위해 청와대의 추가 배제 명단이 하달될 때까지 심의 일정을 연기하여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일정이 공지된 것보다 20일 가량 연기되기도 하였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① 2016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사업 배제

-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 '16.9.27.현재」 문건 중 해당사업 ‘군포문화재단’ 및 ‘서강석’ 배제지시 확인 (* ‘서강석’은 당시 군포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임)

문화파출소 운영사업(7.21)	○군포문화재단(군포시장 김윤주)-(B/7.22) ○ K(8.22) - 서강석
------------------	--

- 리스트 기재 ‘군포문화재단’ 탈락 확인함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는 예술정책과 000 사무관 후임으로 블랙리스트 관리 업무를 맡게 된 예술정책과 000 사무관에게 위 사업 지원자 명단을 전달하였고, 000 사무관은 청와대 및 국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리스트 기재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배제지시 사실을 전달함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는 위 사업 면접심사 과정에 문화예술교육과 담당 주무관을 참여시켜 배제를 이행하도록 함
- 위 면접심사 과정에 참여한 문체부 주무관은 해당단체를 탈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과정에서 해당단체의 타 사업 중복지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배제조치를 이행함
- 결과적으로 위 사안에서, 청와대 및 국정원의 특정 단체 블랙리스트 배제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한 문체부의 배제 이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②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한 하루’ 배제

-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 '16.9.27.현재」 중 해당사업 12인(김경주-김병곤은 동일인) 배제지시 확인

문화예술 명예교사(6.21)	○ B(6.29)-류승완(감독), 이기호(소설), 정희성(시인), 장형윤(애니메이션감독), 변응필(서양화가), 임진택(연극연출, 국악인)
문화예술 명예교사 추가(8.8)	○ K(7.11)-장형윤(애니메이션감독), 정희성(시인), 오동진(영화평론가), 임진택(연극연출, 국악인), 장강명(소설), 류승완(감독), 이기호(소설), 박영택(미술평론가, 교수) ○ B(8.12)-김경주(시인) ○ K(9.5)-김광보, 한만수(반이경), 김병곤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리스트-’16.9.27.현재」

- 위 사업 최종명단 100인 중 문체부 리스트 기재 인사 12인 전원 미포함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 해당사업 담당 사무관은 교육진흥원이 취합한 위 사업 명예교사 후보 명단을 송부받은 뒤 이를 예술정책과 000 사무관에게 전달하였고, 000 사무관은 청와대 및 국정원으로부터 위 리스트 기재 인물들에 대한 배제지시를 받아 이를 문화예술교육과에 전달함
- 문화예술교육과 담당 사무관은 교육진흥원이 취합하여 송부한 명예교사 후보 명단에서 위 리스트 기재 12인을 순차적으로 제외한 명단을 교육진흥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제를 이행함
- 결과적으로 위 사안에서, 청와대 및 국정원의 특정 단체 블랙리스트 배제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한 문체부의 배제 이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국립국악원

① ‘소월산천’ 공연 취소 사건

○ 블랙리스트 작동 의혹

- 국악그룹 앙상블시나위는 2015. 8.말경 국립국악원으로부터 국악원의 <금요공감> 2015. 11. 6.자 공연 섭의를 받았고, 이에 박근형 연극연출가 등과 ‘소월산천’ 협업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음
- 그런데 앙상블시나위는 공연 2주 전 국악원으로부터 급작스럽게 공연장 음향 문제 등을 이유로 협업공연이 아닌 앙상블시나위 단독공연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것이 당시 ‘블랙리스트 예술인’ 으로 알려졌던 박근형 연출가의 협업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의심이 들어 결국 위 공연을 취소함
- 위원회는 당시 국악원의 급작스러운 공연변경 요청이 실제 박근형 연출가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것이었는지 조사를 진행함

○ 조사 결과

- 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국악원 기획운영단장이 박근형 연출가를 문제 삼아 이 사건 ‘소월산천’ 공연의 조정 혹은 취소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관련자 진술을 통해 새롭게 확인됨
 - 국악원 기획운영단장은 공연 2주 전 국악원 과장 및 계장에게 이 사건 공연의 박근형 연출가 협업사실을 문제 삼아 이 사건 공연 조정을 지시함
 - 이에 국악원 직원, 과장, 계장 등이 국악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소월산천’ 홍보물을 삭제하고, 출연자 측에 ‘연출 및 연극요소를 빼’ 단독 음악공연으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함
- 이에 따라, 기획운영단장의 지시를 받은 국악원 직원들이 출연자 측에 공연장 음향 등을 문제 삼아 ‘공연에서 연극요소를 빼 달라’ 는 내용의 요청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박근형 연출가의 공연 배제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됨
- 나아가 기획운영단장의 주도로, 박근형 연출가 검열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공연취소는 공연장 여건에 따른 것이고 특정 연출가 검열과는 무관하다’ 는 취지의 국악원 해명자료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가 이루어졌고, 이

를 통해 사건 실체를 가리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됨

- 한편, 해당 사건에서 문체부는 공연취소 이후에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박근형 연출가 문제를 인지하였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사실이 확인됨

○ 특이사항

- 그 동안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문체부와 국악원 측 공식입장은 국악원의 공연장 여건상 연극공연은 올리기가 어렵다는 운영상 판단에 따라 공연변경 요청을 한 것이고, 이를 검열로 오해한 출연자 측에서 공연을 취소했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시 국악원 기획운영단장이 국악원 직원들에게 이 사건 공연의 박근형 연출가 협업사실을 문제 삼고 출연자 측에 공연변경을 요청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 이에 따라 국악원 직원들이 출연자 측에 이 사건 공연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남
- 한편, 해당사안의 경우 문체부의 특정예술인 배제 지시 등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당시 국악원 기획운영단장의 주도적 판단으로 위 블랙리스트 작동이 행해진 것으로 확인된 점이 특이사항임
- 이와 관련하여 당시 기획운영단장은 2013. 3.~2014. 11.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관련 대수비 및 실수비, 국정원 자료 등을 직접 공유 받은 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당시 기획운영단장은 일관되게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추후 추가조사나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음

국립중앙극장

① <춘향이 온다> 손진책 연출 교체 지시

- 손진책 연출은 2013년 국립극단 연극 <개구리> 공연 당시 국립극단 예술 감독이었다는 점을 사유로 하여 문체부 지원 배제 대상자로 관리됨
- 손진책이 연출하는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공연을 한 달 가량 앞둔 2015. 11. 문체부는 국립중앙극장에 전화하여 손진책 연출 교체를 지시함
- 공연이 임박하였다는 점 등을 사유로 국립중앙극장이 난색을 표하자, 문체부는 연출 교체불가 사유를 정리하여 문건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청와대의 양해를 얻어 연출 교체 없이 공연이 진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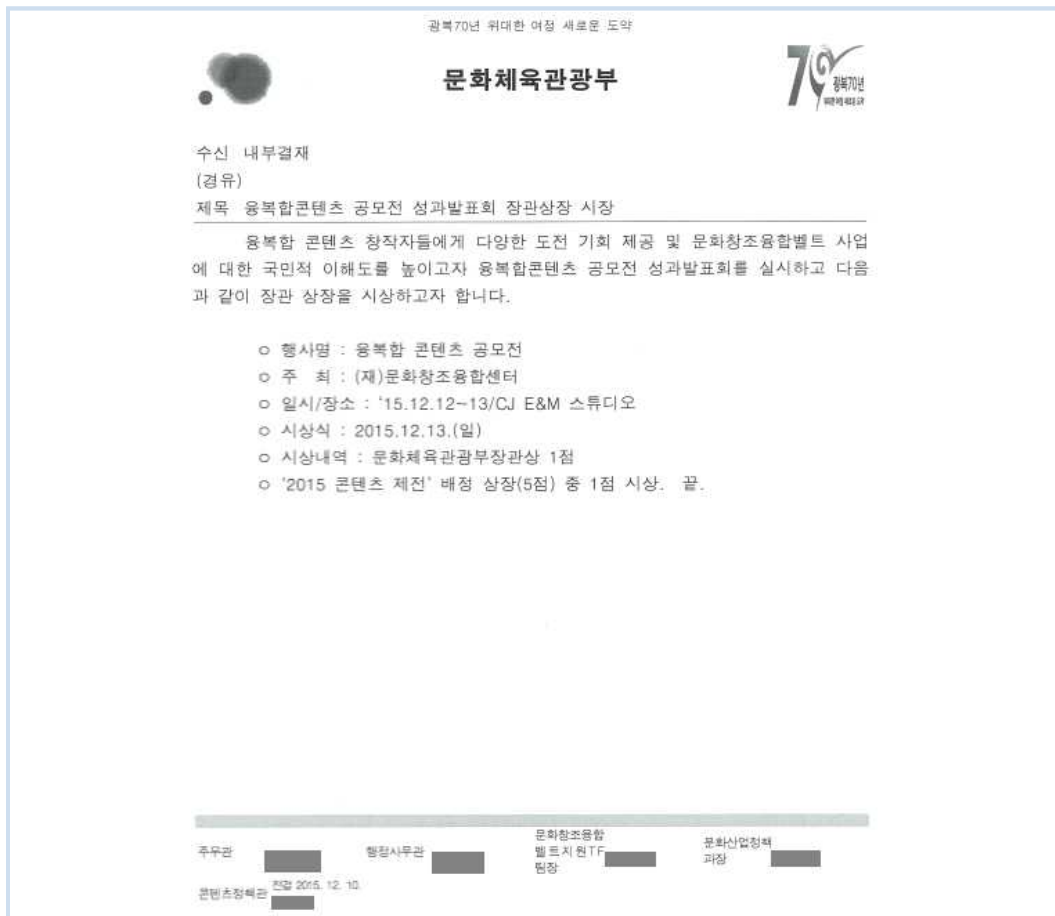
② <향연> 예술위 예산 전용

- 2015. 8. 10.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에 따라 문체부는 2015. 8. 18. 「국정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통문화의 세계화’ 방안을 수립하였음
- ‘전통문화의 세계화’의 일환으로 국립무용단 공연 <향연>이 기획됨
-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는 ‘201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연극 및 오페라분야 잔여예산 6억 원을 국립극장에 전용할 것을 예술위에 지시하였고, 예술위는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민간에 지원되어야 할 예산 6억 원을 위원회 전체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국립중앙극장에 지원함
- 이는 예술위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국립중앙극장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한 것임
- 또한, 예술위가 전용한 예산 6억 원 중 1억 원은 ‘201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박근형 연출 배제로 인해 발생한 잔여예산임

문화창조융합센터

① 융복합 콘텐츠 공모전 장관상 취소

- ‘융복합 콘텐츠 공모전’은 우수 프로젝트를 발굴할 목적으로 2015년에 처음 시도된 사업으로, 선발된 프로젝트는 전문가 집중 멘토링을 거쳐 2015년 12월 성과 발표회에서 심사위원 및 현장 관객 투표로 최종 수상작을 확정하였음. 성과발표회는 tvN에서 <O 크리에이티브>라는 제목으로 오디션 형태의 방송을 제작·방영함
- 2015. 12. 13. 성과발표회 <O 크리에이티브> 최종 심사 결과 극단 하땅세가 대상작으로 선정됨. 대상작에게는 당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었으며, 이는 2015. 12. 10. 문화체육관광부 내부결재 문건에서도 확인됨



2015. 12. 10. 문화체육관광부 내부결재 문건

- 녹화 다음날인 2015. 12. 14. 청와대 행정관은 문화산업정책과장에게 전화하여 ‘2015 융복합 콘텐츠 공모전’ 참여자들이 문제단체인지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지시함. 이에 따라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은 예술정책과 서기관에게 확인전화를 하였는데, 대상 수상단체인 극단 하땅세가 문제단체라는 답변을 들음
- 이미 녹화가 완료되어 심사결과를 번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청와대 행정관에게 극단 하땅세의 장관상 취소 및 방송 분량 조절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함
-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문화창조융합센터 담당자에게 조치를 지시하였음. 이에 극단 하땅세에게 수여 예정이었던 장관상은 문화창조융합센터장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재방송에서 대상 발표 및 시상 장면이 편집되어 방영됨

기타 기관

① 평창동계올림픽 안무 감독 교체

- 2015년 7월 경, 000이 평창동계올림픽 총감독으로 임명된 후 안무 감독으로 안애순 감독을 추천하고 2회에 걸쳐 초기 구성안 회의까지 하였으나, 김종덕 장관이 ‘윗선의 지시’라서 본인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안무 감독을 교체하라고 하여 결국 안애순 감독을 교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2015년 7월경 제가 총감독으로 임명되고 저에게 함께 일할 감독들을 추천하라고 해서 안무감독으로 안애순 감독을 추천하였습니다.

두번에 걸쳐 초기 구성안 회의를 진행한 후에 김총덕장관으로부터 안무감독을 교체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교체이유가 뭔지를 물어보았지만 윗선의 지시라 본인도 어쩔수 없다는 얘기외에는 아무 말도 할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저에게 감독 임명 권한이 있는것이 아니라서 저로서도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000 총감독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2018. 4. 11.)

3 문학 출판 분야

1. 개요

1) 내용요약

[예술위 문학분야 블랙리스트 실행 개요]

- 예술위는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 실행함
- 예술위는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 문체부는 이를 청와대 및 국정원에 송부. 청와대 및 국정원으로부터 특정 문인 및 단체, 출판사에 대한 배제지시 문체부로 하달, 문체부는 다시 예술위로 전달하여 블랙리스트 실행을 종용함
-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적용이 어려워지자 선정인원 축소의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실행함. 중국적으로는 해당 사업들 폐지함
- 선정인원 축소로 발생한 잔여예산으로 후속 사업을 추진함. 후속 사업은 사업 설계단계에서부터 블랙리스트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설치하였으며 후속 사업에서도 블랙리스트 실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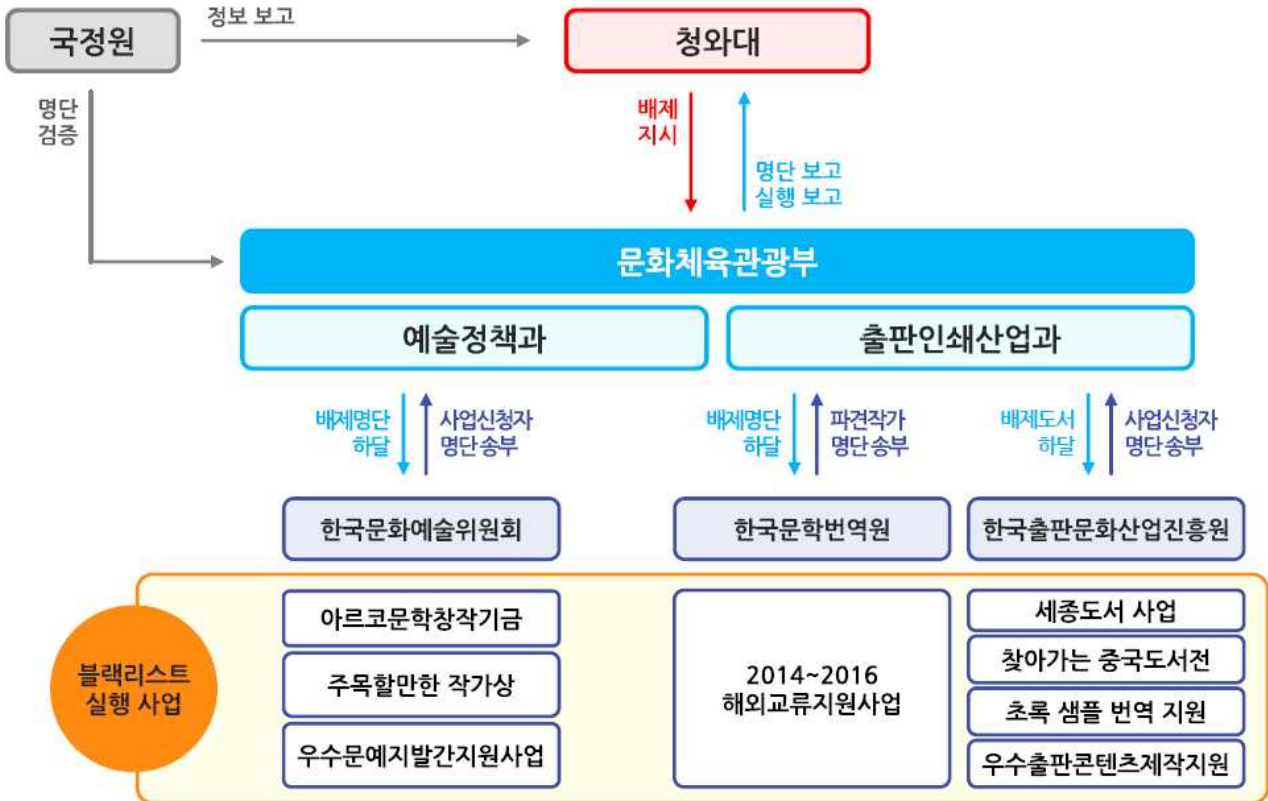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개요]

- 번역원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 및 주무관은 번역원 2014~2016 해외교류지원 사업 전반에 블랙리스트를 하달하여 한국 문인들의 해외 파견을 불허함.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및 제주해군기지·밀양송전탑 등 국가 주요 시책 반대 선언 참여 문인들이 주요 배제 대상이었음

[출판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개요]

- 출판진흥원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임. 일부 매체에서 제기한 2013년 선정 우수도서들에 대한 이념편향 논란을 시작으로 민간 단체에서 진행하던 우수도서 문학부문 사업이 출판진흥원으로 이관·통합되면서 ‘세종도서’ 사업으로 개편되었고, 이 단계에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은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세종도서 사업을 비롯한 출판진흥원 진행 사업 전반에 하달하였고 출판진흥원은 이를 실행함

2) 구조



2. 주요 사건 조사 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사건

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의 경우, 역량 있는 ‘문학인’ 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간 1천만원씩 100여 명에게 지원하는 10억 규모의 대표적인 ‘창작 지원 사업’ 으로, 매년 약 1천여명의 문인들이 신청하는 관심도가 높은 사업임

②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블랙리스트 실행

심의단계	일정	신청자 및 심의통과자	청와대 및 문체부의 배제지시	비고
공모 신청	2014. 10. 27. ~ 11. 11.	959명 신청	76명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1차 심의	2015. 1. 21. ~ 22.	198명 통과	16명에 대한 배제지시	무기명 심사
2차 심의	2015. 3. 31. ~ 4. 1.	102명(94명+8 명) 통과	6명에 대한 배제지시	
			8명에 대한 추가배제시	
3차 심의	2015. 6. 26.	102명(안) 확정		책임심의위원 배제지시 거부
위원회 서면결의	2015. 7. 17.	70명(안) 확정	5명 배제	선정인원 축소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 및 결과>

○ 사건 특징

-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은 청와대-문체부-예술위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의 집요한 실행으로 ① 심의일정 지연, ② 배제기준 고안, ③ 최종 선정인원 축소, ④ 잔여예산 발생 등 여러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사업임
- 2014. 11. 공모신청자 949명 명단 송부, 76명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 예술위는 2014. 11. 청와대 및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2015 아르코문학창작 기금 공모 신청자 949명의 명단을 송부. 청와대 및 문체부는 76명의 배제 대상자 명단을 하달함
- 1차 심의(2015. 1. 22. ~ 22.) 이후 198명 명단 송부, 16명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 1차 심의 이후 심사를 통과한 198명의 명단을 예술위는 문체부에 다시 보고. 문체부는 이를 청와대에 송부함
- 2차 심의(2015. 3. 31.~4. 1.) 이후 102명 명단 송부, 14명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 2차 심의 결과, 해당 심의의 통과자 총 102명(2차 심사 통과자 94명, 예비 후보자 8명) 확정함
 - 102명 중 청와대 및 문체부에서 1차 심의결과 중 배제를 지시하였던 16명 중 5명이 통과자에 포함됨
 - 문체부는 다시 이 5명에 이윤택을 추가하여 총 6명에 대한 배제지시를 하달함
 - 4. 23.경 8명에 대한 추가 배제지시 하달함
- 14명에 대한 배제지시 실행 난항으로 3차 심의 지연
 - 2015. 3.에 최종선정 인원이 발표되었어야 했으나 문체부에서 3차 심의일정을 승인하지 않아 3개월 지연됨
- 3차 심의(2015. 6. 26.) 책임심의위원 배제지시 거부, 102명안 확정함
- 2015. 7. 17. 위원회 서면결의로 최종 선정인원 축소(102명→70명)
 - 박석근, 이윤택, 김병곤, 이성목, 전석순 최종 5명 배제 위해 최종 선정인원 축소 결정함
 - 책임심의위원 3차 심의결과를 무시하고, 위원회 서면결의로 70명안 확정함

③ 블랙리스트 실행 특징

- 대규모의 블랙리스트 하달로 약 5개월 간 심의일정 지연됨
- 특정 인물 배제를 위한 선정기준 고안함
 - 시와 소설분야는 60%로 축소지원 결정하고, 시조 등은 육성차원에서 지원후보 100% 결정 등 세부분야별 형평성 안배를 감안하겠다는 선정기준을 만들었으나, 사실 이는 단편소설 분야 박석근 작가를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는 문체부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 최종 선정인원 축소로 잔여예산 발생함

- 해당 사업 폐지함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용이 가장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된 대표적인 사례이자 강한 집행 의지가 반영된 사례로 블랙리스트 운용 구조의 표본을 보여주는 사건에 해당함

④ 관련 리스트

- 문체부 작성, “리스트-2014/215년도분(654명)-확정” 중 2015-1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중 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문체부 예술정책과 ○○○ 서기관이 작성함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총 4차에 걸쳐 명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검토결과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작가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음

2015-1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사업명	신청 건수	1차 검토	2차 추가	비고
① 아르코문학 창작기금 14년(신청/신청) :99/941 92명	959	○ 총 74명 강정연(75), 곧괏규(60), 김규성(50), 김도원(79), 김미령(75), 김미애(72), 김성경(59), 김영희(64), 김용길(57), 김은경(65), 김정희(58), 김종경(68), 김태형(71), 김필남(81), 김현주(61), 박남희(56), 박혜선(69), 박혜숙(58), 박홍식(43), 방현희(64), 배봉기(57), 백정희(52), 서규경(49), 서성란(67), 서유미(75), 성향숙(58), 손병걸(67), 송영희(57), 송은일(64), 송호필(62), 신덕룡(56), 신동욱(77), 신현림(61), 안지숙(61), 안학수(54), 오미경(65), 윤동수(60), 윤원일(51), 윤이주(68), 윤혜숙(62), 이경희(75), 이노영(80), 이동재(65), 이묘신(67), 이미애(64), 이병순(64), 이상권(64), 수필, 이상권(64, 시), 이선(62), 이성목(62), 이정희(61), 이지담(58), 이창숙(65), 이철경(66), 임봄(70), 임수량(62), 임수현(76), 장대승(65), 전영환(61), 정	○ 2차 추가 : 총 17명 -2차 추가검토자 : 강정규 -1차 무기명 심사결과 1198명중 16명('15.1.22) 강정연, 김성장, 김은경, 김종경, 김필남, 박남희, 박혜선, 백정희, 서유미, 신동욱, 이상권, 이성목, 이정희, 이지담, 조항미, 황은덕 ○ 3차 추가: 총 14명 -2차 심사결과 6명('15.4.1) · 강정연, 김은경, 박남희, 이상권, 이성목, 이윤택 -추가자 8명('15.4.23) · 박석근, 전석순, 정광모, 김혜정, 하신하, 김병곤, 박진성, 이경록 ○ 4차 확인(15.6.23). -이윤택 제외한 13명중 1명(박석근(절대인됨)) ○ 정무리스트 추가('15.7.6)	

세훈(55), 정익진(57), 조성극(63), 조용미(62), 조재도(57), 조항미(70), 차노휘(74), 최종천(54), 최명진(76), 최영철(58), 최영철(64), 최강근(70), 한창훈(63), 황선영(63), 황은덕(66)	· 중복(4): 강정연, 김은경, 이상권, 하신하 · 추가(9): 구경미, 김경, 김미선, 김서령, 김미희, 김인숙, 유종인, 이재훈, 최양선 ○ 최종: 5명 제외(15.7.17 의결 완료) - 박석근, 이윤택, 김병곤, 이성목, 전석순	
--	---	--

○ 2015. 7. 6. 받음 가필 김영란 등 115명 리스트

- 해당 문건은 ‘2015. 7. 6.자 정무리스트’ 로 문체부 ○○○ 예술정책과장은 2015. 7. 5.경 청와대에서 ○○○ 행정관으로부터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신청자 105명을 포함하여 참고사항으로 ‘문재인 지지선언’ 등이 기재되어 있는 113명의 명단을 받아, 이를 ○○○에게 정무수석실에서 받은 것이라면서 전달함
- ○○○은 ○○○로부터 해당 리스트를 전달받으면서 2015. 7. 6. 수령일자를 문건 상단에 가필로 기재함
- 해당 문건은 이례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배제사유(예: 문재인 지지선언 등)가 “참고사항” 에 명시되어 있음

2015. 7. 6. 받음

연번	사업명	지원신청 사업명	신청내역명	대표자	지원신청금액	분야	참고사항
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구개 유> 발간	김영란	김영란	10,000,000	동시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 선언(2012.12.15)
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영란	김영란	10,000,000	동시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 선언(2012.12.15)
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이정숙	이정숙	10,000,000	동시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 선언(2012.12.15)
4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동시집 '여백의 낭만'(가제) 발간	정세훈	정세훈	10,000,000	동시	문체부(2015. 7. 6.)
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동시집 '결' 발간	박경	박경	10,000,000	동시	경남지역 문화예술인 80여명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6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지구개 전후(총) * 발간(가제)	유영갑	유영갑	10,000,000	동시	문화예술계 531인 민주노동당 지지선언(2006.5.24)
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미희 동시집 <우물 안강 뿔바래>	김미희	김미희	10,000,000	동시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 선언(2012.12.15)
8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문학	조인숙	조인숙	10,000,000	동시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 선언(2012.12.15)
9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최영선	최영선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10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박철신	박철신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1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문학창작집 '발간 지평'	박철우	박철우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1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시영 동화 창작집	미나영	미나영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1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홍희정 (한학 과목 외 1편)	김미애	김미애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14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015년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	김리리	김리리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첫사랑은 연두중> 발간	전영남	전영남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16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영화감독 나경나씨의 티라노사우루스	김봉미	김봉미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이미애	이미애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18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동화 작품집 '장강'	백승남	백승남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19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최은영	최은영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20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영정	김영정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2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초등학교 소년 배후	김연진	김연진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2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리리	김리리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2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열두살의 모니차 2	김지영	김지영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24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상한 캠프> 발간	이규숙	이규숙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2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대중 문학창작 기금	김연진	김연진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26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정승숙	정승숙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2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창비출판 <나쁜> 발간	신자은	신자은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28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이성원	이성원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29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이영희	이영희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30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그랜드 캠페인 수레집	강현연	강현연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3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날을 새겨 작품집 '발간'	김혜숙	김혜숙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3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개와 늑대의 시간' 발간	박광희	박광희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3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경원	김경원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34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합동출판 <우물> 발간	김은연	김은연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3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창비출판 <우물> 발간	신정연	신정연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36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홍기훈	홍기훈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3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북키소키의 하늘] 발간 사업	이병승	이병승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38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크림의 노래> 발간(가제)	이영희	이영희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39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장병욱	장병욱	10,000,000	동화, 단편	여인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민 지지선언(2012.12.15)

2)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부당 배제 사건

① 주목할만한 작가상

○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의 잔여예산으로 진행한 후속사업임

○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작가 중 현재까지의 성과가 뛰어나고 앞으로의 문학 적 성취에 지원이 필요한 우수작가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 소설, 아동·청소년문학을 선정분야로 하며, 총 예산 300백만원으로 총 20인에게 각 15백만원을 지원함

② 블랙리스트 실행 방식

○ 비공모 사업으로 추진

-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지원’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공모로 진행된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과 달리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공모 형태로 지원 사업 진행함

○ 추천위원회 및 예비심사위원회 제도를 설치·운영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등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면서 발생하였던 시행착오를 줄이고 배제지시의 수월한 이행을 위해 ‘추천위원 및 예비심사 제도’라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함
- 추천위원회에서 총 300여명의 작가들을 후보군으로 추천함. 이들 중 2인 이상의 중복 추천을 받은 80여명의 후보 풀을 구성함

○ 예술위, 블랙리스트 실행 준비작업 실행

- 예술위에서는 추천위원들의 추천으로 구성된 해당 사업의 후보 작가군을 두고 미리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탈락자, 주요 문학상 수상자 등 기준들을 만들어 여러 배제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해당자들을 탈락시킬 수 있는지를 엑셀자료로 작성함
- 이를 문체부 해당 서기관에게 보고하는 등 블랙리스트를 실행할 준비작업을 철저히 진행함

2015 아르코 주목할만한 작가 창작지원

구분	대상	내용
기준1	노랑	등단 15년 이상(2000년 이전) *사업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을 가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지원이 필요한 등단 15년 미만의 작가로 한정함
기준2	초록	개인 작품집 없음
기준3	파랑	2014~2015 아르코, 서울, 대산문화재단 창작기금 선정자 및 2015 아르코, 서울문화재단 창작기금 신청 탈락자 *창작기금은 통상 2년내 발간 및 성과보고를 원칙으로 하여 기존 지원된 작가들 재신청 할 경우 특성상 편중 지원이 될 수 있음.

기타 일반작가 고려기준(색별 배제지시 대상 제외): 등단 이후 1년내까지 저술한 작품집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 '활동실적'에 대한 기저 평가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연번	분야	작가명	출생년도	출판지	등단(년도/매체)	수상 이력	저서(작품집)	지원신청내역	지원발탁내역	배제	추진	추진권	추진인	추진
1	시분야	강성은	1974.01.01	경복 의성	2005/문학동네		'구두를 신고 밤에 들었다'(2009), '단지 조금 더 심한'(2013)	2015 대산문화재단 선정	2015 서울문화재단 문학창작집발간지원사업 신청		2	송종환	유규옥	
2	시분야	고영환	1968.06.26	중앙 시산	2002/문학사상	2012 제7회 지리산문학상	'사슴공원에서'(2012), '악어', '공손한 손', '그대와 주중기'(2014), '나도 여 제왕이 없는 계절이다'(2012), '기다'(2008), '시자의 눈을 닮았다'(2009), '말머'(2012), '내가 가장 아름다운 때 내 고향 사랑하는 이가 없었다'(2015), '필두 국왕'(2013), '차고 있어. 같이 가'(2013), '사마브러스의 긴 회'(2014), '신데렐라의 외출'(2004)	2014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신청			3	이정복	문성해	박
3	시분야	김경주 (김병관)	1976.07.14	광주	2003/서울신문 신춘문예	2009 모듬의꽃문학예술가상 2009 김수영문학상/시작문학상	'말머'(2012), '내가 가장 아름다운 때 내 고향 사랑하는 이가 없었다'(2015), '필두 국왕'(2013), '차고 있어. 같이 가'(2013), '사마브러스의 긴 회'(2014), '신데렐라의 외출'(2004)	2015 서울문화재단 예술인활동지원 신청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신청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	위선환	홍정영 (임정영)	
4	시분야	김영은	1963	전남 해남	2008/시의 시작		'사마브러스의 긴 회'(2014), '신데렐라의 외출'(2004)				2	장지혜	김길나 (김영희)	
5	시분야	권서재 (김진호)	1976.12.06	경북 의성	2008/리보피아		'나는 이미 한 생을 잘못 살았다'(2015)		2013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신청 2014 서울문화재단 문학창작집발간지원 신청 2014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신청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신청		2	권기덕	백석수	
6	시분야	권서재 (김선아)	1971.07.01	경남 통영	2007/현대문학	2007 현대문학 시 부문 신인상	'말머'(2012), '내가 보았다'(2011), '내 이름은 울레'(2014)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신청		4	최규승	이이혜	
7	시분야	김성규	1977.12.28	충북 옥천	2004/동아일보 신춘문예	2015 김구영시문학상 2014 진동열문학상 2010 제1회 시경문학대상	'나는 잘못 알아보았다'(2014), '전국은 인쇄공 한가진 자들을 수거했구나'(2013), '해운대'(2012), '불 오듯한 밤'(2006), '내 1969년 겨울은 왜 더 무성했을까'(2014), '68년 2월의 문예잡지'(2014)				2	내희덕	함기석	

<여러 배제기준을 적용하여 낸 결과물 엑셀자료, 예술위 직원 문체부 서기관에게 송부>

[참고설명] 예술위 직원이 문체부 000에게 보낸 2015. 12. 7.자 메일에 첨부된 자료

위 메일에 첨부된 엑셀자료를 보면 3가지 기준이 문건 상단에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기준은 “기준1(노랑): 등단 15년 이상”, “기준2(초록): 개인 작품집 없음”, “기준3(파랑): 2014~2015 아르코, 서울, 대산문화재단 창작기금 선정자 및 2015 아르코, 서울문화재단 창작기금 신청 탈락자”이며, 아래 이어지는 표에서는 위 기준에 따라 총 83명의 작가들을 색깔 별로 구분하여 배제가능 여부 명시함

○ 총 27명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 문체부 ○○○은 예술위에 당시까지 하달하였던 배제지시 대상자들을 모두 누적하여 배제해야 된다는 지시를 하달함

기존 누적 명단	김경주(김병곤), 김종일, 박진성, 손병걸, 신동옥, 구병모(정유경), 김태용, 박솔뫼, 서유미, 안지숙, 윤고은(고은주), 천명관, 김혜정, 송미경
신규 추가 명단	강성은, 김사람(김진호), 김성규, 백가흠 손흥규, 신용목, 이안, 오주영, 조해진, 한용국, 한정영, 황인찬, 황정은

<기존 누적 명단 및 신규 추가 명단 구분>

○ 부당한 배제기준 고안

- ‘주요 문학상 수상자 배제’, 민간 부문 문학상의 경우 주목할만한작가상과는 상금 등의 규모에서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 영세한 상들을 수상한 작가들도 상을 수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에서 배제함
-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탈락자 배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은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파행된 대표적 사업으로 이미 한 차례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피해를 본 작가들을 다시 한 번 해당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블랙리스트의 이중적 실행임
- 심의단계에서 비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됨

○ 이로 인해, 김성규, 손흥규, 황인찬 등 약 30여명 배제 결과 발생함

③ 블랙리스트 실행 특징

- 사업 설계 단계부터 블랙리스트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비공모 사업 형태를 선택하고, 추천위원회 및 예비심사위원회 설치함
- 문체부로부터 배제지시 하달 전에 적극적으로 배제기준 고안 및 배제 결과 시뮬레이션 진행함
- 부당한 배제기준 고안 및 심의단계에서 비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함

④ 관련 리스트

- 문체부 작성, 「리스트 - 2014 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2015년 연중 사업 관리 리스트 - 262명”

아르코주목할만한작가상 ('15.11.12) -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한용국, ②신용목, ③김성규, ④황인찬(통진당당원), ⑤백가흠, ⑥손홍규, ⑦조혜진, ⑧황정은-K('15.12.7) ○ 김대용- 오케이(K) ○ ⑨강성은, ⑩김사람(반드시제외), ⑪김선제(김선아), ⑫오주영, ⑬이안(반드시제외), ⑭한정영-B('15.12.11)
인문예술코서트 &는	○ 기하의-L('15.12.7)

- 해당 사업 후보 작가군 명단은 2015. 11. 12.에 청와대 및 국정원에 보고함
- 2015. 12. 7. 국정원에서 8명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함
- 2015. 12. 11. 청와대에서 6명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함

3)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 사건

①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문학 창작 활동의 중요한 토대인 문예지 등 우수한 문학 분야 전문지의 발간을 지원하여 문학 창작 및 비평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임

② 블랙리스트 실행 방식

- 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및 11개 문예지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 예술위는 2014. 11. 11.경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접수를 마감하고 지원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함
 -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거쳐 11개 문예지가 배제대상으로 하달됨
- 실천문학, 문학동네 양해 조치
 - 예술위 및 문체부는 차례로 청와대에 배제대상으로 하달된 문예지 중 ‘실천문학’, ‘문학동네’ 를 배제하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이에 두 출판사는 양해를 받아 2015. 3. 31.자로 최종 선정됨
- 배제지시 실행을 위해 선정 문예지 종수 축소 발표
 -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11개의 문예지 중 2건의 양해조치 이후 9건에 대한 배제지시 실행을 위하여 선정종수 축소 확정함
 - 2013년 55건, 2014년 39건이 선정되었던 해당 사업은 2015년에는 14건에 대하여만 지원결정을 함으로써 배정되었던 총 10억 원의 예산 중 30%만 사용함

○ 해당 사업을 폐지함

○ 창비의 경우 리스트 전달과정에서 누락되어 선정됨

- 창비 선정 이후 문체부는 청와대의 질책을 받고 해당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담당 과장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함

○ 2015. 4. 2.자 ‘대통령 수신 편지’

창비(창의재단) 설립과 관련한 불평탄 여론과 1970년대부터 반정부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이었다는 지적(보거: 반체제)을 받고, 한국문인협회 정동파(소위 보수 진영) 잡지들에게는 격퇴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 절정에 접어들어 인사들이 자기네들과 계층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적지만, 마치 戰場에서 돌아온 개신 장군인 양, 허프린 작군을 격퇴시킨 偉業을 자랑할 하고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들중 집중 지원하기로 한 <창비>나, 그 또 流인 <문학동네> 등은 1년에 14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상업 기관의 기관입니다. 국제 지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단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창비(창의재단)를 만들어, 푸른 문인들을 달아잡고 그들의 폐쇄 집단(Clique)을 만들어, 푸른 문인들을 달아잡고 살피는 底意를 품고 삽니다. 그들은 한때 한국문인협회를 할 부활기(부활)를 거부하며, '단독문학작가회의'의 文學界 하위도 '한국문인작가회의'의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끊임없이 재검 투쟁과 원수 적으로 문학의 조짐과 실천에 앞장섰다가 최근에 갑자기 변절한 평론가 임현영 같은 사람이 이를 대표합니다. '천원짜리 창산'에 주도적으로 활동하기도 하했습니다.
敵 - 을 하고, 한국소설가협회와 국제펜클럽한국본부에 정부 지원금을 支給하고, 한국문인협회 지원금 삭감분 9백 만 원을 원상 복구하여 4천 5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강력히 지시해달라는 내용임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학교 은사인 ‘한국문화비평가협회 고문 ○○○’ 이 대통령에게 탄원하는 편지를 보냄
- ‘국제펜클럽한국본부’에 지원이 되지 않은 것과 한국문인협회 ‘월간문학’ 지원액이 3600만원에 불과한 것은 부당하고, ‘창비’나 그 아류인 ‘문학동네’ 등은 ‘반체제’, ‘반정부’로 국비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과 한국소설가협회 및 국제펜클럽한국본부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한국문인협회 지원금 삭감분 9백만 원을 원상 복구하여 4천 5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강력히 지시해달라는 내용임

○ 박근혜 전 대통령, 김상률 전 교문수석에게 보수문예지 지원 방안 검토 지시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 4. 2.자 김봉군의 편지를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전달하면서 보수문예지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함
- 김상률은 이를 김소영과 ○○○에게 하달하여 대통령 의사 전달함
- 이후 이 편지와 함께 좌성향 문예지 지원 축소 및 보수문예지 지원 확대 방안 검토 지시가 문체부에 하달됨

○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안) 보고” (2016. 1. 8.자)

- 2016년에는 2015년의 단순 반복적 문예지 지원 규모를 축소하여 문학단체의 문예활동을 지원하며 하단에는 ‘펜한국본부’ 등의 문예활동지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됨

3. 핵심장르(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사업개선

□ 문학 분야

2015년 (37.8억원)	2016년 (30.8억원)
① 나뉘주기식 공모지원 (10억원) - 아르코 창작기금 10억원 * 70명 공모 × 10백만원 * 20명 공모 × 15백만원	① 신진중심 창작지원으로 전환(7억원) - 청소년 문학영재 발굴육성 (1억원) - 차세대 신진작가 창작아카데미(3억원) - 유망작가 지원(3억원) * 20명 공모(추천제 병행) × 15백만원
② 단순 반복적 문예지 지원 (10억원) - 문예지 게재작 원고료 지원	② (축소) 문학단체 문예활동 지원 (5억원) - 펜한국본부 등 문예활동지원(3억원) - 문예지 우수콘텐츠 아카이빙(2억)

○ 후속 사업으로 문예지 우수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추진

- 예술위는 2015년도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지원심의 결과 잔여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우수문예지 콘텐츠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함
- 예술위로부터 우수문예지로 선정된 바 있는 주요 문예지에 수록된 우수기획기사의 상당수가 디지털 아카이빙이 구축 운영되지 않아 향후 유실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수집, 보존, 공유의 필요성에 따라 진행된 사업임
- 해당 사업에서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었던 소위 보수문예지들이 1~2차 심사를 통해 모두 지원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던 국제펜클럽한국본부의 문예지 PEN문학은 2015. 7. 30.경 ‘우수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1차 심의 및 지원결정으로 2천만원 지원을 결정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됨

사업명	응모자(단체)	지원금액(원)	선정여부	비고
<PEN문학> 발간	(사)국제펜클럽한국본부	20,000,000	가	1차 심의 시 선정
<한국소설> 발간	(사)한국소설가협회	30,000,000	가	1차 심의 시 선정
<한국수필> 발간	(사)한국수필가협회	22,000,000	가	1차 심의 시 선정
<월간문학> 발간	(사)한국문인협회	6,000,000	가	2차 심의 시 선정

○ 2015 문예지 우수콘텐츠 아카이빙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의 파행으로 부당배제 및 이에 따른 피해를 입은 문예지들에 대한 구제의 목적을 가진 사업임
- 그러나 우수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탈락한 문예지들 중 일부는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되거나 기타 블랙리스트 문건에 등재된 단체로 해당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결정되었어야 하는 단체들로 보이나, 블랙리스트의 실행으로 후속 사업에서조차 부당하게 ‘배제’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음

사업명	응모자(단체)	선정여부	비고
<삶이보이는창> 발간	(사)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부	문제단체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기존관리리스트, 정무리스트 등재 단체
<푸른글터> 발간	도서출판해성	부	
<문학청춘> 발간	문학청춘	부	
<발견> 발간	발견	부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부당배제
<시와동화> 발간	시와동화	부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부당배제
<어린이시조나라> 발간	어린이시조나라사람들	부	
<인디고잉> 발간	인디고서원	부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부당배제

○ 2016 기간문학단체활동 지원 사업 창설 - 보수 문인단체 지원 집중

- 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주요 단체나 협회 또는 전국적 규모의 문학 장르별 대표 단체나 협회의 문예지(협회지) 발간을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심의 결과, 2016 기간문학단체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의 설계상 보수 문인단체들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판단됨

연번	지원대상 단체명	대표자명	지원대상 사업명	지원결정액
1	(사)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이상문	PEN 문학 발간	21,000,000
2	(사)한국문인협회	문효치	월간문학 발간 및 문학활성화 기획사업	52,000,000
3	(사)한국소설가협회	김명자	월간 한국소설 발간 및 문학활성화 기획사업	40,000,000
4	(사)한국수필가협회	지연희	월간 한국수필 발간	24,000,000
5	(사)한국희곡작가협회	홍창수	계간 한국희곡 발간	18,000,000
6	한국아동문학회	김철민	아동문학예술 발간 및 문학활성화 기획사업	9,000,000

③ 블랙리스트 실행 특징

- 최종 선정종수 축소함
- 지원 사업 폐지함
- 블랙리스트의 원활한 실행이 가능한 후속 사업 창설함
- 보수 문인단체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는 신규 사업 창설 의혹 있음

④ 관련 리스트

-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리스트-2014/215년도분(654명)-확정” 중 2015-1 문학 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1차에 총 5건, 2차에 총 6건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기재됨

③ 우수문예지 발간 - 11명 14년(선정/신청) 55/93	99 ○ 총 5명 한국작가회의인권지회(문계봉), 실천문학(김남일), 천년의 사적(채상우), 발견(황학주), 시와 문화(박몽구)	매년인특사제년 이사상 중 연성부 후보적 활동가도 양해됨 ○ 2차: 6명 추가 문학동네(강영선, 계간 문학동네 발간), 시와동회(강정규, 계간 시와 동회발간), 문학수첩(강봉자, 시인수첩 발간), 문학N (이종 찬, 계간 문학N 발간), 문학나무(윤영수, 계간 문학나무 발간) 주변인과 문학(김명관, 계간 주변인과 문학 발간)	2건 양해실 천문학, 문학 동네
③-1 우수문예지	○ 오늘외비평	○ 시장 ○ 늘리미평 - 양재 파우더 / *15.10.8/16.19)	

한국문학번역원

1) 한국문학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①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 한국문학번역원

- 번역원은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문학진흥법 제13조 제1항),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체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법령상 번역원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음

○ 해외교류지원 사업

- 번역원이 진행하는 해외교류 지원 사업은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세계화를 목표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문학 및 학술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함으로써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광범위한 배제지시 하달

-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번역원 ‘교류’ 사업 전반에서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문체부·청와대 등의 특정 문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배제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② 블랙리스트 실행 방식

○ 블랙리스트 규모

- 번역원의 2017. 12. 20.자 위원회 제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총 18건의 교류사업 중 1건, 2015년 총 61건의 교류사업 중 5건, 2016년 총 69건의 교류사업 중 9건의 사업에서 문체부의 배제지시가 하달, 문인 약 30명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의 집요한 블랙리스트 하달
 - 문체부의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및 주무관은 번역원에 해외교류지원 사업의 작가 파견 계획안 등을 분기별로 ‘미리’ 송부하라고 지시하여 이 자료에 기초하여 특정 문인들에 대하여 파견 불허 등의 배제지시를 번역원에 하달함
 - 번역원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배제사례에서 청와대 및 국정원의 배제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 그러나 번역원 블랙리스트 진행 경과에 대해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문체부 담당 과장이 보고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함

- 신경림, 박범신은 국정원에서 배제지시 하달
 - 문체부 예술정책과로 번역원 담당과가 변경되면서 문체부 작성 리스트에 번역원 해외교류 사업 블랙리스트 기재 시작함
 - 신경림, 박범신 파견불가 지시 기재됨
 - ○○○은 국정원의 배제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함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 오세영, 김애란, 최윤: 특이없음(7.25) ○ 고해선: 특이없음(7.26) ○ 신경림(×), 박범신(×), 정호승(○)
--------------	---

<「리스트-16.9.27현재」,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문체부 작성)>

-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문인 배제
 -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이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문인 명단 등을 파견 작가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함

- 밀양송전탑,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선언 문인 배제
 -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과장은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문인들을 국가지원사업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번역원에 블랙리스트 하달함

- 번역원 해외교류지원 사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배제지시 회피 노력
 - 번역원은 문체부의 특정 문인에 대한 ‘파견 불허’ 지시에 대하여 번역원의 해외교류 지원사업의 특성상 항상 해외 사업파트너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배제지시가 하달된 작가들에 대하여, 해외기관 초청이 있는 경우에는 ① 해외기관이 해당 문인들에 대한 초청을 요청한 점, ② 이미 해외기관과 작가 파견과 관련한

협약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들어 번역원에서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피하여 해외 파트너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파견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함

③ 블랙리스트 실행 특징

- ‘청와대 및 국정원 - 문체부 - 산하기관’ 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의 파생적 성격을 가짐
- 문체부 내 배제논리 내재화로 기관 스스로 적극적 배제지시 실행
 - 번역원 블랙리스트 사건은 ‘청와대 및 국정원 - 문체부 - 예술위 등 산하기관’ 간 상명하복식 지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좌파배제의 국정기조가 블랙리스트 실행이라는 방식으로 문체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서 구조화 및 내재화·일상화된 방식으로 작동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임

④ 2014-2016 번역원 해외교류지원 사업 배제지시 및 배제결과 요약표

(2017. 12. 20. 번역원 엑셀파일 제출)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및 배제지시 사실 확인	비고
2014	영국 런던도서전 (2014. 4. 6.~13.)	1. 행사명: 2014년 런던도서전 한국 주빈국 문학행사 개최 2. 행사내용: 한국문학번역원 부스 및 주빈국 작가존 운영, 문학세미나 6회, 문학살롱 4회, 도서전 외부 문학행사 9회, 오늘의 작가 행사(황선미), 주빈국출판세미나, 한국문학번역세미나 3. 대상작가: 황석영, 이문열, 이승우, 김인숙, 신경숙, 김영하, 한강(이상 7인 소설가), 김혜순(시인), 황선미(아동작가), 윤태호(웹툰작가)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유선) - 주한 영국문화원과 모든 참가작가 선정 협의 완료 후, 문체부에서 황석영(소설가), 김영하(소설가), 윤태호(웹툰작가) 등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파견
2015	프랑스 국제 시인 비엔날레 (2015. 5. 29.~6. 10.)	1. 행사명: 국제 시인 비엔날레 2. 행사내용: 프랑스 국제 시 비엔날레 한국 대표 시인으로 참가, 다양한 행사 개최 3. 대상작가: 심보선, 강정, 김이듬 (이상 시인)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유선) - 심보선 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파견

	<p>영국, 노르웨이, 스페인 황석영 작가 <바리데기> 출간 기념 행사 (2016. 5. 10.~6.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명: 황석영 작가 <바리데기>출간 기념 행사 및 독자와의 만남, 현지언론 인터뷰 등 2. 행사내용: 2015년 황석영 작가 <바리데기>가 영국, 호주, 노르웨이, 스페인 등에서 출간됨에 따라 출간 기념회 개최를 지원 3. 대상작가: 황석영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유선) - 황석영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p>파견</p>
	<p>이탈리아 유네스코 본부 특별 시 낭송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명: 유네스코 본부 특별 시 낭송회 2. 행사내용: 유네스코 본부 시낭송회 및 출판 기념회 개최 3. 대상작가: 고은(시인)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유선) - 고은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p>파견</p>
	<p>미국 동부 한국문학행사 개최(2015. 11. 11.~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명: 미국 동부 한국문학행사 2. 행사내용: 한국문화회 참가, 미국 동부 한국문학행사 개최 3. 대상작가: 강영숙(소설가), 김종희(평론가)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유선) - 김애란, 김연수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p>배제</p>
	<p>프랑스 MEET 문예축제(2015. 11. 18.~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명: 프랑스 MEET 문예축제 2. 행사내용: 프랑스 MEET 문학행사 참가 3. 대상작가: 편혜영(소설가)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메일) - 편혜영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p>파견</p>
<p>2016</p>	<p>하와이대 및 UC버클리대 시인 및 번역가 파견 지원 (2016. 2. 17.~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명: 하와이대 및 UC버클리대 시인 및 번역가 파견 지원 2. 행사내용: 미국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캠퍼스 및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한국학 센터가 주관 하는 한국문학 행사 참석, 시 낭송회 및 한국문학 강연 진행 3. 대상작가: 김승희(시인), 안선재(번역가), 이시영, 김수복(시인)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유선) - 이시영, 김수복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p>파견</p>
	<p>프랑스 파리도서전 (2016. 3. 16.~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명: 파리 도서전 한국 주빈국 참가 2. 행사내용: 파리도서전 한국 주빈국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대표작가들 간 작가대담, 토론회 및 낭독회 진행 3. 대상작가: 김애란, 김연수, 김영하, 김종혁, 김혜순, 마중기, 문정희, 오정희, 은희경, 이승우, 이인성, 임철우, 정유정, 한강, 황석영 (소설가, 시인)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메일) - 황석영, 한강, 김영하, 김애란, 은희경, 임철우(이상 소설가), 김혜순(시인)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하달됨 	<p>파견</p>

<p>러시아 한국문학행사 (2016. 7. 7.~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명: 한국 문학 행사 2. 행사내용: 한국 시인과의 만남 개최 및 출판사 미팅 3. 대상작가: 이근배, 문정희, 최동호(시인)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메일) - 이근배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p>파견</p>
<p>슬로베니아 시 축제 작가 파견(2016. 8. 23.~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명: 슬로베니아 시 축제 작가 파견 2. 행사내용: 시축제 참가, 언론사 인터뷰 및 문학행사 개최 등 3. 대상작가: 고은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메일) - 고은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p>파견</p>
<p>중국 항주 문학행사 (2016. 9. 8.~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명: 중국 항주 문학행사 2. 행사내용: 항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작가의 문학행사 개최 3. 대상작가: 오정희, 김기택 4. 문체부 예술정책과,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유선) - 신경림, 정끝별, 박범신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p>배제</p>
<p>베를린 문학축제 및 문학행사 작가 파견(2016. 9. 8.~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명: 베를린 문학축제 및 문학행사 작가 파견 2. 행사내용: 문학축제 참가, 문학행사 개최, 현지 언론사 인터뷰 등 3. 대상작가: 한강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메일) - 한강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p>파견</p>
<p>Manoa 지 한국문학특집호 출간 마케팅 지원(2016. 9. 18.~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명: Manoa 지 한국문학특집호 출간 마케팅 지원 2. 행사내용: 미국 의회도서관, 조지워싱턴대학교 주관 문학 행사 참석, 시 낭송 및 한국문학 강연 개최 3. 대상작가: 고은(시인), 안선재(번역가), 프랭크 스투어트(하와이대 교수)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메일) - 고은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p>파견</p>
<p>한국-호주 시인 교류행사 지원 (한국 2016. 10. 16.~21. / 호주 2016. 11. 6.~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명: 한국-호주 시인 교류행사 지원 2. 행사내용: 한국 및 호주에서 시 낭독 행사, 세미나 개최, 시 창작 워크숍 진행 3. 대상작가: 심보선, 김이듬, 김소연 (시인)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메일) - 심보선(시인)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p>파견</p>
<p>홍콩 10월 한국 문화제 (2016. 10. 19.~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명: 홍콩 10월 한국 문화제 2. 행사내용: 2016 홍콩 한국 10월 문화제(Festive Korea) 한국문학행사 참가 3. 대상작가: 김애란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유선) - 김애란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p>파견</p>

<2014-2016 국내작가 해외교류 지원 현황 및 배제지시·결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 출판계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

○ 출판계 블랙리스트 실행의 단초가 되었던 언론보도

- 2013년 10월 뉴포커스, 뉴데일리, 2014년 2월 미래한국 등 보수인터넷 매체 보도
- 2013년 문체부 우수도서 선정작에 대한 이념 편향 등의 문제 제기함
- 반미, 반대한민국, 북한 옹호, 역사왜곡, 사회적 갈등 조장 등의 내용으로 보도함

- 반미 소재 : 체 게바라와 랄랄라 라틴아메리카, 나는 빈 라덴이 아니에요, 믿음의 불편한 진실 종교
- 반정부 소재 : 비정규씨, 출근하세요?
- 반 시장경제 :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 고장난 거대기업, 국가에서 마을로, 노동을 보는 눈,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세계노동운동사, 시장의 착각 경제의 방향, 자본주의 특강, 협동조합 참 쉽다
- 역사편향(김일성 미화) : 한국의 레지스탕스
- 역사편향(이승만 비판) : 현실주의자를 위한 변명,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

○ 출판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식된 ‘우수문학도서’

- 좌편향’ 도서 배제를 위한 문체부, 청와대 등의 관련 대책 논의
 - 2013. 11. 문체부 유진룡 장관 지시로 우수문학도서 선정 기관 및 주무부서 변경 등 관리 강화함
 - 2014년 초 청와대 실수비를 통해 우수도서 선정 취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함
- 문체부 우수도서 선정 보급 사업 개선
 - 주무부서를 ‘도서 관련 이념성향 스크린 노하우’가 있는 출판인쇄산업과로 변경함
 -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진행하던 우수도서사업을 출판진흥원으로 이관하여 통합함
 - 우수도서 명칭을 세종도서로 변경함

- 좌성향과 반정부적인 도서를 거르기 위한 심사방법을 강화함
 - 도서 내용 검토를 위한 심사위원회와 이념 편향 등 결격사유 검증 중심의 선정위원회 운영함
 -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3차 심사를 진행함
 - 문체부 등 관계기관이 최종안을 재확인하는 절차 마련함

○ 2014, 2015 세종도서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 출판진흥원은 신청자 명단, 단계별 심사 통과자 명단 등을 문체부에 전달하고, 문체부는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에 전달함
- 청와대에서는 세월호를 비롯한 시국선언 참여 전력 작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들에 대해 문체부에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함
-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자에게 배제 지시 목록을 전달
 - 출판진흥원은 문체부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에게 의견을 전달하여 배제를 실행함
- 2014년 9종, 2015년 14종 등의 도서가 3차 심사과정에서 배제 지시에 의해 탈락함

○ 2014. 10. 15.에 부임한 출판인쇄과장

- 2014년 10월 신임 ○○○ 과장 부임시 김희범 차관, ‘이데올로기의 최전선’에서 있으며 MB때부터 이어져왔던 헌법 수호 노력의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방향 제시함
- 2015. 4. 출판진흥원 관련 각종 공모 사업에 진행상황 보고, 사전 협의, 문체부의 의견 반영 등을 지시함
- 출판인쇄과장 재직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함
 -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담
 -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
 - 국내 유관사업 진흥 및 해외 진출 경쟁력 미흡
 -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 소지
 -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범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 등 활용

- 각종 공모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출판진흥원은 심사 결과지 조작, 회의록 임의 수정 등의 방법으로 지시를 이행함
 -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지원사업,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2) 세종도서

- 세종도서는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 독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학술, 교양, 문학 3가지 분야 도서를 심사 선정하고 세종도서, 출판사로부터 각 1000만원 상당의 선정 도서를 구매하여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사업. 매년 1,200여종의 도서를 선정하는 출판 관련 대표적인 사업임

①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사업 내용 변경

- 주무 부서를 출판인쇄과로 변경하고, 우수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으로 이관하여 통합함
- 사업 명칭을 세종도서로 변경함
- ‘이념 편향적 도서’ 제외를 위한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최종 3차 심사로 심사 절차를 강화함

②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 문체부는 출판진흥원에 세종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 2차 심의 통과자 명단 등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함
- 세종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 출판진흥원 -> 문체부 -> 청와대에 송부함
- 청와대는 세월호 등 시국선언 명단과 대조 후, 문체부 -> 출판진흥원에 배제지시 명단 하달함

③ 세종도서 선정 배제 과정

- 세월호, 밀양 송전탑 반대, 야당 인사 지지 표명 등 시국선언 문인과 정부 비판 서적, 사회주의 관련 서적 배제를 지시함
- 출판진흥원은 배제지시 도서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배제 유도함
 - 정서를 순화시키거나 문학의 치유기능을 할 수 있는 도서,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책 지양 등
- 문체부의 배제지시 이행을 위해 선정결과 공고 지연도 발생함

3) 2016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 2016찾아가는 중국도서전은 국내 출판물 중국시장 진출 지원, 대외 출판교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출판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중국 현지 출판사들에게 출판물을 소개하여 저작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

① 선정 결과를 문체부가 사전 검토

- 출판진흥원 담당자가 이메일을 통해 심사위원회 선정 목록 60종을 문체부 담당자에게 송신함
- 문체부 심사 결과 목록에 음영표기를 하여 5종 도서들에 대한 배제 지시함
 - 느영나영 제주 - 조지욱/김동성
 - 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 - 고도원
 - 마을로 간 신부 - 정홍규
 - 미학 오디세이 1~3 - 진중권
 -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 박시백

보낸사람: [REDACTED]
날짜: 2016년 7월 28일 오후 1:55
제목: (중요)RE: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송부
받는사람: [REDACTED]
참조: [REDACTED]

안녕하세요.

3차 찾아가는 도서전 위탁도서 목록 중
4번, 31번, 37번, 56번, 57번 제외바랍니다.

<출판인쇄과 주무관이 출판진흥원 담당자에게 2016. 7. 28. 발송한 메일>

- 시장 경쟁력 확보, 역사적 문제, 우리 해군의 대양 진출 정책 및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정부 시책의 비판 등이 배제 사유임
- ‘4.3 사태, 강정해군기지 내용 포함’ 이라고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도서도 있으나, 해당 도서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음 - 느영나영 제주

② 배제 지시에 따라 선정 결과를 임의로 수정한 출판진흥원

- 배제 지시된 도서들을 누락 시킨 이후 선정 결과를 발표함
- 출판진흥원은 배제 지시의 사유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으며, 일반적인 관행으로 인식함
- 심사위원회에서 애초 55종이 선정된 것으로 회의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배제 지시를 수행함

일자	시행자	내용
2016. 7. 6. ~ 2016. 7. 15.	출판진흥원	위탁도서 79종 접수
2016. 7. 21.	출판진흥원 심사위원회	위탁도서 60종 선정
2016. 7. 21.	출판진흥원 담당자	위탁도서 60종 선정 목록 문체부에 발신
2016. 7. 25.	문체부 출판인쇄과	최종 확정 보류 지시 메일 출판진흥원에 발신
2016. 7. 28.	문체부 출판인쇄과	5종(4, 31, 37, 56, 57번) 배제 지시 메일을 출판진흥원에 발신
2016. 8. 9.	출판진흥원 담당자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60종에서 55종 선정된 것으로 허위 작성
	출판진흥원	55종 선정으로 결과 보고 진행 문서번호 : 글로벌사업팀-538(2016. 8. 9.)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선정 도서 배제 과정 일람>

4) 2016 초록·샘플번역지원사업

- 2016 초록·샘플번역지원사업은 출판 저작권 수출 지원 내실화를 위해 책 소개 자료인 ‘초록’ 과 요약본 ‘샘플’ 을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하는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진행하는 사업으로 3인의 심사위원들이 심사 결과지를 온라인으로 제출, 취합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① 선정 결과를 문체부가 사전 검토

- 출판진흥원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매 회차별 심사 결과를 문체부에 송부함
- 문체부는 각 회차별 선정 목록 검토 후 메일을 통해 배제를 지시함
 - 12차 :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 - 정지형
 - 12차 : 삼살개가 독에 감춘것 - 정지형
 - 12차 : 차남들의 세계사 - 이기호
 - 13차 :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 김종배, 조형근
 - 14차 : 한국이 싫어서 - 장강명
-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 예산이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유로 배제를 지시함

② 배제 지시에 따라 심사표를 조작한 출판진흥원

-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결과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담당자 임의로 심사표를 조작하여 처리함
- ‘적격’ 처리한 심사 결과를 ‘부적격’ 으로 조작함

2016년 제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표

연번	출판사	도서명	글	신청구분	심사결과	의견
10	민음사	한국이 싫어서	장강명	샘플	적격	

심사일자 : 2016. 8. 25.

심사위원 : [redacted] [redacted]

2016년 제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표

연번	출판사	도서명	글	신청구분	심사결과	의견
10	민음사	한국이 싫어서	장강명	샘플	적격	

심사일자 : 2016.08.22

심사위원 : [redacted] [redacted]

3.2. 박경희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출판본부 부분부장

연번	출판사	도서명	글	신청구분	심사결과 (적격/부적격)	의견 (부적격일 경우 상세 의견 기입)
10	민음사	한국이 싫어서	장강명	샘플	부적격	도서 소재 특성 상 영미권 수출 경쟁력이 낮음

심사일자 : 2016.08.25.

심사위원 : [redacted] [redacted]

3.3. 김경순 출판수출자문위원

연번	출판사	도서명	글	신청구분	심사결과 (적격/부적격)	의견 (부적격일 경우 상세 의견 기입)
10	민음사	한국이 싫어서	장강명	샘플	부적격	출판 전환즈 특성상 조류 지형으로 인한 해외시장의 포외적 반응을 살펴본 후 추후 샘플 번역 기획하는 게 좋을 듯함

심사일자 : 2016.08.26

심사위원 : [redacted] [redacted]

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표 조작 내용
(위 : 심사위원이 출판진흥원에 전달한 심사표, 아래 : 출판진흥원 결과보고 붙임)

회차	일자	시행자	내용
12회차	2016. 7. 26.	심사위원 ○○○	12차 온라인 심사 진행
	2016. 7. 27.	사업담당자 ○○○○○○○	12차 접수목록을 문체부에 발신
	2016. 7. 27.	출판인쇄과장 ○○○	3종 배제 지시 메일 출판진흥원에 발신
	2016. 7. 29.	심사위원 ○○○	12차 온라인 심사 진행
	2016. 7. 29. ~ 8. 4.	사업담당자 ○○○○○○○ (팀장 ○○○의 지시)	심사위원 ○○○에게 배제 지시 도서에 대한 심사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12회차	2016. 7. 29. ~ 8. 4.	사업담당자 ○○○○○○○	○○○의 심사표 중 3종을 부적격으로 작성
	2016. 8. 4.	사업담당자 ○○○○○○○ (팀장 ○○○의 지시)	○○○의 심사표 중 3종을 부적격으로 조작
		출판진흥원	12차 초록샘플 지원사업 결과보고 진행 문서번호 : 글로벌사업팀-516(2016. 8. 4.)
13회차	2016. 8. 10.	사업담당자 ○○○○○○○	13차 접수목록을 문체부에 발신
	2016. 8. 12.	심사위원 ○○○	13차 온라인 심사 진행
		심사위원 ○○○	13차 온라인 심사 진행
	2016. 8. 16.	출판인쇄과장 ○○○	1종 배제 지시 메일 출판진흥원에 발신
	2016. 8. 16. ~ 8. 18.	사업담당자 ○○○○○○○	○○○의 심사표 중 1종을 부적격으로 작성
	2016. 8. 18.	사업담당자 ○○○○○○○ (팀장 ○○○의 지시)	○○○의 심사표 중 1종을 부적격으로, 심사일자를 8. 16.로 조작
출판진흥원		13차 초록샘플 지원사업 결과보고 진행 문서번호 : 글로벌사업팀-567(2016. 8. 18.)	
14회차	일자불상	사업담당자 ○○○○○○○	14차 접수목록을 문체부에 발신
	2016. 8. 22.	심사위원 ○○○	14차 온라인 심사 진행
	2016. 8. 25.	심사위원 ○○○	14차 온라인 심사 진행
	2016. 8. 26.	사업담당자 ○○○○○○○	○○○의 심사표 중 1종을 부적격으로 작성
	2016. 8. 29.	사업담당자 ○○○○○○○ (팀장 ○○○의 지시)	○○○의 심사표 중 1종을 부적격으로, ○○○의 심사표 중 1종을 부적격으로, ○○○의 심사표 심사일자를 8. 26.로 조작
14회차	2016. 8. 29.	출판진흥원	14차 초록샘플 지원사업 결과보고 진행 문서번호 : 글로벌사업팀-609(2016. 8. 29.)

<2016년 제12~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 도서 배제 과정>

5) 2016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 등 블랙리스트 실행 정황

- 우수출판 콘텐츠 발굴, 창작 활동 지원 등을 위해 매년 미 발간된 140편의 콘텐츠를 선정하여 각 편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도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0000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이라는 문구를 표기함
- 예비심사, 본심사, 최종심사 등 3차에 걸쳐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3차 선정 과정에서 배제 지시를 하달한 정황 확인
- 2차 심사 결과를 출판진흥원에서 문체부에 송부하고, 문체부는 이를 검토 후 배제 지시를 하달함
- 출판인쇄과장의 자의적인 판단 기준(북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부 정책, 역사관 등 정무적 판단 등)으로 배제를 지시함
-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 아닌, 배제 지시를 한 담당자의 기억을 통해 유추한 배제 지시 도서 목록
 - 2015년 이혼추진위원회(정연철), 전선일기(안재성), 낮선 식민지 제주(김동현),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김세연), 혁신가 경제학(이일영), 기생과의 만남 그리고 명월관(신현규) 작품으로 본 북한미술감상(박계리), 평양 서울 : 두 도시 이야기(이민, 김주희), 남북의 연구자가 함께 만든 북한사회의 이해(정일영, 정대진, 김혁, 이혜란), 수요시위 갈래요(윤미향), 2016년 자본주의 너머의 경제사상(원용찬)

※ 출판 분야 블랙리스트 배제 지시 목록

순번	사업명	년도	도서명	출판사 / 저자	저자
1	세종도서	2014년	소년이 온다	(주)창비	한강
2	세종도서	2014년	겨울나기	(주)도서출판삼인	이수호
3	세종도서	2014년	그리운 나무	(주)창비	정희성
4	세종도서	2014년	기룬 어린 양들	푸른사상사	맹문재
5	세종도서	2014년	봄눈	도서출판 b	김병섭
6	세종도서	2014년	영통의 기쁨	서정시학	박희진
7	세종도서	2014년	장춘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실천문학사	신동호
8	세종도서	2014년	체 게바라 만세	실천문학사	박정대
9	세종도서	2014년	검은 눈, 하얀 바람	신아출판사	정창근
10	세종도서	2015년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2)	분도출판사	공지영
11	세종도서	2015년	A형 기침	도서출판 북인	정안나
12	세종도서	2015년	금정산을 보냈다	산지니	최영철
13	세종도서	2015년	꿈결에 시를 베다	실천문학사	손세실리아

14	세종도서	2015년	슬픔에게 무릎을 꿇다	실천문학사	이재무
15	세종도서	2015년	집에 가자	삶창	김해자
16	세종도서	2015년	단 한 번의 사랑	(주)해냄출판사	김홍신
17	세종도서	2015년	어우동, 사랑으로 죽다	(주)해냄출판사	김별아
18	세종도서	2015년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꾸리에북스	이진경
19	세종도서	2015년	파농	한길사	이경원
20	세종도서	2015년	사회적 인간의 몰락	(주)이학사	김윤태
21	세종도서	2015년	자공공	또하나의문화	조한혜정
22	세종도서	2015년	잊지 않겠습니다	한겨레출판	김기성 외 120인
23	찾아가는중국도서전	2016년	느영나영 제주	나는별	조지욱/김동성
24	찾아가는중국도서전	2016년	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	큰나무	고도원
25	찾아가는중국도서전	2016년	마을로 간 신부	학이사	정홍규
26	찾아가는중국도서전	2016년	미학오디세이 1~3	휴머니스트	진중권
27	찾아가는중국도서전	2016년	조선왕조실록	휴머니스트	박시백
28	초록샘플번역지원	2016년	텔레비전나라의 푸푸	창조의 별	정지형
29	초록샘플번역지원	2016년	삼살개가 독에 감춘것	창조의 별	정지형
30	초록샘플번역지원	2016년	차남들의 세계사	민음사	이기호
31	초록샘플번역지원	2016년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사이언스북스	김종배, 조형근
32	초록샘플번역지원	2016년	한국이 싫어서	민음사	장강명
33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	2015년	이혼추진위원회	미발간 원고	정연철
34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	2015년	전선일기	미발간 원고	안재성
35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	2015년	세계를 매혹시킨 태극기	미발간 원고	이현표
36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	2015년	낮선 식민지 제주	미발간 원고	김동현
37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	2015년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	미발간 원고	김세연
38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	2015년	혁신가 경제학	미발간 원고	이일영
39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	2015년	기생과의 만남	미발간 원고	신현규
40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	2015년	작품으로 본 북한미술감상	미발간 원고	박계리
41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	2015년	평양, 서울 - 두 도시 이야기	미발간 원고	이민, 김주희
42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	2015년	남북의 연구자가 함께 만든 북한 사회의 이해	미발간 원고	정일영, 정대진, 김혁, 이혜란
43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	2015년	수요시위 갈래요	미발간 원고	윤미향
44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	2016년	자본주의 너머의 경제사향	미발간 원고	원용찬

4 영화 분야

1. 개요

1) 내용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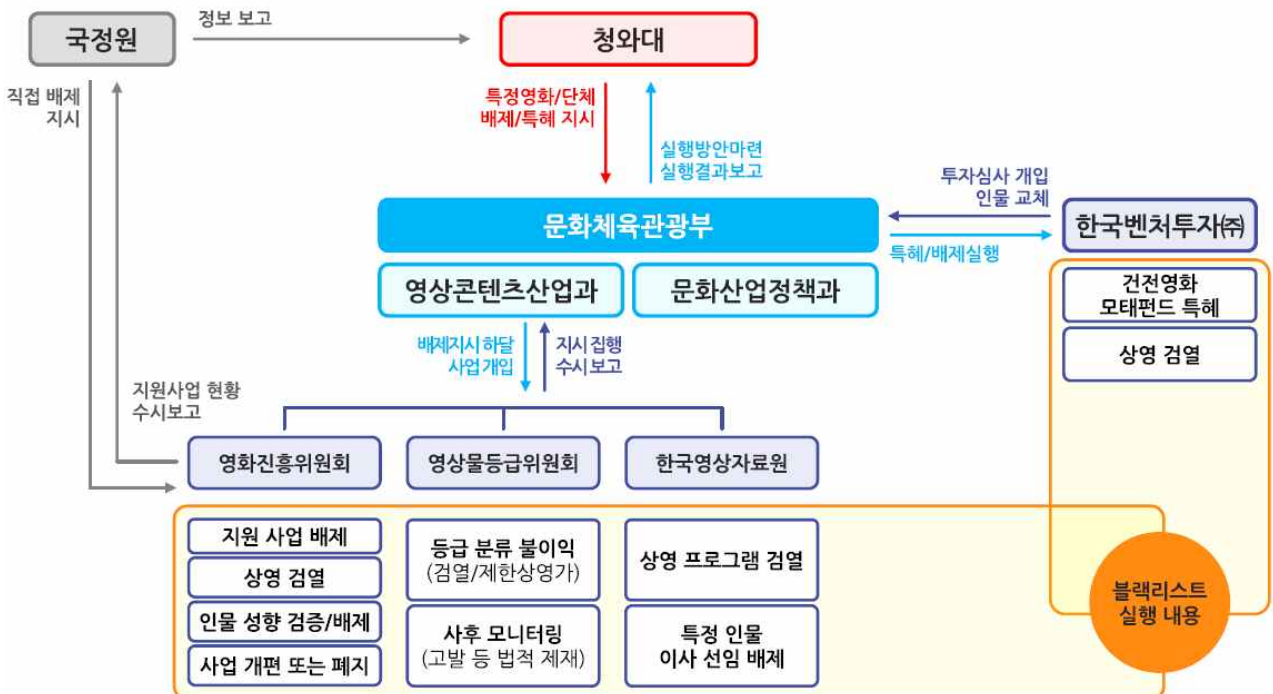
- 2018. 1. 23. 서울고등법원의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사건(‘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서는 영화 분야 지원배제와 관련, 2014. 8.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을 이유로 한 예술영화전용관 동성아트홀 지원배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으로 인한 지원금 축소,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에서의 상영거부 및 인디스페이스와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 등 지원배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에서 <산(박찬경)>, <연인들(이송희일, 시네마달)>, <바당감수광(오명)> 지원배제 등 8건이었음
- 위원회 조사결과,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전 시기에 걸쳐, 지원배제, 문제영화에 대한 “검열”, “상영거부” 등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자료원 나아가 해외 한국영화제 그리고 모태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개입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음이 확인됨
- 문체부 국고 지원 사업에서의 지원배제
 -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 우수한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인천 다큐멘터리 포트>는 감독 권철인 운영위원장, 문제성 영화 다큐 지원 이유로 2016년 국고 지원을 배제함

사업	시기	배제 작품 또는 단체	배제내용	배제의 방법 또는 사유
인천 다큐멘터리 포트 국고 지원 사업	2016	인천영상위원회	행사 국고보조금 전년도 기준3억원	청와대 또는 국정원의 지시로 문제성 영화 다큐 지원 이유, 영진위 지원 차세대영상콘텐츠 지원 사업으로 전환

- ※ 2016년 선정작에 영진위 지원배제 작품인 <밤섬해적단 습격의 시작>, <공동정범>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영화진흥위원회에서의 지원배제 작품은 36개 영화, 단체지원배제는 17개 단체, 특혜(화이트리스트) 단체는 2개 단체, “상영거부”, “검열” 등은 19개 영화에 달함
-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2개의 작품에 대해서 등급분류 기준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하여 상영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등급분류 면제가 가능한 소형영화의 공동체상영을 이유로 고발하여 외압을 가함
- 영상자료원에서는 2016. ‘Ten Best 기획전’ 에서 영화 <위로공단>에 대하여 상영거부 지시가 하달되어 실행됨
- 모태펀드 계정 운용 개입을 통하여 3개 창투사에 대해 배제하고 1개 창투사에 대해 특혜를 줌. <판도라> 등 2개 작품에 대하여 배제하고, <인천상륙작전> 등 5개 작품에 대해 특혜를 주는 등 블랙리스트가 실행됨

2) 구조



2. 주요 사건 조사 결과

1) 모태펀드 영화계정·문화계정 개입을 통한 블랙(화이트)리스트 실행 사건

① 모태펀드 개요

- (모태펀드) 전체 출자금을 하나의 모(母)펀드로 결성하고, 모(母)펀드를 통해 펀드 운용사가 결성하는 자(子)펀드에 출자
 - 2005년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이하 모태펀드)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기금과 재정 등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2005년 6월 모태펀드 투자관리 전문기관으로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벤처투자(주)(이하 한벤투)’가 설립되었고,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의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 (투자 결정) 자펀드가 개별 작품에 직접 투자
 - 투자조합 결성 후 개별 작품에 대한 투자결정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운용사와 심의기구(투자심의위)가 담당함
 - 영화 투자는 문체부(문화예술진흥기금)와 영진위(영화발전기금)의 투자조합출자사업 예산을 모태펀드 문화계정·영화계정에 출자하면 한벤투가 이 기금을 민간투자금(창투사, 대기업 투자·배급사의 투자, 개인 투자자)과 함께 결성해 영화 제작사나 작품에 투자하게 됨

② 청와대 및 국정원의 개입 및 블랙(화이트)리스트 실행 과정

-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따르면 “대중이 쉽게 접하고 무의식중에 좌파 메시지에 동조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인 영화를 중심으로 국민의식 좌경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 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을 제시함
 - 이로부터 한벤투는 민간전문기구로 설립되었지만 모태펀드 운영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되었음
 - 신규투자사업 관련 정부에서 예산을 직접 배정함에 따라 한벤투의 조정 권한이 약화되었고, 영화배우 ‘문성근’ 과 ‘명계남’ 이 출연하는 영화에 모태펀드 지원배제를 지시함

- 2013. 12. 18. CJ에서 배급한 영화 ‘변호인’ 이 흥행에 성공하자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위 영화의 엔딩 자막에 문체부가 투자했다고 나온 것 등을 질책하면서 ‘CJ에 대한 제재방안을 찾아보라’ 고 지시함
- 모철민은 문체비서관(김소영)에게 전달하면서 문체부와 영진위가 협의해 관련 대책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이후 모철민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모태펀드 개선방안’, ‘건전영화 육성방안’ 등에 관하여 보고함
 - 문체부는 모태펀드 개선방안으로 ‘투자조합의 업무 보고의 정례화 및 투자심사계획 등 수시 상황보고로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 ‘정책방향에 따라 투자조합 투자심의위원회 참석(옵저버), 의견 제시’ 한다는 방안을 제출함

③ 정부출자펀드의 영화투자	'06년부터 모태펀드에 총 4,143억원 출자 → 투자조합(투자심의위) 의사에 따라 투자 결정	○ 사전 모니터링 강화 - 투자조합의 업무보고 정례화(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 등 수시 상황보고, 투자심의위 참석 및 의견제시 등 ○ 투자심의위 결과 법령·규약 위배시 권고/재심의 요청
-----------------------	---	---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일부 발췌>

- 2014. 3.경 문체부, ‘건전영화 육성방안’ 으로 ‘전체 ·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7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사업과 건전애국영화 제작지원 사업 추진
 - 2014. 8.경 문체부는 영진위에 건전애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으로 50억 규모 편성 지시했으나, 영진위는 전체관람가영화(가족영화)로 20억 편성함
 - 2015. 4. 영진위, 가족영화 제작지원 사업으로 24.7억 편성하여 최종 사업 공고함
- 김기춘 비서실장은 실수비에서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 등에게 정무수석 주관으로 각 부처별 보조금 지원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TF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이 TF 활동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박준태 행정관이 2014. 5. 말경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로 작성함
 - 위 문서 ‘3.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 에서는 문화·영화 계정에 투자되는 모태펀드가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창구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친노(親 盧) 계열과 대기업인 CJ·롯데가 문화펀드 운용을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
 - ※ 예) 영화 <변호인>, <부러진 화살>, <화려한 휴가> 등 정치 편향적인 작품에 투자하고, 창투사인 (주)유니온투자파트너스, (주)MVP창업투자, (주)캐피탈 원 등이 참여정부의 후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기술함

- 더불어 ‘대규모 정부자금을 투입한 문체부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이를 용인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창투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한국벤처투자의 임원 교체를 통한 대책을 강구’ 하라고 지시함

○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교문수석실 김소영 비서관을 통해 ‘캐피탈 원’, ‘HQ인베스트먼트’, ‘일신창투’, ‘유니온 투자파트너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GB 보스턴’, ‘미시간 벤처 캐피탈’ 등을 모태펀드의 운용사 부적격 대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시를 전달받음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과정에서 영진위에 지원 및 배제 창투사를 전달함. 특히, 영화 ‘변호인’에 투자한 ‘(주)캐피탈 원’은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변호인’ 배급사인 ‘NEW’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음

- 정부 비판적인 영화에 대한 대책으로 문체부 정책보좌관 박철호가 투자조합이 운영하는 투자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풀’ 제도에 개입하여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함

- 2014. 10. 경 문체부에서 작성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에는 ‘영화 투자 관련 개선방안’으로 ‘투심위 심사결과가 법령·규약 등에 위배될 경우, 운용사(투자심의위)에 대해 권고 또는 재심을 요청’ 하겠다는 대응 방안을 제시함

- 2015. 6. 경 문체부에서 작성된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선정 관련’ 보고서에는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배제 및 지원을 결정하는데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남

○ 한벤투는 ‘문제 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의 ‘3.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 교체’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짐

- 2014. 6.경 000이 감사로 임명되고, 같은 해 대표이사인 000가 2014. 10. 23. 취임하면서 1실 4본부 1부 체계로 조직개편을 단행함

- 기존 투자운영본부장은 두고 투자관리본부장과 글로벌본부장, 엔젤투자 본부장을 새로이 임명하고, 다음 해인 2015. 1. 12. 상근 전문위원이 신설되어 000을 임명함

○ 2015. 창투사 선정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문화컨텐츠에만 해당하는 전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운용사를 선정하는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출심위’) 성원을 4인에서 7인으로 늘리며, 외부전문가 풀 구성 및 영화 인센티브 제도 등을 추진함
- 위 전문위원을 통해 창투사에 직접 지원 및 배제지시가 이루어졌고, 한벤투에서 영화계정 출심위 성원 7인 중 6인을 정함에 따라 한벤투의 운용사 선정 권한이 강화됨
- 또한, 운용사에서 영화작품 선정 시 구성되는 투심위에 읍저버로 참석하는 외부위원 전문가 풀 제도는 운용사의 투자 자율성을 압박

③ 실행 결과 특혜 및 배제 현황

○ 특정 창투사 특혜 및 배제

- 정부기관에서 문화·영화 계정에 투자되는 모태펀드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창투사에 대한 지원 및 배제 지시를 단행한바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년도	사업명	창투사명	지시사항	결정사항
2009	영진위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주)캐피탈 원	문체부에서 영진위에 배제 전달	배제
2014	모태펀드 9월 수시 출자사업	(주)캐피탈 원	문체부에서 영진위에 배제 전달	배제
2015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유니온 투자파트너스	문체부에서 영진위에 지원 전달	지원 (특혜)
2016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주)캐피탈 원	문체부와 영진위 캐피탈 원 배제 대상 공유	배제

○ 특정 영화(드라마) 특혜 및 배제

- 정부기관이 개입하여 모태펀드 운용사에 선정된 창투사에 특정 영화 지원 및 배제 지시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함

년도	계정	영화명	회사명/사업명	지시사항	결정사항
2013		연평해전	영진위 2010년 3D 영화제작지원사업	계약 불이행으로 지원 취소 결정 과정 중 문체부와 청와대 개입	계속 지원 (특혜)
2015		판도라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 (구 CJ 창투사)	· 한벤처에서 투자 배제 지시 · 청와대, 국정원, 산자부, 문체부 개입 사실 확인	배제
2015		덕혜옹주	디시즈 플러스	· 한벤처에서 투자 배제 지시 · 국정원에서 시나리오 검열 - 박정희 전 대통령 분량 대폭 축소	배제
2016	문화	인천상륙작전	CJ E&M	투자배급사 계약 시 한벤처 개입	계약 (특혜)
2016		아가씨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 (구 CJ 창투사)	한벤처에서 투자 배제 지시	배제
2016	문화	부메랑 (컨트롤)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 (구 CJ 창투사)	한벤처에서 투자 지원 지시	지원 (특혜)
2016	문화	왕은 사랑한다	SM콘텐츠 인베스트먼트	한벤처에서 투자 지원 지시	지원 (특혜)

○ 영화 ‘판도라’ 배제 경위

- 2015년 상반기 국정원, 영화 ‘판도라’ 는 원전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으므로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청와대에 보고하고, 영화제작 현장을 방문하여 영화의 내용을 문제 삼음
- 청와대는 산업자원부에 ‘판도라’ 의 내용을 지적하고, 산업자원부 원자력정책 과에서는 문체부에 모태펀드 배제를 요청함
- 한벤처에서 창투사에 투자 배제할 것을 지시함

○ 영화 ‘사선에서’ 지원 현황

- 청와대의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을 교체하는 추가 조치 결과 OOO SH 필름 대표가 2015년 1월 한벤처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됨
- OOO이 SH필름 대표로 재직 중 저작권을 갖고 영화 제작을 추진하던 ‘통영의 딸’ 이 이후 제작자와 제목을 바꿔 ‘사선에서’ 로 제작됨

- 이 영화는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부지원금이 영화 순제작비 45억원을 상회하여 51억 7천만원에 이르는바 영화 제작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 위 영화는 2016. 9.경 크랭크 인하고, 같은 해 12.경 크랭크 업했으나 2018. 5. 현재 미개봉 상태임

년도	지원내역		지시사항	특이사항
	모태펀드	영진위 가족영화 제작지원사업		
2016	43.7억 (문화계정: 30억 영화계정: 13.7억)	8억	한벤처에서 이수 창업 투자 및 유니온 창투사에 투자 지원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이 감독에게 청와대 지원 언급(2012년) · 국정원이 영진위에 영화 정보제공하며 제작 현황 점검지시(2013년) · 문체부 영화 폴더에 관심영화로 저장(2015년)
총액: 51.7억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 및 영화 '사선에서' 투자 경과

계정	출자사업명	회사명	조합명	투자조합 선정일	'사선에서' 투자계약일	투자액
문화		이수창업투자	ISU-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2015. 7. 경	2016.06.29.	10억
영화	2015 2차 정시 출자사업	유니온 투자파트너스	유니온 시네마조합	2015. 06. 26.	2016.08.01	13.7억
문화	2015 2차 정시 출자사업	미시간 벤처캐피탈	미시간 글로벌콘텐츠 투자조합 5호	2015. 06. 26.	2016.08.05.	10억
문화		미시간 벤처캐피탈	KT-미시간 글로벌 콘텐츠 펀드		2016.08.05.	10억

※ 특이사항 : 국가기관의 지원 지시를 통해 2015년 모태펀드 2차 수시 출자사업에 선정된 유니온투자파트너스는 같은 해 영화 '연평해전', 2016년 '인천상륙작전' 과 '사선에서' 에 모두 투자하였음

2)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① 블랙리스트 작동 구조

- 주요 지원배제 작품은 사회비판적 독립영화 또는 다큐멘터리(이를 ‘문제영화’라 칭하였음)이고 주요사업은 독립영화제작지원,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임. 단체들 또한 ‘촛불시위’ 참가 등 비판적 활동에 참여한 곳들에 집중되어 있음
 - 이 가운데 독립영화제작지원 및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은 2014. 10. 문체부에서 건전콘텐츠활성화TF를 구성하고 청와대로 보고한 ‘건전콘텐츠 진흥방안’에서 주목한 사업과 일치함
 - 위와 같은 사업들에 집중된 이유는 이러한 문제영화 즉, ‘독립·다양성영화 창작 및 보급 생태계가 제작→후반작업→유통(배급) 과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임
 - 더불어 위와 같은 ‘문제영화’를 상영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거나 상영한 독립·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배제가 이어짐

○ 권력·정보기관의 총체적 개입

[국가정보원]

- 적어도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 I/O(정보관)과 영화진흥위원회와의 상시적인 “채널”이 형성되었음이 확인됨
- 국정원은 이 채널을 통하여 문제영화 또는 이른바 ‘건전·애국영화’에 대한 제작현황 등을 수시로 요구하여 보고받았음
- 독립영화제작지원,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영화단체 지원 사업 등 주요한 지원사업의 신청내역을 파악하여 ‘스크린(검열)’을 거쳐 특정 작품에 대해 “지원배제”를 요구함. 영진위의 이 “채널”은 이를 영진위원장에게도 보고하고 협의하는 한편, 각 사업담당자(팀)에 하달하여 이와 같은 배제를 관철시켜 나갔음

[문체부]

- 문체부는 영진위가 이와 같은 국정원의 ‘스크린(검열)’ 기제가 작동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위 사업을 수행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신청내역, 심사과정, 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 더불어 문체부 또한 이와 같은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특정 작품들에 대해 검열하고 배제 지시를 하여 관철시켜 나갔음

[청와대]

- 청와대는 ‘문제영화’ 들에 대하여 문체부에 “검색(검열)” 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문체부는 영진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다시 청와대로 보고함. 이와 같은 ‘문제영화’ 보고는 2014. 10. 김기춘 비서실장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불안한 외출>에 대한 검색 및 보고 소홀을 이유로 문체부 관계자를 질책하면서 더욱 강화되어감
- 청와대는 독립영화전용관의 지원체계 개편 방안(서울지역 독립영화전용관의 해체), 국제영화제 지원 개편 등을 주도하고, 부산국제영화제(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다이빙벨 상영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배제 등에 관여하여 ‘문체부→영진위’ 로 순차적으로 하달하여 관철시킴
- 2015. 영진위 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에는 문체부를 경유하여 신청내역을 보고토록 하여 직접 지원배제 작품을 선정하여 다시 문체부를 경유하여 영진위에 하달하여 배제를 관철하는 등 직접 ‘지원배제’ 를 주도함

○ 배제 키워드

- 영진위의 각 부서에서는 위와 같은 주요 지원 사업에서 먼저 신청자와 시놉시스 등 작품 내용들을 검토하는 사전 검열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국가정보원이나 문체부로부터 하달된 “배제 키워드” 에 의한 것이었음. 이러한 키워드는 “국가수반의 명예훼손”, “4대강 등 정부정책이나 시책비판”, “강정 해군기지 반대나 용산 철거민 투쟁”, “노동자 투쟁 문제”, “세월호 문제”, “국정원 비판”, “국가보안법 비판”, “북한 관련(분단을 소재로 앞의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라 할 수 있음
 - 위 국가정보원의 “채널” 역할을 한 영진위 직원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의 경우 자신들을 비판하는 영화 <자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히 반응하고 배제를 주문하고 문체부는 상대적으로 시국사안에 대해서 민감하고 배제 요구는 더욱 “강렬” 했다고 함
- ※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 같은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11조의 직권남용금지를 위배한 것임

○ 영진위 심사과정을 통한 ‘문제영화’ 배제

- 영진위 심사관리규정은 모든 공모지원 사업을 심사함에 있어 공정·투명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청와대와 문체부,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하달된 요구에 따라 영진위는 지원배제 의도를 관철할 이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

위원들에게 배제해야 할 작품에 대해 낮은 평가점을 주도로 하는 등 “배제”를 주문하고 관철시켜 왔음

- 2011. 당시 조희문 위원장이 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작품이 선정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논란이 된 후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로 하여 심사위원 풀(pool)에서 “무작위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그러나 특정 작품에 대한 배제가 실행될 당시에는 항상 이와 같은 과정이 “생략”되거나 (공정성의) “외양”만을 갖추고 진행되었음
 - 이 같은 배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오직 심사과정을 통해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배제 의도가 관철되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임. 따라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절차가 마치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외양을 갖추기 위해 ‘근거’ 서류를 조작하기도 하였음

○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사업의 변경과 축소

-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영진위는 청와대 및 문체부의 지시를 따라 문제 사업을 아예 없애거나 변경하였음
- 영진위는 2015. 2. 13. 문체부에 「영진위 주요현안 경과보고서」,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관련 개정 검토 내용」, 「예술영화전용관 사업개선안 경과」 등 당시 상황에서 이 같은 사업 추진이 법률적으로나 여론을 고려하여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이를 강행하여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을 예술영화유통배급사업으로 변경하였음
- 결국 문체부는 2015. 7. 1. 예술영화전용관 사업개편 관련 입장을 제시하여 영진위로 송부하고, 7. 2. 영진위 직원은 관련 예술영화유통배급 지원 사업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영진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문체부로 송부해 확인 요청하고 보도자료를 완성하는데, 그 내용은 이 사업 개편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누적된 문제 개선, 상영관 중심에서 관객 중심으로 개편” 한다는 것, 예술영화전용관 프로그램 자율성 침해 주장에 대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반박논리로 예술영화전용관이 ‘문제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개편하면서 ‘보도지침’까지 하달한 것이라 할 것임

② 주요 사례

○ ‘창작지원 →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순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음

○ 2014년 하반기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

- 2014년 하반기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2014. 7. 14.~7. 18. 접수를 받았는데 모두 301편이 지원 신청하였고 같은 해 8. 7.~9. 3. 재택 및 숙박심사를 거쳐 3인 4개조로 편성하여 조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작품 중 전체심사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작품을 면접 심사에 회부하여 최종결정하였음. 당시 영화 <명령불복종 교사>와 <투 워스>는 평균 점수 70점 이하로 탈락하였음
- 이 작품들은 모두 같은 조에서 심사를 거쳤는데 이들은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심사위원 구성에 대하여 문제부로 보고하기도 하였음. 이 두 작품은 관련 진술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신청내역 및 시놉시스를 영진위 “채널”을 통해 전달받고 배제 주문을 하고, 영진위는 특정 조의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배제를 관철한 것임

○ 2016년 4분기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사업

- 2016년 4분기 장편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사업 신청접수는 2016. 8. 29.~9. 9.에 있었는데 신청 작품은 모두 17편이었음. 같은 해 9. 21.부터 9. 28. 재택심사, 9. 28. 최종결정심사 회의를 통해 당시 정윤석 감독의 <밤섬해적단 습격의 시작>은 평점 76.7점으로 9위, <우리>라는 작품은 74.3점으로 10위를 차지하여 지원에서 탈락하였음
- 당시 영진위의 이 사업 관련자는 2015년경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내역 및 시놉시스 등을 위 국정원 “채널”인 직원에게 전달하여 ‘문제작품’ 들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았는데 여기에 <강기훈 말고 강기타(2017. ‘국가에 대한 예의’로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밤섬해적단 습격의 시작(2017. ‘서울불바다 2017’로 개봉)>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함
- 당시 영진위 직원 등은 심사위원들에게 <밤섬해적단 습격의 시작>에게 배제를 주문, 관철시켰음
-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의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된 녹음의 녹취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그리고 「밤섬」이라는 영화, 국가보안법 다룬 영화 있잖아?”
- “막 시끄럽고 굉장한 김정은 막 이러는 영화.”
- “그런 게 좀 지원이 되면 우리가 지원 사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알아서 좀 해 줘요.”
- “어, 힘은 좋아. 그런데 계속 흔드는데 그거 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우리」라는 작품 있잖아? 장애인 영화. 개는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 2015년 하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 이 사업은 국가정보원의 사전 “검열” 행위와 문체부 등과 함께 영진위 지원 사업에 개입, 특정 영화 배제를 실행한 전형적 사례라 할 것임
- 이 사업 접수기간은 같은 8. 17.~8. 21.까지 5일간, 접수편수는 모두 43편인데 심사편수는 42편, 같은 해 9. 11.~9. 21.까지 채택심사, 9. 21. 심사평가를 가졌음
 - 당시 국가정보원은 위 심사평가일 이전에 영화 <산다>, <그림자들의 섬>, <소년, 달리다>에 대하여 비판성향 작품으로 철저히 배제하도록 강력히 주문 할 것이라는 정보보고를 하고 있음
- 당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내역 및 시놉시스를 국가정보원 및 문체부에 보내고 지원배제 할 문제 작품을 하달 받아 접수표 등에 체크해왔는데, 이 접수표에 특별히 표기된 작품과 위 국정원이 지적하는 작품이 일치함
- 한편 위 국정원의 정보보고 문건을 보면, 영진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건전” 문화단체의 “의견조회”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김기춘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이 단체가 2014. 9.경 정무수석실의 제시에 따라 다이빙벨 상영에 대한 반대 성명, 다이빙벨 상영 반대 유튜브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결국 이는, 영진위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청와대, 국정원, 경찰, 문체부 등 핵심 권력 및 정보기관이 주도하면서 상호 교차 “검열” 과 정보를 공유하였고, ‘건전영화단체’ 로 불린 보수(우파) 단체까지 개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2015. 9. 16.

영진위의 다양성영화 지원예산작 엄선 필요

- 건전영화계에서는 영화진흥위의 독립·다규영화 개봉지원을 위한 '하반기 다양성영화 지원사업' 대상작 발표(10월초)를 앞두고 홍보물 제작비 광고비 등 마케팅비용(3,000만원, 1편 지원)
- 응모작(총 43편) 가운데 사실 왜곡·정부비판 내용의 영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심사과정에서 걸리내야 한다는 여론 제기

▷ 산다 : KT 민영화에 따른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자투쟁 부각
▷ 그림자들의 섬 : 한진중공업 고공농성 파업 주동자 미화 내용
▷ 소년, 달리다 : 국보법 위반사범 주도 공동체 '마포 성미산마을' 홍보

대표 감독원

- 이와 관련 '차세대문화인연대' 등 건전 영화단체들은
- 상반기 지원대상 작품(10편)에 노동운동을 선동하는 '위로공단', 재일 「조선학교」를 부각시킨 '올보 권투부' 등이 선정된 바 있고 조총련 계열 송두물 미화 '경계도시2' 제작
- 이번 예비심사 위원(5명)에 좌파 성향 감독 김명희가 포함, 영화제 수상경력을 내세운 문제작 '끼워넣기' 행태가 되풀이될 소지가 크다며
- ★ 그림자들의 섬(2004년 서울독립영화제 대상)·산다(DMZ다규영화제 최우수상)
- 독립·다규 영화계에 만연해 온 「비판영화 제작→영화제 수상→정부지원 획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

■ 문제부는 영진위에 지원대상 편수를 줄이더라도 비판성향 작품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강력 주문. 독립·다규 영화계 건전화 도모

2015(하)

영진번호	신청인	신청구분	제목	장르	직종영(국산)	작품영(해외)	제작사	감독	성형기간	총 제작비용	지원신청금액
2015-08-17-00001	모모스튜디오	영화사	장쾌하	극영화	국산	해외	제작사	김정민	76일	30,000,000원	25,000,000원
2015-08-18-00002	유진영화사	영화사	조근래	극영화	국산	해외	The Salt Farms	이종호	124일	350,000,000원	30,000,000원
2015-08-18-00004	김대현제작사	영화사	노경민	극영화	국산	해외	Old Sike	이종호	76일	30,000,000원	25,000,000원
2015-08-18-00008	김대현제작사	영화사	노경민	극영화	국산	해외	Black Stone	이종호	124일	350,000,000원	30,000,000원
2015-08-19-00006	이대현제작사	영화사	김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GRIT	이종호	76일	30,000,000원	25,000,000원
2015-08-19-00007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The Islands of Shadow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19-00008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Warm After All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19-00009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Heart Tower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19-00010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Try to remember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19-00011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Dream House by the Border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19-00012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ALONE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19-00013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We will be ok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19-00014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People Facing By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0-00015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EL CONDOR PASA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0-00016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Swan Island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0-00017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Dirty Romance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0-00018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su rack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0-00019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Somewhere Over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0-00020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Love and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0-00021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Sunshow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0-00022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Boys Run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0-00023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Holy Whore Day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0-00024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Sony of a jellyfish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0-00025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A Little Bit More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26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Unleashed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27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Dance with Montague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28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LENA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29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UPSTANDING MAN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30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THE COMES UNCLE JOE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31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Uplifting Man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32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Fern Field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33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Mission School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34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Overturn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35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Wind on the Moon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36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Jung Joob-an's Pet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37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Like a French Film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38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Hard boundaries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39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Unwanted brother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40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SANDS Surviving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41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Meet me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42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Kissing Cousins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43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Night Song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44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Malice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45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where am I? Beyond Girl and Woman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08-21-00046	유진영화사	영화사	이정민	극영화	국산	해외	5:00 PM	이종호	99일	39,000,000원	25,000,000원

<2015. 하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접수표>

< 영화진흥위원회 특정 영화 및 단체 지원배제 일람 >

사업	시기	배제 작품 또는 단체	배제내용	배제의 방법 또는 사유
영화 단체 사업 지원	2009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자뉴스제작단,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인디포럼, 서울인권영화제,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전북독립영화제 등 지원배제	기재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제한 지침, 문체부→영진위 지시
	2010	인디포럼 작가회의	인디포럼 지원배제	위와 같음
	2011	인권운동사랑방, 인디다큐페스티벌	서울인권영화제 및 인디다큐페스티벌	위와 같음
	2015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단체 행사지원	국정원의 스크린, 문제단체 이유, 심사위 지원배제 의도 구성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2010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정위탁→공모제로 전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2010	한국독립영화협회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지정위탁→공모제로 전환
	2010	인디포럼작가회의, 독립영화협의회, 한국예술전용관협회,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최공재) 선정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2015 2015	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	인디스페이스 임대료 지원 및 인디플러스 위탁운영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체계 개편(청와대→문체부), 서울 직영 해소, 지역 이전
		아리랑시네센터	위탁사업 지원금 지원배제	다이빙벨 상영 이유, 지원배제 명분발굴(독립영화전용관 사업 개편)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2013. 상반기	모래가 흐르는 강	다양성영화 개봉을 위한 P&A 지원금	배급사 (주)시네마달 및 4대강 반대 이유
	2014. 상반기	구름비-바람이 분다	위와 같음	제주 강정해군 기지 내용, 국정원 스크린→영진위
	2014. 하반기	그림자들의 섬	위와 같음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관련, 국정원 스크린→영진위
	2015. 상반기	그림자들의 섬, 불안한 외출, 밀양아리랑,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	위와 같음	국정원, 문체부 스크린→영진위, 배제의도에 맞는 심사위 구성
	2015. 하반기	그림자들의 섬, 소년, 달리다, 산다	위와 같음	국정원, 문체부→영진위, 배제의도에 맞는 심사위 구성
	2016. 상반기	그림자들의 섬, 불온한 당신, 소년 달리다, 산다	위와 같음	국정원, 문체부→영진위, 배제의도에 맞는 심사위 구성
	2016. 하반기	TwentyTwo, 자백, 그림자들의 섬, 소년 달리다, 불온한 당신	위와 같음	국정원, 문체부 스크린→영진위, 심사위원 배제의도에 따라 구성
독립영화제작지원	2013. 하반기	빛	독립영화 창작지원(다큐멘터리)	(주)시네마달 관련
	2014. 상반기	빛	위 같음	(주)시네마달 관련, 다큐멘터리 심사 조 별도 구성, 의도적 제척사유 발생

	2014. 하반기	명령불복종 교사, 투 워스	위와 같음	국정원 스크린, 특정 심사 조 편성
	2015. 상반기	엄마가 팽목항으로 올 때면 난 엄마보다 먼저, 할매꽃2	위와 같음	할매꽃2는 서류심사 상위권→면접탈락, 엄마가...는 서류탈락('세월호' 키워드), 국정원 스크린, 심사위 의도적 구성
	2015. 하반기	두 개의 문 2, 할매꽃2, 언더그라운드	위와 같음	용산참사, 노동문제 등 소재, 국정원 스크린
	2016. 상반기	할매꽃2	위와 같음	국정원 스크린
	2016. 하반기	할매꽃2	위와 같음	국정원 스크린
예술영화제작지원	2015	산(박찬경), 연인들(이송희일), 바당감수광(오명)	다양성가족영화제작지원 중 예술영화제작지원금 지원배제	산은 연출자의 진보성향, 연인들은 제작사 (주)시네마달 및 연출자의 진보성향, 바당감수광은 연출자의 진보성향
국내 영화제 육성	2016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항일역사재단	북한인권영화제, 항일독립운동영화제 등	특혜(화이트리스트), 의도에 부응한 심사위 구성
예술영화전용관	2014	동성아트홀	정액지원금 지원배제	영화 천안함프로젝트 상영 이유, 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보류, 심사위원회에 주문
독립영화 후반기작업 기술지원	2016. 3분기	강기훈 말고 강기타, <밤섬해적단 습격의 시작>	후반작업 디지털시네마팩키지 작업 등 지원배제	내부검열(국정원), 심사위원회에 배제 주문
	2016. 4분기	<밤섬해적단 습격의 시작>	위와 같음	내부검열(국정원), 심사위원회에 배제 주문
영화상영 검열 및 거부	2011	江, 원래 프로젝트	인디플러스 100일 기획전 상영 거부	영진위의 상영거부
	2012. 7.	잼 다큐 강정	인디플러스 개봉 프로그램 상영 거부(보류)	상영거부→사후 상영승인
	2012. 10.	MB의 추억	인디플러스 상영 거부	선거법 위반 검토 이유 상영보류→배급사의 상영거부
	2015	다이빙벨	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의 인디플러스에서 상영요청 거부	문체부→영진위, 상영요청에 불가 통보
	2016	송환, 마이 제네레이션, 검은나뭇잎에 희나 백성, 대학로에서 매춘하다가 토막 살해 당한 여고생 아직 대학로에 있다, 마녀의 관, 환호성, 자본당 선언- 만국의 노동자여 축적하라, 이어도, 백야, 제외될 수 없는, 레드헌터, 레드헌터2:국가범죄, 내 안에 부는 바람, 희망이 없으면 불안도 없다, 광대버섯, 슈퍼따롱이(15편)	부산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개관 영화제('영화의전당')에서 상영프로그램 변경, 취소	영진위 측이 상영 불가 입장 제시

3)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

- 부산국제영화제 외압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음.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된 이후,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포함한 영화를 상영한 것에 대한 제재로 일부 예술·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을 정하였고, 이러한 지원중단 및 지원금 삭감방안을 김기춘 비서실장의 공동 대응 지시에 따라 정관주 소통비서관을 통해 정무수석실과 협의 및 공유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 및 대통령에게도 보고(당시 박근혜는 “흔들림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게 정확한 워딩이었다는 진술이 있음)하고, 김상률, 김소영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14. 12.경 문체부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다음 해 영진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함
- 이에 대하여 문체부는 김종덕 장관에 대한 보고를 거쳐 일거에 지원금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 영화계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문체부와 영진위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2014년 14억 6,000만 원에 달하던 지원금을 2015년 8억 원으로 삭감하기로 조정한 다음 문체부를 통해 2015년도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8억 원으로 삭감하라는 지시를 영진위에 하달하였으며, 영진위 글로벌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업무담당자는 부산국제영화제 2015년도 지원금을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8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영진위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철하였다는 것임
- 당시 이 사업 심사과정에서도 위원장의 지시 아래 심사위원 후보자군(pool)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를 심사위원에 포함하는 등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 시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2018년이 되면 10억 이상, 7년 이상 보조를 받은 단체에 포함되어 기재부 지침에 따른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자생성 강화 논리를 유도하고 사전에는 심사위원들에게 지원금 축소를 주문하여 실행하였음
 - 그런데 이듬해 2016.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당시에도 당시 영진위원장 등 영진위는 전년도 지원금 축소로 인한 파장을 축소하고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를 마찬가지로 “추첨” 등에 의하지 않고 심사위원을 위원장이 지정하여 심사를 진행함

- 한편, 차세대문화인연대 관련자는 2014. 9. 4.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영에 대한 자제를 요구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보내 확인을 거쳐 유포하고, 9. 29.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다이빙벨 관련 동영상 유포 자료 “부산영화제 초청작 ‘다이빙벨’ 을 저격하다!” 를 보고, 확인을 거쳐 이를 유포하였으며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임
- 위 관련자는 2014. 10. 1.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에게 ‘〈다이빙벨〉 향후 대처계획’ 을 이메일로 보고하고, 10. 6. 하태경 의원실 보좌관 및 부산지역 대학생들과 합류하여 이 영화를 단체관람 후 보수적인 언론매체에 대한 ‘언론작업’, ‘온라인감상평작업’, ‘부산시민의 반대시위’, ‘일반인 유가족의 맞대응 기자회견’ 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음

(2015. 6. 1. 허현준이 차세대문화인연대 관련자에게 보낸 이메일)

“우리 수석(당시 박준우 정무수석)께서는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논쟁 당시 차세대문화인연대를 보면서 저 단체를 어떻게든 도우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이빙벨 관련 활동(성명, 동영상)에 대한 보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 잠재력을 보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언론작업’ 은 문체부와 영진위에서도 이루어졌는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 이후 독립영화전용관에서 같은 영화 상영이 확대되자 문체부는 국민소통실을 통해 언론사를 접촉, 기사 노출을 요구하기로 하고 2014. 10. 22. 뉴데일리, 미디어펜과 접촉한 결과 기사 노출을 약속받아 2014. 10. 23.자 『미디어펜』의 「세월호 참사 ‘다이빙벨’ 개봉... “사고 고통 이용한 상업 작품”」, 같은 해 10. 26. 『뉴데일리』의 「세월호 가족 가슴 찡는 영화 다이빙벨」(이는 어버이연합 및 한겨레청년단 등의 시위 관련 기사)로 기사화되어 여론 왜곡을 동원하여 영화 상영을 가로막고 표현의 자유, 문화향유권을 침해함
- 나아가 부산국제영화 지원금 축소 및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영진위, 문체부는 이에 대하여 ‘여론전’ 을 도모함(※이에 대하여 영화인들은 당시 김세훈 영진위원장을 고발하였음)

- 영진위 000 전 사무국장과 김세훈 위원장은 사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언론기고를 협의하고, 2015. 6. 2. 영진위 직원은 관련하여 기고문 초안을 김병재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다음날에는 수정초고를 위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문체부에 보냈으며, 2015. 6. 9. 문체부는 이 기고문의 수정본을 영진위로 전달하고, 2015. 6. 16. 서울경제신문에 “부산국제영화제가 먼저 실천할 것들” 제하의 기사가 실렸음

- 2015. 10. 16.에도 예술영화전용관 사업 개편과 관련하여 서울경제 발언대 수정원고를 영진위 직원은 위원장에게 보내면서 10. 21.원고마감으로 이때까지 문체부와의 조율 및 필자 섭외 등을 마쳐야 한다고 보고하고, 2015. 10. 17. 내부 검토라인을 거쳐 10. 19. 경 문체부로 송부한 후 10. 21. 발언대 원고를 서울경제 기자에게 보냈으며, 2015. 10. 22. 서울경제 발언대에 당시 영진위 위원 000의 “한국예술영화 상영 늘려야” 제하의 기사가 실렸음
- ※ 위 영진위 위원은 2016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음

4)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특정 영화 검열·배제

① 영화 <자가당착> 제한상영가 등급

- 2008. 7. 31. 헌법재판소는 종전 영화진흥법에서 정한 제한상영가 등급 기준 및 이등급분류 기준의 설정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위임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따라서 2009. 5. 8. 영화비디오법 개정 시 등급분류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그 기준을 새로이 하였으나 ‘제한상영가’ 등급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음

- 영화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의 배급사 (주)두원엔터테인먼트는 2011. 4. 29. 이 영화에 대해 영화상영 등급분류를 신청, 6. 14. 영등위는 이 영화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을 함

- 2012. 9. 14. 위 두원엔터테인먼트는 이 영화에 대해 재차 ‘청소년관람불가등급’ 분류 신청을 하였고, 2012. 9. 22. 영등위는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을 변경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하여 위 영화의 연출자(김병선)는 법원에 ‘제한상영가등급분류결정처분 취소’ 소를 제기(2012구합36552)하였고, 2013. 5. 10.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등급분류결정 취소를 선고하였음.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마스크트인 포돌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현실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비판하려 하였을 뿐,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를 미화 조장하려 한 것을 볼 수 없다”, 제한상영가 규제내용으로 볼 때 “현재 국내에 제한상영관이 없으므로 사실상 국내개봉이 불가능한 점”, “다수의 영상 표현기법과 여러 장르를 혼합한 실험적 작품인 점, 베를린국제영화제 등에서 공식 상영된 점,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로 인정한 점,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16281, 2013. 5. 24.선고), 상고(대법원, 2014두5033, 2014. 7. 10.선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2015. 9. 10. 청소년 관람불가로 개봉하기까지 제작자는 4년여 기간이 넘도록 실질적인 상영금지 조치를 당함. 당시 영등위 직원은 ‘제한상영가’ 등급이 악용되어 정치적 내용을 이유로 특정 영화에 대한 상영을 가로막은 대표적 사례로 이 영화를 들고 있음

- 이는 이 영화가 당시 박근혜를 비판한 영화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인데, 대법원 선고 이후인 2015. 1. 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제(‘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에서 영화 <자가당착>이 상영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정원 등의 스크린을 거쳐 청와대에서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영진위 후원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에 대하여 등급분류 면제를 “추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취소하는 방안과 민간 독립영화전용관으로 프로그램 선정 및 상영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므로 사후 조치로 2015년 영진위 지원(임대료 50백만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음. 이 중 전자의 방안은 이루어지기 힘들고 결국 <자가당착>이 상영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자 다음 지원에서 인디스페이스를 배제하였음.

- 결국 영화 <자가당착>은 비판적 소재와 내용을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심의 권한을 이용하여 상영을 가로막고, 등급분류 면제추천이 허용된 ‘영화제’ 에서 상영을 이유로 그 상영관에 대해 보복조치로서 배제를 실행하였음

② 영화 <불안한 외출>에 대한 고발

- 이 영화는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경쟁작으로 선정되어 상영되었음. 그리고 이후 2015. 5.경부터 2015. 10.경까지 총8회에 걸쳐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로 인디스페이스, 광주G시네마, 부산 국도 등지에서 소규모 ‘공동체상영’ 을 하였음
- 2015. 11. 13. 영상물등급위원회(2015년도 제223차)는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는 부모 등 보호자 동반 시 관람 가능)” 이라며 등급분류 결정을 하였음
- 이와 같이 등급분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등위 직원은 2015. 12. 2. 문체부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사후관리위원회에 올려 향후 조치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영화 <불안한 외출> 사후확인 진행사항 보고」 (2015. 12. 1.)를 함
- 2016. 1. 28. 영등위 사후관리위원회를 열어 “영화 <불안한 외출> 사후 조치에 관한 건” 이 의결되었는데 다수의 사후관리위원들은 대가를 받고 상영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다수의 의견으로 제작업체를 고발기로 결정하고, 서울마포경찰서(수사과)에 ‘다큐창작소’ 를 고발함
- 2016. 7. 28. 서울서부지검의 이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는 <불안한 외출>의 DVD 해상도를 확인한 결과 해상도가 720*480 픽셀로 제작되어 있어 소형영화임이 확인되고 인디스페이스는 무료 상영, 광주영상복합문화관G시네마, 메가박스 서면점 등은 각 사회단체가 주최한 것으로 극장대관료 또한 각 사회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음
 - ※ 당시 영등위 직원이 위 ‘사후관리위원회’ 개최 시에 “요즘은 기술발전으로 휴대폰으로 찍어도 고화질 영상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상영버전만 가지고 해당 영상이 어떤 촬영장비로 제작되었는지 알기는 매우 어려움” 이 있다고 하였으나 검찰은 해상도를 확인하여 소형영화임을 곧바로 인정하였음

- 이 영화는 2014. 10.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이후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등으로 부터 ‘문제영화’ 로 낙인이 찍히면서 영등위의 등급분류 제도를 활용한 제재와 외압을 당하였음

- 한편, 이 영화에 대해 영진위는 2015년 상반기 영진위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에서 지원배제를 하였음. 당시 이 사업 담당 영진위 직원은 당시 문체부 공무원이 “다소 경직된 억양으로 <불안한 외출>, <산다>, <그림자들의 섬> 등을 언급하면서 배제를 지시” 했다고 하고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국정원으로부터도 배제 지시를 받았다” 라고 하였음
 - ※ 위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심사는 2015. 7. 21.에 있었음. 이에 비추어 청와대와 문체부는 이 영화의 ‘공동체상영’ 기간 동안 지원배제를 실행하고 나아가 공식 개봉을 앞두고도 고발하는 등 집요하게 외압을 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5 시각 예술 분야

1. 개요

1) 내용요약

- 시각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실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실행 형식은 ▲ 전시 행사는 검열을 통해 문제가 되는 작품의 전시 불가 또는 교체를 지시 ▲ 공모 사업은 지원배제 등을 하달함
 - 검열 및 지원배제 사유는 ▲민족미술인협회 · 민예총 등 소속 ▲ 야당지지 또는 시국선언 참여 ▲ 대통령 모독 또는 정부 비판 내용 ▲ 통일 · 사드 · 세월호 등을 표현 ▲ 블랙리스트 등재자 옹호 등 다양
- 시각 예술 분야 주요 조사사건 목록은 다음과 같음

분야	주요 사건	기관	유형
시각 예술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	청와대 광주시	검열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취소 사건	뉴욕한국문화원	검열
	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검열 사건	국립현대미술관	검열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	대구시	검열
	홍성담의 전시회 무산, 보수단체 시위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서울시립미술관	검열
	'(사)우리만화연대'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배제 의혹 사건	콘텐츠진흥원 만화영상진흥원	지원배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김장언' 선정 배제 사건	예술위 국립현대미술관	검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전시 '나의국가' 책임큐레이터 중도계약 파기 사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검열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 2015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배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 원로작가 디지털자료집 제작 연구지원 공모사업	"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 2015년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 사업 2차 공모사업	"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 전자도록 발간 지원 사업	"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 2016년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공모 사업	"	"

2) 구조



※ 전시행사의 경우, 문체부는 모든 사업에 대해 세부전시내용 확인

(신청단계에서 최종전시계획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이 다수이므로 분기/반기별 전시계획 확인 후 지급한다는 방안 수립)

2. 주요 사건 조사 결과

1) 검열 사건

① 작동 구조 사례

- 전시 주최기관이 세부전시계획 등을 문체부에 사전 보고하고, 이를 문체부를 통해 전달받은 청와대와 국정원은 보고 내용 검토 후 특정 작품 등에 대한 전시불가를 문체부에 하달하고, 문체부는 이를 다시 전시행사 주최기관에 통보함
- 지역 행사의 경우 예산권을 쥔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여 작품 검열 또는 교체 등을 결정하기도 함

② 검열 사건 주요 사례 조사 결과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

○ 사건 개요

- <2014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서 홍성담의 걸개그림 작품 ‘세월오월’ 이 전시되지 못함

- 홍성담은 국정원 블랙리스트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에 ‘A급’으로 등재되어 있음
- ‘대통령 비하’를 이유로 비서실장 김기춘이 ‘세월오월’의 전시금지를 지시, 교문수석 송광용, 문체부 차관 김희범과 김종, 행안부 고위 관료 등이 광주시를 압박하였고, 광주시 공무원이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전시가 취소됨
- 또한 김기춘이 민정비서관 우병우에 지시하여 홍성담을 고발하고 사찰하라는 지시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보수우익단체가 홍성담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음

○ 사건 특징

- 당시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이유로 전시를 막음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의 차별 금지’를 위반한 대표적인 사건
- 또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정책’을 추진하게 한, ‘대통령 모독’의 대표적 사례가 된 사건이며, 박근혜 정권은 해당 작가와 작품뿐만 아니라 이에 연관된 단체와 사람까지 배제 조치를 추진하였음

○ 조사 결과 새롭게 밝혀진 사실

- 김기춘이 ‘세월오월’ 작품의 전시금지 뿐만 아니라 향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비지원 재고 또는 축소 경고’를 지시한 사실을 자료를 통해 확인
 - 실제로 <2018 광주비엔날레> 행사 예산이 13억 원이 삭감된 총 18억 원만 배정됨(2016년 초 예산심사)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14.8.8 국정기획수석 (기획비서관)
<input type="checkbox"/> 성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황보고	<input type="checkbox"/> 결실요망	<input type="checkbox"/> 지시사항조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시 급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긴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합의/협의공유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유 (송수석)

금일(8.8일, 08:30-09:45)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별첨 안건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 오늘부터 국민세금 37억원(국비 21억원과 시비 16억원)을 지원하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 행사(8.8-11.9)와 관련, 광주시가 소위 전개그림 작가 홍성담의 ‘세월오월(MP 풍자그림)이 전시하기에 부적절한 작품이라고 판단, 작품선치를 불허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도 국민혈세의 낭비를 방지하고 광주비엔날레의 권위 유지를 위해서도 예술을 병자한 저급한 정치적 작품이 받을 불이익 못하도록 노력해 나아함

- 따라서 등 작품의 전시 금지(광주시 조치)는 물론이고 문체부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국비지원을 재고 또는 축소하겠다는 뜻을 광주비엔날레 주최측에 경고해 두어야 할 것임 (교문수석)

<2014. 8. 8.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 2016년 말 경 문체부 김종 차관이 전시 외압을 가하였다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폭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추가로 김희범 차관이 송광용 교문수석 지시로 외압을 가한 사실이 법원 기록에서 확인되었음

문 : 송광용, 김상률 교문수석과 직접 연락하는 일이 많았나요?

답 : 송광용 수석은 2014.8.경 제가 장관 대행을 하고 있을 때 '세월오월'의 작가 홍성담 문제로 한 번 전화로 연락을 해왔고, 광주비엔날레에서 '세월오월'이 전시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000 기초실장이 저에게 광주시장 전화번호를 알아다주어, 제가 전화를 하여 '세월오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김희범 진술조서」(2016. 12. 31.), 서울지방법원 2017노2425 형사소송기록 제11권>

- '세월오월' 작품 또는 홍성담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피해를 입은 단체와 문화예술인이 확인되었음

단체명 또는 인명	등재 사실
<p>지역문화재단 (13년 10월경) - 5명</p> <p>광주 문화재단</p>	<p>①인천문화재단:민예총 출신 강광 임명 -> 낙하산 서울문화재단 -②김정현 이사장 및 전교조 참여연대 등 5명 이사 포진 -③윤현술(국보법 폐지 연극 연출가) 2회 선정(6,000만원 지원) 광주문화재단 -④월북 음악가 정윤성 추모음악제 -⑤홍성담 활동 중인 광주민예총 지원 부산문화재단: 예술공연지원센터 개설하여 좌편향 단체 후원 확대</p> <p>※ 출처: 「리스트 - 2014/2015년도분(654명) - 확정」 중 '기존관리리스트-149명'</p>
<p>박영택</p>	<p>아시아문화원 간부진(1.19)</p> <p>○①김희정:민주통합당, 임수경방북지지, 노현추모공연기획, 친노/ 남편, 한겨레 활동 등)-1.27-K ○②박영택:경향, 미디어오늘 등 필진활동, 홍성담의 그림 옹호, 박정희시대 비판 등 ○③성무량:2009소고기반대 시국선언 1건-양해가능 ○④조현중:광주사태 연루, 복원됨 - 문제없음</p> <p>※ 출처: 「리스트-'16.9.27.현재」 중 '2016 기타사항 확인리스트(K)'</p>

홍성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가확인자: 전민규(민노당당원, 절대안됨)/ 홍성민(홍성담과 활동, 절대안됨) - 음악 : 없음 - 시각예술: 3명 · 자체확인자: 양혜규 · 추가확인자: 김승연(절대안됨)/ 안태성(절대안됨) <p>※ 출처: 「리스트 - 2014/2015년도분(654명) - 확정」, '㉔ 2015년 연중사업리스트 -262명' 중 '2015 국제교류 2차공모('15.5.27.)-36명'</p>
-----	---

<홍성담 관련 블랙리스트 등재자 및 기관>

[홍성담의 또 다른 피해 사실: 홍성담의 전시회 무산, 보수단체 시위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 사건 개요

- <2015년 독일 ngbk 전시회>(2015.4.18.~6.14.)에 홍성담의 작품 5점이 출품하기로 되어, 독일 주최측에서 'OO해운' 과 작품운송 계약함. 그런데 'OO해운' 이 작품 수령 당일인 2015. 2. 24. 갑자기 정치적 내용의 작품은 취급하기 어렵다는 회사방침에 따라 운송을 거부하였고, 운송시일이 촉박하여 결국 작품은 운송되지 못하고 작가가 직접 가서 작업함
- '2015<SeMA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 공허한 제국' (2015.9.4.~9.13.)이 서울시립 미술관 주최로 개최되었음. 여기에 홍성담의 작품 '김기종의 칼질' 이 전시되었는데, 이를 한 언론사에서 비판적으로 보도한 이후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보수우익단체의 집단 방문 시위까지 이어졌음. 결국 9월 8일 작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철거되었음

○ 사건 특징

- 2014년 '세월오월' 사건 이후, 홍성담 작가가 겪은 '작품운송 거부', '보수 우익단체의 방문 시위', '서울시 측의 전시작품 철거' 등 일련의 사건은 당시 권력에 밍보인 예술인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줌
- 특히 '김기종의 칼질' 철거 사건은 권력에 대항하면, 언론과 민간단체 등을 총동원하여 압박하고, 나아가 고발까지 하는 당시 박근혜 정권이 즐겨 쓰던 수법임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

○ 사건 개요

- 대구아트스퀘어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에서 박문철의 출품작 <100번째 촛불을 든 성주주민계>의 제외·교체 및 윤동희의 작품 <망령>에 대한 제외 요구와 함께 이은영의 작품 <바다 위로 밤이 걸어온다>의 작가노트의 ‘세월호’ 언급 부분에 대한 주최 측의 수정 요구가 있었으며, 위 세 작가는 이러한 요구에 반발하여 전시 참여 거부를 하였음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 개요



2) 출품작(대표작품 이미지)



박문철(영상)



조진섭(사진)

14

<조직위 회의자료 중 박문철 작품 스틸컷>

- <100번째 촛불을 든 성주주민계>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성주군 주민들의 일상을 다룬 영상 작품이고, <망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상되는 작품이며, <바다 위로 밤이 걸어온다>는 작가 노트에 ‘세월호’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주최·주관 및 조직위원회 및 실무진 일부에서 사드 반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성향, 세월호 관련 작품이라는 이유로 해당 작가들에게 작품의 교체, 제외, 수정 등을 각각 요구한 것임



<윤동희의 '망령'>

-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 공무원이 행사 전에 있었던 조직위 회의 및 실무진 회의에서 전시내용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등 권한을 넘어선 개입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음

○ 사건 특징

- 이 사건은 2017년 박근혜 정부 종료 이후 발생한 사건이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적용이 문화예술계 좌파배제라는 국정기조에서 출발하여 당시 야당 지지나 정부비판, 세월호 등 시국선언 참여자 등을 배제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양상과 그 궤를 같이함
- 또한 이 사건의 피해 작가들은 청년작가들로 소위 블랙리스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되었던 블랙리스트 배제 방식과 유사하게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구시 및 주최 측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회 ‘김장언’ 선정 배제 사건]

○ 사건 개요

- 위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2015년과 2016년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30주년 기념 포상’, ‘2016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등 4건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한 사실이 밝혀졌음

○ 사건 특징

- 국립현대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만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적용을 피하지 못하였음
- 향후 감사원은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개선과 관련자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8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 - 262명	
공연예술센터대학로 3관 대관(2차)('15.6.29) -1명	○박종우(청소년전문극단 진동)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 위원('15.6월) - 2명	○이영옥, 최열
작가장터 개설지원 ('15.5월) - 1명	○무미아트(민병동)
리스트-'16.9.27현재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국립극단 비상임이사, 감사	○특이없음(K/7.14)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20)	○특이없음(K/7.2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후보	○특이없음(K/7.21)
2016문화예술발전유공자 포상(1차)	○특이없음(K/7.29)
현대미술관과천30주년기념포상	○최열(K/7.29)
시각예술 글로벌기획인력 양성사	○특이없음(B/3.29)
공연예술스텝지원 -공연기획 및 경영전문인력지원 (5.30)	○주다걸쳐(이다현), 극단 청년극장(정창석), 문화예술교육 디베르(이미희), (재)배우공동체자투리(김경수), (재)극단기분좋은극장(이하나), 한국연극협회광주광역시지회(정순기), 거창 우리문화인구회(김현영), (사)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김덕수)-B/6.13(동명이인여부 확인할 것) *이미희, 김경수-동명이인, 특이없음으로 처리 *공무는서이티(김강수) : 양해됨 ○장애인문화예술협회(화동업), (사)정기학회(천계현), 사회적협동조합 살관(천동일)-K/7.12
현대미술관-현대카드컬처프로젝트,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신형철-특이없음(K/6.21)
신진국악 실험무대	○특이없음(B/7.22)
신진단체예술가연계 기획공연(7.12)	

국립현대미술관의 2015~2016 블랙리스트 실행 목록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YAP) 2016> 당선작 신형철의 <템플>. 이 작품은 건조된 지 35년 된 폐선(廢船)을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뒤집힌 세월호를 연상시킴. 국정원 회신(K/6.21) 결과가 '특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아르코 미술관, ‘2014 미술을 위한 캐비닛 전-아카이브로 읽는 미술관 40년전’ 검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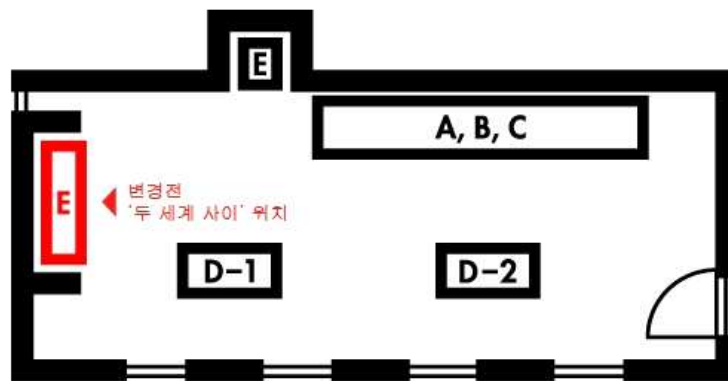
○ 사건 결과

- 아르코미술관은 1980년대에 있었던 ‘현실과 발언(민중미술 그룹)’ 창립전에서 있었던 검열에 대하여 당시 참여 작가였던 김정현, 민정기, 윤범모 등이 회고 좌담하는 형식의 비디오 작업인 전소정 작 <두 세계 사이>를 전시하였음(2014. 10. 24.~11. 30.)
- 이 작업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문체부 000 사무관이 아르코미술관을 방문하여 000 관장과 담당 큐레이터에게 각각 별도로 대담 비디오를 빼거나 관객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음. 000 관장은 담당 큐레이터에게 000 사무관의 지시에 따르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나 담당 큐레이터는 모니터 크기를 줄이고, 작품의 위치를 전시장 전면에서 안쪽 구석진 공간으로 변경하고, 헤드셋을 연결하여 사운드가 전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추가 조치 계획으로 ‘다큐멘터리, 작가 인터뷰 등 영상 추가 제작으로 노출을 최소화’ 하겠다고 000 본부장과 000 관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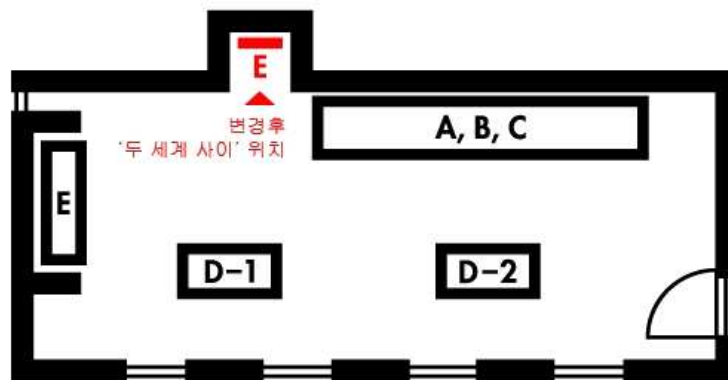
□ 기초치 사항

- 1) 52인치 모니터에서 40인치 모니터로 변경하여 상영함
- 2) 작품의 위치를 전시장 전면에서 안쪽 구석진 공간으로 변경함
- 3) 헤드셋을 연결하여 전시장에 사운드가 나오지 않도록 함
- 4) 변경된 전시장 도면 (아래)

1F: Section. 1 스페이스필룩스



1F: Section. 1 스페이스필룩스



□ 향후 추가 조치 계획

: 다큐멘터리, 작가 인터뷰 등 영상 추가 제작으로 노출을 최소화

2) 지원 배제 사건

① 개요 및 작동 구조

- 공모사업 주관기관이 신청인(단체)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하고, 이를 문체부를 통해 전달받은 청와대와 국정원은 보고 내용 검토 후 특정인(단체) 등에 대한 배제 지시를 문체부에 하달하고, 문체부는 이를 다시 사업담당자 등에 통보

② 지원 배제 사건 주요 사례 조사 결과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 사건 개요

- 2015~2016년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모 사업에서 시각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배제 사실이 총 5건 밝혀짐
- 5건 모두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은 확인되며, 일부는 문체부의 지시로 배제를 실행하였다는 진술을 확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중 시각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내역>

사업명	배제 경위
2015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무미아트(민병동) 등재 -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이너과장이 지원센터 대표에게 배제명단을 구술하였다는 진술 확인 - 무미아트(민병동)는 1차 심사 통과, 2차에서 탈락
2015 원로작가 디지털자료집 제작 연구지원 공모사업	-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이지호 등재
2015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지원 사업 2차 공모사업	-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임민욱 등재 -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이너과 사무관이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배제 명단을 통보하였다는 진술 확인
2015 전자도록 발간 지원 사업	-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최열, 최석태 등재 - 최열의 배제 명단 통보사실은 확인
2016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 아트페어 참가지원 공모사업	-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우찬규(학교재갤러리) 외 6인(단체) 등재 -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이너과 사무관이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배제 명단을 통보하였다는 진술 확인 - 학교재갤러리가 선정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는 내용의 배제 경위 확인

○ 사건 특징

- 이 사건은 만화 분야에서 ‘대통령 모독’ 등의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공모사업 등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 이와 같은 ‘대통령 모독’ 사유는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철저히 그 경위를 파악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며, 정부 기관에 배제를 지시하는 ‘중요 관심 사항’이었음

6 해외 분야

1. 재외 한국영화제 특정 한국영화 배제

1) 재외 한국영화제 개요

- 2012년 이전 재외 한국영화제에 대한 지원은 문체부에서 직접지원을 하였고 이 후부터는 영진위가 영화발전기금으로 매년 1~2월 심사를 통하여 약 8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12년째를 맞이하는 ‘파리 한국영화제’, ‘런던 한국영화제’ 등의 역사가 오래 된 한국영화제부터, 부정기적인 한국 영화주간, 수교 기념 한국영화 상영 행사 등 다양한 한국영화제가 2009년의 경우 전 세계 27곳에서, 2016년도의 경우 46개국 주재 재외 공관 등 55개 한국 영화제 및 행사가 진행되었음

2) 해외 한국영화제에서 특정 블랙리스트 영화 배제

(1) 실행 체계

- 2014년 청와대 000 행정관의 지시를 받은 국제문화과 000 과장은 프랑스 한국 문화원장 000에게 ‘변호인’에 대한 상영 금지를 요청 하였고 결국, ‘변호인’은 ‘파리 한국영화제’에서 상영되지 않음. 또한, 국제문화과에서는 프랑스 한국문화원에 “남영동 1985(2012), 변호인(2013), 설국열차(2013), 관상(2013), 지슬(2013), 다이빙벨(2014), 자가당착(2015)” 등에 대한 상영배제 요청을 하였음
- 한편 ‘문체부, BH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예정(국정원 2014. 3. 21.)’ 문서에서는 『① 문제성 단체 참여 및 이념갈등 유발 소재 행사 주최·후원 지양, 문화원 주최 및 후원영화 선정시 문제성 영화 배제 조치 ② 영화 선정시 개별문화원에서 영진위에 직접 요청하지 않고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일괄 점검토록 모니터링 체제 정비』라고 하여 특정 영화 배제 실행체계를 만들었음
-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사업부에서도 ‘특정 영화 배제에 관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들이 있으나 문화원과 상호 교신한 흔적은 발견 못했음. 해외 한국문화원에서 영상콘텐츠산업과로 관련 문의를 한 경우는 있었음

(2) 특정 블랙리스트 영화(불입 문서)의 해외 한국영화제 배제 현황

- 2015년 해외문화홍보원장의 경우, 해외 한국영화제에 대하여 ‘청와대가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라고 밝힌 바 있고, 2015년 이전에 특정 영화 배제에 대하여 문화원장들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이 있으며, 당시 다수 문화원장 진술에서 특정 영화에 대한 배제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
- 특히, 영화 ‘변호인(2013)’ 은 2014~2016년까지 단 『LA 샌디에고 한국영화제(2014)』 에서 한차례 상영을 제외 하고 이후 해외 한국영화제에서 상영되지 못했고 정부가 바뀌고 나서야 2017년 10월 ‘파리 한국영화제’ 에서 다시 상영됨
- 이명박 정부 시절 ‘그때 그 사람들(2005)’ 은 2008년 파리, 루앙 아고라, 2011년 워싱턴의 한국영화제 등에서 상영된 바 있고 ‘도가니(2011)’ 는 2012년 호주와 프랑스 한국영화제에서, ‘화려한 휴가(2007)’ 는 2008년 호주, 프랑스 한국영화제에서 상영된 바 있으나 박근혜 정부 때에는 상영되지 않음
- ‘지슬(2013)’, ‘부러진 화살(2011)’ 은 2013년 스위스 한국영화제에서 ‘효자동이발사(2013)’ 은 런던 한국영화의 밤에서 한차례 상영된 바 있으나, 본격적인 블랙리스트가 실행되던 2014~2016년에는 상영되지 않음.
- ‘남영동1985(2012)’, ‘26년(2012)’ 및 ‘다이빙벨(2014)’, ‘자가당착(2015)’ 등은 아직 한 차례도 해외 한국영화제 등에서 상영되지 못했음
- 본격적인 블랙리스트가 실행되던 2014~2016년 특히, 고위공직자가 문화원장을 맡는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뉴욕, LA, 러시아 한국문화원》 등 8개 지역에서는 2014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한국영화제』 ‘설국열차’, 『LA 샌디에고 영화제(2015년 폐지)』 ‘변호인’, ‘관상’, 2015년 『영국 런던 한국영화제』 ‘살인의 추억’, ‘광해’ 가 상영됨. 2016년에는 소위 문제 영화가 전혀 상영되지 않았는데, 특정 영화 배제 정황이 뚜렷함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프랑스 포럼데이마주에서는 해외문화홍보원 및 예술감독 000의 주도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1981)’, ‘상계동 올림픽(1988)’, ‘아름다운청년 전태일(1995)’, ‘그때 그 사람들(2005)’, ‘변호인(2013)’ 등 5편의 영화가 검열·배제 되어 상영되지 못했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정원, 해외 문화원 문서에서 나타난 특정 영화 블랙리스트>

연번	영화	영화 평가	문서 출처
1	괴물(2006)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 국민의식 좌경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청와대 2008. 8.
2	공동경비구역 JSA(2000)	북한을 동지로 묘사 국민의식 좌경화	
3	효자동이발사(2004)	국가권력의 몰인정성을 비판 국민의식 좌경화	
4	영화 26년(2012)	공권력,정부는 탄압의 주체로 대중은 사회적 약자로 왜곡 공권력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함은 물론 그릇된 대북관을 주입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국정원 2013. 3.
5	남영동 1985(2012)		
6	살인의 추억(2003)	공무원·경찰을 부패·무능한 비리집단으로 묘사,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입	<CJ의 좌편향 문화사업 확장 및 인물 영입 여론' 제하 BH 보고서> 국정원 2013. 8. 27.
7	공공의 적(2002)		
8	도가니(2011)		
9	공동경비구역 JSA(2000)		
10	베를린(2012)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사회 저항운동을 부추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청와대 2014. 5.
11	설국열차(2013)		
12	광해(2012)		
13	변호인(2013)		
14	부러진 화살(2011)	정치편향적 작품	
15	화려한 휴가(2007)		

<2015.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이메일에서 나타난 상영 금지 영화 리스트>

연번	영화	문서 출처
1	남영동 1985 (2012)	<전 프랑스 문화원장 이메일> 2015. 2. 23.
2	변호인 (2013)	
3	설국열차 (2013)	
4	관상 (2013)	
5	지슬 (2013)	
6	자가당착 (2015)	
7	다이빙벨 (2014)	

<국정원 IO 정보 보고 중 영화 상영 저지 및 배제 관련 내용>

연번	영화	영화 평가	문서 출처
1	철의 여인(2013)	대통령님 폼페이내용	대통령님 비하 독립영화 '철의 여인' 개봉 차단 추진 2013. 4. 2.
2	자가당착(2015)	대통령님 폼페이 영화	문체부, 독립영화협회 '청와대 비판'영화 상영계획취소 2015. 1. 21.
3	산다(2015)	KT 민영화에 따른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 부각	영진위의 다양성 지원예산작 엄선 필요. 2015. 9. 16.
4	그림자들의섬(2014)	한진중공업 고공농성 파업 주동자 미화 내용	
5	소년, 달리다(2015)	국보법 위반사범 주도 공동체 '마포 성미산 마을' 홍보	
6	위로공단(2014)	노동운동을 선동	
7	올보 권투부(2014)	재일 조선학교 부각	
8	귀향 (2017)		<문체부, 위안부 영화 '귀향' 개봉 관 최소화 조치> 2016. 2. 16.

2. 해외문화홍보원, 재외 한국문화원에서의 블랙리스트 사건

1)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사건 개요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한-불 양국이 상호 문화예술 교류 등을 추진한 대규모 국제교류행사였음

(1) 실행 체계 및 역할

- 2015년 3월 31일 해외문화홍보원장에 부임한 000은 청와대 김소영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000 기획관으로 하여금 문체부 예술정책과 000으로부터 9,473인 리스트를 받아 오게 하였음. 또한 담당 사업 사무관과 주무관에게 공모 진행 과정에서 이 문서를 상호 대조하게 하여 블랙리스트 예술가 배제하도록 하고 예술감독 000에게도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함. 또한 출판인쇄산업과 000과장에게 연락하여 ‘아르떼(ARTE) 한국, 다양한 기적의 나라’ 자막제작 지원 배제를 지시하였음
- 김종 당시 차관도 담당 과장에게 블랙리스트 실행을 독려했음
- 예술감독 000는 가능하면 사업은 진행되게 하였다라고 진술했으나 그가 참여한 2015년 6월 2차공모 심사에서 ‘시네마 콘서트 제천국제영화음악제’에 거의 최하 점수를 주어 예산 배제를 심사 단계에서 실행하였으며 각종 사업검열과 배제에 관하여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음
- 국정원은 해외문화홍보원, 출판인쇄산업과, 예술정책과에서 배제시키지 못한 ‘이미아직’ 주재환 예술감독에 대한 배제를 지시하는 등 감시 역할을 했던 것이 확인됨
- 당시 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은 2014년 말경 국제문화과로부터 받은 7편의 블랙리스트 영화가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 상영되지 않도록 리스트를 관련 담당자(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문화홍보원 담당자, 영화 전문위원 000, 000 예술감독)와 공유한 바 있고, 다른 사업들에도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소위 ‘찍힌’ 공연 등에 대해서는 지원 요청이 있어도 거절하였음

- 출판인쇄산업과 000은 000 해외문화홍보원장의 지시의 실행 뿐 아니라 주도적으로 ‘프랑스 MEET 문예축제’ 작가 파견, ‘2016 파리도서전 주빈국’ 행사에 특정 문학인 배제 지시를 하였고 한국문학번역원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주요 본부장들을 세종시로 소환하여 겁박을 한 사실이 확인됨
- 000 해외문화홍보원장은 2016년 7월 경 예술정책실장에 있을 때는 당시 해외문화홍보원장 000에게 ‘프랑스내 한국의 해’ 폐막식이 열릴 예정이었던 퐁피두 센터에서 블랙리스트 작가 ‘양혜규’가 전시회를 한다는 것을 알려 폐막식 장소를 외교관 클럽으로 변경하게 하였음. 이에 관하여 주프랑스 대사 모철민도 협력한 것으로 보임. 결국,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퐁피두센터에 폐막식을 하지 못하게 하여 ‘최대 4만 1천 유로에서 최소 1만 4천 유로’의 예산낭비 또는 국고 손실을 야기하였음
- 국제문화과는 업무 분장상(대통령 순방행사) 한-불 행사의 일환이었던 2016. 6. K-CON 사업 확정에 관여하였고, 청와대는 해외문화홍보원과 조직위 사무국(예술경영지원센터)에 최순실이 개입한 K-CON ‘한식체험전시’ 운영 예산을 3억에서 5억으로 증액 지원할 것을 지시하여 5. 7. (토), 5. 8.(일)에 예산심사를 급하게 진행하고 5. 9.(월)에 예산교부를 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정이 진행되었음.

(2) 총 21건의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실행은 21건의 사업에서 나타났으며 ▶검열(작품 교체 및 배제 2건), ▶지원배제(예산지원 배제 7건), ▶인물배제(특정 인물만 배제하여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 2건), ▶회피(블랙리스트 등재 작가 전시 회피, 1건) ▶우회지원(항공비를 프랑스측이 지불하게 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신청서 작성 등 5건), ▶배제실패(해당 사업기관에서 배제를 거절하여 진행한 것, 2건), ▶막지 못함(우연하게 예산교부가 됨으로 해서 막지 못한 것, 1건), ▶양해(청와대가 지원을 양해한 것, 1건) 등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음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실행 사업>

연번	분야	배제 대상 프로그램	배제이유	결과
1	시각	'이응노, 이우환외 프랑스의 한국화가들/이응노 미술관'	이지호 9473리스트 등	우회 지원
2	시각	아르떼(ARTE)'한국, 다양한 기적의 나라'자막제작 지원	4.3. 강정마을	지원 배제
3	영화	포럼데지마주(Forum des Images) ³⁾ '서울과 부산의 초상', '매혹의 서울', <번호인,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상계동 올림픽, 그때 그 사람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영화 5편 배제	검열
4	시각	릴 3000 '서울 빨리 빨리(Seoul vite, vite)'	노순택 특정 사진 9473리스트	검열
5	학술	'프랑스에서 본 한국영화' 성균관대 프랑스어권 연구소/동아방송예술대학교	차승재 9473리스트	인물 배제
6	공연	무브먼트당당(김민정) 넥스트 축제외 프랑스 투어	김민정 9473리스트	양해
7	공연	GRAME 콘서트 한국 음악의 밤 한양대 전자음악연구소	박민희 9473리스트	우회 지원
8	공연	현대음악극 공동 창작 프랑스 국립창작음악연구소	박선영 9473리스트	우회 지원
9	시각	콘크리트 오페라(정글 슈즈) 한국 킴킴갤러리	김나영 9473리스트	막지 못함
10	영화	시네마 콘서트 제천국제영화음악제	허진호 9473리스트	지원 배제
11	공연	현대 음악 엑스포 참가 한국음악 레이블사업협회	김병찬 9473리스트	지원 배제
12	공연	한국음악과 함께하는 불꽃축제 하이서울 페스티벌	동명이인 9473리스트	지원 배제
13	공연	한국전통음악회 코리아 매니지먼트	박민희 9473리스트	우회 지원
14	시각	국제 판화 비엔날레 한국현대 판화 특별전 한국현대 판화가 협회	이준규 등 9473리스트	지원 배제
15	시각	이응노와 서체주상 이응노 미술관	이지호 9473리스트	지원 배제
16	시각	대안적 기술문화 축제 팝쿵	송수연 9473리스트	지원 배제
17	공연	연극 '빛의 제국' 공연(국립극단) 배제 지시, 원작자 김영하 초청 방해	세월호 컬럼	우회 지원
18	문학	프랑스 MEET 문예축제' 작가 파견	편혜영 9473리스트	배제 실패
19	문학	2016 파리도서전 주빈국	황석영,김영하, 김애란, 한강 등 9473리스트 등	배제 실패
20	공연	이미아직 국립현대무용단	주재환 국정원 리스트	인물 배제
21	시각	양혜규 작가 풍피두 전시	트위터 문재인지지	회피

3) 파리의 중심부에서 영화 및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5개 상영관이 있으며 매해, '도시의 초상들'

7 기타 분야

1.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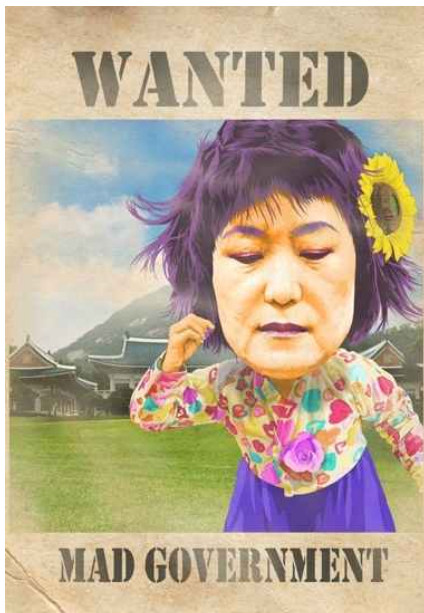
1) 사건 성격

-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풍자(퍼포먼스)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로 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
-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건으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정부가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임

2) 전단지 배포 현황(2014. 10. ~ 2015. 11.)

- 2014. 10. 20.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이병하(이하 작가)가 전단지를 배포한 후,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국에서 수만 장의 전단지가 배포됨

<이하 작가가 배포한 전단지>



<퍼포먼스 활동가 박성수가 배포한 전단지>



이라는 주제로 영화제가 진행된다. www.forumdesimages.fr

3) 전단지 배포에 대한 국가 기관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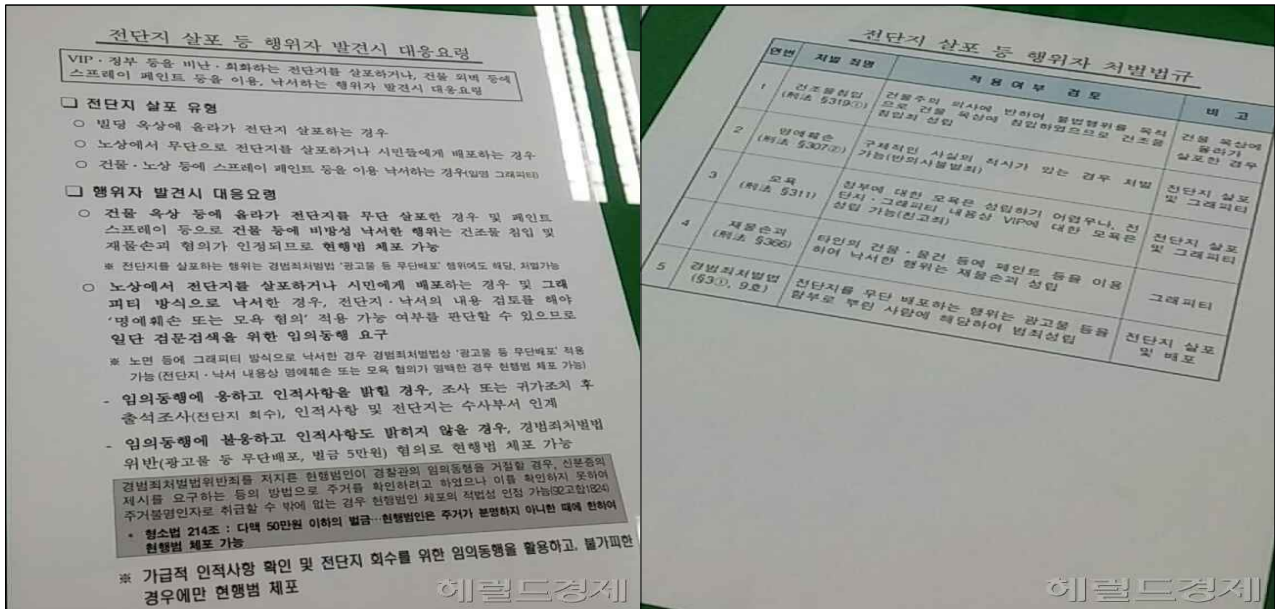
- 청와대는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는데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에 청와대의 전단지에 대한 대응을 적시함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수첩		
연번	일자	내용
1	2014. 10. 31.	· 이병하, 엄마부대 고발(명예훼손)
2	2014. 11. 1.	· 대통령 모욕 전단 살포 건(경찰) - 이병하 - 건조물침입 의율 상태 - 경범죄법으로 즉결 처리 검토
2	2014. 11. 3.	· 대통령 모욕 전단 살포 행위 ① 건조물침입, ② 경범죄법 → 경범죄 법정형 상향 개정
3	2014. 11. 4.	[長] · 경범죄 - 유치 활용안
4	2014. 12. 29.	홍보: VIP 모욕 빠라 살포, 낙서사건 유의, 조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연번	일자	내용
1	2015. 3. 4.	VIP 비방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경각심 주는 차원에서 범인을 색출, 강력 처벌할 것(정무수석, 민정수석)
2	2015. 3. 16.	3. 14일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대통령 비방 전단(약 200여장)이 배포되었다고 하는데(현재 모든 전단 수거 상태) 조속히 범인을 색출하여 의법처리할 것(민정수석).
3	2015. 5. 18.	최근 VIP를 비난하거나 풍자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사례가 있는 데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님. 민정수석은 관련자를 색출하고 수사해서 반드시 엄단토록 할 것(민정수석)
4	2016. 2. 10.	부산문화재단이 '14. 9월 유희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행사(벽화예술품 설치)를 개최했을 당시 한 건물옥상에 그려진 'VIP 비방 벽화'가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는데, 철거하도록 조치할 것(교문수석, 정무수석)

-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은 경찰에게 전단지 배포자를 색출하여 강력 처벌할 것을 지시함

- 경찰은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경찰서에 전단지 배포자를 발견했을 때의 행동 요령을 지시함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 시 대응요령>



4) 전단지 배포자들의 피해

- 이하 작가는 건조물침입죄, 경범죄처벌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됨
- 퍼포먼스 활동가 박성수는 집과 핸드폰, 통장 등을 압수수색 당했으며 8개월간 구속 수감됨

5) 전단지 배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퍼포먼스 활동가 박성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함
- 2심 재판부는 전단지의 내용이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함

6) 사건의 특징 :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전단지 배포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에 해당함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정리)>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VIP·정부 등을 비난·회화하는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건물 외벽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 낙서하는 행위자 발견시 대응 요령

□ 전단지 살포 유형

- 빌딩 옥상에 올라가 전단지 살포하는 경우
- 노상에서 무단으로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 건물·노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 낙서하는 경우(일명 그래피티)

□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 건물 옥상 등에 올라가 전단지를 무단 살포한 경우 및 페인트 스프레이 등으로 건물 등에 비방성 낙서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므로 현행법 체포 가능
 - ※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광고물 등 무단배포'행위에도 해당, 처벌가능
- 노상에서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시민에게 배포하는 경우 및 그래피티 방식으로 낙서한 경우, 전단지·낙서의 내용 검토를 해야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단 검문검색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
 - ※ 노면 등에 그래피티 방식으로 낙서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등 무단배포'적용 가능(전단지·낙서 내용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현행법 체포 가능)
 - 임의동행에 응하고 인적사항을 밝힐 경우, 조사 또는 귀가조치 후 출석조사(전단지 회수), 인적사항 및 전단지는 수사부서 인계
 - 임의동행에 불응하고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광고물 등 무단배포, 벌금 5만원) 혐의로 현행법 체포 가능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저지른 현행범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거절할 경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주거불명인자로 취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인정 가능(92고합1824)

- 형소법 제214조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 체포 가능

※ 가급적 인적사항 확인 및 전단지 회수를 위한 임의동행을 활용하고, 불가한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처벌법규

연번	처벌 죄명	적용여부 검토	비고
1	건조물 침입 (刑法 §319①)	건물주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건물 옥상에서 침입하였으므로 건조물 침입죄 성립	건물 옥상에 올라가 살포한 경우
2	명예훼손 (刑法 §307②)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는 경우 처벌 가능(반의사불벌죄)	전단지 살포 및 그래피티
3	모욕 (刑法 §311)	정부에 대한 모욕은 성립하기 어려우나, 전단지·그래피티 내용상 VIP에 대한 모욕은 성립 가능(친고죄)	전단지 살포 및 그래피티
4	재물손괴 (刑法 §366)	타인의 건물·물건 등에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낙서한 행위는 재물손괴 성립	그래피티
5	경범죄처벌법 (§3①, 9호)	전단지를 무단 배포하는 행위는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에게 해당하여 범죄 성립	전단지 살포 및 그래피티

2.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국가 권력 개입 사건

1) 사건 성격

-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을 좌파 집단이라 규정하고 좌파 집단 청산을 위해 한예종의 사업, 인사 등에 국가 권력이 개입한 사건

2) 한예종에 대한 정권의 인식

- 2008. 8. 27.경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청산 실시’ 적시함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일부>

<p>○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은 소리없이 지속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기관의 내부에는 아직 많은 수의 좌파실무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청산 필요 -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진두지휘하고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청산작업을 지속 감시·독려 <p>※ 급진적인 인적청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불필요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좌파 고사 유도</p>
<p>II. 좌파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p> <p>가. 우파와 좌파간 행태 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를 대표하는 예종은 규모확장, 정부지원금 확보, 국회의원 진출 등 외형 및 자리다툼에 치중하여 근심점 기능 상실 - 외형상 회원수 120만명으로 좌파 민예총(10만명)을 압도하나 회원공감대 및 정체성 부족으로 지리멸렬한 상황 - 지난해 말 대안으로 미래문화포럼(대표: [redacted])이 결성되었으나 역시 주목할 만한 활동은 미약한 실정

- 문화미래포럼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현안과 과제」 문건에서 ‘한예종이 문화예술 분야의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이므로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3) 한예종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 사례

(1) 2009년 한예종 종합감사

- 이명박 정권은 당시 정권에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한예종 교수인 황지우, 심광현 등을 ‘좌편향적인 노(盧) 정권 코드인사’, 한예종을 ‘문화예술계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이라고 규정함

- 한예종의 좌편향 인물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고 한예종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2009년 한예종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함
- 당시 청와대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 노무현 정권 인사에게 사표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부처 감사관실을 동원하라고 기재함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일부 인용)

<08. 8. 20 공직윤리지원관>

□ 조직신설 목적

○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盧)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의 국정수행에 차질

□ 당면과제

○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제출 유도(9월, 공기업 임원 39명)

※ 필요시 각 부처 감사관실 동원

- 당시 황지우 한예종 총장은 한예종 종합감사가 “전형적인 표적감사”라고 비판하며 총장직 사퇴서를 제출함. 한예종은 황지우가 한예종 총장으로서의 임기만료 전 사임하였으므로 교수 등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황지우에 대한 교수직을 퇴직 처리함
 -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 등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고 판단함
- 당시 문체부는 한예종에게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최종 요구 조치 사항을 지시하였고 한예종은 심광현 교수를 정직 처리함
 -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10. 26. 심광현 교수의 정직 처분을 취소

(2) 한예종 U-AT 사업 중단

- 한예종 U-AT 사업은 유비쿼터스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크게 증가된 예술과 과학·기술의 증가된 접속 기회를 예술교육의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려는 기획임
- 당시 문체부는 2009년도 문체부 예산사업에서 U-AT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U-AT 사업 예산을 미반영함

- 당시 문체부가 U-AT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이유
 - ① ‘한예종이 문화예술분야의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 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인식
 - ② U-AT 사업을 추진한 황지우 한예종 총장, 심광현 한예종 교수, 진중권 교수 등을 청와대·국정원은 ‘좌파’ 라고 인식함
- (3) 한예종 일부 교수들에 대한 퇴출·보직 배제 시도
 - 국정원은 심광현 한예종 교수를 비롯한 한예종 교수들을 ‘좌성향’ 으로 판단하고, 연구실적 등이 부진한 이념편향적 교수 퇴출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제시함
 - 청와대는 국정원으로부터 ‘한예종 총장이 좌성향교수의 보직교수 임명에 유의하고 연구실적이 부진한 좌성향교수에 대하여는 퇴출유도가 필요’ 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문체부에 지시함
 - 당시 김희범 문체부 차관은 김봉렬 한예종 총장과 심광현 교수, 김소영 교수 등 소위 ‘좌성향’ 교수들의 퇴출을 논의하려 했으나 김봉렬 총장은 거부함
 - 문체부가 한예종에 심광현 영상이론과 교수에게 영상이론과 학과장 보직을 주지 말라고 지시하여 신규 교원 채용하여 학과장에 임명함

【문화관련 이념문제 보고서 요약】

○ 지난 정부이후 정부지원축소 및 스크린강화로 좌성향 세력이 많이 위축되기는 했으나 부분적으로 세 확산 기도가 감지됨

- 부산국제영화제에 ‘구럼비- 바람이 분다’ 영화 상영예정(제주 미항 건설 반대)

- 좌파영화계인 CINECOOP(발기인 : 정지영, 문성근) 및 영화전략기획센터, 영화영상발전포럼 등을 설립하여 활동

○ 민족극운동협의회(이사장:최재우), 전국민족극한마당(8.2~4/제주) 활동

- 좌성향인사들이 국악원장/국립극장/영진위원장 등 기관장에 진출 모색(영진위 김인수사무국장, 문예위 양효석 문화나눔본부장 등 주도)

- 느티나무도서관재단(박영숙관장)=> 진림동 단곡주민도서관 등 작은도서관에 자금지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국립단체는 펀더링을 위한 공모제 확대 및 심사기준 강화 필요

한예종 총장이 좌성향교수의 보직교수 임명에 유의하고/ 연구실적이 부진한 좌성향교수에 대하여는 퇴출유도가 필요

최준호

보안 325..

(4) 2014년 서울자유시민대학 강좌 취소

- 국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평생교육과장)에게 2014년 서울자유시민대학 사업에 한예종의 진보적 교수들과 인사들이 참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김희범 前 문체부 차관을 통해 2014년 예술과 인문학 강좌를 취소하도록 김봉렬 한예종 총장을 압박함
- 한예종은 개강일 3일 전 서울시장(평생교육과장)에게 ‘한예종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중 강좌운영이 어려워져 운영시기를 연기할 것’을 급하게 협조 요청하여 2014년 예술과 인문학 강좌를 취소함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중 한예종 관련 인사들>

48	문학	황지우	06.6 한예종 총장	B
85	연극	박근형	한예종 전임교원	B
124	음악	임진택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겸임교수	B
190	영화	심광현	한예종 영상원 교수	A
241	기타	김종원	한예종 무용원 교수	B
244	기타	이동연	한예종 교수	B
245	기타	이승엽	한예종 교수	B
246	기타	전규찬	한예종 영상원 교수	B

4) 사건의 특징 : 교육의 자주성 · 대학의 자율성 침해

- 이 사건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사건으로 한예종의 의사결정과정(의사결정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3. 2015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위촉 예정자 김규호의 위촉 취소 사건

1) 사건 성격

-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이하 문화재위원) 위촉에서 탈락시킨 사건
- 이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정부위원회 위원에서 탈락시킨 사건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학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하나임

2) 청와대의 문화재위원 인사 검증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과정>

시 기	내용	비 고
1. 12.~1. 30.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추천 접수	<input type="checkbox"/> 각 학회, 대학, 관계 기관 등에서 추천
4.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을 선별하여 청와대에 인사 검증 요청	
4. 27.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에게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일정(2015. 5. 4.) 통보	<input type="checkbox"/> 전화 통화와 이메일로 전체회의 일정 통보 <input type="checkbox"/> 이 전체 회의에서 문화재위원 위촉장 수여 예정
4.말	청와대,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 중 11명을 문화재위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	<input type="checkbox"/> 청와대 인사 담당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담당자에게 유선을 지시
4.말 ~ 5.초	문화재청, 청와대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11명에게 문화재위원회 회의 참석 불가 통보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11명에게 유선으로 통보
5. 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진행하여 68명에게 문화재위원 위촉장 수여	<input type="checkbox"/>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렸으며 위촉된 68명의 문화재위원 중 56명 참석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담당자에 따르면, 문화재청에서 선별한 2015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중 청와대에서 11명을 위촉에서 제외하라고 지시
- 이 11명중 8명은 정권을 비판하는 시국선언 참여자,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지지자들임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탈락한 2015년 문화재위원 추천자 신원>

연번	성명	현직	비고
1	전봉희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input type="checkbox"/> 2008. 3. 25.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 모임 참여 <input type="checkbox"/> 2014. 5. 30. 세월호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 204명 에 참여
2	정병삼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input type="checkbox"/> 2009. 6. 22.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숙명여대 교수 일동에 참여
3	강형태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재보존관리학과 객원교수	
4	김규호	경주대 관광레저학과 교수	<input type="checkbox"/> 2012.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경북도당 선대위 경주시위원장
5	홍성덕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input type="checkbox"/> 블랙리스트 등재(문예6-11_리스트-'16.9.27현재) <input type="checkbox"/> 2000. 12. 10. 故김대중 前대통령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축하공연. <input type="checkbox"/> 2008. 12. 18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
6	정강환	배재대 관광축제호텔대학원장	
7	하문식	세종대 역사학과 교수	<input type="checkbox"/> 2004.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부위원장
8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input type="checkbox"/>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input type="checkbox"/> 2013. 7. 17.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 128명 에 참여
9	최기영	서강대 사학과 교수	<input type="checkbox"/> 2009. 6. 7.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서강대학교 교수 45인 일동에 참여 <input type="checkbox"/> 2013. 9. 12.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선언 서강대 교수 28명에 참여
10	윤범모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input type="checkbox"/> 2014. 홍성담 화백의 그림 '세월오월'의 광주비엔날레 전시 주도
11	김두규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input type="checkbox"/> 2009. 6. 1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10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지역교수 연대시국성명에 참여

3) 박근혜 정부의 좌편향 인사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

- 박근혜 정부는 좌편향 인사들을 정부위원회에서 해촉하기 위해 463개 정부위원회를 전수 조사하여 이중 66개 위원회 70명을 선별함. 이는 2014년 5월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문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에 적시함
- 이 문서에 첨부된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에는 위 70명의 특이사항에 2012 대선 문재인 후보 지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선언과 단체 참가 여부가 주요 선별 기준으로 기재됨.
 - 이들 70명을 임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전원 교체할 예정으로 적시

○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정부위원회 위원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학계 블랙리스트로 활용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일부>

□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

- 각 부처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에 대한 진수조사를 실시, 총 70명의 좌편향인사가 66개 위원회에서 활동(중복 제외)중임을 확인

* 대통령(16개), 국무총리(64개) 소속위원회를 제외한 중앙부처 위원회 전체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위원회 특성 상,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단계별로 해촉할 예정 (첨부#3)

- 비서관실별로 해당부처 핵심인사(차관, 기획조정실장 등)를 통해 통보

<정부위원회 위원 확인 결과(2014.5)>

구분	계	기재	미래	교육	통일	법무	안행	문화	농림	산통
위원(명) (중복활동자 제외한 총 70명)	79	3	1	3	1	1	7	5	8	3
	(중복활동자 제외한 총 70명)	복지	환경	노동	여성	국토	해양	법제처	보훈처	삭처
		7	9	12	2	11	1	1	2	2

- 좌편향인사가 다수 포진한 정부위원회는 회의개최를 지양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개최횟수가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 검토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 일부>

첨부 3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

※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전원 교체할 예정 : 66개 위원회 70명(중복 9건 포함)

번호	위원 (직함)	정부위원회		특이사항
		부처	위원회	
1	박능후 (경기대 교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지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교수 1000명 • 담쟁이포럼 발기인
2	박병현 (부산대 교수)		복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교수 1000명
3	윤순진* (서울대 교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산쇠고기 협정파기 촉구선언 • 서울대교수 124명 MB정부 비판 시국선언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시국선언 • 서울대교수 204명 세월호 진상규명 시국선언
4	조만형 (한남대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쟁이포럼 발기인 •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교수 1000명
			국가핵융합위원회	
5	전형수 (대구대 교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교수 1000명 • 전교조를 지지하고 사수하는 전국교수연구자모임 • 미국산쇠고기 협정파기 촉구선언

IV.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 권고

- 1**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권고
- 2**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문화행정 개선 권고
-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기관 개선 권고 : 6개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4**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후속 조치 권고

1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권고

□ 헌법 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문화기본권 확대

- 현행 헌법 제9조 개정 : 문화의 자율성, 다양성, 지속가능성, 문화접근권(문화향유권) 보장 조항 신설

현행규정	개정안	비 고
<p><항 신설></p> <p>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00조 ①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p> <p>②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문화의 창달과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p>	<p>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다음에 조 신설</p>

- 현행 헌법 제22조 개정 : 학문과 예술의 자유 관련 권리보장의 확대, 예술인의 자조적 활동을 위한 헌법적 토대 마련

현행규정	개정안	비 고
<p>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p> <p>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p> <p><신설></p>	<p>제22조 ①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학문과 과학, 예술의 결과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p> <p>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p> <p>③국가는 문화예술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자조조직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가의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은 법률로써 보장한다</p>	<p>학술·예술의 결과 향유권 규정</p> <p>국가의 지원·보장의무</p> <p>자조조직 지원·육성의무</p>

- 현행 헌법 제21조 개정 : 표현의 자유 명문화

현행규정	개정안	비 고
<p>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p>	<p>제25조①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p>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언론매체의 자유와 다원성·다양성은 존중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 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 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 현행 헌법 제32조 개정 : 문화예술인의 노동자성 보장

현행규정	개정안	비 고
제32조 ① 모든 <u>국민은 근로의</u>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	제32조 ① 모든 <u>사람은 일할</u>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	근로 --> 일
제33조 ① <u>근로자는 근로조건</u> 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33조 ① <u>모든 사람은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u> 가진다.	

○ 현행 헌법 제19조 개정 : 정치적 이유에 의한 차별 및 배제 금지 조항 신설

현행규정	개정안	비 고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항 신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u>양심, 사상, 신념, 의견, 종교, 신앙의 자유를</u>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u>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법에 의해 부여되는 자격이나 능력, 권리가 제한되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한다.</u> 다만 <u>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u>	정치적 이유에 의한 배제 금지

□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법제도 정비를 통해 문화예술 관련 표현의 자유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 및 보상 역시 법제도화 추진
 - 「문화기본법」 개정 또는 (가칭)「예술가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법제도화 추진

- 「문화기본법」 개정 및 (가칭)「예술가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
 - 목적 :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 권리 보호
 - 예술가의 권리 : 표현의 자유와 문화다양성 등 문화기본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 예술을 사회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 예술 활동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 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의무, 계획과 정책 그리고 평가 등의 수립과 집행, 차별과 배제 금지, 문화예술 지원 기관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외
 - 문화예술 지원 기관의 책무 :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는 원칙(팔길이 원칙) 강화,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협치에 기초한 기관 운영 외
 - (가칭)〈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 보장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
 -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예술가권리보호책임자 제도 도입 : ‘(가칭)예술가권리보호관’ 을 개방직으로 임명, 예술가권리보호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가칭)〈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 보장 위원회〉 지원 업무 총괄 외
 - 예술가 권리 침해행위 관련 내용 : 실태조사, 신고 및 직권 조사,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시정 조치 외
 -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 : 벌칙, 과태료 외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상 기관에서 문화예술 지원 기관 제외 추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 분야 협의체(협치형) 위원회에 대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예외 조치 검토 및 추진
 - 해당 법률은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임원 임면을 하도록 하여 “민관협력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 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기획재정부가 평가하도록 하여 문화예술 지원 기관의 설립 목적 및 운영과는 동떨어져 있다” 는 비판을 받아 왔음
 - 문화예술분야 협치형 위원회들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고려하고, 블랙리스트 범죄의 작동 방식 등을 판단했을 때,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지속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높음

-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문화예술 지원 기관의 자율성, 독립성, 특수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상 기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예외 기관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

2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문화행정 개선 권고

□ 국정운영 차원의 문화정책 정체성 확립

-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문화국가의 원칙 확립 및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 수립
 -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등 주요 권력기관의 인식 제고 필요
 - 특정 부처나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운영 철학으로서 문화적 가치 확산과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태도 재정립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가 권력의 성찰과 대안을 담은 (가칭)〈문화국가의 원칙 확립 및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정책과 국정운영 차원에서 수립

-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가칭)〈문화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언〉
 -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사회적 성찰 및 재발방지,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치와 방향, 문화적 가치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담은 선언 발표

- 국가 문화정책의 정상화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정부 내) 역할 재조정 및 정체성 확립
 -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개별 문화사업 관리 및 통제”에서 “국가 문화정책 기획조정 및 협치”로 정체성 확립
 -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의해 일상화되어 있는 문화정책/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 개혁. 이를 위해 문화 관련 국정운영 의제, 부처 간 협력 사업 등에 있어 문화정책 주무부처의 국정 참여와 권한 확대
 -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역할을 “국가단위 문화정책 기획조정, 국정운영의 문화적 가치 확산, 국가 단위 문화사업 관련 부처 간 협력, 전국 단위 지역문화 연계, 문화 관련 국제 교류, 문화 관련 R&D 등”으로 확장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구조화

□ 국정 홍보기능 혁신 및 조직 분리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에서 국정 홍보(공보)기능을 분리(또는 전면 혁신)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협치 기반 마련 중심으로 국정홍보 정책(사업) 자체의 혁신 추진
 - 국정 홍보 정책(사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국가 기관의 일방적인 홍보구조를 극복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협치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혁신해야 함
 - 표현의 자유, 문화다양성 등을 핵심 가치로 운영해야 하는 문화정책 주무부처 내에 현재와 같은 국정 홍보 조직이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정부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정 홍보기능을 조직구조 상에서 분리 (또는 전면 혁신)
 -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문화적 가치와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체성 확립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개혁을 통한 소속기관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

- 문화체육관광부 스스로 소속기관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정구조 혁신 및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
 -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확인된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사이의 위계적이고 비효율적인 직렬 구조 전면 개혁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처들이 소속기관을 통해서 단위별 사업을 지시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위계적인 행정 구조와 문화를 개혁하여 “소속기관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부처 간, 국가 간 문화정책 기획조정 능력 활성화” 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구조 모색
 - 예산편성에 따른 지원 사업의 집행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주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은 장르별 특성에 따른 제도 개선 요구(예를 들어 세제, 재정확대, 금융, 법제도 체계 정비 등)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을 예술 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른 ‘기능+장르’ 체계로 개편
 - 현행 예술 장르별 담당과(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 등)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사업 집행은 소속기관 등에 일임하고 제도개선 요구, 부처 간 협력 등으로 역할 및 업무 재조정”

- 중장기적으로는 “(가칭)〈국가예술위원회〉 설립 로드맵에 따라 조직 구조 개편”
(기초예술과 등으로 통합 후 개별 장르 담당과의 경우 폐지 등 검토)
 - 현장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공립 예술기관의 기능·역할을 조정하고, 자율책임 운영 체계 확립
- 중장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정책 분야를 (가칭)〈국가예술위원회〉 등의 전문기관으로 독립하는 조직 개편 검토 및 추진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독립성 강화
 -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국가 단위 예술행정과 지원체계의 자율성·독립성을 법제도화 : (가칭)〈국가예술위원회〉 설립(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요 예술지원기관 전문단체)
 - (가칭)〈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위한 이행 전략(과정) 속에서 현행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의 예술지원체계 전면 혁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주요 예술 기관” 으로 (가칭)〈국가예술위원회〉 설립
 -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장기 정책 수립과 법·제도 개선에 집중하면서 문화행정 혁신 실행
- 성과협약 체결 및 목표달성에 관한 평가·환류를 통해 가치 지향적인 성과 체계 마련
- 예술 지원의 성과를 무리하게 계량화하지 않고, 질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예술 분야 평가지표 개발 등 별도의 성과 평가체계 구축
- (가칭)〈문화예술 지원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 정부 소속의 주요 문화예술 지원 기관의 상설적인 협의 기능 필요
 - 지역문화재단과 논의 테이블 마련 및 활성화

□ 문화행정 협치 기반 조성 및 제도화

-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구조 개혁과 협치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행
 - 현재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국가 문화행정을 개혁하고, “자율, 분권, 협치”에 기반 한 문화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협치 정책의 수립과 제도화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치 행정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하여 실행

- 문화행정 관련 “참여와 협치의 원칙”, “정보공개 책임” 등을 「문화기본법」에 명시
 -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문화행정의 의무와 책임으로서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협치 보장”을 「문화기본법」에 개정하여 명시
 - 협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 책임 의무화 : 청구행위 이전에 사전 공개 원칙 명시

- 국가 중장기 재정 수립, 정부 기관 평가 등에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보장
 - 국가 단위 정책 수립 과정에 문화적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의무화

- 참여와 협치에 기반 한 문화행정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 평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 : 시민추천시스템 도입, 평가위원 선정 과정 공개 외
 - 평가에 있어 국민 참여 및 협치 제도의 실질적인 도입 : 국민평가단 운영 및 실질적 배점 부여 외
 - 문화행정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혁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선 권고

□ 예술 지원정책의 인식 전환과 원칙 수립

- “국가 주도의 진흥” 에서 “예술가의 협치와 지원” 으로
 - 국가 권력 주도의 ‘진흥 패러다임’ 에서 벗어나 ‘자율, 분권, 협치’ 에 기반한 예술 지원정책 수립

- “계량화된 기능” 에서 “내재화된 가치” 로
 -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예술 이외 가치의 환원성이 아닌, 예술 그 자체의 근원적 가치에 있음

- 새로운 예술지원체계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목표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 지원체계의 자율성·독립성 강화,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의 개방성·책임성 확보
 - 방향 : 기본적으로는 “문화, 예술, 지역” 의 세 가지 범주로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구성
 -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국가 단위 예술행정과 지원체계의 자율성·독립성을 법 제도화 : (가칭)〈국가예술위원회〉 설립(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요 예술지원기관 전문단체)
 - (가칭)〈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위한 이행 전략(과정) 속에서 현행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심의 예술지원체계 전면 혁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주요예술기관” 으로 (가칭)〈국가예술위원회〉 설립
 -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장기 정책 수립과 법·제도 개선에 집중하면서 문화행정 혁신 실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운영 혁신

- 독립적 예술 지원 조직으로서 위상과 역할 재정립
 - 예술 지원 기관·전문 기관으로 기관명 변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영문명 동일)
 - 예술 지원 기관·전문 기관으로 성격 강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제외 추진
 -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과 현장성 강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호선제를 도입하고(법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 사이의 수평적인 협력 관계 구조를 새롭게 제도화, 장르별·기능별 균형적이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위원회 구성,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
- 조직 운영 투명성 강화
 -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통해 위원회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 심의제도 개방성 및 전문성 강화 : ‘공개심의제도’ 시범운영, ‘심의자료 심층 검토제’ 시범도입, 지원 외압 신고제 및 옴브즈만 제도 활성화 등
- 재정 구조의 독립성과 안정성 강화
 - 문예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및 재원 운용 협치 강화
 - 복권기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안정적 전입을 위한 기관 협의 추진
 - 기금운용심의회 별도 설치 및 심의회 구성 시 예술인 참여 제도화
 - 예술지원사업의 재원으로 문화 분야 기금 통합 운용 추진
- 사업 운영의 개방성과 전문성 확보
 -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순 수탁형 사업을 정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의 이원화를 지양하고, 창작지원을 우선시하되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사업 체계·구조를 재설계
 - 예술 현장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 개편 및 사업 관련 공청회·토론회 정례화를 통한 현장 소통 강화
 - 다년도 지원, 단체지원, 예술인 경력단계별 지원 강화 외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 및 분석에 근거한 사업 구조 개편 및 혁신 추진
- 예술인·시민 등으로 구성된 사업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

- 사무처 혁신을 통한 위원회 개방성 및 전문성 강화
 - 사무처의 역할 재정립 : 위원회에 대한 행정 관리 부처에서 벗어나 위원회 협치 전반에 대한 지원과 연계 조직으로 역할 재정립
 - 사무처 직위 개방 : 현장 참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처 주요 직위(사무처장 외)를 예술 현장에 개방

- 소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위원회의 현장성 및 민주주의 강화
 - 협치형 플랫폼으로서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 다양한 장르별·기능별 현장 예술인 중심으로 구성하고 권한을 강화, 소위원회가 실질적인 상설 정책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현장 참여 확대
 - 장르, 세대, 성 등 현장 대의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위원 구성과 위원 선임 절차 운용
 - 소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 소위원회 지원과 협력 중심으로 사무처 구조와 기능 개편
 - 참여형 사업 운영 : 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 단계별 여러 형태의 공청회·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다양한 예술가의 협치 보장

□ (가칭)〈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통한 예술정책의 자율성·전문성 강화

○ (가칭)〈국가예술위원회〉 설립 검토 및 추진

- (가칭)〈국가예술위원회〉를 통해 예술정책기관의 위상 격상 및 역할 강화
- 예술정책, 예술행정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 및 행정 구조 수립 :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에서 독립 위원회로 예술정책 및 예술지원사업의 행정 권한 이양
- 국가권력 간섭 배제, 불합리한 요구에 대한 거부권 확보 등 예술정책, 예술행정의 자율성 확보
- 예술의 가치에 중심을 둔 정책 및 행정 구조 확보 : “국가주의”가 아닌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 *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사례 참조
- (가칭)〈국가예술위원회 설립 추진단〉 구성하여 세부 추진과제 검토 및 단계별 사업 추진

○ (가칭)〈국가예술위원회〉 설립과 연계하여 주요 예술지원기관, 국립예술단체 등을 유기적으로 이관하여 운영

- 중장기적으로 (가칭)〈국가예술위원회〉로 다음 예술지원기관, 국립예술단체 이관하여 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예술지원기관
- 국립극장, 국립극단 등 국립예술단체

○ 법적 지위와 위상을 확보한 실질적인 합의제 위원회 실현

- 예술 관련 법 재정비를 통한 (가칭)〈국가예술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 검토안 : 「국가예술위원회 설치법」 제정, 「문화예술진흥법」 전면 개정을 통한 설치 외
 - * 현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
- 사회적 합의에 바탕 한 예술 현장 중심의 합의제 위원회

○ 재정구조의 독립성 및 안정성 확보

- 문예진흥기금 고갈에 따른 불안정한 재원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
- 검토안 : 문화 분야 기금 통합 운영을 통해 확보, 예술 가치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따른 국고 배정, 기금 통합 운영 + 국고 지원

- “자율, 협치, 분권” 의 가치에 기반 한 책임 있는 운영 체제 구축
 - 국가예술위원회 위원을 16~20명 규모로 구성
 - 실질적인 현장 예술인의 참여 보장, 위원 구성에 있어 다양성(성별, 연령, 지역, 소수자 등)의 가치 반영 등
 - 문화예술계만이 아니라 재정, 법률 등의 다양한 사회적 전문가 참여
 -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운영의 민주주의 확보 : 다층적 선정방식 도입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현장 예술인 중심의 위원 구성, 민관 협치와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플랫폼 기능
 - 정책 결정과 심의 과정 전체 기록 및 공개(열람) 원칙
 - 국가예술정책의 최종 협의체(예산 분배 등)이자 최종 결정 기구
 - ‘위원회-소위원회-예술현장-시민사회’ 의 긴밀성 확보 : 국가예술정책의 독립된 최고 의결 기구 및 집행기구로서 정책 입안 및 평가에서 예술현장과 시민사회에 열린 구조 확보

4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선 권고

□ (가칭)〈예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예술인복지재단 정체성 확립

- 예술인복지 정책의 통합적 수립과 관리를 위한 (가칭)예술인복지위원회 설치
 - (가칭)〈예술인복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위원회로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민간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정부의 예술인복지 정책 중장기 계획과 운영, 정부 부처 및 다양한 관련 주체간의 정책적 조율 등을 수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 (가칭)〈예술인복지위원회〉는 예술노동에 대한 정의,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범위와 기준, 예술인복지 실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예술현장의 불공정 문제 대응에 대한 조율 등 주요 예술인복지 의제에 대한 포괄적 논의와 조율 역할
-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예술인복지 정책 수립
 - 단위 사업화 되어 있는 예술인복지 정책을 통합적인 국가 정책으로 재설계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
 - 이를 바탕으로 주요 문화예술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을 포괄하는 지원체계와 구조 설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위상과 역할, 중장기적 비전 등을 새롭게 설정하고, 필요할 경우 이에 기반을 둔 예술인복지법의 정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기관 구조 개편 등을 진행

□ 예술인의 참여에 기반을 둔 개방적 구조 마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회 구조 개혁 및 활성화
 - 개방적인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진 공개 추천과 선정을 진행하고, 상임이사 선임 방식을 개선하여 현장예술인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
 - 이사진 구성 시 당연직 비중을 낮추고, 장르와 정책의제를 고려한 이사진 구성
 - 개별 이사가 참여하는 의제별 소위원회 구성

- 민간 전문가,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확대 도입
 - 임기제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여 예술현장과 밀착한 새로운 기관운영의 구조 마련
 - (가칭)정책기획팀 팀장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고,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조직 확장과 업무에 따라 개방형 직위를 확대 적용
 - 예술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직무(예. 예술인복지지원 등에 대한 상담, 경력관리, 불공정 신고 대응 등)에 예술인을 상담 전담 비정규 인력으로 고용하여 해당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술인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

□ 정책역량 강화와 사업구조 및 운영방식 개편

- 정책역량 강화와 통합적 사업관리를 위한 조직구조 개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개발과 사업설계, 의제 발굴, 예술현장에 기반을 둔 평가체계 마련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상임이사 직속으로 <(가칭)정책기획팀> 신설
- 예술인의 삶과 사회적 가치 보고서 제작
 - 현재의 파견예술인사업의 결과보고 형태가 아닌 기본적인 통계/조사에 기초한 정책보고서 형태로 제작
- 예술인복지 정책 사업에 대한 공개 제안 제도 도입
 - 예술현장과 예술인의 삶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제안 제도> 도입
 - 기존의 단순 청원 형태가 아닌 정책을 ‘설계-집행-평가’ 하는 과정 자체를 현장 예술인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구조로 설계
- 투명하고 개방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 현황과 사업, 지원, 조직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담 인력 확보와 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요
 - 지원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심사위원 풀 제(pool system)를 도입하고 별도의 심사시스템 관리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 예술 현장에 기반을 둔 협치 구조 확대

- 예술인복지정책 평가회 개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책, 사업, 운영 등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정기적인 평가회 개최 필요
 - 평가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예술현장에 기반을 둔 평가와 환류 구조 마련
 -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복지 관련 민관 협치 체계 구축

- 지역 기반의 예술인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가칭)〈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
 - 현행 「예술인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는 예술인복지와 관련한 제도 설계와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예술인 지원과 실행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이 실행하는 방식으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역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예술인복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가칭)〈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
 - 예술활동증명, 창작준비금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지역 이관 및 실행체계 구축, 관련 기관 및 부처 간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
 - 단순히 예산을 지역으로 내리는 방식이 아닌 사업의 운영 전반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여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성

- 협치 주체 발굴과 강화를 위한 민간 지원 확대
 - 다양한 민간 주체 발굴과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마련하여 예술인복지 협치 구조를 확대하고 강화
 -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현장 지원사업의 경우 민간단체나 주체가 직접 실행하는 방식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유도 : 프랑스의 〈예술가의 집〉 사례 참조

5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개선 권고

□ 영화진흥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 위원장 호선제 복원
 - 영화인들의 민의와 합의로 운영되는 자율적 행정 자치기구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위원장 호선제 복원
 - 형식적인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호선제가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원 선임에 대한 혁신 필요
- 위원 선임 절차 혁신
 -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2배수 위원 추천권 보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종임명(인사검증시스템의 필요성은 인정)
 - 단 현재 법률상 존재하는 위원회 구성 모호성(전문성과 경험, 성(性)과 연령의 균형)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추천권과 임명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
 -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의제(문화다양성/분권/공정환경 등)와 분야(영상산업/영상문화/노동복지 등) 등으로 구체화된 구성 요건을 갖추고, 현장의 추천을 의무화

□ 영화 ‘진흥’ 에서 영화 ‘가치확산’ 으로 정책혁신

- ‘영화진흥위원회’ 에서 ‘영화위원회’ 로 전환
 - ‘진흥’ (일으켜 세움)이 목표가 되고, 계량화된 수치로 행정의 결과물을 판단하는 시대는 지남
 - 인위적 ‘진흥’ 이라는 목표는 시장에서 행정역할에 대한 과신이며, 산업적 성과에 정책 목표를 두는 것임
 - 영화 분야 비전을 구축하고 영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기구로 위상 재정립

- 자율성, 다양성, 창조성에 기반을 둔 가치 중심 지원
 - 경제적 결과와 효율성만이 강조되는 산업 중심 지원 정책 탈피
 - 익숙함이 아니라 ‘다름’에 주목하고, 산업에서의 취약성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산업이 시도하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와 영역에 대한 지원

- 이해의 조정 및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역량 강화
 - 이해관계 중심의 정책 구조를 극복하고 가치 지향성,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정책 구조 확립
 - 현장의 문제제기에 제도적 권한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역량 강화
 -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역량 강화
 - * 새로운 영화진흥위원회 활동 이후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의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관련 기존 권고 내용이 이미 반영되었으며, 이에 본 권고에서는 세부 내용을 생략함

- 중장기 의제(agenda)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조직 개편(예. 영상문화, 영상산업, 노동복지)

□ 영화 행정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위한 실질적 전환

- 개방형 직위제 실시
 - 센터 및 직영사업 등의 주요직에 현장 영화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제 도입
 - 공정환경조성센터, 정책센터 등 우선 실시
 - ※ 영화진흥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와 기 진행된 논의를 통해 공정 환경, 정책과 관련된 센터의 경우 개방형 공모로 전환하기로 결정함

- 소위원회 확대
 - 위원회 주요 업무에 연관 소위원회 배치
 - 자발적 참여 풀(pool) 접수 및 전문성에 따른 위원선정
 - 모든 소위원회는 호선제 방식으로 위원장 선출

○ 영화행정의 민주화

- ‘위원회-사무국-소위원회-개방형직위제’ 등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다층적 구조와 논의 프로세스 확립
- 정책실명제를 통해 책임성 보완
- 참여예산제를 통한 현장의견 반영 보완
-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각 주체 참여 및 심의
- 중장기 발전계획안 공청회 의무화
- 사업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 영화진흥위원회는 심사방식 개선에 관한 영화계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블랙리스트 실행과정의 문제점 개선(심사위원 풀(pool) 제도 개선, 선정의 투명성 개선 등)이 기 실시되고 있어 본 권고에서는 별도 기술하지 않음

□ 위원회 권한 및 책임 강화

○ 모태펀드 직접 관리

- 영화발전기금이 상당부분 출자되고 있는 영상전문투자조합(일명 모태펀드) 결성 사업을 중소기업청이 운영
- 관리주체의 책임성이 불분명 함
- 외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못함
- 수익성 위주의 배치로 다양성의 확보 방안 불투명
- 영화진흥위원회 직접 관리 및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보완

○ 예산 실링제 도입으로 기금 운영 자율성 확보

- 기금운영의 자율성이 획득되지 않으면 권한 없는 책임만 따르게 됨
- 현장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시의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반복하게 됨
- 정량적 평가위주의 평가지표로는 가치적인 측면의 사업추진이 어려움
- 실링제 도입으로 부분 자율편성권을 주되 예산 집행의 적절성은 추후에 평가
- 점진적으로 실링제 확대

○ 불공정 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조사권) 확보

- 자발적인 조사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의 불공정 행위 등의 파악에 한계 존재함
-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는 제도개선도 이루어질 수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및 판결을 담당하더라도, 조사 권한은 위원회로 이관

6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선 권고

□ 기관 위상 및 이사회 권한 정립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위상 재정립
 - 블랙리스트 사태를 극복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위상 재정립과 자율적 권한 보장이 우선 과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수행 단위가 아니라 국가의 “출판문화 관련 국가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민관 협치 및 지원기관”으로 위상 확립

- 정부의 출판문화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민관 협치 체계 활성화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계 사이에는 전자출판, 유통, 국제교류, 독서진흥 등 분야별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단체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분야별·사안별 민관협의체 운영의 확대 및 상설화가 요구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민관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 현장을 잇는 출판문화 관련 협치형 지원기관으로서의 공공성, 개방성, 전문성 등을 확보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임원 구성 및 이사회 권한 재정립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관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명시하여 임원 구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관에 임원의 자격 및 이사회 구성 명시하여 임원 구성 과정의 개방성, 전문성 등 확보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의 속기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이사회 외에도 주요 회의들에 대한 회의록 공개 추진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 개최를 정상화, 정례화 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등 강화
- ※ 2018년 4월 현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등의 사전 권고 내용에 따라 정관 일부 개정

□ 출판문화 지원기관으로서의 운영 혁신 및 전문성 강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개방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방형 직위 제도 도입 및 활성화
 - 인적 쇄신, 기관 전문성 제고, 현장 친화적 사업 집행을 위한 개방형 직위 제도의 도입 및 확대 : 기획재정부의 개방형 직위 5% 권고사항 시행
 - 사무처장에 대한 개방형 직위 제도 적용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가칭)〈출판문화연구센터〉 설립
 - 출판문화와 관련된 정책, 지원 사업, 제도개선 등을 중장기적이고 일상적으로 연구하고 기획할 수 있는 연구센터 설립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 실태조사,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실행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평가 관련 정보 공개
 -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배정, 사업성과와 결산을 출판계와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사업성과 관리시스템 및 대내외 평가시스템을 마련 및 공개
 - 공시 항목 중 현재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는 대내외 평가(국회지적사항,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지적사항,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감사 직무실적 평가결과, 이사회 회의록, 내부 감사결과) 내용을 공개 대상으로 전환
 - 정보공개에 책임 의무화 : 청구행위 이전에 사전 공개의 원칙 명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각종 지원 사업 선정결과 목록을 공표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송하여 검토 및 승인받는 과정 폐기
 - 업무 협의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이 과정으로 인해 블랙리스트 범죄 발생은 물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훼손됨
- 심사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심사위원의 확인 서명을 별지에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회의록 작성 후 본문에 확인 서명하는 방법으로 변경 : 심사위원회 회의록 임의 수정 및 허위 작성 방지
 -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심사결과를 심사위원에게 통보하는 것을 제도화. 또한 심사위원에게 심사표를 문서변형이 어려운 형태의 파일로 제출할 것을 요청

□ 표현의 자유 확대와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 표현의 자유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표현물에 대한 국가 기관의 검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심의기관이 등급서비스 중심으로 폐지 또는 전환되었음
-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유해매체 관련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어 왔음
- 이에 표현의 자유 확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기관 정체성 재정립 등을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추진

○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제도 보완, 법제도적 공백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추진체계 마련하여 검토 및 집행

-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와 제도보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가칭)〈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위한 TF〉 구성하여 추진
- 표현의 자유 확대 맥락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제도적 보완 추진

□ 사업구조 혁신 및 ‘세종도서 선정사업’ 민간위탁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정체성과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 전면 혁신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정체성, 위상, 사회적 역할 등을 고려한 사업 구조 재설계 필요.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제한적 역할과 한계 극복
- 출판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출판문화 정책의 핵심 과제는 ‘출판 수요 창출 및 출판유통 선진화’, ‘출판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미래산업으로서의 출판문화 생태계 형성’ 등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출판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유통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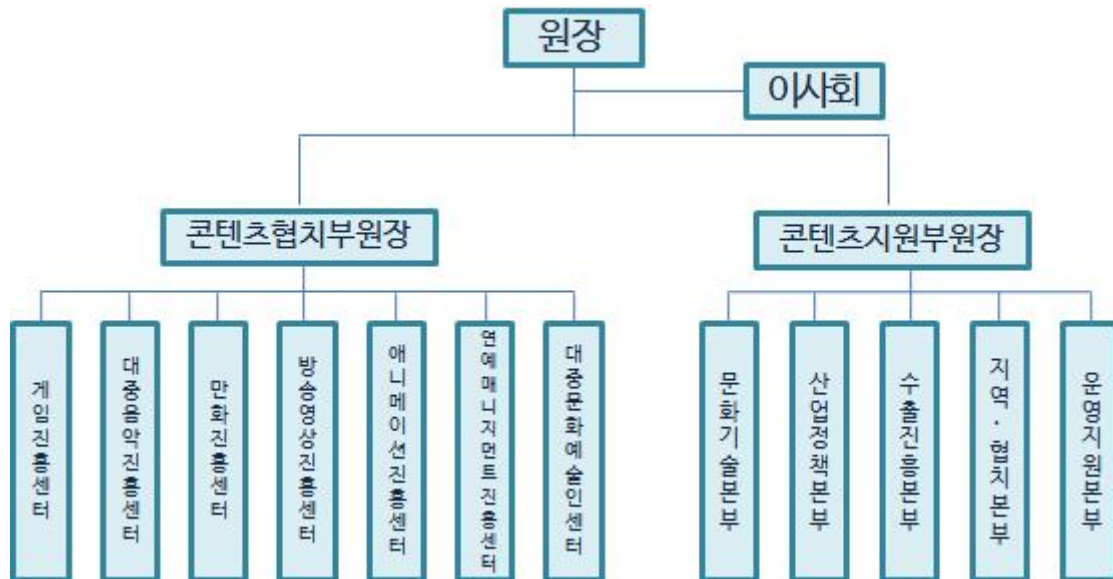
- (가칭)〈세종도서 선정사업 개선 TF〉 운영을 통해 민간위탁 과정 진행
 - 세종도서는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블랙리스트 실행의 대표적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수직적 관계에서 소속기관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도서의 우수성을 심의하는 사업을 국가 기관이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 문제 (행정력을 동원한 선택과 배제의 위험성 상시 존재)
 - ‘세종도서 선정사업’에 대한 정책 평가 및 개선 방안 필요 : 국가가 우수도서를 선정하여 보급하는 사업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위계적인 권력구조 및 이에 대한 신뢰 저하로 민간위탁 요구 높음
 -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세종도서 선정사업 개선 TF〉를 설치하고 사업 평가 및 개선안 마련, 민간위탁 등 진행

7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선 권고

□ 장르 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전문성 있는 문화산업 지원기관으로 재탄생

○ 장르별 개방형 센터 중심체제로 사업 조직 재편

- 사업 부서를 콘텐츠 장르 생태계 구성에 맞도록 “방송영상, 대중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연예매니지먼트, 대중문화예술인” 등 7개 지원센터로 재편
- 센터장은 개방직으로 공모하고, 센터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를 위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본부 체제의 병행을 통해 부분적 기능 강화

- 이슈별 기능통합이 필요한 부문은 <문화기술본부>, <산업정책본부>, <수출진흥본부>, <지역·협치본부>, <운영지원본부> 등 직할본부를 둬

○ 장르별 센터체제의 중·장기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체제의 유지 또는 해체 여부를 결정

- 현행 한국콘텐츠진흥원 체제를 해체한다면, 그 대안으로는 복수의 장르별 진흥원으로 분화, 합의제 진흥기구(문화산업진흥위원회)로의 전환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문화산업 지원체제의 기능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R&D, 수출지원 관련 본부를 독립적 진흥기구로 분리 추진하는 (안)을 검토

□ 심사평가제도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심사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성과 전문성의 균형적 개선을 도모
 - 심사위원 추천 과정의 행정적 투명성 제고 (예. 추천 상황 영상 기록 의무화 등)
 - 심사평가 과정의 모니터링, 리뷰,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옴부즈맨제도 도입
 - 심사위원 풀(pool)의 사전공개, 심사위원 사전공개제도 도입 (예. 일부 사업, 사전 공개 선택제 등)

- ‘선별지원에서 보편적 지원’,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으로 지원 사업 방식 다양화
 - 현재와 같이 심사를 통해 소수를 선별하여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심사 평가 제도에 가중되는 부담은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움
 - 직접 지원 중심(예. 제작 지원 등)에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 지원하는 간접 지원·인프라 지원(예. 인프라 구축, 용자마케팅·행사 지원 등) 방식으로 지원 사업 방식 전환
 - 지원 사업의 총량 중 일부를 쿼터 방식으로 집행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문화산업 종다양성을 확산하고, 창의성을 강화 (예. 인디 쿼터, 창의성 쿼터, 신사업 쿼터, 미래 쿼터 등을 일정 비율로 배정하는 방식)

□ 협치 기반의 정책 심의 및 지원체제 구축

- <문화산업전략위원회> 설립
 - <문화산업전략위원회>를 설립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합의제 행정기구 위상을 부여. 해당 위원회는 문화산업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을 포함한 문화산업 전반의 정책 심의를 담당하여, 문화행정의 비제도성 극복
 - 공동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민간전문가가 맡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국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장르별 민간단체 추천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
 - 장르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정책 심의를 진행하고, 위원회 규정에 따른 장르별 소위원회 위원 위촉 등으로 자율성 제고

- ‘협치 체제’ 구축으로 대의 구조 한계 극복
 - 장르별 센터체제와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기반의 대의 구조를 구축하고 협치 체제의 기반으로 활용
 - 산업 현장 및 민간 영역과의 실질적인 협치 운영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영 사업 중 가능한 부분은 민간 위탁을 추진 (예. 분야별 백서, 교육 프로그램, 인프라, 시설 등)

-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문화콘텐츠협치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민간의 협치 역량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 협치 행정은 새로운 방식의 민간 동원에 그칠 수 있음. 교육, 연대, 위탁 등 민간 협치 역량 제고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문화콘텐츠협치지원센터>를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설립
 - <문화콘텐츠협치지원센터>는 기업협회, 대중문화예술인 조합, 단체, 기구, 대학, 소비자 단체, 모임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센터 운영도 민간에 위탁

8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개선 권고

□ 기관 위상 재정립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직적인 사업 구조 개혁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역할 재정립 필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개입,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권한 등은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 취지와 미션, 가치 등에 부합하는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위상 재정립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의 수행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민간협치형 문화예술교육전문기관으로 위상 재정립
 - 국민, 문화예술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의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협치 플랫폼이자 지원기관으로 재설계하고 조직 구조 개편
 -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정책의 도구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 정상화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를 포함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제고를 위해 기관 간 역할 재정립
 - “지역 및 수요자 중심”, “기관별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 방향으로 역할 재정립
 - 지역중심으로 국민의 수요, 지역 내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 재정립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물적, 인적, 제도적 인프라 조성 지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원 사업 총괄, 연구 및 조사,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중심으로 전국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자율적 협치·전문 기관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계획 수립 · 예산 지원, 사업지침 및 사업 평가 · 법제도 정비 · 부처 간 협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사업 총괄 · 전국 단위 협력망 구축.운영 · 정책연구 및 조사, 통계 · 전문 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사 · 국제 협력 · 선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종합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 광역 내 시.군.구 단위 협력망 구축운영 · 지역 자원 및 수요 연구 및 조사 ·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운영 · 매개인력 양성.배치 및 재교육 ·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원 . 정보 관리 체계 구축 · 중앙 사업 및 자체 사업 운영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지원 예산 구조 개편을 통해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개편방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지원 예산에 연구개발, 연수 등 기반 조성 사업 및 선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편
- 현재 기관 운영비는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외에 경상사업비가 약 12% 수준에 불과함
- 연구개발 및 연수, 국제교류 사업 등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세부 사업별로 소액씩 분산 편성되어 개별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통제를 받는 구조임

[세부 개편내용]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분산 편성된 기반 조성 및 모델 개발 사업 예산을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예산으로 통합 편성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지원 사업 예산은 특수계층 사업 등 중앙 위탁사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단계별 분권화를 통해 지역별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편
- 보조금이 총 예산의 80%에 이르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재정구조 상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유지하되, “공공기관 예산 조기교부 및 소액단위 집행의 자율성 보장”, “기관운영 보조금의 경우 인건비, 경상운영비, 경상사업비 통합 지원”, “보조사업 심사제도 개선을 통한 보조사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구조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상임이사직 폐지 또는 상임감사제도로 변경

- 기관 자율성 침해, 공공기관 낙하산 재취업 의혹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임이사직 폐지
- 상임감사제도로 변경하여 운용할 경우 감사 자격요건 강화하여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 방지 제도화

□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협치 기반 마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사결정기구(이사회) 운영 정상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재정, 법률 등 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고,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내부감시 등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직 구조 자체에 협치 관련 상설조직 설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민주적인 운영, 다양한 주체의 참여 보장, 협치 기반 마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개혁 추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중요한 협치 대상인 예술강사(학교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예술지원기관(지역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등과의 상설적이고 능동적인 협치 기반 마련
 - 이와 관련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직 구조 자체에 협치 관련 상설조직 설치. 이를 통해 조직 운영의 개방성, 투명성, 전문성 등 강화
 - 현장 중심의 토론과 정책을 생산해내고 이를 통해 외압으로부터 견제함으로써 현장 의견에 힘을 보태고, 기관의 정책과 사업운영 방향성을 유지해야 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 구조 내에 참여예산제도 기반 지원 사업 구조 마련
 - 최근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 구조 내에 참여예산제도 기반형 공모사업 제도화
 -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구조 자체에 참여형, 협치형 구조 활성화하는 전환점 마련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
 - 중앙정부 주도의 규격화된 정책 사업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할당하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관점으로는 지역·계층별로 다변화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수요를 섬세하게 담아낼 수 없는 상황
 - 정책 도입기를 경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요가 질적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지역분권·자율형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의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 중앙-지역 간 역할 재정립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기능 및 역할 강화 방향으로 중앙-지역 간 역할 재정립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 재설정

중앙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자율적 문화예술교육생태계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 제시 및 기반(물적, 인적, 제도적 인프라) 조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 내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을 활용, 지역사회 기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추진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체계화 : 지역별 종합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 지역별 협의회 등 육성 기반 체계화
 - 광역센터 역할 강화 및 기초단위까지 추진체계 구축 : 광역센터를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밀착형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가능 구조 마련
 - 예산운용 자율성 제고 : 광역센터의 자율적 기획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의 통합 지원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협치 기반 마련을 통해 국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공교육 내에 활성화·제도화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 추진

□ 지원사업과 심사제도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사업 구조 혁신 : “사업성과 중심에서 주체형성 중심으로”, “개별/단년 지원 사업 중심에서 협력/다년 지원 사업 중심으로”, (가칭)〈중기 문화예술교육재정 협약〉 도입 등
- 중기적 관점의 다년간 지원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3년 혹은 5년 단위의 (가칭)〈중기 문화예술교육재정 협약〉을 근간으로 당해년도 실행예산의 다소간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중기적 관점에서 사업 및 예산운영 자율성과 연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 중기적 관점의 다년간 지원제도가 신규 사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평가체계 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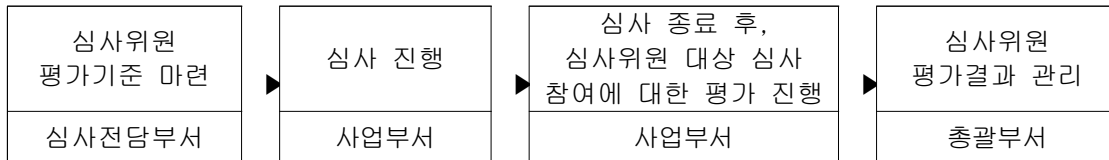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규정·조직·행정체계 개선을 통한 투명성 강화
 - 청탁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지정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외부 청탁 작동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외부 청탁이 사업별 담당부서의 부서장이나 직원에게 일차적으로 접수되고, 담당부서의 상급자에게 보고되는 구조였으나, 향후 청탁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공식적이고 시스템적인 관리 체계 마련
 - 청탁 및 행동강령 등 지침 보완 및 안내 강화
 - 문제제기 또는 신고를 했을 때 직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와 제도 안에서 본인의 의견과 입장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내부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 외부 신고체계 개설
 - 청탁, 부당지시 관련 외부 신고체계 설치 검토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뿐 아니라,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타 공공기관 등에도 블랙리스트와 같은 청탁과 부당지시가 작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체계가 필요함. 즉, 다층적 차원에서 경각심 제고가 요구됨
 - (가칭)〈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 위원회〉의 신고센터 기능과 연계하거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위원회) 설치

- 심사 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성·전문성 확보
 - *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진상조사TF의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 참조
 - 전문가 풀(pool) 구성 및 활용 : 전문가 풀 DB 구축 및 전문성 제고(부서별 전문가 풀 취합, 유관기관 추천, 공개모집 등), 내부 인력 참여 제외를 통한 공정성 확보 및 신규 전문가 유입 구조 마련(심사위원 인아웃(in-out)제, 심사위원 평가제 등), 전문가 풀의 일정 비율을 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
 - 전문가 풀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내부 인력 참여 제외 제도화 검토 :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훈령(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대한 개선 검토

○ 심사위원 평가제도 도입 및 운영

-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위원 관리를 위해 심사위원에 대한 평가 등 전문가 풀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심사위원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심사위원 평가 결과는 차기년도 전문가 풀 구성 시 반영

○ 심사 ombudsman(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건이 접수될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ombudsman이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추진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9 후속 조치 권고

□ 국가의 사과와 정의의 실현

○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해 정부는 위헌·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국민과 문화예술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권고함
- 국가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하여 「문화기본법」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형법 정비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및 피해자 구제, 보상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함

○ 책임자 및 가해자 처벌

- ‘정의의 실현’은 공권력을 오·남용한 국가기관과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및 집행 계통에 있었던 공무원 그리고 공조 또는 가담한 자의 죄책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통해 가능함. 이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책임자에 대한 (가칭)〈책임규명 권고안〉을 후속 조치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권고함
- 책임자 및 가해자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는 향후 작성 및 제출될 (가칭)〈책임규명 권고안〉 참조

○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고, 공직자 및 문화예술행정 종사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의 인권적·헌법적 의미와 재발방지책 등 일련의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내용의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권고함

□ 피해자 명예 회복 및 피해 보상

○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 국가는 공권력의 오·남용 결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단체)의 명예 회복과 배·보상 그리고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이의 실행을 위한 조치에 조속히 나설 것을 권고함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사건 피해자는 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직·간접의 배제 효과에 따라 차별 당한 문화예술인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야 함
-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그러나 국가범죄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특성상, 국가기관이 피해 자체를 알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여 은폐하였던 것이므로, 단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권리행사 기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이명박 정부 시기 블랙리스트와 같이 5년 이상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 손해배상이 가능하여야 함

○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

- 블랙리스트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기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교훈을 사회적으로 기억·기록·보존·전승하는 사업 및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함

□ 진상 규명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기구 설립

○ 후속 진상 규명과 권리 침해 방지 기구 설립의 필요성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활동의 종결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활동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권한 한계, 기관 협조 부족, 촉박한 조사기간 등으로 충분하게 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국가범죄의 실상과 이를 야기한 구조적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후속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함

- 블랙리스트 사태는 장기간에 걸쳐 국가기관과 공무원, 민간인이 동원되어 다양한 기제를 통해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실증한 사례이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신고, 조사, 피해구제, 처벌 등을 포함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 이에 지속적인 진상 규명과 문화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구로서 (가칭)<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장 위원회>의 설립을 권고함

○ (가칭)<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장 위원회> 설립

- 해당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기구로 설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문화기본법」의 개정 또는 (가칭)「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령 신설을 권고함
- 해당 위원회는 형식화 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기구의 목적달성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관 협치형 행정위원회로 설치하여야 함

○ 기구의 구성 및 역할(안)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구성 :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약 10인 내외의 위원) ■ 경력 및 자격 : 문화예술 분야 및 권리보호 분야에서 추천 (구체적인 인원 구성 등은 법률에 근거를 둠)
기능과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 * 자료 접근 및 수집, 관련자 소환 등을 실행할 충분한 조사권한 확보 ■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후속 조치 활동 ■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 권리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센터' 운영 ■ 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제보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 ■ 권리 침해 피해자 보호 및 구제 활동 ■ 문화예술인 권리 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인 권리 증진 사업 ■ 문화예술 행정 및 정책에 대한 문화예술인 참여 및 협치 활동 ■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와 권리 연간 정기보고서 작성 및 공표 ■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자율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권고 이행을 위한 ‘이행협치추진단’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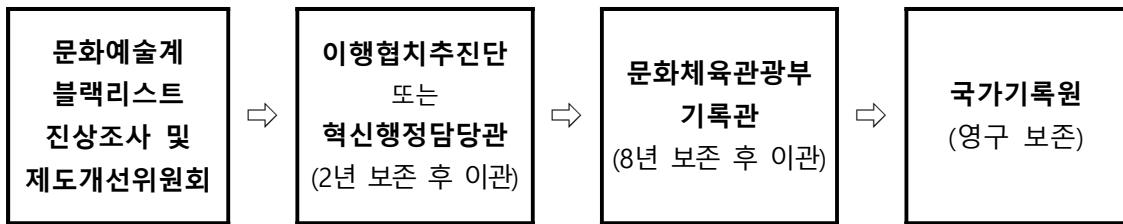
○ ‘이행협치추진단’ 설치 및 운영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약 9개월 동안 진행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권고사항 이행 추진 및 이행 여부의 확실한 점검을 위해 문화예술인과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행협치추진단’ (이하 ‘추진단’)을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설치할 것을 권고함
- ‘추진단’의 구성, 운영기간, 업무내용(안)은 다음과 같음

추진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간 공동으로 구성
운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 후 설치함 ■ (가칭)<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장 위원회>설립 시, ‘추진단’ 운영은 종료하고 필수 업무 이관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위 기록물 이관 및 정보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위 기록물 보존(2년) 및 이관 -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공개 - 아카이브 홈페이지(www.blacklist-free.kr)의 운영(계속) ■ 권고사항 이행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속 기구 설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 책임규명 권고의 이행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이행 - 소속 공공기관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 여부 확인 점검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 결정한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기타 업무 ■ ‘표현의 자유 위원회’ 설립 전까지 필요한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인 권리 보장 관련 활동

○ 기록물 이관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입수·분석·생산한 문서 및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 일체를 이관하여 영구 보존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단’ 또는 소관 부서에서 2년간 보존 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
- ‘추진단’ 설치 시 위원회 기록물 이관 절차



10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조치사항 (종합)

권고 분야	과제 구분	세부 과제 내용	관련 부처 및 기관	조치 기한	
법제도	헌법 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문화기본권 확대	▪헌법 각 조항 개정 및 신설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국회	2020. 12.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제도 정비 : 「문화기본법」 개정 또는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대통령직속 (가칭)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 설치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국회	2018. 12.	
	법 개정/제정을 통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 보장	▪「문화기본법」 개정 또는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법제도 근거 마련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국회	2018. 12.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상 기관에서 문화예술 지원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제외 추진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재정부 • 국회	2019. 12.	
문화행정	국정운영 차원의 문화정책 정체성 확립	▪(가칭) <문화국가의 원칙 확립 및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가칭) <문화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언>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재조정 및 정체성 확립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8. 12.	
	국정 홍보기능 혁신 및 조직 분리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에서 국정홍보 기능 재정립 ▪국정홍보 정책 및 사업 패러다임 전환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9. 12.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개혁을 통한 소속기관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	▪소속기관 등과 중층적 협치 구조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업무 재조정 및 “기능+장르” 체계로 개편 ▪(가칭)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추진 및 예술정책 조직 개편 ▪성과협약 체결 및 성과체계 마련 ▪(가칭) <문화예술지원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12.	
	문화행정 협치 기반 조성 및 제도화	▪문화행정 협치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및 이행계획 수립 ▪“참여와 협치의 원칙”, “정보공개의 책임”을 「문화기본법」에 명시 ▪국가 단위 정책 수립 과정에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보장 ▪참여와 협치에 기반 한 문화행정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 국회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8. 12.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 지원정책의 인식 전환과 원칙 수립	▪새로운 예술지원체계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운영 혁신	▪위상과 역할 재정립 : 기관명 변경, 「공공기관운영법」 제외, 호선제 도입,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권한 이관 외 ▪조직운영의 투명성 강화 : 회의 운영 공개, 연차보고서 발간, 심의제도 혁신 외 ▪재정 구조의 독립성과 안정성 강화 ▪사업 운영의 개방성과 전문성 확보 : 사업구조 개편, 사업모니터링단 운영 외 ▪예술 현장과의 협치 기반 마련 : 사무처 직위 개방, 소위원회 활성화, 참여형 사업 운영 외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기획재정부 • 국회	2019.12.

기관	(가칭)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검토 및 추진 :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추진단 구성 및 단계별 사업 추진 외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회 	2020. 12.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가칭)예술인 복지위원회 설치와 예술인복지재단 정체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칭)예술인복지위원회 설치 ■예술인복지 증장기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련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9. 12.
		예술인의 참여에 기반을 둔 개방적 구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 추천과 선임을 위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임원 추천위 구성 ■이사회 당연직 비율 축소, 의제별 이사 배분 ■이사가 참여하는 의제별 소위원회 구성 ■개방형 직위 도입 ■상담, 경력관리, 불공정신고대응을 위한 예술인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련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12.
		정책역량 강화와 사업구조 및 운영방식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칭)정책기획팀 신설 ■예술인의 삶과 사회적 가치 보고서 제작 ■예술인복지정책 공개 제안 제도 도입 ■심사위원 풀 제 도입과 별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12.
		예술현장에 기반을 둔 협치 구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복지정책 평가회 정기 개최 ■(가칭)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 ■협치 주체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지역문화재단 	2018. 12.
	영화진흥 위원회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호선제를 위한 법개정 ■위원의 단체추천 의무화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비의 최대비율 명문화 ■의제와 분야에 따른 위원구성 명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련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재정부 	2019. 12.
		영화 '진흥'에서 영화 '가치 확산' 으로 정책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위원회'로 명칭 변경 ■자율성, 다양성, 창조성에 기반을 둔 가치 중심 지원 ■위원회 정책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련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진흥위원회 	2018. 12.
		영화행정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위한 실질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직위제 실시 ■모든 주요업무에 소위원회 신설 ■소위원장 호선제 실시 ■참여예산제 실시 ■정책실명제 실시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개선 ■증장기 발전계획안 공청회 의무화 ■사업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진흥위원회 	2019. 12.
		위원회 권한 및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태펀드 영화계정 직접관리 ■영화발전기금 중 영화진흥위원회 자율적 집행 실링제 도입 ■불공정 위 조사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련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진흥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기획재정부 • 중소기업청 	2018. 12.
	한국출판 문화산업 진흥원	기관 위상 및 이사회 권한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위상 재정립, 민관 협치 체계 활성화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임원 구성 및 이사회 권한 재정립 :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의 구성 요건, 이사회 개최 정례화 등을 정관 개정을 통해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09.
		출판문화 지원기관으로서의 운영 혁신 및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직위 제도 도입 ■(가칭)출판문화연구센터 설립 ■운영 및 평가 관련 정보 공개 ■사업선정 결과 문체부 보고 방식 폐기, 심사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12.
		표현의 자유 확대와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칭)<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09.
		사업구조 혁신 및 '세종도서 선정사업' 민간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 과제 도출 및 사업 구조 전면 혁신 ■(가칭)<세종도서 선정사업 개선 TF>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12.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혁신위원회 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조직혁신(안)도출 문화산업기본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06. (법개정 제외 일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 평가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제도개선위원회 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평가제도개선(안) 도출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 평가 지침 개정 '심사평가 옴부즈맨제도' 등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08.
		문화산업전략위원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산업기본법 개정 문화산업전략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04.
		협치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협치형 사업 공모 문화콘텐츠협치지원센터 운영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0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관 위상 재정립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직적인 사업 구조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위상과 역할 재정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제고를 위해 기관 간 역할 재정립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지원 예산 구조 개편을 통해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상임이사직 폐지 또는 상임감사제도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03.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협치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사결정기구(이사회) 운영 정상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에 예술강사, 지역문화예술지원기관 관련 상설적인 협치 조직 설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 구조 내에 참여예산제도 기반 지원 사업 구조 마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회 	2019. 12.
		지원 사업과 심사 제도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사업 구조 혁신 : 다년지원제도 확대, (가칭)중기 문화예술교육재정 협약 도입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규정, 조직, 행정체계 개선을 통한 투명성 강화 외부 신고체계 개설 심사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성·전문성 확보 심사위원 평가제도 도입 및 운영 심사 옴부즈맨(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12. [지원사업 구조개편의 경우 2019.12]
	후속조치	국가의 사과와 정의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 책임자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및 관련 기관 국회 	2018. 12.
		피해자 명예 회복 및 피해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국회 	2019. 12.
		진상 규명 및 권리보장을 위한 기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칭)<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2019. 12.
이행협치추진단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협치추진단 설치 및 운영 기록물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 	2018. 07.	

부록 :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일지

연제	어디서	내 용	출 처
2013. 3. 15.	국정원	(국정원 작성 보고)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대통령기록관 (민정수석실)
2013. 8. 16.	국정원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활동 실태 보고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3. 8. 21.	청와대	(실수비) 김기춘 중복세력이 15년간 문화계 장악 지적 발언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5쪽
2013. 8. 27.	국정원	OO의 좌편향 문화사업 확장 및 인물 영입 여론' 보고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3. 9. 3. ~ 9.15. 국립극단 연극 「개구리」 공연, [카멜레온(박정희) 비하]	
2013. 9. 3.	국정원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3. 9. 9.	청와대	(실수비) 김기춘이 '천안함 메가박스 상영은 중복 세력의 의도' 발언 "국립극단 개구리 용서 안 돼"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5쪽
2013. 9. 9.	국정원	문화예술정책 점검 T/F 구성하는 등 기금 보조 사업에서 특정문예인에 대한 지원 배제책을 마련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3. 9.	문체부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2013. 9.	청와대	김기춘,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 일탈 행태 시정 필요'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 전달과 필요 조치 지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72쪽
2013. 9. 26.	국정원	시·도문화재단 좌편향 일탈행위 시정 필요	문체부 예술정책과 입수
2013. 9. 30.	청와대	(대수비) 박근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 문제가 많다고 지적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6쪽
2013. 9. 30.	청와대	- 좌편향 문화예술계 대응 • 국립극단의 일부 정치편향적 작품 제작,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이념성 사업 지원과 부실 운영 등 지속적 논란 행태에 대책 마련 실시 • 9.30일부터 문체부에 감사반을 구성, 지역문화재단 등에 서면·현장 감사(~11.29) 실시 후 제도 개선 추진(12월) 등 • 보수적 시민운동 단체 등 대안 단체 육성	대수비 교문수석실 보고 자료

2013.10. 2.	국정원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재확산 시도 차단 건의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3. 10. 3.	문체부	문화관련 이념 문제 보고서	검찰 의견서 140 쪽
2013. 10. 7.	문체부	문예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추진 실태조사' 관련 협조요청	
2013. 10.	청와대	교문수석실로 국정원 정보문건 '한예종 총장이 좌성향 교수의 퇴출 유도 필요' 전달, 문체부로 하달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73 쪽
2013. 10. 31.		문체부장관, 우수문학도서 선정시 좌편향 배제 지시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3. 12. 5.		문체부, 좌파관련 문화예술정책점검 TF 지속 운영 방침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3. 12. 13.		월간 '현대문학'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신을 부정적 묘사 이유로 이제하, 정찬, 서정인 소설 연재 중단	검찰 의견서
2013. 12. 18	청와대	(실수비) 김기춘 문화계 권력을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 지적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6 쪽
2013. 12. 18.	청와대	김기춘 '변호인' 영화 문체부 투자 질책, OO 제재 방안 지시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73 쪽
2013. 12. 19.		박근혜는 당 최고위원 송년만찬 모임에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우파가 10년 만에 정권을 잡았지만 MB 정권 때는 좌파척결에 있어서 한 일이 없다. 나라가 비정상이다'라는 취지로 발언	검찰 의견서 263 쪽
2013. 12. 20.	청와대	(실수비) 김기춘 좌파세력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 전수조사 지시	대통령 서면 보고서
2014. 1. 3.	청와대	(실수비) 김기춘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실태 전수조사 지시	대통령 서면 보고서
2014. 1. 4.	청와대	수석비서관 모임 김기춘 좌파 지원현황 전수조사 재차 지시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7 쪽
2014. 1. 13.		문화교육 NGO 지원실태 마무리	박준우 수첩
2014. 1. 24.		문체부 장관, 좌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 강구 지시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1. 27.	국정원	문예기금 운용기관의 보조금 지원기준 보완 필요 의견' 보고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2.	청와대	김기춘은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에 좌파단체, 작가 포함 되었다고 지적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10 쪽
2014. 2. 17.	예술위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문체부를 통해 교문수석실에 보고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73 쪽

2014. 2. 18.	미래한국	반미 反대한민국 서적이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고 기사 게재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10 쪽
2014. 2. 20.	국정원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보완 필요 여론 보고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2. 21.	청와대	유진룡 장관 김기춘에게 '이념 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보고서 제출 문체부, 김기춘에게 '2014 년도 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보고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11 쪽
2014. 2. 21.	국정원	예술위(위원장 권 OO)는 문서 팩스 발송	문체부 예술국
2014. 2.	문체부	예술정책과 000 과장과 000 사무관,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문예기금 지원 사업 관련' 보고서 작성 보고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11 쪽
2014. 2. 24.	국정원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 추진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2. 28.		"우수도서 선정 개선 방향 보고"	검찰 의견서 260 쪽
2014. 3. 5.	문체부	이념 논란의 사업 선정 관련 대책 방안 (000 당시 예술정책과장 작성)	1 심 소송 기록 발체
2014. 3.	언론보도	동성아트홀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계획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20 쪽
2014. 3. 14.	청와대	(실수비) 김기춘 수석실 별로 업무 관련 비서관들을 모아 TF 구성, 내용 정리 지시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7 쪽
2014. 3. 17.	국정원	문체부, 좌성향 단체 참여 현장예술인 지원사업 폐지 방침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3. 19.	국정원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現況 및 고려사항' 보고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3. 21.	국정원	문체부, BH 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 예정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14. 3. 27.	청와대	(실수비) 각 부처가 산하단체 기관에 정부보조금 지원시 해당 단체·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과거 불법집회나 시위의 가담 여부,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 여부, 이러한 범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 유무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한 지침(기재부)이 마련되어 있음 정무수석은 조속히 관련 수석실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예시) 전 부처가 산하 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기관 명단 일체를 검경에 제공 모든 단체·기관에 대한 사법조치 이력이 등재되어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실수비 안건 및 결과

2014. 3. 28.	예술위	2014 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배제 대상자 19 명 확정	감사원 보고서 120 쪽
2014. 3. 28.	청와대	금년 지침에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한 단체'로 한정하고 '적극 참여한 단체' 부분은 삭제되어 있는바, 이는 지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실수비 결과
2014. 3.28.		민간단체 보조금 효율화 방안 기금 운영자 - 기금 심사위원 교체 공모사업 시 자격기준 사업 위주로 평가하는 배점 기준 ⇒ 단체 기준에 대한 평가 → 불법 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	OOO 前 행정관 업무수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책임자) 범위 명확하게 할 것, 안행부 등 고려 • 좌편향 NGO 예산(기부금 포함) 사전 지원 차단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 BLACKLIST 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 보조금 → 민간지원 (1 조 1,669 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7,006 억원) - 배정단체 (1,713 억원) - 민간단체 지원 (2,950 억원) • 심사위원 교체 • 한시적 TF 구성 •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 	OOO 前 행정관 업무수첩
2014. 4. 4.	청와대	김기춘의 지시로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이 민간단체 보조금 TF 2014.5.말까지 운영. (전수조사 4. 4. - 5. 23)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8 쪽
2014. 4. 4.	청와대	민간단체 보조금 TF 첫 회의 개최 (정무수석 박준우 주도, 모철민 교문수석 참석)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74 쪽
2014. 4. 8.		문화단체(좌파) 현황 조사 → 공모사업 현황 자료 요청 → 4/9(수) 확인 무인가 자극 선동단체 확인 및 처벌 방안 여부	OOO 前 행정관 업무수첩
2014. 4.21.		문체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체 정화시스템 가동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4.24.	문체부	영상콘텐츠과 OOO 사무관, 소통비서관 OOO 에게 동성 아트홀 지원 여부 문의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20 쪽
2014. 4.24.	청와대 문체부	문체비서관 김소영, 문체부 1 차관 조현재에게 동성아트홀 지원 배제 연락 문체부 OOO 은 영진위 OOO, 영진위 국내진흥본장 지원심의 중단 요구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20 쪽
2014. 5.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 비서관 김기춘과 박근혜에게 민간단체 보조금 TF 의 중간 진행 상황 보고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9 쪽

2014. 5.	청와대	소통비서관실 행정관 000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 작성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74 쪽
2014. 5.	청와대	소통비서관 신동철이 문체비서관 김소영에게 정권반대 운동 등 전력 80 여명의 명단 전달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13 쪽
2014. 5.	청와대	문체비서관 김소영이 교문수석 모철민에게 명단 보고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13 쪽
2014. 5.	청와대	김소영이 문체부 1 차관 조현재에게 명단 전달하며 문화예술계의 저항과 비판이 조직적이니 적극 대응을 주문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13 쪽
14. 6. 7.	청와대	(교문수석실) 2014. 우수도서(공감도서) 선정 방식 개편 - 이념 편향 도서 선정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개편, 학술분야(6 월) 문화. 교양 분야 (12 월) 도서 선정. 보급('14 년 152 억원)	실수비 자료
2014. 7. 16.		유진룡 장관 사퇴	
2014. 7. 25.		문화융성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	
2014. 7. 30.	출판진흥원	2014 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분 선정보급 사업 공고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24 쪽
2014. 8. 4.	문체부	2 차관 전달사항 "세종도서 선정관련, 세종도서 명칭 및 선정 프로세스 등에 대하여 원점에서 검토하고 다시 보고 (미디어 정책국)	문체부 실국장 간담회(14. 8. 4.)
2014. 8. 8.	김영할비망록	(실수비) 김기춘이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 지시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267 쪽
2014. 8. 8.	청와대	광주시립 미술관 개최 광주비엔날레 행사 관련 작가 홍성담의 '세월오월(풍자그림)이 전시하기에는 부적절한 작품이라고 판다, 작품 설치를 불허하는 입장을 밝힘 따라서 동 작품의 전시 금지(광주시 조치)는 물론이고 문체부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국고지원을 재고 또는 축소하겠다는 뜻을 광주비엔날레 주최 측에 경고해 두어야 할 것임	실수비 회의 결과
2014. 8. 20.		김종덕 장관 취임	
2014. 8. 22.	청와대	독립 예술 영화 제작 및 지원 유통 체계 개편 ◦ 국가 정체성 훼손 독립영화 제작 및 유통(전용 상영관)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실수비 회의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심사위원 풀 개편(700 여명→400 여명 이하, 문제인사 배제하고 상업영화 인사 비중 확대) ◦ 문제영화 상영 독립영화 지원관 지원 배제 (심사절차 강화: 영진위 2차 심사도입) ◦ 독립·예술 영화 상영 지원 사업에 경쟁체제 도입 (일반상영관까지 지원대상 확대) ◦ 건전 애국영화 제작 지원 (영화발전기금 50 억 원, 연내) 	
2014. 8. 23.	청와대	각 부처마다 산하기관, 단체가 많이 있는데 일부 기관 단체의 경우 정부 철학과 배치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러한 기관 단체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수단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인사권과 예산권이므로 앞으로 보조금 축소, 중단 등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전 수석)	실수비 회의 결과
2014. 8. 25.	영진위	동성아트홀 포함 예술영화전용관 지원배제 심사결과 확정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0 쪽
2014. 8.경		문체부, BH로 부터 문예계 左派 견제 강화 지시 (출판 유공자 선정 등 현안) [2014. 9. 3. 제 38 회 국무회의 출판 유공]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9.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	다이빙벨 상영 결정 발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1 쪽
2014. 9. 10.	청와대	10 월 부산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다이빙벨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려 한다고 함. 동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문체부장관, 문화융성위 등에서 상영을 하지 말도록 부산시장과 조직위원회에 통보 하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것 (정무수석, 교문수석)	실수비 회의 결과
2014. 9. 11.	청와대	다이빙벨 상영을 결정한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동 영화제조직위원장(이용관)을 비롯하여 영화제 선정위원회(총 7 명) 홍효숙 위원(DJ 정부때 임명, 조직위 사무차장 역임한 터줏대감, 2000 년대 안티조선선언 동참), 남동철 위원(前 시네 21 편집장, 08 년 조직위 마켓실장) 등 이념 편향적 인물이 다수 포진되어 있음 이러한 이념 편향적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임무수행이 어려운 만큼 각 위원회 現 위원들에 대한 재검증과 함께 향후 위원 교체시 및 신임위원 선정시에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할 것(전 수석)	실수비 회의결과
2014. 9. 14.	청와대	문체부 부이사관급 주요 인사 세평 종합	대통령 기록관 (민정수석실)
2014. 9.	청와대	(실수비) 김기춘 다이빙벨 상영 금지 지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1 쪽
2014. 9. 26.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비판단체 지원 차대책 추진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9. 26.		소통비서관실 000 다이빙벨 관람석 70% 확보했다고 보고 (000 진술) 70% 확보는 정무비서관실을 통해 부산의원들에게 부탁함 (000 진술)	검찰 의견서
2014. 10. 2.	청와대	(실수비) 김기춘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성향은 지양.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지시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21 쪽
2014. 10. 2.	청와대	정무비서관 신동철은 후임 정관주 소통비서관에게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 전달 및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 인계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16 쪽
2014. 10. 2.	김영한 비망록	김기춘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지시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27 쪽
2014. 10. 2.	청와대	그동안 정무수석, 교문수석 및 관련부처에서 광주비엔날레에서의 홍성담 그림전시 차단, 파주 북소리축제에서의 월북작가 홍명희 문학제 개최 차단, 부산영화제에서의 '다빙빙벨' 영화 상영 차단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온 결과 실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음 -앞으로도 문화·영화예술 분야에서의 이념 편향적인 행태를 방관. 좌시해서는 안 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 (정무수석, 교문수석)	실수비 회의 결과
2014. 10.	문체부	김종덕 장관 김기춘에게 '이념 편향 사업에 세금 지원 바람직하지 않다' 등 질책 받고, 000 기획실장에게 청와대 관심 사업 이행 점검 지시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14 쪽
2014. 10.	문체부	김종덕 장관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금지 요구 김희범 1 차관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상영금지 요구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21 쪽
2014. 10.	문체부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작성 (창조행정관 000 작성)	
2014. 10. 17.	영진위	000, 씨네코드 선재에 다이빙벨 상영자제 요청, 거절 당함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22 쪽
2014. 10. 21.	문체부	김종덕 장관 김기춘에게 000 작성의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방안' 보고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15 쪽
2014. 10. 23.	청와대	(실수비) 김기춘 다이빙벨 상영 대관료 등 자금원을 추적하여 실체를 폭로하라고 지시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22 쪽
2014. 10. 27.		청와대, 세월호 다류상영 논란 관련 문체부 실무자 경고 지시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10. 31.	청와대	국회에서 15년도 예산이 최종확정(12. 2.)되면 내년 초부터 각 부처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신청-선정-보조금지급 등) 각 부처로 하여금 보조사	실수비 회의 결과

		<p>업자 선정 및 지급시 타성적 관성적으로 전년에 준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급 대상자, 기관의 성격, 보조금 용도 등을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할 것</p> <p>-이와 같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자 엄선, 국고 보조금의 누수 없는 효율적 사용문제에 대해 각 부처 장관이 실무진에만 맡겨두지 말고 직접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독려했을 것(각 수석들이 소관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유선 통화하여 강조해 줄 것) (전 수석)</p>	
2014. 11. 4.	출판진흥원	<p>세종도서 763 종 선정 심사 통과</p> <p>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 000 사무관 작성</p>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24 쪽
2014. 11.	문체부	<p>예술정책관 000 은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 000 을 불러 홍성담 작가를 거론하며 정치적 논란 작가 유의 필요 전달</p>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16 쪽
2014. 11.	문체부	<p>사무관 000 는 출판진흥원 000 본부장, 000 팀장에게 9 종의 문제도서들이 세종도서에 선정되지 않도록 지시</p>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24 쪽
2014. 11. 14.	출판진흥원	<p>세종도서 3 차 심사과정에 청와대 하달 도서가 세종도서에 선정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에게 전달</p>	
2014.11.17.	강일원 업무수첩	<p>좌파 생태계 대응방안 「TF 정무비서관실과 협업」 정무수석 지침 필요사항 작은 도서관 등을 통해 이념 전개</p>	검찰 의견서 202 쪽, 245 쪽
2014. 11. 21.	청와대	<p>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사업 관리 강화 ⇒ 신청 사업에 대한 단계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작품(작가) 배제</p>	실수비 회의 자료
2014. 11. 24.	문체부	<p>국고보조금 사업 종합대책 발표(12 .3.)</p>	<p>장관주재 실국장회의, 제 51 회 국무회의 참고자료「민간보조금 집행실태 특별감사 실시현황 및 향후 계획」</p>
2014. 11. 26.	청와대	<p>국고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그동안 지원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관성적으로 지원해오던 관행이 많이 개선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대상단체의 성격이나 특성을 감안하면서 지원해 오고 있음. 그러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언론매체에 공익광고나 시책광고를 주는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언론 매체의 성향이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집행해 오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차제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대외 광고</p>	실수비 회의결과

		발주실태에 대해 상세히 파악·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광고발주 관행을 바로 잡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 (국정기획, 정무수석, 미래수석, 교문수석)	
2014. 12. 1.	청와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생태계 건전화 추진 ◦ 예산지원 단계별 철저 검증으로 문제단체·작품배제 및 건전단체·작품지원강화 * 사전(심사위원 엄선, 선정 재량권 확보), 집행(문제작 배제), 사후(조건 위반시 지원 중단, 향후 지원배제) 등 ⇒ 문체부내 건전문화생태계 TF 운영으로 주간단위 철저한 검증시스템 운용 중 *(예) 서울연극협회 지원배제(사전), 서울독립영화제 국가원수모독 배제(집행), 부산국제영화제 지원배제 (사후)	실수비 회의 자료
2014. 12.	청와대	문체부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영진위 지원금 전액 삭감 지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2쪽
2014. 12. 12.	청와대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지원체계 개선 ◦ 지역영상미디어(문체부지원 16개소)의 이념편향 영화 상영방지 및 사업전화 추진 *다이빙벨을 상영한 성남, 고양 영상미디어 센터의 경우. '15년 지원 배제	실수비 회의 자료
2014. 12. 19.		문체부, 조성향 전태일 문학상 장관상 지원 배제 조치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12. 28.	청와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상영되고 있는데, 영화 제작시 정부 출자 펀드 투자지원을 포함 투자자들을 모으기 힘들었다고 함. 반면 종전 상영된 바 있는 '변호인'의 경우 국고 또는 기금이 출자한 6개 모태펀드로부터 35억원 투자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정부 투자자금 지원에 문제가 큼 -따라서 영화제작 지원을 위한 투자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건전 애국영화가 널리 제작, 상영되도록 투자자금 지원, 제작자 격려, 시사회 참여, 영화 관람 권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교문수석, 경제수석)	실수비 회의 결과
2014. 12. 30.	국무회의	박근혜, 국가보안법 혐의자 우수문학 도서 선정 논란과 관련 개선 방안 지시	제 56 회 국무회의의 대통령 말씀 자료
15. 1. 28.	청와대	건전 영화 보급 확산 추진 ◦ 애국·가족애 등을 그린 건전영화 보급 확산으로 통합적 가치 확산	실수비 회의 자료
2014. 2. 4.	예술위	다원예술 창작 지원 배제 확정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등)	감사원 보고서 325쪽

2015. 1.21.	예술위	소외계층 문화순회(농산어촌)(극단 산 등) 지원배제 확정	
2014. 2. 2.		문체부, 민간 예술단체 공연지원 심사시 문제단체 배제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5. 2. 4.	예술위	시각예술창작 및 발표 공간 지원 배제 확정 (신선미술관 이지호)	감사원 보고서 325 쪽
2015. 2.25.	문체부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논의	문체부 자료
2015. 3. 3.		[대외주의] 국제영화제 지원 개선 ("150303 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 (대외주의))	검찰 의견서 259
2015. 3. 6.	국정원	문체부 장관, 국립단체 공연작 선정시 좌성향 작품 배제 지시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5. 3. 25.	청와대	다양한 형태의 민간단체(NGO)에 많은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상당부분이 중복좌파 세력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고 하는 바, 민정수석, 정무수석, 교문수석은 실제 현 상황이 어떠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문화관련 단체지원) 전체적으로 면밀히 스크린해 볼 것. 다만,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차분히 진행할 것 (민정수석, 교문수석)	실수비 회의 결과
2015. 3. 31.	예술위	민간국제예술 교류지원 1 차 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 프로젝트 지원 하당세) 배제 확정	감사원 보고서 325 쪽
2015. 3. 31.	예술위	민간국제예술 교류지원 1 차 지원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등) 배제 확정	감사원 보고서 325 쪽
2015. 3. 31.	예술위	국제교류기반 강화지원 (해외 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 윤한솔) 배제 확정	감사원 보고서 325 쪽
2015. 3. 31.	예술위	문학행사 및 연구지원 배제 확정	감사원 보고서 324 쪽
2015. 3. 31.	예술위	공연예술 비평연구 활성화 지원 배제 (서울변방연극제 임인자)	감사원 보고서 325 쪽
2015. 4. 30.	영진위	부산국제영화제 삭감지원 결정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23 쪽
2015. 5.	청와대	문체부 000 사무관 청와대 000 행정관으로부터 '세월호 시국선언' 등 관련자 장관 보고 후 송부 지시받음	김기춘 외 1 심 판결문 17 쪽
2015. 5. 15.	청와대	지난 월요일 '중앙부처 산하단체 재정지원 등에 대한 총 점검 지시의 점검대상 범위와 관련, 각 부처가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는 민간단체(NGO)를 대상으로 점검해 줄 것 (쑤 수석)	실수비 회의결과
2015. 5. 21.		문화예술분야 지원 사업 관련 현안	문체부 예술정책과 입수

2015. 7.	예술위	청와대 하명 5명 심사과정 배제, 지원금 수혜자 99명에서 70명 발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18쪽
2015. 7. 15.	청와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담긴 "불안한 외출"이라는 영화가 국립 충남대와 수원시립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상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문제가 심각함. 교육부와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교문수석)	실수비 회의 결과
2015. 7. 17.	예술위	문학창작 활동 지원(아르코문학 창작기금) 지원배제 확정	감사원 보고서 324쪽
2015. 7. 27.	청와대	금번 추경예산 중 문체부 소관 예산으로 예술계 비단단체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단체의 활동내용, 성향 등을 분석한 후 지원여부 결정토록 할 것 (교문수석)	실수비 회의결과
2015. 7. 28.	출판진흥원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분 및 문학부분 선정보급 사업 공고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5쪽
2016. 7. 29.	예술위	2016년도 심의위원 풀 선정 배제 명단 확정	감사원 보고서 322~323쪽
2015. 9. 11.		문체부 장관, 문예기금 지원사업 논란 관련 총력 대응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5. 10.	문체부	사무관 000는 출판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세종도서 2차 신청자 목록을 교문수석실 000 행정관에게 전달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5쪽
2015. 10.	청와대	행정관 000는 공지영 작가 등 15종의 도서를 선별,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보고 후 000 사무관에게 통보 함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5쪽
2015. 10.	문체부	000는 출판진흥원 000 본부장, 000 팀장에게 문제도서 통보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5쪽
2015. 10.	출판진흥원	000, 000는 세종도서 선정위원회에게 문제도서가 선정되지 않도록 의견 전달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6쪽
2015. 11. 18.	청와대	문체부가 좌성향 단체에서의 무분별한 지원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는 데 (12월 확정) 이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이므로 차제에 동 개편작업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 (교문수석)	실수비 회의결과